내일을 여는 35년의 열정

35TH ANNIVERSARY KRILA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사

1984 ——— 2019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35th Anniversary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사

내일을 여는 35년의 열정

CONTENTS

발간사 008

축사

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적 대안 마련하길 010
2.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지방자치 핵심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012
3.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균형발전의 꽃 피우길 014
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중앙·지방 간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 기대 016
5.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방자치 싱크탱크, 지방정부의 동반자 018
6.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신원철
   자치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대 020
7.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경기수원시장 염태영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 기대 022
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남 영광군의장 강필구
   지역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024
9. 강원연구원장 육동한
   평화시대 전진기지, 강원도에서 더 높이 도약을 026

사진으로 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028

데이터로 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 046

제1부 _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걸어온 길 열정의 35년

제1장 태동기(1984-1985)

지방행정연구소의 개설 054

제1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태동기 055

제2절 연구소의 역할과 구성 055

1. 지방행정연구소 설립배경 055
2. 연구소 설립계획 수립 056
3. 지방행정연구소 개소 058
4. 한국지방행정연구소로 명칭 변경 058

제3절 조직, 인력 및 재정의 변화 059
1. 조직개편 단행과 인력구성 변화 059
2. 연구소 초기의 재정과 운영 059
1) 예산편성 060
2) 연구소 관련규정 제정 및 개정 061
3) 이사회 활동 061
4)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062
3. 연구소 서울로 이전 063
제4절 지방행정의 초기 연구기반 조성 064

제2장 마포시대(1986~199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범과 지방자치의 실시 066

제1절 대통령 직선제 부활과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 067
제2절 법령 및 관련 정책 067
1.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법인명 개칭 067
2. 연구원의 법적 기반 강화 및 토대 마련 068
제3절 조직, 인력 및 재정의 변화 069
1. 연구원의 기구조직 변화 069
2. 연구원 조직 강화에 따른 인력증강 070
3. 연구원 운영기금 · 출연금 조성과 예산집행 070
제4절 지방자치의 도입과 연구원의 기여 071

제3장 수원시대(1997~1998)
지방자치제도화의 주도적 역할 담당 074

제1절 지방자치 실시 초기의 연구원 활동 075
제2절 법령 및 관련 정책 075
1. 수원에 단독청사 마련 075
2. IMF 구제금융 사태와 위기 극복 의지 077
제3절 조직, 인력 및 재정의 변화 078
1. 조직개편과 인원 감축 078
2. 자체 수입이 출연금 수입 초과 078
3. 기금조성을 위한 긴축운영 079
제4절 민선자치 실시와 연구원의 기여 080

제4장 서초시대(1999~2015)
지방자치의 정착과 새로운 역할의 수행 082

제1절 지방자치제의 도약과 효율적 지방분권화 추진 083
제2절 법령 및 관련 정책 083
1. 서초동으로 청사 이전 083
2. 지역균형개발지원센터 설립 084
3.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설립 085
제3절 조직, 인력 및 재정의 변화 086
1. 조직과 인력의 변화 086
2. 재정의 변화 088
1) 세입예산 088
2) 세출예산 088
3) 기금 090
제4절 민선자치 정착과 연구원의 기여 091

제5장 원주시대(2016~현재)
혁신도시의 선도 096

제1절 원주혁신도시 청사 이전으로 새로운 전기 마련 097
제2절 법령 및 관련 정책 097
1. 원주혁신도시 이전 계획 097
2. 신사옥 건설 099
3. 원주청사 이전 및 이주직원 지원대책 100
제3절 조직, 인력 및 재정의 변화 101
1. 지방분권형 조직개편 101
2. 원주신청사 이전 이후의 인력 추이 102
3. 재정의 변화 103
1) 세입예산 103
2) 세출예산 104
3) 기금 104
제4절 혁신도시와 연구원의 역할 104

제2부_연구원의 역할과 성과

제1장 연구원의 역할 체계 110

제2장 연구원의 핵심 성과 114

제1절 자치행정 부문 115

1. 민선지방자치제도 기틀 마련 115
2.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 도입 및 확산 116
3.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분석제도 운영 117
4. 법령상 사무총조사 119
5.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도입 및 확산 121

제2절 지방재정 부문 122

1. 프로그램(사업) 예산제도 연구 122
2.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 123
3. 지방교부세제도 연구 125
4.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 126
5. 복식부기회계제도 연구 128

제3절 지역발전 부문 131

1. 지방소멸 인구감소 시책 개발 및 제시 131
2.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발 132
3. 도서,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정책개발 및 제도화 기여 132
4. 지역의 소득창출 및 생활여건 정책 개발 및 지원 133

제4절 타당성조사사업 부문 134

1. 타당성조사과제 134
2. 지침개발 및 제도연구과제 136
3. 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136
4. 자체 타당성조사 검토 138
5. 공무원교육 및 컨설팅 138

제3장 연구원의 사업별 성과 140

제1절 연구원 35년의 연구 성과 141

1. 태동기(1984~1985)의 연구 성과 141
   1) 연구과제사업 141
   2) 발간사업 142
2. 마포시대(1986~1996)의 연구 성과 142
   1) 지방행정 분야 142
   2) 지방재정 분야 144
   3) 지역개발 분야 146
   4) 발간사업 147
3. 수원시대(1997~1998)의 연구 실적 147
   1) 지방행정 분야 147
   2) 지방재정 분야 148
   3) 지역개발 분야 149
4. 서초시대(1999~2015)의 연구 실적 150
   1) 1999년 150
   2) 2000년 151
   3) 2001년 152
   4) 2002년 153
   5) 2003년 155
   6) 2004년 156
   7) 2005년 157
   8) 2006년 158
   9) 2007년 159
   10) 2008년 160
   11) 2009년 162
   12) 2010년 163
   13) 2011년 164
   14) 2012년 165
   15) 2013년 167
   16) 2014년 168
   17) 2015년 170
5. 원주시대(2016~현재)의 연구 실적 171
   1) 2016년 171
   2) 2017년 173
   3) 2018년 174
   4) 2019년 176

제2절 국제교류협력사업 178

1.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178
2.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182
3. 중국행정학원
   (상해행정학원 · 북경행정학원 · 길림성행정학원) 185
4.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187

제3절 자치분권과 사회혁신포럼 187

제4절 발간물사업 189

1. 지방행정연구 189
2. 세계지방자치동향 189

3. 단행본 190
4. 잡지 발행 191

제4장 연구원의 비전 192

제3부_연구원에 대한 회상과 미래

제1장 연구원에 대한 회상 : 과거 그리고 현재 198

1. 김동건 _ 서울대 행정대학원명예교수, 현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
연구원과 나와의 35년 깊은 인연 199
2. 김병국 _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현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원장
스티븐 코비식 '사명감과 원칙'으로 200
3. 김안제 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7대 원장, 현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원장의 소신을 지켜준 장관 202
4. 라휘문 _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KRILA는 내 인생 최고의 무대 204
5. 박완규 _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서초동 먹자골목에서 있었던 일 207
6. 박재영 _ 광주대 부총장
지방자치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208
7. 유순기 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재정으로 살펴본 연구원 35년 210
8. 이상용 _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세미나를 통한 지방의회와의 첫 만남 213
9. 임경호 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9대 원장
수원의 독립청사 건립 비화 216
10. 임성일 _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소장
무주 송어장과 백련사, 행복이 충만했던 하루 217
11. 하동현 _ 안양대 행정학과 교수
일본 지진 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들' 220

제2장 연구원의 미래 : 특별 인터뷰 225

1. 고규창 _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선도적 · 창의적 지방자치 연구 기대" 226
2. 김동욱 _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학회장
"지역 연구원 맏형 노릇해야" 229
3. 김재훈 _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자치분권 · 균형발전의 싱크탱크 역할해" 232
4. 박성호 _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연구원 기능 강화 위해 함께 노력할 것" 234
5. 변성완 _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해야" 237
6. 서정섭 _ 지방재정경제실 재정분석센터 선임연구위원
"연구원이 더욱 성장 · 발전하길" 239
7. 손희준 _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35년 능가하는 발전 기대" 242
8. 이승종 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6대 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구원의 역사는 지방자치의 역사" 245
9. 임경수 _ 성결대 국제개발협력학부 교수, 한국지역개발학회장
"연구회-학회 간 상호 보완관계 유지해야" 248
10. 정정화 _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지리적 한계 극복하고 세계적 도약 이루길" 251
11. 홍준현 _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연구 발굴하길" 254

제3장 35주년 기념 직원들의 한마디 257

부록

– 일반현황 274
– 직급명칭 변천과정 276
– 역대 원장 278
– 역대 연구자문위원 282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관 및 직원 포상 292
– COP 활동현황 298
– 발간자료 목록 303
– MOU 현황 336
– 연구과제 목록 339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과제 목록 412
– 연표 419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천적 연구기관으로 도약해나가겠습니다!

1984년 9월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해온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의 35년을 준비하는 마음과 지방행정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나가기 위해《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국가적으로는 먼저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여 경제발전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사에 큰 획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0년대 들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구상과,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구상하여 이러한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유인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자치제도 체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대에는 그간의 구상들이 실현되는 해들이 이어져, 2012년 7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고 150여 개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2016년 12월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원주시대의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와 함께 중앙정부의 행 · 재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구축의 노력이 있어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기저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있었습니다. 향후 35년 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연구원 본연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고품질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 도약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중요한 기폭제와 원동력이 될 것이며, 연구원 구성원 개개인은 지속적인 혁신과 전문성 향상, 국민과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발간되는《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35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재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간 발간 작업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의 정성과 수고에 아낌없는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적 대안 마련하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35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윤태범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1984년 개원한 이후, 수많은 연구 활동과 정책개발을 통해 지방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지방자치 분야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지방행정의 미래를 전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위한 제도적 씨앗을 뿌렸습니다. 1990년대에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에 걸맞은 지방자치제도 마련과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년 이후에는 성숙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확대,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 구현 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행정, 통일시대의 지방 역할,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 고령화, 지방소멸, 주민 삶의 질 개선, 균형발전 등 지역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방행정의 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분야의 최고 전문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다해나갈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 35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 핵심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한 지 이제 30여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그보다 이전인 1984년 지방행정연구소 개소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연구를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역사와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제1대 장병구 소장을 시작으로 현재 제18대 원장을 맡고 계신 윤태범 원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분야 연구를 이끌어가는 핵심연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동안 활동을 바탕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이론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더욱 그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우리가 당면한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자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무역전쟁과 저성장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 간 협력과 협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여 함께 잘사는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33개 과제는 우리사회 공동체 복원과 불평등 완화를 넘어 지역 간 균

형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확대, 지역발전 정책에 관한 연구를 선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치분권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의 실현을 견인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항상 실질적 연구를 지원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이끌어가시는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35th Anniversary

1984 - 2019



지역균형발전의 꽃 피우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개원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도와 정책 연구에 헌신적으로 힘써오신 윤태범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여건이나 국민의식에 맞게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뒷받침해온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84년 연구원이 설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이 국내에 전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형 지방자치모델 및 선진화 설계,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 운영,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개발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련한 다양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지방자치의 토대를 형성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제 분권의 시대를 거쳐 포용을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 만큼 제도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의 미래상을 주민이 결정하고, 지역민이 바라는 시책을 스스로의 역량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구호 아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는 '포용적 분권발전 정책'의 이름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장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일자리 역시 중앙에 집중되어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 각 지역이 직면한 스스로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방자치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책무가 크다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대해 어느 기관보다 잘 이해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에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립적 성장기반을 지역이 주도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개원 3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지역균형발전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축사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35th Anniversary

1984 - 2019



중앙·지방 간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 기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분권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설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구원의 지난 발자취와 성과를 담아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사》의 발간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5년 기초 · 광역자치단체 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4대 동시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도 어느덧 25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 아래 지방정부가 직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과 연구를 수행하며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지원해왔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 시행에 힘입어 그간 지방정부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역량 제고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 확산의 선봉에 서며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힘을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자치역량과 주민주권의 눈부신 성장 ·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비율은 8 대 2이고 사무비율 또한 7 대 3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재천명하고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자치분권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해 지방을 살리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균형 발전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시대적 소명을 실천 · 지원해나가는 중추적 연구기관으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 또한 앞으로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맞게 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 35주년과 더불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사》 발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귀 기관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권 영 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구광역시장

축사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35th Anniversary

1984 - 2019



지방자치 싱크탱크, 지방정부의 동반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설립 35주년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사》 발간을 강원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역사가 있기까지 묵묵히 노력해주신 역대 원장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35년간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치단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설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책 싱크탱크로서 지방정부의 변함없는 동반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등의 사업은 지방자치의 튼실한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지방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에 이어, 2021년에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원주로 이전합니다.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분야의 최고 연구기관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는 연구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지역의 여건과 정책 환경은 연구원으로 하여금 선진화된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발휘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역량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또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사》 발간을 위해 애쓰신 윤태범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자치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3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날을 기념해, 지난 35년간의 연구 발자취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담은《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사》가 발간된 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연구원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윤태범 원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우리나라 지방행정, 지방재정, 세제 발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1991년에 지방의회가 부활되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는 우리의 지방행정이 주민을 위하는 주민 우선 행정으로 변모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지난 세월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8년의 역사만큼 성숙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만 집중되고, 지방으로는 책임만 떠넘겨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 특색에 걸맞은 정책을 펴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을 둘러싼 환경과 주민의 요구가 빠르게 변화한 것에 반해, 지방자치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이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성숙한 자치분권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시대적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국가와 국민만큼이나 지방과 주민이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이런 시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현실이 되고, 대한민국이 자치분권의 기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기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모든 구성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 기대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지방행정연구소'로 출발하여 198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우리나라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천을 방안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윤태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방행정과 지방자치가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3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 들어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지방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1단계 재정분권이 마무리되는 등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치분권종합계획'이나 재정분권 등 전반적인 지방분권정책이 시 · 군 · 구의 참여는 배제된 채 시 · 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 · 군 · 구는 정부가 추진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국회는 과거 관치시대의 시 · 도와 시 · 군 · 구 간 일방적 종속적인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시 · 도자치와 시 · 군 · 구자치는 상호 독립적이며 대등 · 협력적 관계입니다. 더 이상 '시 · 도–시 · 군 · 구 경유 행정'의 시대가 아닙니다.

현대 지방행정의 대부분은 주민과 접점에 있는 시 · 군 ·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나 정책이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해야 하는 대민서비스 또는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분권 정책이나 2단계 재정분권은 시 · 군 · 구가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실질적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시 · 도자치와 시 · 군 · 구자치가 조화롭게 협력 · 발전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많은 연구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35주년 개원을 축하드리며 연구와 임직원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염태영 전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경기 수원시장



지역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개원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 지방재정 및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에 헌신적으로 힘써오신 윤태범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설립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지방정치사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 대안을 발굴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향후 5년의 국정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국정운영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기대와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지방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그동안 중앙과 지방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행정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구로 국가핵심 연구기관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수용성과 실행가능성이 높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물을 산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구원 개원 3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보다 더 지방의 실상을 이해하고 지방화

시대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주시기를 바라며 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남 영광군의장

축사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35th Anniversary

1984 - 2019



평화시대 전진기지, 강원도에서 더 높이 도약을

우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35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행정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핵심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과 밀착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평화의 중심이자 남북협력의 선도지역인 강원도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 기념식에도 참석했었습니다만 강원도민을 대신하여 우리 강원도에의 정착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마도 국정운영의 핵심전략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싱크탱크로서의 기대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역은 저출생 ·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사회 · 경제적으로 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적 · 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인구 유출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앞장서서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 다양한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을 위한 이슈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핵심적인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분권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분권을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의 최종 지향점은 국민입니다. 분권의 결과로 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여 국정 운영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이 예정대로 입법화되고,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국가의 중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자치분권의 심화과정에서 강원연구원은 전국의 시 · 도연구원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은 물론, 강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방면에서 실천하고 계시지만 남북평화시대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지방분권의 테스트베드로서 강원도가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35년의 성과를 뛰어넘어 평화시대 전진기지, 강원도에서 더 높이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yesterday

Start the Age

첫발을 내딛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아장아장, 한 발 또 한 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그 도전과 역경을 헤치고
없는 길을 만들며 걸어온
35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of Local Self-Government

국민과 함께 그 길을 꿈꾸었습니다.



Research Institute today

지방행정의 창조적 발전
그것은 곧 국가 발전입니다.
사람의 나이로 서른다섯
좀 더 원숙하고 듬직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35년사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발전을 견인해온
자랑스러운 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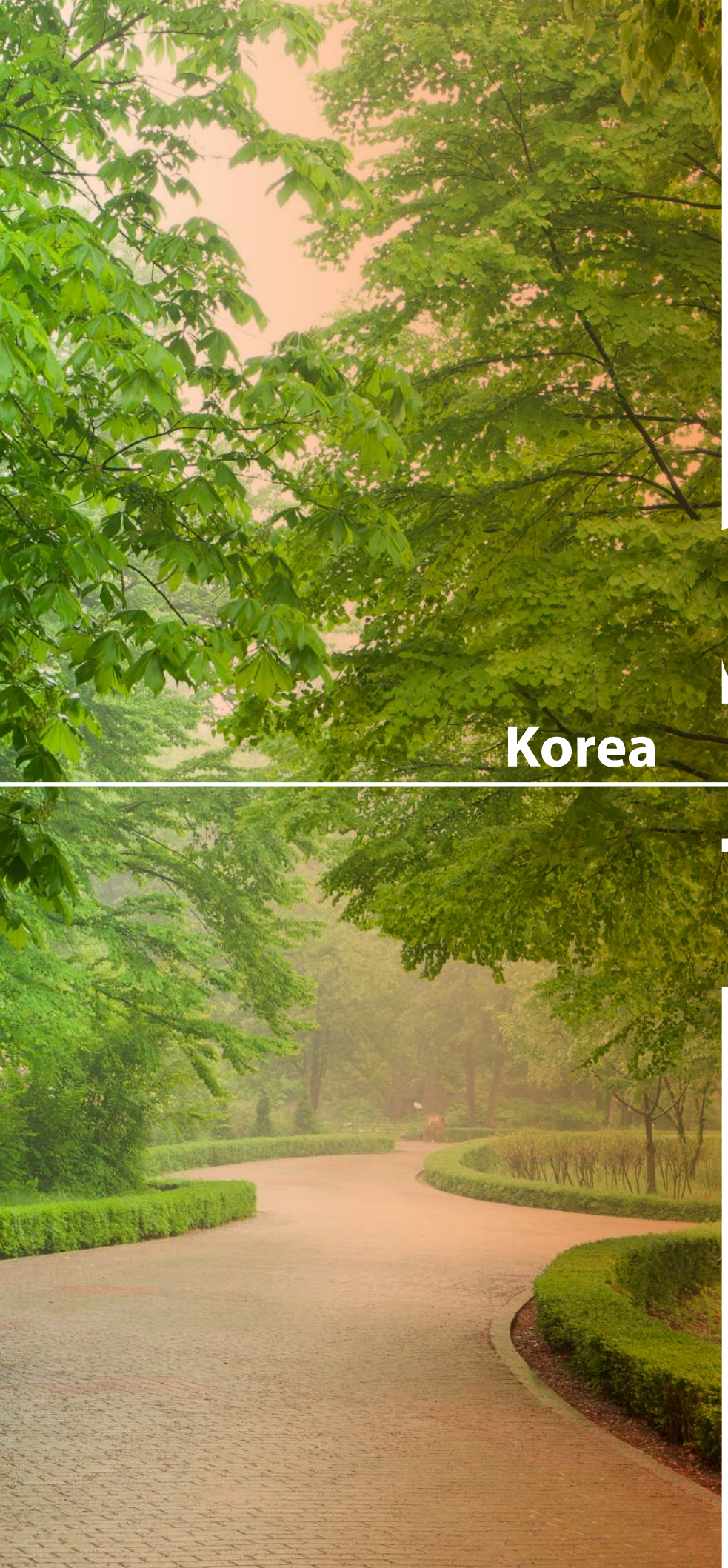


for Local Adminstration

국민과 함께 그 길을 걷습니다.



국민과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갑니다.



Korea

tomorrow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걸어온 길만큼
국민의 행복이, 그리고
국가의 발전이
한 발 더 가까이 성큼 다가옵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행보는 곧
미래 청사진이며 디자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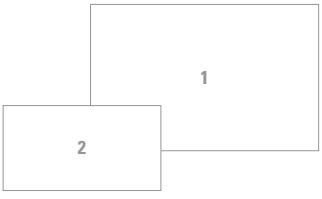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지방자치시대를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며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포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서초로,
서초에서 다시 원주로,
함께 걸으며 더욱 탄탄한
지방행정을 지원해온 사람들,
바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경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부진

people

새 길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와
분권의 시대, 지방과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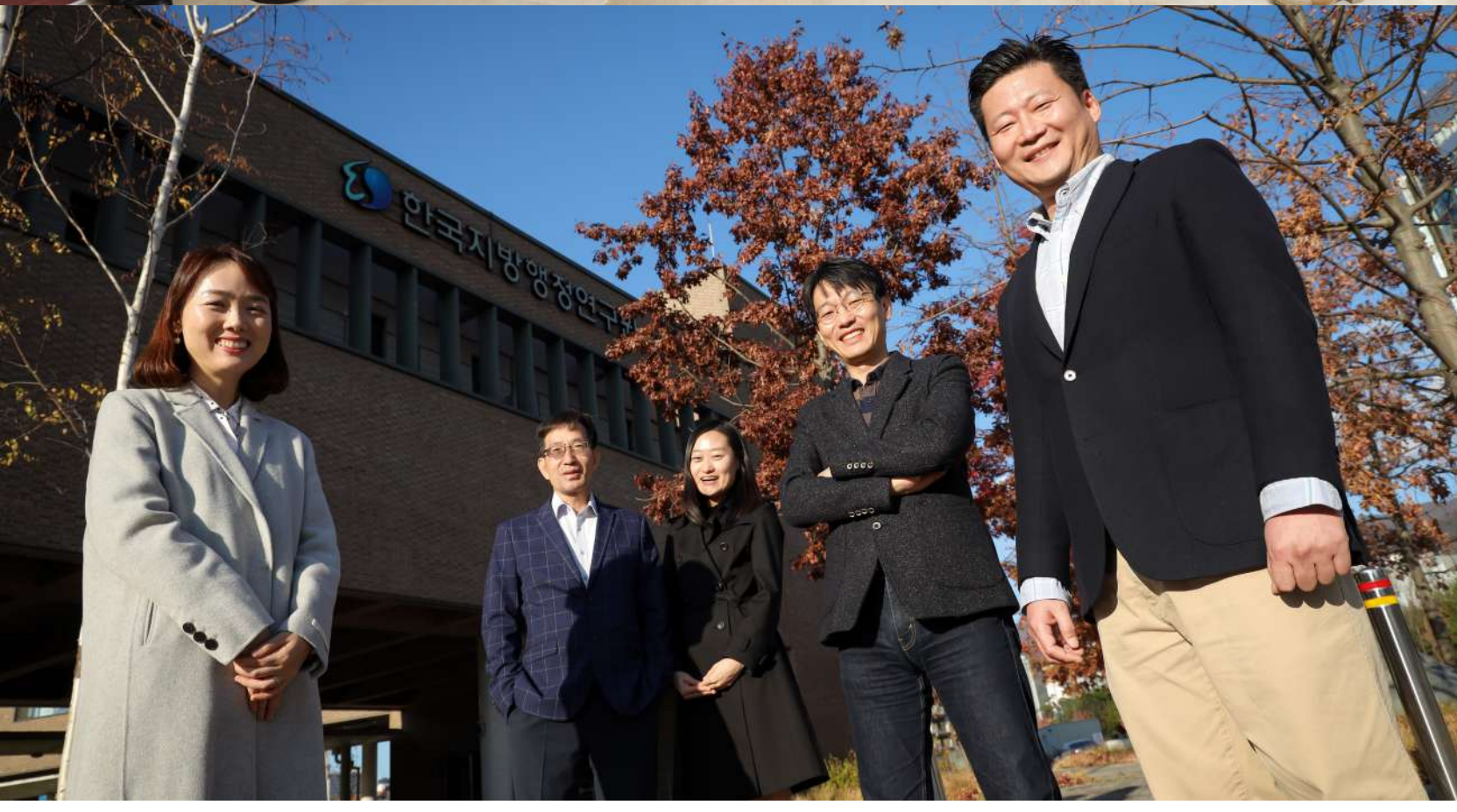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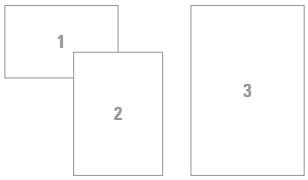
3

1 자치행정혁신실
2 경영지원실
3 지역포용발전실









1 대외협력단
2 자치분권제도실
3 지방재정경제실



언제나 즐겁게
언제나 진지하게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길을 찾습니다.

people



글로컬의 시대
자치와 분권, 국가발전이 공존하는
균형발전을 이끄는 사람들,
바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people

2

1

1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 기획조정본부




INFORM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4 —— 2019

KRILA 35 years of History

1984.09
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 개소,
초대 장병구 소장 취임



1986.03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법인명 개칭



1986.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공포
(대통령령 제11961호)

1984

지방자치, 첫걸음을 떼다

국가 전략연구였던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발전 구상'에서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2000년대를 향한 지방행정의 좌표 설정'이라는 이름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미래를 전망하고, 지방행정의 발전 좌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86.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 공포
(법률 제3809호)



1989.04
제5대 손재식 원장 취임

1990.08
제6대 김양배 원장 취임

1992.07
제7대 김안제 원장 취임
지방재정의 현실 세미나



1998.01
청사 신축 이전
(서울 마포 → 수원시 파장동)



1998.04
제10대 이달곤 원장 취임

1990

행정혁신과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국가 운영기조 변화와 더불어 행정혁신의 시기였던 1995년 이후, 민선단체장의 출범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변화된 행정 운영기조를 지방행정의 현장에 정착시켜왔다. 특히 1998년에 추진된 행정개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조직구조·운영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편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개혁 실현을 가시화하였다.



1994.10
개원 10주년 기념식



1999.10
청사 이전
(수원시 파장동 → 서울 서초동)

2000

2002.04
2001년 경영혁신추진 우수기관 표창



2002.08
제12대 김흥래 원장 취임

2004.06
2003년도 경영혁신추진실적평가 결과 우수기관 표창



2006.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개정 (법률 제7910호)

2008.08
제14대 유정석 원장 취임

2000

2004.11
UNESCAP LOGOTRI 의장기관 당선

2005.08
제13대 김주현 원장 취임

삶 속으로 들어온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설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총액인건비제'의 기초설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신장에 기여했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 및 재정 진단 사업을 지속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한 교육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견인하였다.



2009.06
개원 2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2010.01
제15대 한표환 원장 취임

2011.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개정 공포

2014.09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2014.11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설치
(지방재정법·
행정자치부 고시)

2010

내일의 도약을 위한 새 패러다임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 분야에서 중점 정책과제를 통한 기초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방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왔다. 2014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설립해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2016.12
청사 이전(서울 서초동→원주 혁신도시)



2017.01
'2017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4위



2017.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청사 개청식

2018.02
제18대 윤태범 원장 취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현판식



2019.10
개원 35주년 기념세미나



2019.04
제1회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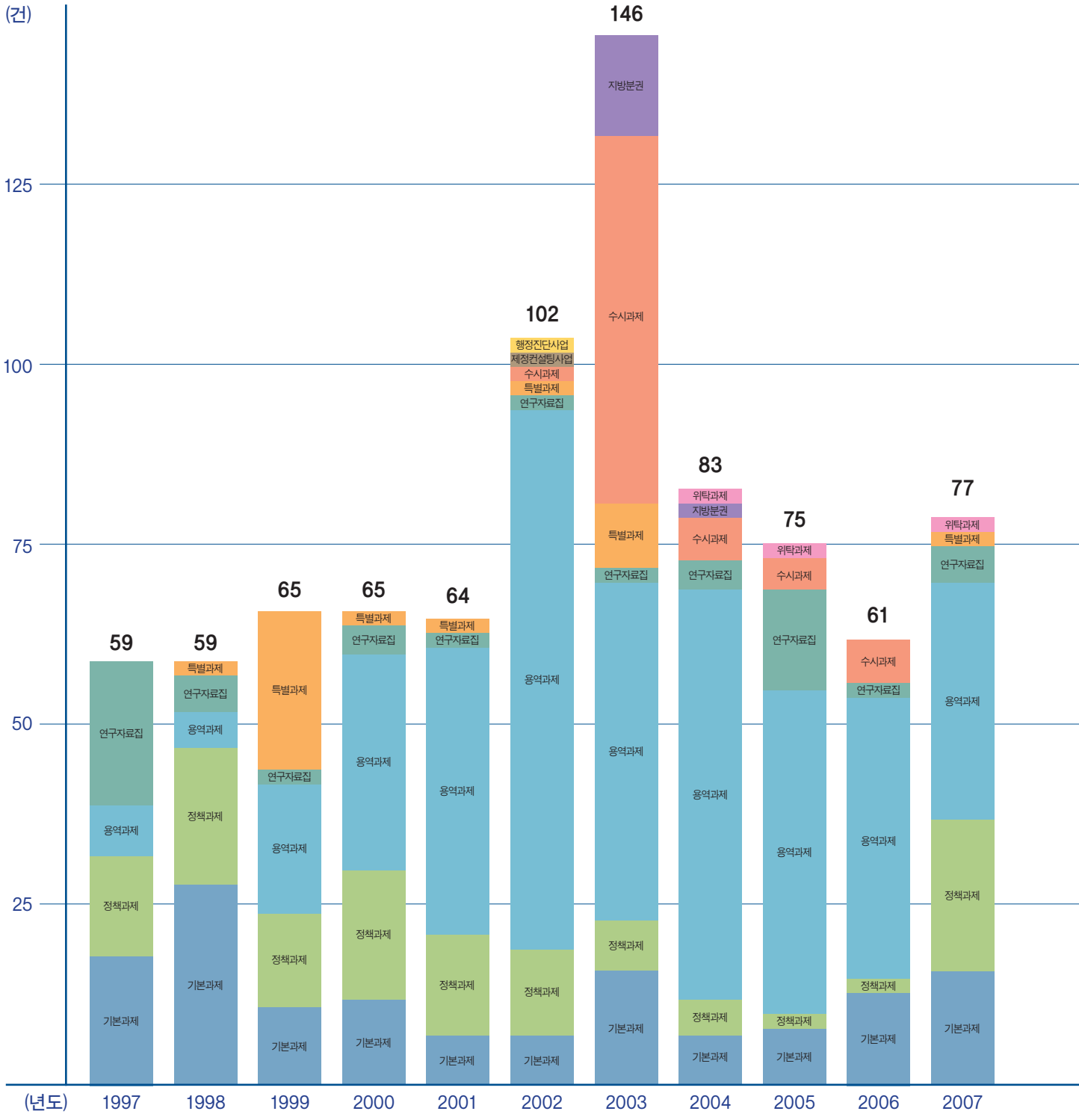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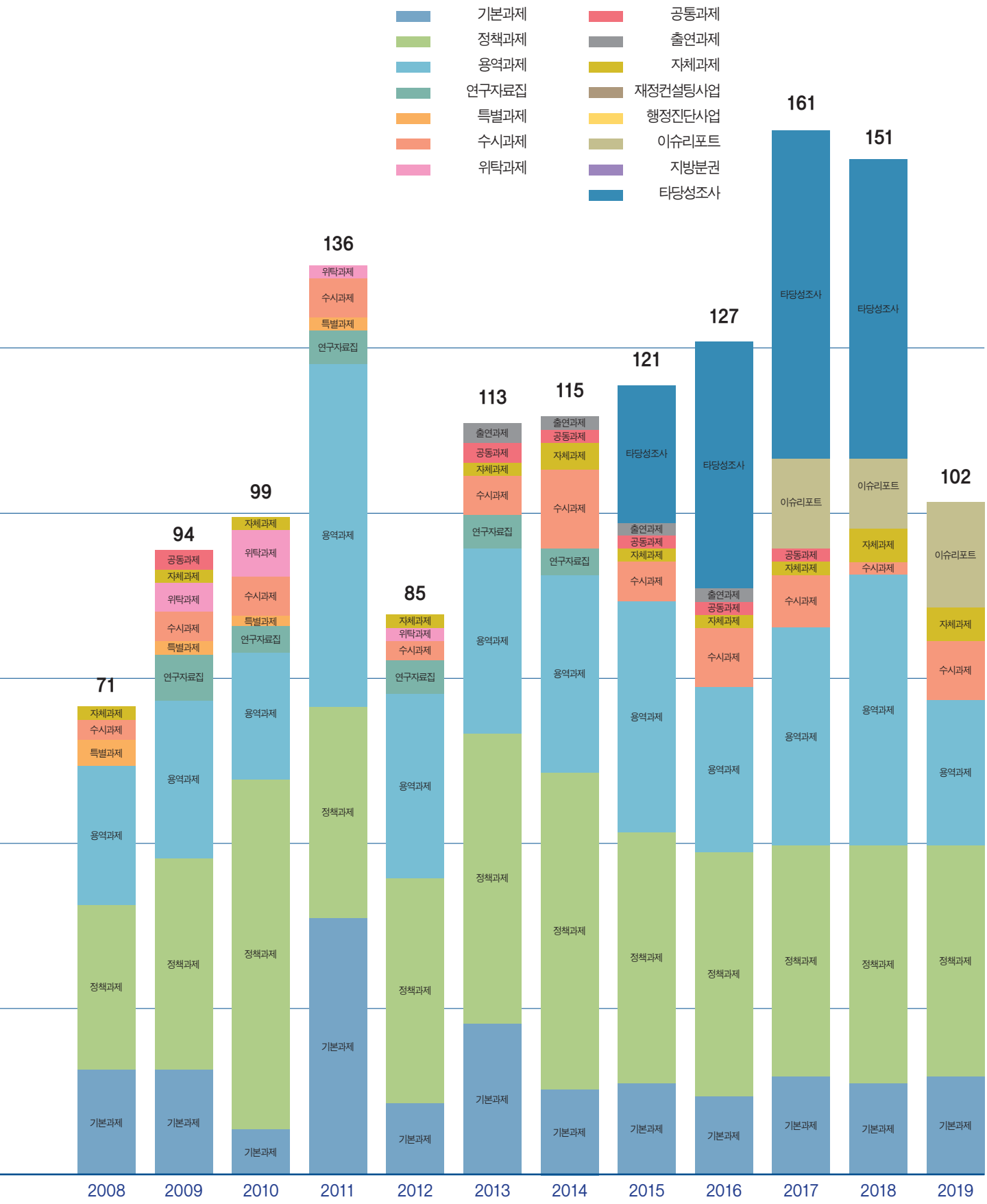
2019.11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류10주년 기념 한일
세미나

KRILA INFO 01

연구과제의 내용과 변화

1997 ——— 2019




기본과제
정책과제
용역과제
연구자료집
특별과제
수시과제
위탁과제
공통과제
출연과제
자체과제
재정컨설팅사업
행정진단사업
이슈리포트
지방분권
타당성조사
71
94
99
136
85
113
115
121
127
161
151
102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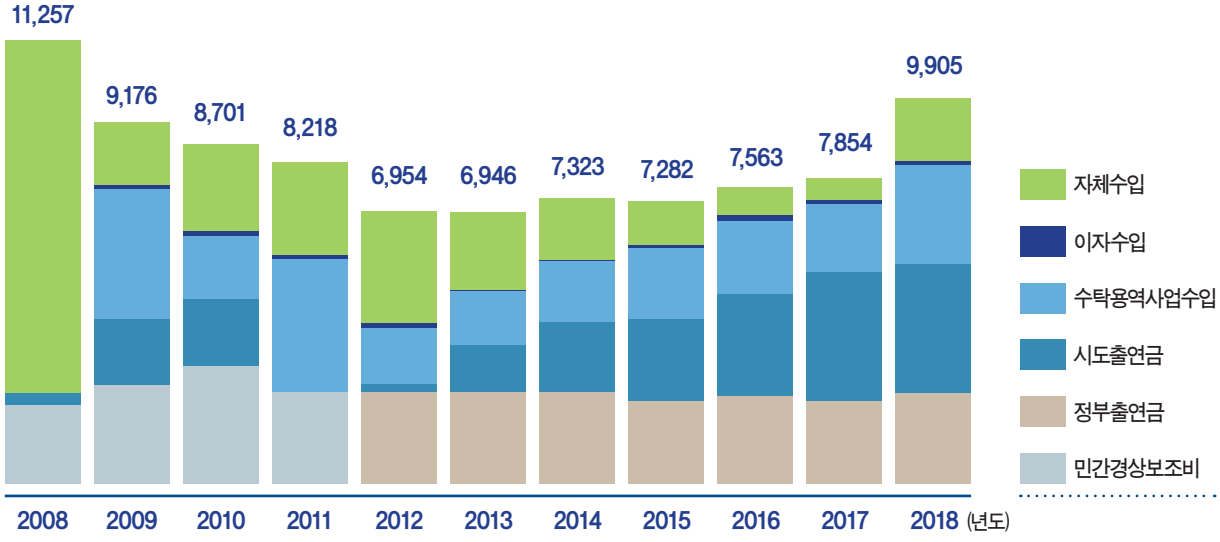
KRILA INFO 02

예산의 내용과 변화

2008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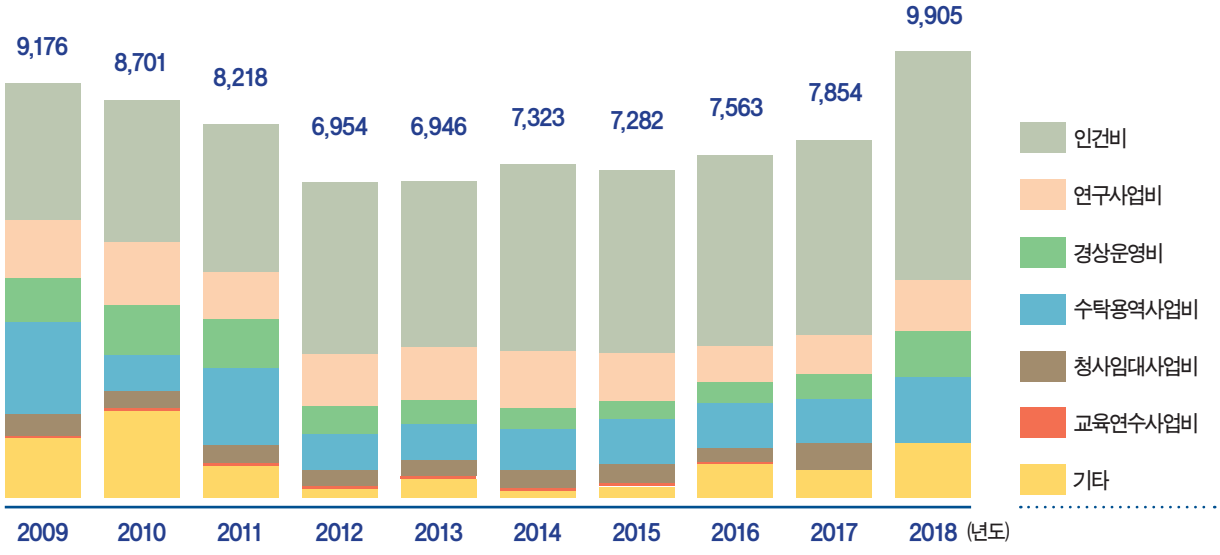
세입의 규모와 구성

(단위: 백만원)



세출의 규모와 구성

(단위: 백만원)



KRILA INFO 03

인원의 변화와 현황

1984 ———— 2019

(단위: 명)

년	정원	현원	원장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기능직	투자 분석직	계약직	정원추이 그래프
1984	8	8	1	4	1		2			
1985	21	21	1	14	2		4			
1994	64	50	1	30	11		8			
1995	64	52	1	31	12		8			
1996	64	51	1	29	13		8			
1997	59	45	1	25	12		7			
1998	45	31	1	23	6		1			
1999	45	32	1	23	7		1			
2000	45	35	1	26	7		1			
2001	45	35	1	26	7		1			
2002	45	38	1	26	10		1			
2003	45	39	1	25	11		2			
2004	47	44	1	27	12	2	2			
2005	48	41	1	24	12	2	2			
2006	48	46	1	29	12	2	2			
2007	54	49	1	33	12	1	2			
2008	57	52	1	33	12	1	2		3	
2009	57	57	1	37	15	2			2	
2010	62	54	1	38	14	1				
2011	62	50	1	34	14	1				
2012	62	46	1	31	13	1				
2013	62	50	1	35	13	1				
2014	62	52	1	37	13	1				
2015	85	60	1	38	14	1		6		
2016	85	65	1	41	14	1		8		
2017	85	70	1	43	15	1		10		
2018	97	74	1	43	16	1		13		
2019	102	83	1	49	17	1		15		

KRILA INFO 04

KRILA 청사 이전 약사

1984년 태동기

경기도 수원시
지방행정연수원 내
지방행정연구소 설립

1986년 마포시대

서울시 마포구
지방행정회관 6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으로 법인명 개칭

1997년 수원시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신청사
독립청사 숙원사업
해결

1999년 서초시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청사 매입 이전
지역균형개발지원센터,
지방투자사업관리세터
설립

2016년 원주시대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
분권의 시대, 새로운
도전과 기회 모색 중



KRILA INFO 05

소장자료 현황

2019.11.08. 기준

단행본 14,499

- 국내서 9,045
- 영미서 3,917
- 일서 1,537

정기간행물 3,575

- 국내서 1,576
- 영미서 1,084
- 일서 915

원문(국내서) 877

비도서(국내서) 91

세미나 75

- 국내서 71
- 영미서 4

(단위 : 권)

국내서	영미서	일서	합계
11,660	5,005	2,452	19,117

0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걸어온 길

열정의 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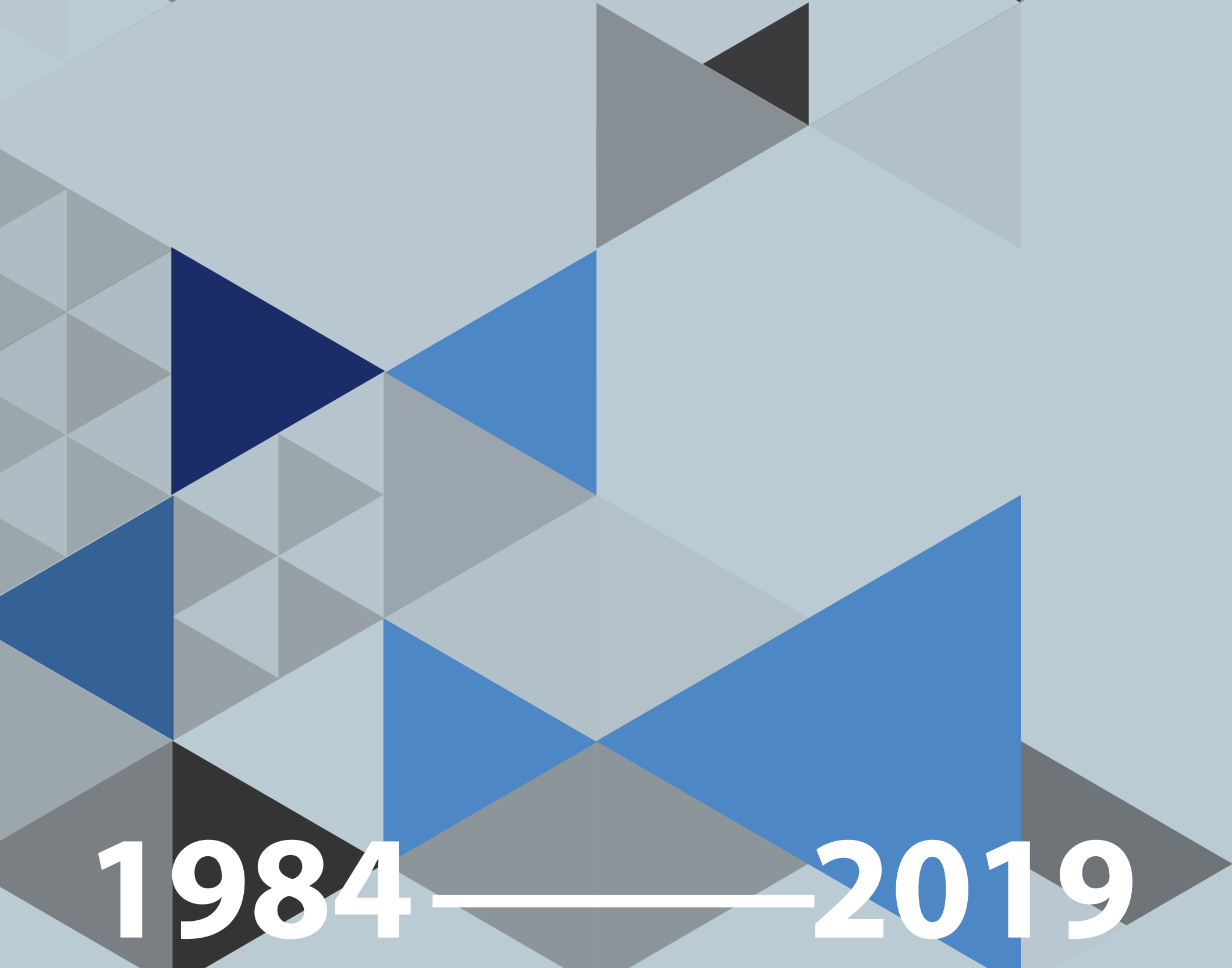
제1장 태 동 기 1984~1985 지방행정연구소의 개설

제2장 마포시대 1986~199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범과 지방자치의 실시

제3장 수원시대 1997~1998 지방자치제도화의 주도적 역할 담당

제4장 서초시대 1999~2015 지방자치의 정착과 새로운 역할의 수행

제5장 원주시대 2016~현재 혁신도시의 선도


1984——2019

1984 — 1985

01 장 태동기

지방행정연구소의 개설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고 했다던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35년 역사가 시작된 1984년, 출발은 조촐했다. 내무부 산하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내에 설립된 지방행정연구소는 소장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 작은 조직이었다.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태동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발은 1984년 '지방행정연구소' 설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설립 당시 내무부 산하 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장이 연구소장을 겸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연구소를 경기도 수원시 지방행정연수원 내에 두었다.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임직원으로 시작한 태동기에는 지방행정의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기초적인 단계의 일부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 연구소 행정을 운영해나가는 가운데, 이사회와 위원회에서는 내무부의 지방행정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소의 위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1985년에 명실상부한 한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 연구기관으로 승격되어 '한국지방행정연구소'로 거듭나게 되었다.

1대 소장에 이어 2대 소장 역시 겸직을 하였지만, 3대 소장이 취임하면서 겸직에서 전임으로 바뀌었고, 이와 함께 수원시 지방행정연수원 내에서 서울시 마포구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바야흐로 '마포시대'를 열게 되었다.

연구소의 역할과 구성

01.

지방행정연구소 설립배경

1981년 제5공화국의 출범 이후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함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정부는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앞서 우선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지방행정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지방행정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내세울 수 있다. 먼저 외적 요인으로 1980년대 초의 시대적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요인으로 미래의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행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외적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환경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의 변화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우리나라는 미군정을 거쳐 1948년 정부수립이 되면서 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를 규정하였다. 이후 제1·2 공화국 시대에는 민주화의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채택을 둘러싸고 많은 우여곡절과 진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러다가 지방의회를 해산한 제3공화국 때부터는 경제개발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단 지방자치제도는 수면상태에 들어갔다. 1980년 이후에는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민주화 열기가 뜨거워졌으며, 마침내 지방자치체 실시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다.

내적 요인으로는 제5공화국의 내무부를 중심으로 하여 미래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중장기 정책과제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기반이 먼저 조성된 다음에 정책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만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실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전반기에 정부는 내무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첫째,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앞으로 연구·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예컨대 행정계층구조 및 계층 간 사무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개선·확충,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훈련,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관리와 합리화, 지방도시권역의 기능 및 개발 등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개발에 관한 제 분야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을 대부분 민간기관 등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소요는 과다한 반면 연구 결과는 미흡하여 행정시책으로 반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내무부를 제외한 중앙 타 부처의 경우 대부분 특별법인 또는 직제상의 산하기관, 예컨대 경제기획원은 한국개발연구원, 건설부는 국토개발연구원, 농산부는 농촌경제연구원, 문교부는 교육개발원, 재무부는 조세문제연구소, 외무부는 외교안보연구소 등 자체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하면서 시책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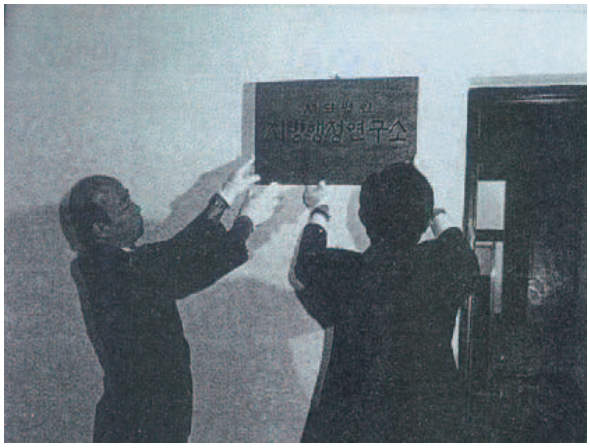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로 내무부는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문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02.

연구소 설립계획 수립

지방행정연구소 설립 의견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84년 초 지방행정연수원 간부회의에서였다. 내무부 본부 재직 경험이 많은 연수원 간부들은 그동안의 업무 경험상 지방행정의 종합적·장기적·체계적 관점에서의 연구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수원 내부적으로도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연계하는 기능 강화 측면에서 연구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마침내 1984년 3월 31일 장병구 연수원장은 제3회 고급간부 수료식에 참석하기 위해 연수원을 방문한 당시 이춘구 내무부차관에게 연구소 설립에 관해 건의하였다. 이렇게 되자 내무부는 물론 행정부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어 본격적으로 연구소 설립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 6월 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 개소 현판식



1986년 3월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법인명 개칭 후 현판식

연구소 설립 계획은 지방기획과장, 지방행정국장, 차관보, 차관을 거쳐 1984년 6월 4일 당시 주영복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84년 7월 9일 지방행정연수원장을 비롯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 설립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고도정보사회로의 변혁과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 등 지방행정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 요청에 부응하여 지방행정의 당면 정책과제를 합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조사·연구코자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뜻을 모아 본 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를 설립키로 함."

이러한 설립취지에 따라 통과된 정관 제2조에서 '연구소는 국가발전 및 지방행정의 선진화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 부문의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행정연구소 설립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위원장에 지방행정연수원의 장병구 원장을, 간사에 연수원의 곽만섭 연구발전부장을 선임하였다. 곧 선임된 장병구 위원장의 주재로 정관(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졌으며, 19명 위원 전원 만장일치에 의하여 무수정으로 의결을 확정지었다.

1984년 8월 16일에는 내무부장관 법인설립허가(제84-23호로)를 받았으며, 이어서 8월 22일 수원지방법원(제103호)에 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 설립등기를 마쳤다.

03.

지방행정연구소 개소

지방행정연구소는 설립등기를 마친 직후인 1984년 8월 29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9월 5일에는 설립발기위원회 위원장인 장병구 지방행정연수원장이 초대 소장을 겸임토록 했으며, 연구자문위원으로는 김안제 서울대 교수 외 7인을 위촉하였다.

1984년 9월 7일 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는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184번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연구소 개소식은 이춘구 내무부차관을 비롯하여 장병구 소장, 연구자문위원,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및 시·도의 간부, 고급공무원 정예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행정연수원 도서관 1층에서 거행되었다.

연구소 사무실은 지방행정연수원 내에 마련되었다. 초기 인력 구성은 주임연구원 2명, 연구원 2명, 사무원 1명, 기능원 2명 등 소장을 포함한 총 8명이었다. 초기의 연구소 조직은 이사회 아래 소장과 감사·연구자문위원회를 두었으며, 실무 부서로는 연구부와 행정실로 기본 조직이 구성되었다.

1984년 10월 10일에는 초대 장병구 소장이 제주도지사로 발령되면서 지방행정연수원장직을 떠남에 따라, 일단 이규환 주임연구원에게 소장 직무대행을 맡겼다. 그리고 10월 19일 제2차 이사회 개최를 통하여 이창수 내무부 지방행정국장이 제2대 연구소장겸 이사장을 맡게 되어, 10월 30일 정식으로 취임하였다. 이창수 소장은 전임 소장과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연수원장직도 겸임하게 되었다.

04.

한국지방행정연구소로 명칭 변경

지방행정연구소는 1985년 1월 15일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지방행정연구소'란 명칭의 부적합성이 도출되었다.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처럼 '한국'을 앞에 넣어 '한국지방행정연구소'로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명칭 변경은 다른 연구기관과 동일한 등급의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당위성과 함께, 우리나라 지방행정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85년 4월 9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의결을 거쳤으며, 그 직후인 4월 11일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소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조직, 인력 및 재정의 변화

01.

조직개편 단행과 인력구성 변화

1985년 4월 1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소는 연구소 명칭 변경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는 새롭게 제3대 소장 체제하에서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사무실의 서울 이전에 대비하여 신규 연구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단행은 연구소가 소장의 지방행정연수원장 겸임체제에서 제3대 전영춘 소장의 전임체제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기구조직의 개편과 인력 보강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소는 설립 목적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내무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초기의 단순한 연구부와 행정실 기구만으로는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소는 내무부의 기구조직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기구를 확대·개편하기로 하였다. 즉 기존 연구부를 세분화해서 그 밑에 지방행정연구실·지방재정연구실·지역개발연구실 등 3연구실을 두어 연구부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1연구부·1행정실 체제에서 1연구부·3연구실·1행정실 체제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단행으로 그에 합당한 새로운 인력도 보강하였다. 처음 지방행정연구소로 출발할 당시 1부 1실의 정원은 소장을 포함해 총 8명이었는데, 1985년 4월의 조직개편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연구 경력자를 비롯하여 신규 연구원의 보강이 절실하게 요청되었으므로, 1985년 6월 1일 연구소 최초로 제1회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다. 이때 공채를 통하여 신규 채용한 6명의 연구원은 새롭게 연구부의 기능을 강화한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개발 분야에 각 2명씩 인사발령 되었다. 경력자로는 주임연구원 1명이 있었고, 나머지 5명은 신입 연구원이었다. 이로써 소장 1명, 연구위원 1명, 수석연구원 3명, 주임연구원 4명, 연구원 6명, 행정실장 1명, 사무원 1명, 기능원 4명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소의 임직원은 총 21명으로 늘어났다.

이때 신임 전영춘 소장은 1985년 4월 16일 충청남도 당진·보령 군수 등을 역임한 김형태 행정실장을 기용해 전문 행정인력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연구소 주임연구원이 맡았던 행정업무를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의 전문행정가가 맡게 됨으로써, 연구기능을 보조하는 행정지원 체제의 기틀을 제대로 갖출 수 있었다.

02.

연구소 초기의 재정과 운영

초기 연구소의 세입은 크게 나누어 출연금 수입과 자체 수입으로 이루어졌다. 출연금 수입은 직할시와 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육성법」에 의거해 출

연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법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는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하는데, 그 금액은 내무부가 시·도의 일정액 또는 일반회계 규모의 일정비율로 설정하였다.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연구원 내에 설치한 것으로, 그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였다. 이러한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체 수입으로는 기금 운용에 따른 기금의 과실수입과 외부기관으로부터 용역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받는 용역수입, 연구보고서 등 각종 발간물 판매에 따른 출판물 판매수입 등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소의 운영재원은 시·도 출연금과 자체 수입으로 조성하였다. 집행예산은 총운영재원 중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편성하여 점차 기금을 적립해나가도록 하였다. 연구소의 기금은 매년 12개 시·도로부터 출연되는 기금 중 예산편성 시에 기금으로 확보해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서울특별시는 제외되어 있었다.

한편 연구소의 운영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따라서 연구소장은 매년도 수지결산을 연도출납 폐쇄 후 2개월 이내인 익년도 2월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될 운영비에서 남아 있는 잔액, 즉 회계연도의 잉여금이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연구소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별도계정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며, 연구소가 기금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였다.

1984년 9월 1부터 업무를 시작한 지방행정연구소의 당해 연도 예산액은 운영자금 5,040만 원과 설립자금 3,000만 원을 합한 총 8,040만 원이었다. 이는 12개 직할시·도가 출연한 금액을 연구소 운영자금으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었다. 즉, 각 시·도에서 420만 원과 설립자금 250만 원을 합한 670만 원을 각기 무상 출연한 금액이었다.

1985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운영재원은 9억 원이었다. 이는 연구소 개소 초기인 1984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8,040만 원에 비하면 무려 11.25배나 늘어난 액수였다. 12개 시·도당 출연금 7,0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된 데다 자체수입 증가분 6,000만 원을 더한 금액이었다.

1) 예산편성

연구소 초기의 운영재원은 출연금과 자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총운영재원 중에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집행예산을 편성하였다.
연구소를 개소한 첫해인 1984년도 집행예산내역은 총운영재원 8,040만 원 중 2,900만 원이었다. 이 예산에서 인건비 1,000만 원, 연구사업비 400만 원, 경상운영비 1,500만 원이 편성되었다.
1985년도에는 총 운영재원 9억 원 중 5억 1,700만 원이 집행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이 중에서 인건비 1억 900만 원, 연구사업비 3억 4,300만 원, 경상운영비 6억 500만 원이 지출되었다.
지방행정연구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소를 거치는 연구소 시대인 1984년 9월부터 1986년 2월까지의 집행예산총액은, 총운영재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4년 36.2%에서 1986년 57.4%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데다, 연구소 개소 첫해보다 그 이듬해에 연구 활동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결과였다.

2) 연구소 관련규정 제정 및 개정

연구소 개설과 동시에 제정된 규정은 직제 및 인사규정, 보수규정, 재무회계규정 등이었다. 그 후 1985년 7월 12일과 1985년 10월 15일 2차례에 걸쳐 연구소 관련규정이 제정되었다. 제1차에는 기금관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지급규정, 문서관리규정, 용역사업규정 등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제2차에 제정된 내용은 직원채용규칙, 초임금 및 경력 등 환산기준규칙, 연구장려금지급규칙, 위임규칙, 문서보관·보존규칙, 직인관리요령, 원고료지급기준, 실비보상적 경비지급기준 등이었다. 제2차에는 임시직원규정도 마련되었다.
또한 연구소 초기에 이루어진 규정의 개정은 직제 및 인사규정이 1985년 4월 11일에 1회, 보수규정이 1984년 11월 29일과 1985년 4월 11일 2회, 재무회계규정이 1985년 4월 11일 1회 이루어졌다.
이처럼 연구소 초기는 기반 구축을 위한 시기로, 연구소 운영의 기본이 되는 규정과 규칙의 제정이 주로 이루어졌다. 규정의 제정은 초기에 제정된 각종 제 규정의 세부적 운영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더욱이 직인관리요령과 실비보상적 경비지급기준 등의 예규는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이사회 활동

지방행정연구소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시대의 이사회는 연 2회 개최되는 정기이사회가 있었다. 임시이사회의 경우 소장·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사회는 연구소의 기본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정

관의 변경,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주요 재산의 처분 및 기본재산의 증감, 연구소의 해산,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였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이사는 직할시·도의 기획관리실장,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장, 지방행정국장, 지방재정국장, 지방개발국장, 민방위국장, 지방행정연수원의 연구발전부장과 교수부장, 연구소장 등이다. 그리고 임의직 이사는 관계 분야의 저명인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었다.

연구소 초기의 이사회 활동은 서면이사회 6회, 소집이사회 2회가 있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4년 연구소 설립 당해 연도에 약 5개월 동안 4회, 1985년도에 4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1984년과 1985년 시기에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은 연구소 정관 및 관계규정 개정 5회,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3회, 연구소 인수관련 사항 심의 2회, 예비비 사용 및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5회 등이었다. 이처럼 당시는 연구소 개소 초기였으므로 이사회 개최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다. 따라서 이때는 규정개정이나 추경예산, 임원선임, 사업승인 등을 주로 다룬 것을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다.

4)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연구소장은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 등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할 때 연구자문위원회를 열 수 있다.

1985년 1월 15일 개최된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에는 14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985년도 연구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연구소의 신규 연구사업인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에 관한 연구〉, 〈지방세 확충방안 연구〉, 〈도시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광역단위 투자효율화를 위한 연구〉, 〈도시미관과 색채에 관한 연구〉 등이었다.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는 1985년 5월 3일에 개최되었다. 이때의 자문내용은 연구소 개소 이후 최대 규모의 연구과제사업인 〈2000년대의 지방행정좌표 설정〉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연구 및 연구수행 방법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된 이 회의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연구소 개소 후 시작된 〈지방행정 기능분석〉 연구과제의 중간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도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제3차 연구자문위원회는 1985년 7월 16일 개최되었으며, 제2차 회의 때 논의한 〈2000년대의 지방행정좌표 설정〉 연구의 세부 계획안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동시에 1985년도에 개최할 〈2000년대 지방행정 발전〉 세미나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었다.

결국 연구소 초기의 연구자문위원회 소집은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개발 분야 등으로 구분되어 자문에 응하였다기보다는 연구소 사업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에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03.

연구소 서울로 이전

한국지방행정연구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정연구기관으로서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원시보다 서울시에 사무실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지방행정 연구업무는 주로 내무부와 연관되어 있었는데 연구소가 수원에 떨어져 있었으므로, 연구원들은 잦은 출장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연구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소는 1985년 4월 12일 제2대 이창수 소장의 이임과 함께 제3대 전영춘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전영춘 소장은 전직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장이었으며, 전임 소장과는 달리 현직 공무원이 아닌 전직 공무원이었으므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장은 겸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영춘 소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소의 업무만 관장하는 최초의 전임제 소장이 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소는 제3대 소장 취임과 함께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1985년 4월 16일 소재지를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184번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34-2번지 지방행정공제회관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1985년 4월 16일 수원에서 서울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새로운 전력을 갖추어 '마포시대'를 열게 되었다.

서울로 사무실을 이전함과 동시에 한국지방행정연구소는 정관도 수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지방행정 분야의 교수 및 관련자들과 접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속기관이 아닌 내무부의 독자적인 연구기관으로서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및 지리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지방행정회관 10층의 일부 공간 80.3평을 사용하던 한국지방행정연구소는 신규 채용인력을 포함한 21명의 직원이 연구 및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사무실이 협소하여, 1985년 12월 16일 지방행정회관 내의 6층 전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확보한 6층 공간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총 210평으로, 10층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던 때보다 약 2.6배 확장된 것이다. 연구소장실 20평, 연구위원 및 연구실 68평, 행정실 18평, 자료실 23평, 회의실 28평, 공용면적 52.5평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없던 회의실의 마련으로 연구자문회의나 연구책임자회의 등을 진행하는 자체 공간이 확보되었

으며, 자료실의 설치로 지방행정 관련 자료의 집대성이 가능해진 점은 연구 활동의 간접적 지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었다.

지방행정의 초기 연구기반 조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설립은 우리나라 지방행정, 지방자치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연구원의 성장·발전의 과정은 한국 지방자치사의 전개과정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출발은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헌법과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선거의 실시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전쟁 중이던 1952년 4월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더구나 최초에는 특별시장과 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선출하였으며,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였다. 이후 1960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하여 직선되면서 비로소 최초의 완전한 민선자치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렇듯 민선자치의 실시가 정착되는 듯하였으나, 1961년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하여 지방자치는 전면적인 중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특별시와 도의 광역의회, 시·읍·면의 기초의회를 강제해산하고, 단체장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더하여 1972년 유신헌법 부칙 제10조는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구성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논의가 중단되어온 지방자치제는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지방행정의 효율화이고, 둘째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였다.

지방행정의 효율화 분야는 지방행정 기능분석에 대한 연구나 대도시 행정제도 개편방안 연구, 지방재정조정제도 연구, 지방재정수요 예측 및 재원대책



1995년 10월 한국정치 50년의 회고와 전망

방향 연구 등 지방행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행정에 대한 정책 수립은 물론 연구원 내외의 지방행정 분야 연구에 대한 초석이 되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분야는 다시 두 가지 방향에서 준비되었다. 그 하나는 2000년을 대비한 다양한 탐색으로, 2000년대 지방행정의 좌표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세미나에서 제시된 2000년대 행정변화와 지방행정, 2000년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2000년대의 지방행정의 구조와 운용 등이다. 이러한 작업은 지방행정의 중장기적 관련정책의 수립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다음 다른 하나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비교 및 한국의 지방자치제 실무방안 연구 등으로, 지방자치제를 대비한 사전적 준비작업이 이미 이때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86 — 1996

02 장

마포시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범과 지방자치의 실시

1986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고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민주화의 실현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많은 것이 변화, 발전하던 이 시기에 연구원의 위상 또한 크게 달라졌다.

대통령 직선제 부활과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

1986년에서 1996년의 기간은 지방자치제의 도입 전후와 맞물려 연구원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특히 1986년 대통령 직선제의 부활과 함께 제6공화국이 출범하고, 이러한 민주화의 실현은 곧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는 국민적 요구로 이어졌다. 그리고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마침내 1995년 4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지방자치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연구원의 위상도 많이 달라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되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 인력도 확대되고, 연구과제도 주제의 폭이 더욱 다양해지고 수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늘어 지방자치 각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 시기 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제도의 구체화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또한 각종 세미나를 통하여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제반과제와 정착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공동체 발전전략, 고객지향적 정부 구축을 위한 민·관 합동 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선자치 정착에 다양한 민의를 담은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아울러 수행하였다.

법령 및 관련 정책

01.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법인명 개칭

1986년 3월 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소는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법인명을 변경하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5월 8일 국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정부 차원에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을 통과시켰으며, 9월 11일에는 대통령령으로 동법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변경되고 그 법적 지위가 강화된 것은 당시 민주화의 열기와 지방자치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제5공화국 헌법은 그 부칙 제10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5년 3월 29일 국무총리 산하에 각계각층의 인사 30인으로 구성된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 위



1995년 4월 자치단체장직선 이후의 중앙-지방관계의 발전적 정립방안

원회를 통하여 지방자치제실시에 필요한 제반 과제의 연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1년 3개월간의 연구 끝에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을 마련했고, 이후 전국 시·도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과 당정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1986년 10월에 지방자치제 실시 기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02.

연구원의 법적 기반 강화 및 토대 마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되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내무부 소관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자치제 실시 준비에 필요한 연구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위가 변경된 연구원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었다.

첫째,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하되,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해야 한다. 연구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익년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공유재산에 대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한다.

다섯째, 연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대해 지방행정과 관련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받을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곱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서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서의 서류를 첨부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1995년 9월 지방화시대와 내무부의 바람직한 역할

제출해야 한다.

여덟째, 연구원은 회계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우선적으로 보전하고 그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에 전입하도록 한다.

아홉째, 내무부장관은 산하단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조직, 인력 및 재정의 변화

01.

연구원의 기구조직 변화

1986년 5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과 동법 시행령의 공포로 연구원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조직을 확대·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조직은 원장을 정점으로 산하에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부와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 외에 이사회, 연구자문위원회, 감사로 구성되었다. 연구부는 지방행정연구실, 지방재정연구실, 지역개발연구실 등 3개의 연구실을 운영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점차 연구 과제가 늘어나고 연구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과 인원구성에 있어서도 변화를 거듭하였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인 1990년대 전반기에만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1990년 3월 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기획 조정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기획실을 신설, 효율적인 연구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1991년 1월 7일에는 전산실과 자료실을 신설하였다.

1992년 2월 1일에는 연구부에 정책제도연구실을 신설하고, 기존의 행정실을 1사무국 1과로 개편하였다. 이는 1991년 10월 5일 총무처 산하의 한국행정연구원이 개원됨에 따라 당시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 중 최소 규모였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구요원의 정예화를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993년 1월 27일에는 연구부에 방재연구실을 설치하였다. 이는 1991년 중앙정부 부처 간 기능조정으로 건설부가 담당하던 방재법률기능이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당면한 방재연구기능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하게 된 데 따른 조치였다.

1993년 12월 31일에는 1부 6연구실 2지원실·1국 1과 체제에서 정책제도연구실을 폐지하고 자료실과 전산실을 통합해 1부 5연구실 1지원실·1국 1과 체제로 운영하였다. 이때 연구기획실은 기획정책연구실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부에는 연구기획실·정책제도연구실·지방행정연구

실·지방재정연구실·지역개발연구실·방재연구실 등과 연구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자료실·전산실을 설치하였다. 또한 행정 및 연구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과를 두었다.



1995년 10월 기초의회의원 연찬회

02.

연구원 조직 강화에 따른 인력증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90년대 전반기에 5차례의 기구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이와 더불어 인력증강도 함께 이루어졌다. 연구원의 법적 지위변경이 있었던 1986년 당시의 직원 수는 약 30명이었다. 이 수는 1989년까지 이어지다가 1990년 연구기획실의 신설로 전체 구성원이 증원되었다. 또한 1991년 이후 거듭되는 조직 변경 및 신설 부서의 증강으로 1993년까지 정원은 68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법적으로 규정한 정원 규모와는 달리 실제 직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1993년 말 법적 정원은 68명이었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56명밖에 안 되었던 것이다. 결원이 연구직에서 9명, 관리직에서 3명이나 발생하여 총 12명에 이르렀다. 이는 연구과제에 따른 조직 규모의 축소와 현상 유지 추세에 따라 그 수를 조정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직 규모의 축소로 1994년에도 정원이 64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한편 직원의 직급구성은 크게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직은 연구위원·수석연구원·책임연구원·연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었다. 관리직은 사무국장, 사무원 1~4급, 전산원 2~4급, 사서원 2~4급, 기능원 1·2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03.

연구원 운영기금·출연금 조성과 예산집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된 1986년 이후 1994년까지 세입예산은 시·도 출연금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1990년에는 출연금 수입이 47억 4,500만 원에 달하였다. 1991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4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자체수입은 1993년도에 121억 원을 기록하는 등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여 연구원의 재정 안정에 기여하게 됐다. 1991년 이후 시·도 출연금이 감소한 것은 당시 내무부의 교부세 배정금액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늘어난 기금 적립액에 따른 이자와 실수입 증대에 힘입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자체 수입의 비중이 25~34%에 이르렀으나, 1994년에 들어와 그 비중이 크게 줄었다. 그 이유는 기금 예치이자수입 중 미수이자 21억 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94년과 1995년에는 대부분이 출연금 수입으로 이루어졌다.

1994년 시·도 출연금 수입은 33억 8,100만 원으로 총수입의 85.2%, 1995년에는 출연금 수입이 34억 1,400만 원으로 총수입의 94.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6년 이후부터는 자체 수입이 출연금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4년 이후 1993년까지 예산집행 총액은 117억 5,200만 원이었다. 인건비로 45.2%(53억 1,500만 원), 연구사업비로 27.3%(30억 2,400만 원), 경상운영비로 27.5%(32억 3,300만 원)가 사용되었다.
연구원의 법적 지위가 변경된 후 편성된 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의 연도별 결산액 추이는, 1986년 결산액(4억 8,800만 원)을 기준으로 1993년에는 6배로 늘어났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세출 결산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1986년 이후 매년 총예산의 50% 이내에서 지출되었고, 연구사업비는 30% 정도까지 증감이 나타났다. 경상운영비는 199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다.
1995년 세출예산은 28억 6,400만 원 중 인건비 54.5%, 연구사업비 25.2%, 경상운영비 20.3%가 지출되었다. 1996년에는 세출예산 27억 4,600만 원 중 인건비 62.4%, 연구사업비14.6%, 경상운영비 23.0%였다.

지방자치의 도입과 연구원의 기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마포 시기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년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 확대와 함께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거쳐, 민선자치의 틀이 확정되고 도입되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72년 이후 논의가 중단되어왔으나,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에서 그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었다. 1987년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에 의한 '6·29 민주화선언'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인간존엄성 존중과 인권신장, 사회정화조치 단행,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실행, 자유 언론의 창달,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



1996년 5월 제1회 방재행정 세미나



1995년 9월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방안 공청회

한 경쟁의 보장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정권 이양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1988년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1991년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직선에 의하여 선출됨으로써 민선 1기 자치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의 제도 도입과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연구과제 수행, 각종 세미나를 통한 관련 논의의 확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였다. 또한 방재와 도시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를 계기로 방재연구실을 설치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 역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화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1년 구성된 지방의회는 운영과정의 미숙, 권한의 실질적 한계, 의원 개개인의 전문지식 미흡 등으로 활동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와 1991년 외국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1994년에는 지방의회의 위상정립방안이 연구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조정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1995년에는 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구체화를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특히 다양한 세미나를 통하여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제반 과제와 정착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였다. 1986년 지방자치의 발전전략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고, 1987년에도 주민생활 행정기능의 강화·발전, 지방자치와 지방재정력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어 1988년에는 대도시 관할구역의 적정규모,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당면 과제 등을, 그리고 1989년에는 지방행정의 전문화 방안, 대도시의 특례범위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토대검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내무부의 역할,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지방의회 구성을 앞두고 지방자치시대의 다양한 준비요소에 대한 검토작업을 지원하였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에는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발맞춰 자치단체장 직선 이후 중앙과 지방의 관계 정립방안, 한국 재정 50년의 회고와 전망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96년에는 6·27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 1년 평가와 전망,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공동체 발전전략, 고객지향적 정부 구축을 위한 민·관 합동 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선자치의 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또 다른 특기할 사항은 방재연구의 실시였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소방행정체제의 변화, 민방위 기능의 재정립은 물론 도시화의 진전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을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이에 따라 1994년 설치된 방재연구실은 1997년 당시 행정자치부 산하에 국립방재연구소 설립 시까지 운영되었다. 방재연구실에서는 재해영향평가제도 및 재해보험제도에 관한 도입방안 연구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새롭게 재편된 지방행정의 방재대응전략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1988 — 1991

03 장

수원시대

지방자치제도화의 주도적 역할 담당

다시 열린 수원시대는 연구원의 숙원사업이었던 단독청사 마련의 꿈을 실현한 시기였다. 겨우 2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선자치의 시작과 성격을 만든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 실시 초기의 연구원 활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마포시대'를 마감하고 다시금 '수원시대'를 열었다. 그동안 연구원 자체 청사건물이 없어 임대 형식으로 있다가 수원에 단독청사를 건설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연구원의 숙원사업이었던 단독청사 마련은 1996년 제9대 원장이 취임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1997년 6월 기공식을 거쳐, 1997년 12월 22일 수원 신청사로 이전하였으며, 이듬해인 1998년 1월 9일 입주식을 거행하였다.

이 시기는 2년여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의 시작과 그 성격을 만들어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수원시대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가치를 주민에게 두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주민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민본행정', '주민만족' 등 주민우선주의가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중심키워드로 자리매김한 시기이기도 하다.

법령 및 관련 정책

01.

수원에 단독청사 마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창립 10주년이 넘도록 단독청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역대 연구원장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자체 청사 건설은, 1996년 제9대 임경호 연구원장이 취임한 이후에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 사실상 그동안 자체 청사 건설을 하지 못한 것은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고, 따라서 서울시 권역에서 마땅한 부지를 찾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2억여 원에 이르는 임대료 지출은 연구원 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자체 청사가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임대료 때문에 예산낭비가 심하여 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96년 1월에 취임한 임경호 연구원장은 임기 내에 반드시 독립청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온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첫째는 자금 확보 문제였는데, 내부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해결하였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임경호 원장은 연구원 단독청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당시 김우석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냈다.

둘째는 청사 부지 마련이었는데, 이는 임경호 원장이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



1998년 1월 수원청사 입주기념

력이 있어 수원시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따라서 지방행정연수원 입구의 도유지를 저렴한 감정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원시에 청사 부지를 마련할 당시에, 행정대학원대학을 설립하여 지방자치행정 분야의 인재를 직접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다. 대학원대학은 일반적인 종합대학과는 달리 학사과정 없이 석·박사과정만 있는데, 1996년 당시 교육부는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원대학 설립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다.

대학원대학은 석·박사과정만 있어 정원 100명 미만의 작은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물 한 채나 빌딩 한두 층만 있으면 되므로, 상당수 대학원대학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설립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구과제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집중적으로 우수한 행정 연구 인력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행정대학원대학을 건립하는 목적에 부합하였다.

사실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청사 부지를 수원시에 마련하게 된 것도 서울시내에는 대학원대학을 건립할 정도의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먼저 자금을 그만큼 확보하기 어려웠고, 서울시에서 대학원대학 허가를 받는 절차도 까다로워 수도권이면서 전국 교통의 십자로라고 할 만큼 도로망이 발달한 수원에 청사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학원대학 설립까지 염두에 두고 수원 지방행정연수원 입구의 도유지 일부를 매입해 청사 건축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였다. 기존의 종합대학마다 행정대학원이 있는데, 굳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별도의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교육계에서 공론화되었던 것이다. 서울대학을 비롯한 국내 종합대학들과 교육부의 의견이 그러하므로 연구원은 결국 대학원대학 설립을 기획단계에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26에 마련한 부지는 2,651㎡ 규모였으며 매입가는 약 12억 원이었다. 부지가 마련되자 곧바로 청사 건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건축 설계가 완료되자마자 1997년 6월 13일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기공식에는 당시 강운태 내무부장관이 참석하였다. 건축비는 약 16억 원이 들어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28억 원이 청사 건설에 소요되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은 3,119㎡였다.

마침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97년 12월 22일 수원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8년 1월 9일 당시 조해녕 내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997년 8월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공청회



1997년 9월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공청회

신청사 입주식을 거행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9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내에 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를 개소한 이후 13년 만에 다시 수원시에 신청사를 짓고 이전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1985년 4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34-2 지방행정회관으로 이전하여 1997년까지 사무실을 사용하던 12년간의 '마포시대'를 마감하고, 마침내 자체적으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새롭게 '수원시대'를 맞이하였다.

02.

IMF 구제금융 사태와 위기 극복 의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원시에 단독청사를 마련해 새롭게 '수원시대'를 열었을 즈음,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아 경제적으로 일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전 산업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세수가 줄면서 재정이 악화되자 시·도 출연금 역시 줄어들면서 연구원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연구원 전체 세입예산의 출연금 수입비중이 13.9%로 떨어져 1998년 세입예산이 50억 원대로 내려갔다. 예산 중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연구원으로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연구원은 그동안 법적으로 규정된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인력을 줄여야 하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직, 인력 및 재정의 변화

01.

조직개편과 인원 감축

1995년 지방자치제도 본격 실시 당시만 해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인력은 60명이었다. 그러나 수원으로 청사를 이전한 이후인 1998년에 크게 연구원 인력이 줄어들었다. 이는 IMF 구제금융 사태와 무관하지 않았다. 구조조정은 기업에만 해당된 일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당면한 현실이었으므로, 연구원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원 청사로 이전하기 전에 조직개편이 먼저 있었다. 1997년 3월 1일 이루어진 조직개편은 1연구기획부 5실, 2지원반, 1사무국 1과로 구성되었다. 이때 1994년에 개설했던 방재안전연구실을 전면 폐지하였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조직을 축소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정원은 기존 64명에서 59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1998년 10월 24일에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때는 1연구기획부 3실, 2지원반(팀), 1사무국 1과로 기구조직을 대폭으로 축소하였다. 다만 새롭게 전산정보팀을 신설,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업무효율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1연구기획부가 5실에서 3실로 줄어들면서 정원이 대폭 감축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10월 30일 연구직 2명, 관리직 5명, 기능직 7명 등 총 14명이 연구원을 떠났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점차 연구과제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IMF 구제금융 사태를 조기졸업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의 일환이므로 연구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02.

자체수입이 출연금 수입 초과

1995년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던 때까지만 해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수입은 대부분 시·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1996년부터 자체 수입금이 출연금을 초과하기 시작해 세입예산규모가 약 90억 원에 달하였다. 이는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 이후 연구원의 과제가 증폭되고, 연구 영역도 확대되면서 자체 수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원 청사로 이전한 1997년에는 자체 수입금이 다소 줄어들어 70여 억 원을 기록했으며, 그 이듬해인 1998년에는 더욱 줄어들어 50여 억 원으로 내려갔다. 이는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사태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된 데다, 1998년 새롭게 들어선 '국민의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전격 실시하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도 긴축경제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원 자체 수입이 크게 줄어 세입예산의

상당 부분을 시·도 출연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96년 자체 수입이 크게 증가할 당시 출연금 수입 비중은 36.1%였는데,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자체 수입보다 출연금 수입 비중이 많아 53.4%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IMF로 인하여 1998년에는 출연금 수입까지도 7억 8,80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세입예산이 50억 원대로 내려갔다. 전체 세입예산에서 출연금 수입의 비중이 13.9%로 급격히 감소하였던 것이다. 이는 1995년 출연금 수입이 총 수입의 94.5%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위축된 금액으로, 연구원으로서는 재정 부문에 있어서 일대 위기를 초래하였다. 결국 1999년부터는 시·도 출연금이 완전히 끊겨 자체 수입에만 의존하는 세입구조로 변하였다.

03.

기금 조성을 위한 긴축운영

1997년과 1998년의 세입예산규모는 평균 60억 원 안팎이었는데, 이 시기의 세출예산은 20여 억 원으로 약 40억 원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세출예산은 주로 인건비로, 전체 구성비의 60~7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1997년 인건비는 14억 2,100만 원으로 전체 대비 65.5%, 1998년 인건비는 19억 8,900만 원으로 74.2%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하면 연구사업비는 1997년 2억 3,800만 원으로 전체 구성비의 11.0%, 1998년 3억 2,300만 원으로 12.0%를 기록하였다. 또한 경상운영비도 1997년 5억 600만 원으로 전체 구성비의 23.4%, 1998년 3억 7,000만 원으로 13.8%를 차지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인건비 이외의 지출규모를 최대한 축소함으로써 IMF 구제금융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긴축재정으로



1998년 5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조성한 기금은 연구원의 재정적 자립에 있어 중요한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1999년부터 시·도 출연금 수입이 없어졌으므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금 적립액은 연구원이 안정적 재정 상태를 구축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1994년에는 기금출연금 100%, 1995년에는 94.8%로 기금적립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기금적립액 규모는 200억 원을 넘어섰으며, 1998년에는 300억여 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IMF 이후 금융권의 이율이 올라가면서 적립기금액의 이자소득이 늘어난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이자소득에 비하면 1998년부터 연구원은 세출예산을 예산집행 잔액으로 100% 충당하였으며, 1999년부터 시·도 출연금 수입이 없어지면서 더욱 자금에 대한 압박감이 심해진 것도 사실이었다.

민선자치 실시와 연구원의 기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수원시대는 민선1기의 후반기, 즉 1997년에서 1998년까지 2년여의 짧은 기간이다.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단독청사의 마련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새로 시작된 민선자치에서 행정이 주민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기본전제의 정립에 기여함으로써 짧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한 시기였다.

1995년 7월 시작된 민선1기(1995~1998)는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와 함께 지방행정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향점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재가치를 주민에게 두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주민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른바 '민본행정', '주민만족'이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중심키워드로 정착된 시기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다양한 소통채널이 만들어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민에게로의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에게서 지방자치단체로 다양한 요구가 투입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로의 정보제공은 민선1기 때인 1996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함께 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었다.

1998년에는 '행정서비스헌장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대고객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 이행의 기준과 내용, 제공절차,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명문화하여 제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행정이 종래의 소극적인 대응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주민대응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부단체장의 국가공무원 임명, 민선1기 동안 시행된 1995년의 총정원제, 1997년의 표준정원제 등 공무원 정원관리제도 등 제한된 자치권은 민선자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가장 큰 영향은 행정서비스헌장 도입 관련 다양한 과제수행을 통하여 이후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 및 확산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 도입·운영의 기본목적으로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에 두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정지침들을 규정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주요 핵심사항은 바로 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의 실천성 확인과 보다 궁극적인 행정서비스 사용자로써 고객의 만족도 척도가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전체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헌장에 고객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공표·평가하고, 제도 전반에 고객을 참여시켜 고객과 행정기관 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문화 확산에 선도자로서 기능하였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연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시·군·자치구의 자치제도 비교분석,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확대, 광역행정수행체계의 효율화 등이 민선자치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총정원제 등 정원관리, 전자주민카드, 지방소득세 도입 등 실제적인 정책적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민선자치시대 자치권 강화는 물론, 지방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분석진단제도가 1994년 도입되어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제도의 구성을 비롯하여 매년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진단까지 총괄하고 있다.

1999 — 2015

04장 서초시대

지방자치의 정착과 새로운 역할의 수행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시작된 서초시대는 민선2기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어가는 시기였다. 연구원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사업 및 연구영역 또한 확대했다.

지방자치제의 도약과 효율적 지방분권화 추진

1999년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는 분수령이 되는 해였으며, 1998년에 시작한 민선2기가 2000년대로 이어지면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어가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지방자치제의 본격화는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의 연구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연구원이 서초시대를 맞이한 1999년부터 원주로 이전하기 전인 2015년까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민선2기를 거쳐 민선6기가 새롭게 시작된 기간으로, 지방자치의 제도화와 실천을 위한 수많은 연구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을 거치면서 더욱 지방자치의 발전 속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영역 역시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에는 연구원에 국가균형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서초시대'에서 '원주시대'로 이전하기 두 해 전인 2014년에는 연구원 부설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자치단체 타당성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등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해나갔다.

법령 및 관련 정책

01.

서초동으로 청사 이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98년 1월 수원시에 단독청사를 마련해 이전하였으나, 그해 4월에 제10대 이달곤 원장이 취임하면서 연구원을 서울로 다시 이전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연구원은 내무부 소속 기관이므로 마땅히 중앙정부가 있는 서울에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경기도 수원시에 청사가 있다는 것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연구원들의 서울 출장이 잦고, 출퇴근도 서울에서 수원으로 하는 직원들이 많아 업무 효율성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달곤 원장은 여러 차례 자문회의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구소의 서울 이전 계획을 정론화하였다. 그리고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1999년 청사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마침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2-14의 지하 3층 지상 6층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하게 되었다.

기존의 수원청사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매각했는데,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대금은 약 48억 원이었다. 수원청사를 건설할 당시 전체 건축비 28억 원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사이에 20여 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었다.

새로 매입한 서초동 청사는 건물 45억 원, 토지(901.8㎡) 7억 3,000만 원 등



1999년 수원에서 서초로 청사 이전

총 52억 3,000만 원이었다. 수원청사 매각대금에서 불과 4억여 원 더 충당하여 서울시에 입성함으로써 새롭게 '서초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이다.

02.

지역균형개발지원센터 설립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지역개발 분야의 중요 연구영역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2003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제1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7년 3월 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으며,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 업무를 정책적·실무적으로 지원할 별도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신설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역균형개발지원센터를 법정 기구로 설치하게 되었다. 이로써 연구원은 새로운 기능으로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과제수행과 실무지원에 상응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 별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나치게 산술적·기계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분산정책의 추진으로 갈등과 낭비 요인이 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지역경쟁력 강화를 요체로 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신지역개발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기존의 관련조직·제도·회계 등도 대폭적으로 개편하였다.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입체적 3차원 시스템으로 분류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고, 국가



2009년 4월 지방행정의 유사중복기능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었다. 특히 신지역발전체계에서는 특별회계의 운용방식에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사업단위 보조금 방식을 지양하는 반면, 유사기업들을 묶어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개선조치들을 반영해 2009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 시행령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위상 또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구원 내에 법정기구로 설치되었던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근거 조항과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검토, 평가 등에 관한 실무지원의 근거조항도 삭제되었다. 결국 기초생활권과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기능의 일부만 행정안전부의 기능으로 남게 되어, 향후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원의 지원기능은 이전에 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9월 조직문화 변화 세미나

03.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설립

정부의 감사원 감사연구원에서는 2012년 12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실태분석〉을 실시한 바 있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기관을 직접 설정함으로 인하여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

둘째, 공신력 있는 타당성조사 기준 및 방법론 미비로 인한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미흡하다.

셋째,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한 타당성조사 전문 독립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29일「지방재정법」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행정자치부 고시 제 2014-2호로 고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정하였고, 연구원은 '타당성조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2014년 12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를 신설하게 되었다.

LIMAC의 주요 업무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미만) 인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지방투자 심사규칙 제13조에 의거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타당성조사 지침개발 등 투자심사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운영을 지원하



2011년 10월 정책세미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발전방향'

며,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관련 교육, 투자사업 이력관리 등의 업무도 맡았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자체 타당성조사 검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다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4항에 의거해 실시하였다.

LIMAC에서 실시하는 타당성조사는 투자 효율성 제고, 투자 효과성 견인, 투자 객관성을 통한 신뢰성 강화, 투자책임성을 통한 형평성 강화 등을 운영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는 데 근본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LIMAC은 소장을 두고 그 산하에 기획총괄부·재정투자조사부·재정투자평가부 3부 체제로 운영하였다. 초대 소장으로는 이상용 소장이 취임하였으며, 2015년 1일부터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LIMAC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하여 지방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사회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효율성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데 근본 목표를 두었다. 나아가 국민세금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타당성조사의 품질 향상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각종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갔다.

LIMAC이 2015년에 완료한 연구과제는 공공청사 및 일반 행정 부문, 문화·체육·관광 부문, 산업단지 등 산업 부문, 도로 및 교통 부문, 주거 및 상업 부문, 환경 분야, 지방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였다. 공무원교육 분야에서는 2015년 11월 6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한편 조사과제로는 울산실내체육관 건립 등 총 16개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2014년 12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 지방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01.
조직과 인력의 변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직은 서초시대가 시작된 1999년부터 원주청사로 이전하기 전인 2016년까지 17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9년 12월에는 1부 3연구실 3지원반(팀,국)·1국 1과와 지방포럼국을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2000년 12월에는 사무과 산하에 총무팀과 재무팀을 신설하였다.

이후 2001년에 2번, 2002년에 2번, 2003년에 3번, 2004년과 2005년에 각기

조직, 인력 및 재정의 변화



2009년 4월 개원 25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 한국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

1번, 2006년에 2번, 2007년과 2008년에 각기 1번, 2009년에 3번, 2010년과 2011년에 각기 1번, 2012년에 2번, 2013년에 4번, 2014년에 3번, 2015년에 4번 조직이 바뀌었다.

2015년 10월 12일의 조직개편은 원장 산하에 별도로 감사관과 대외협력단을 두었으며, 그 아래 부원장과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행정국이 편재되어 있었다. 다시 부원장 산하에는 연구기획실·자치행정연구실·지방재정연구실·지역발전연구실 등 4연구실과 별도 기관으로 안전통일연구센터·지방혁신지원센터 2개 센터가 있었다. 또한 연구기획실 아래는 연구기획과와 교육연수센터가, 자치행정연구실 아래는 지방3.0지원센터와 지방규제개혁센터가, 지방재정연구실 아래는 지방재정분석회계관리센터가, 지역발전연구실 아래는 지역경제분석센터가 있었다. 그리고 행정국 산하에는 행정예산과와 청사이전보좌역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처럼 조직이 자주 바뀌게 된 것은 시대에 따라, 당시 여건에 따라 연구과제의 방향과 주제의 내용이 다양화된 것에 기인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정원보다 임직원 수가 늘 적은 데 비하여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연구원 능력의 재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변화를 보면 1999년 정원 45명에 현원 32명이었으며, 2004년에 가서야 정원 47명에 현원 44명, 2008년에 정원 57명에 현원 52명, 2015년에 정원 85명에 현원 60명을 기록해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다.

02.
재정의 변화

1) 세입예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서초시대를 시작하는 첫해인 1999년부터는 자체 수입에만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자체 수입의 규모를 보면 2000년 78억 9,900만 원에서 2002년 55억 8,9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2007년부터 자체 수입이 점차 증가세를 나타내어 2008년에는 세입예산이 112억 5,700만 원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IMF 구제금융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1996년 90억 원대를 상회하던 때로부터 12년 만에 그보다 20억여 원 더 많은 수입예산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다시 세입예산이 하락세로 돌아서 2015년 이전까지 약 50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대를 오락가락하였다. 가장 심각했던 때는 세입예산이 46억 6,900만 원을 기록한 2012년이었다. 사실상 이때부터 민간경상보조비를 정부출연금으로 대치하여 이 부분에서 연간 20억 원가량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이 20억 원대로 크게 떨어지면서 50억 원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빚어낸 것이었다.

2013년부터는 시·도출연금이 전년도 2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나 약 62억 원 수준의 세입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14년도에는 약 73억 원, 그리고 2015년에는 106억 4,300만 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100억 원대로 턱걸이를 하였다. 2015년도에 세입예산이 늘어난 것은 시·도출연금이 약 3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데다, 자체 수입도 약 52억 원으로 50% 가까이 상승한 데 기인하였다.

이처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99년부터 시·도 출연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자체 수익금만으로 어려운 재정을 꾸려왔던 것이다. IMF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연구원 운영에도 그만큼 오래도록 큰 타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원의 지출 비중은 인건비가 대체로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세입예산의 부족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 구조로 어렵게 연구과제를 수행해나가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2) 세출예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세출구조는 인건비·연구사업비·경상운영비·수탁용역비·청사임대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수탁용역비는 1996년부터, 청사임대사업비는 1999년부터 새롭게 생긴 세출 항목들이었다. 거기에다 2002년부터는 교육연수사업비가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이처럼 수탁용역비·청사임대사업비·교육연수사업비 등이 1996년부터 세출예



2007년 10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발전방안

산에 포함되면서 기존의 인건비·연구사업비·경상운영비 등의 구성비가 그 전에 비하여 다소 하향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청사임대사업비가 추가된 1999년부터 살펴보면, 인건비의 비중이 전해에 71.2%까지 올라갔었으나 다음 해인 1999년에는 48.9%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수탁용역비와 청사임대사업비의 항목이 세출예산에 새롭게 편성되면서 생긴 현상이었다. 이때부터 인건비 비중은 대체로 40%대 안팎을 유지하다가 2008년에 잠깐 50%대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다시 30~40%대에 머물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0%대를 회복하였다.

연구사업비의 경우 1999년 전체 세출예산에서 12.9%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약 10년간 10% 미만을 기록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 16.9%로 올라섰으며, 2010년에는 20%를 상회하기까지 했다. 2011년에는 다시 14.1%,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17%대를 유지했으며, 2015년에 12.4%로 다소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처럼 연구사업비는 1999년 12.9%를 기록했으나, 이후 2008년까지 10% 이하의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2001년에는 4.4%, 2005년에는 3.9%를 기록해 5%대 미만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다. 그러나 2009년에 16.9%를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20.2%까지 상회하였다. 이후 대체적으로 2015년까지 15% 안팎을 유지하였다.

경상운영비의 경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20%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998년 IMF 구제금융 사태로 긴축정책을 편 결과 10%대로 떨어졌다. 1999년에는 15%대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01년에는 8.9%까지 떨어지는 등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체로 10%대 안팎을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는 10%대 미만으로 떨어지더니 2015년에는 5.5%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1996년에 처음 항목에 추가된 수탁용역비의 경우 당해 연도의 지출규모가 1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6%에 불과했으나 2003년 20.6%, 2006년 40.5%를 차지하여 세출구조의 항목 중 인건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연구원 수입이 점차 수탁용역비로 지출되면서 불안정한 세입구조로 바뀌어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99년에 세출구조 항목에 포함된 청사임대사업비는 2003년에 5억 1,400만 원으로 총예산의 12.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 세출구조 항목에 추가된 교육연수사업비는 2003년에 6,000만 원으로 총예산의 1.5%였다가 2006년에 그 비중이 2.3%로 높아졌다.

2002년부터 세출항목에 포함된 교육연수사업비는 세출항목 중 가장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당해 연도에 1.8%였으며 2007년까지 2~4%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0.9%를 기록한 2008년부터 1015년까지 1.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0년 9월 CLAIR 한일공동세미나

특히 2015년도에는 새로운 세출항목으로 조사사업비가 추가되었는데, 당해 연도에만 10억 3,400만 원이 세출예산에 들어가 11.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연구원의 사업이 기존의 고유한 연구사업에서 수탁연구사업·교육연수사업, 그리고 조사사업 등으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가면서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기금

기금의 경우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적 자립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 시·도의 출연금 수입이 전면적으로 없어지고, IMF 구제금융 사태 발생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던 적립기금액에 대한 금융권의 이자율이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연구원 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1996년부터 시·도 출연금의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해 1996년 41.2%, 1997년 29.8%를 차지하였다. 그러다가 출연금 수입이 전혀 없었던 1999년 한 해 전인 1998년부터는 연구원의 지출규모 100%를 예산집행 잔액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1998년에는 기금적립액 규모가 약 300억 원을 상회하다가 1999년 다소 떨어져 약 300억 원을 밑돌았는데, 2001년부터는 약 350억 원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기금을 적립하지 못한 채 약 350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2008년 말 기금적립액 총액은 356억 883만 8,000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9년 302억 2,000만 원으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2010년에는 290억 원대로 내려앉았다. 그보다 20억 원가량 더 떨어진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276억 6,400만 원을 기록해 평행선을 유지하였다.

민선자치 정착과 연구원의 기여



2010년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상해행정학원 한중학술세미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서초시대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원 역사에서 가장 오랜 독립청사 시기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다양한 개선과제가 발굴되면서 지방자치의 전 범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온 시기이기도 하다.

서초시대는 민선2기(1998~2002), 민선3기(2002~2006), 민선4기(2006~2010), 그리고 민선5기(2010~2014)를 아우르고 있다. 그 시작은 1998년 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매우 어려운 때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민선2기는 이러한 위기극복, 즉 경제살리기가 가장 큰 정책과제였던 시기이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지방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당시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하에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한 동시에 이양하도록 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의 복리 및 생활편의와 직접 관련된 사무는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도 아울러 천명하였다.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자치분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었으며, 발굴노력과 이양작업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지방산업단지 개편, 지방문화사업 육성,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도시재정지출의 효과분석, 지방예산제도의 개선,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회계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관리를 위한 전략적 기획의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역량 평가체계의 구축 및 활용,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행정운영 효율화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계층 간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연구도 이루어져 정부의 지방이양과 사무배분 관련 정책 수립의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한편 민선3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의지가 단연 부각된 시기였다. 이 시기 중 들어선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2011년 9월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간의 연계협력과 갈등관리

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 기준, 교육자치제도 개선, 경찰자치제도 도입, 국세와 지방세 세원의 합리적 조정,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 강구 등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들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에서 낙후지역 개발 등 국가발전의 형평과 균형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그리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혁신발전의 목표와 지역현황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각각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정부의 분권기조에 맞추어 지방행정과 재정영역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자치입법권 신장,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분석지표 설정, 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채와 지방양여금제도 개편, 지방재정평가제도 도입 등 전 범위에 걸친 분권정책을 연구·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낙후지역 실태분석, 오지개발대상지구 재선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적 연구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아울러 수행하였다.

민선1~3기 동안 내실화를 다져온 지방자치는 민선4기에 들어와 지방분권의 보다 강력한 촉진과 새로운 자치모델의 실험 등 한 단계 진화된 자치분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먼저 2008년 제정된「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종래의「지방분권특별법」을 전면개정하여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명확한 구분, 법령정비기간의 명시, 국가사무의 포괄적·일괄적 이양추진과 추진실적의 공표, 자주재원 확충의 보장,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을 제공하여주었다. 다음 새로운 자치모델의 실험은 제주특별도의 출범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그것이다. 2006년 7월 1일부로「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종래 도의 지위를 갖고 있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법적지위가 전환되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분권 및 국제자유도시개발관련 권한을 이양받아 새로운 자치모델을 시작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제정 당시 144개 분야 1,062건의 사무 권한이 이양된 것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규제완화, 각종 특례 등을 통하여 자치사무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평가와 함께, 아직도 분권제도 일부에 대한 시범적 운영 수준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분권 촉진정책과 시범적 자치모델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분권체감도는 높지 못하였다. 일례로 2007년 10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대국민 선언을 발표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률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방분권은 한계가 있으므로「헌법」차원에서 이를 보장해야 하며, 정무부시장·부지사의 업무범위 조정,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등 24개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자치분권의 내실화가 보다 요구된 이 시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사무조사를 통한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 개선,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지방



2012년 KRILA 자치포럼

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제고,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등의 연구를 통해 대응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의 연구를 통해 특별자치도 정책을 지원하였다. 특히 지방재정 분야에서 2007년부터 회계제도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광역경제권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과 운영, 광역경제권 추진체제, 광역경제권 체제의 지역개발사업 재편,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분석, 지역단위 균형발전사업 평가체계 개선 등 다양한 연구수행이 이루어졌다.

민선5기는 제1회 '지방자치의 날(2013. 10. 29)'과 '지방자치의 날 박람회'의 주제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주민'에서 볼 수 있듯이 성년이 된 자치제도 부활과 확대된 주민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자신감이 표출된 시기이다. 이 시기 자치분권 추진의 강력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제체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지난 100여 년간 기본 틀에 변화가 없던 지방행정체제에 대하여 교통·통신·인터넷 등의 발전을 반영하고, 행정구역과 주민생활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과 함께 다층제 행정구조의 고비용시스템 해소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자치분권을 도모하며, 세계화 추세에 맞는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2012년 7월 1일에는 또 하나의 특별자치모델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대선공약에서 시작되었는데,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행복도시의 명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 들어



2013년 6월 세종-충청포럼공동학술세미나 : 분권과 균형발전, 세종시로 통한다

와 수정안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민선5기가 시작된 2010년 12월 9일 국회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의 모습을 확정하게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자치분권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음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2013년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두 법률을 통합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각각의 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로 인하여 자치분권업무가 중복되고, 분산·추진되는 데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강력하고 일원적으로 분권을 주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실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의 체감도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였다.

2014년 3월 민선6기를 앞두고 발표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성명서는 그러한 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성명서에 제시된 기본적 자치권 보장,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 입법·정책참여 보장,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의 요구사항은 성숙한 지방자치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 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 예컨대 기형적 행정구역 조정, 지방행정체제개편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시·군 통합 대응전략 등을 통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였다. 또한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방법 연구 등을 통하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종합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 성과 비교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새롭게 출범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발전 모델 연구용역, 세종시 행정구역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지역발전지표 개발, 분권교부세 제도개선, 자치단체 이전재원 사용 및 관리체계 개선, 지방녹색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지속발전방안,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지방재정 및 지역발전 부분의 정책적 연구 수행을 통하여 정부정책을 뒷받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4년 11월 설치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대형 신규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객관성·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6 — 2019

05 장 원주시대

혁신도시의 선도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와 함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원주시대가 가시화되었다. 2016년 새롭게 맞이한 연구원의 원주시대에는 분권개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주요한 이슈들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활동이 추진되었다.

원주혁신도시 청사 이전으로 새로운 전기 마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것은 2003년 참여정부가 전격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가시화되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혁신도시특별법」을 만들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원주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일찍부터 공식화했으며, 정부의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연구원 이전 계획을 진행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원주혁신도시에 신청사를 건설해 2016년 12월에 연구원 이전을 마무리하였다.

새롭게 원주시대를 맞이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민선6기(2014~2018)로 접어들어 성년의 시기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로 지방행정 연구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나갔다. 특히 분권개헌 논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의, 인구감소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모색 등 새로운 환경과 수요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되고 있다.

법령 및 관련 정책

01.
원주혁신도시 이전 계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원 지방이전 계획'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구원은 마침내 원주시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전 계획은 우선 임직원의 참여에 의한 연구원의 구체적인 지방이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연구·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연구원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 6월 12일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선포하였으며, 이어서 2005년 6월 24일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2006년 1월 16일에는 원주시 반곡동 일원을 '강원혁신도시'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08년 3월 지방이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이전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일단 연구원은 노사 간 의견



2014년 3월 청사이전 설명회





2017년 2월 '원주시대'의 문을 연 신청사 개청식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이전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노동조합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지방이전TF를 구성, 향후 이전 계획 수립 등 중요한 의사 결정 및 현안 문제를 심의·의결토록 하였다.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소재의 청사에 대한 현황부터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서초동 사옥은 연건평 4,394.1㎡ 규모로, 그중 연구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간이 3,419.6㎡이고, 나머지 974.5㎡는 임대였다. 지방이전TF의 조사 결과 이 사옥은 연구원 활동에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첫째, 연구원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점이다.

서초청사는 교육 공간 및 워크숍 개최 등과 같은 관련 대외기관을 포함한 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어 공간이 협소하여 대내외적인 행사를 하는 데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더구나 연구실·회의실 등 업무에 맞는 공간 배치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둘째, 임직원들의 업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점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당시 임직원은 50여 명이지만, 프로젝트 수행 등을 위해 상주하는 인원이 70여 명 이상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업무 공간 2,549㎡를 70명으로 나누면 1인이 36.4㎡의 공간을 사용해야만 하였다. 더구나 외부 인사 등 방문객과 업무 협의를 할 공간이 부족한 데다 자료실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다.

셋째, 시설 개선이 어려운 점이다.

건축년도가 25년을 경과한 건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의 한계점이 드러났으며, 방음 등의 미비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2년 1월 말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최종적으로 연구원 지방이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02.
신사옥 건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서초동 사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원주혁신도시에 새롭게 건설하게 될 신사옥은 그 단점들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건축방향과 시설규모를 확정하였다.

원주혁시도시 신사옥의 건축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정하였다.

첫째,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연구원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신사옥 건립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여 연구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명실상부한 지방행정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또한 창조적인 건물구조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정책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연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신사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에 최대한 신경을 쓴다.

먼저 21세기 지방자치 행정을 선도하는 정책연구 공간을 확보한다.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하는 지방행정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구용 시설에 걸맞은 그린 공간, 옥내외 운동 및 휴게시설 등이 잘 갖추어진 활력 넘치고 창조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토록 한다.

이러한 계획 아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건교부 지침 기준상 1인당 56.53㎡ 규모를 임직원 77명으로 환산해 총 4,352.8㎡로 확정하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신사옥 부지는 3,874㎡로 정부 승인이 났다.

신사옥 건설비는 서초동 사옥을 매각한 대금으로 자체 조달키로 하였다. 따라서 2014년 8월 1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149억 5,8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그리고 이 대금을 부지 매입 22억 원, 공사비 108억 원, 설계비 6억 원, 감리비 8억 원 시설부대비 및 예비비 5억 원 등 원주혁신도시 신사옥 건설비로 활용토록 하였다.

원주혁신도시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축규모였다. 건물을 완공한 실제 건설비용은 부지 19억 8,000만 원, 건축 135억 원 등 총 154억 8,000만 원이 들어갔다. 서초동 청사 매각대금보다 약 4억 원이 더 투자되었는데, 이 금액은 연구원 운용 기금에서 충당하였다.







2014년 4월 기본설계 용역 최종보고회 현장과 청사 모형

03.

원주청사 이전 및 이주직원 지원대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6년 12월 5일 청사 이전을 하였다. 다만 LIMAC은 서울시에 그대로 남아 기존 업무를 수행해나가도록 했으며, 이전 계획은 차후로 미루기로 하였다. 사실상 원주혁신도시 신청사의 규모로 볼 때 LIMAC의 인원을 수용하기도 어려워, 만약 LIMAC이 원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청사 건물을 증축하거나 다른 건물을 임대해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LIMAC은 서울시에 그대로 두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사만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임직원들에 대한 이주 지원대책을 먼저 세웠다. 그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시달된 정부의 이주직원 지원대책 수립지침과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할 이전지원계획, 그리고 타 혁신도시 이주직원 지원대책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원의 이주직원에 대한 상세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때 최종적으로는 연구원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통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시행 및 이행토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이주직원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았다.

이사비용은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되 실비정산토록 하였으며, 이전수당은 1인 월 20만 원씩 2년간 지급토록 하였다. 그리고 단신 이주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해 임시숙소 23실을 마련하여 배정하였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정부는 이주직원과 가족들에 대하여 주거지원·취업지원·업무지원 등의 대책도 강구하였다.

첫째, 주거지원의 경우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APT)을 임직원에게 조성원가로 특별 공급하였다. 또한 혁신도시 내에 임대 공공주택(APT)을 건립하여 원하는 임직원들에게 특별 공급하는 대책도 마련하였다.

둘째, 취업지원은 임직원 배우자 희망 시 공공기관 종사자나 공무원인 경우 혁신도시 또는 인근 지역으로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의 경우는 취업을 알선하였다.

셋째, 업무지원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원주혁신도시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교통편을 운영토록 하였고, 지방이전에 따라 증가하는 경상경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였다.

넷째, 기타 종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시한을 연장해주고, 이전 공공기관의 재정부담 완화와 원활한 지방이전 추진을 위하여 조성원가 인하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기관 이전비용과 직원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중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토록 하였다.

강원도와 원주시에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여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공공임대 아파트 5년 이상 무상 임대, 지자체 건립 아파트 및 단독주택 원가 분양, 수도권 대학 자녀를 위한 재경 합숙 주택 건립 지원, 독신자 아파트 건립, 장기무이자 융자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조직, 인력 및 재정의 변화

01.

지방분권형 조직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6년 12월 원주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한 직후인 2017년 1월 16일 행정국 산하에 있던 청사이전팀을 서무관리과로 바꾸었다. 이는 신청사 입주가 끝나면서 청사이전팀의 업무가 완료되었으므로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밖에 기존의 조직구도는 2016년 체제를





2018년 4월 상반기 임직원 워크숍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2017년 7월 31일에도 약간의 조직 변경이 있었다. 원장 산하의 정부3.0추진단을 지방분권지원단으로 바꾼 것이다. 그 외에는 종전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시 2018년 4월 24일 단행한 조직개편에서는 원장 산하의 지역분권지원단을 없애고, 부원장 산하에 새롭게 사회혁신연구단을 두었다. 이때 자치행정연구실, 지방재정연구실, 지역발전연구실의 각 센터도 명칭이 약간씩 변동되었다. 또한 업무 변화에 따라 없어지거나 새로운 센터가 태어나기도 하였다.

자치행정연구실의 경우 기존 지방혁신지원센터·상생협력지원센터·지방규제개혁센터가 조직진단분석센터·자치분권연구센터·참여협력연구센터로 변경되었다. 이는 연구원 조직의 업무가 지원 업무 개념에서 집중적인 연구와 분석의 개념으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지방재정연구실도 재정분석회계센터·재정사업평가센터에서 재정분석연구센터·재정사업관리센터로 바뀌었다. 즉 '회계'가 '연구'로, '분석연구'가 '사업관리'로 변경되면서 센터의 업무 방향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화된 형태로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발전연구실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13일 조직개편 때 새롭게 생긴 섬발전센터가 없어져 2개 센터만 남았다. 기존의 지역경제분석센터·지역계획연구센터 중에서 지역경제분석센터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계획연구센터는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로 변경되었다. 이는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균형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처럼, 정부의 국가운영 기본방향인 지방분권 부문에 있어서 보다 연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였다.

02.

원주신청사 이전 이후의 인력 추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원주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하기 직전인 2016년 정원 85명에 현원 65명이었다. 원장 1명과 연구직 41명, 관리직 14명, 전문직 1명,

그리고 투자분석직이 8명이었다. 2017년에는 정원은 기존 85명 그대로였으나 현원이 70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에는 정원 97명에 현원 74명, 2019년에는 정원 102명에 현원 83명으로 원주혁신도시 신청사 이전 이후 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2019년 현재 연구직 49명, 투자분석직 15명으로 연구인력이 전보다 늘어난 것은 그만큼 연구과제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투자분석직의 경우 2014년 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 새롭게 인력 충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2015년에 6명, 2016년에 8명, 2017년에 10명, 2018년에 13명, 2019년에 15명으로 매년 2~3명씩 투자분석직 연구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LIMAC의 사업이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03.
재정의 변화

1) 세입예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세입예산은 2015년 106억 4,300만 원으로 100억 원를 턱걸이하듯 넘어선 이후, 2016년 115억 1,600만 원을 기록해 전해보다 다소 늘어났다. 2016년에는 정부출연금 22억 4,100만 원, 시·도출연금 25억 8,000만 원, 자체 수입 66억 9,500만 원으로 전해보다 자체 수입이 약간 상승한 데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원주혁신도시로 신청사를 이전한 이후인 2017년에는 151억 5,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이때 정부출연금 23억 2,900만 원, 시·도출연금 33억 원으로 다소 출연금이 증가한 면이 있긴 하지만, 자체 수입이 96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0억 원이 늘어나 세입예산을 크게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8년에도 세입예산은 159억 700만 원을 기록해 다소나마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출연금 세입예산은 정부출연금 25억 2,900만 원, 시도·출연금 33억 원을 기록하였다. 정부출연금은 조금 늘었으나 시·도출연금은 전년도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자체 수입이 100억 7,800만 원을 기록, 100억 원대를 넘어선 것이 세입예산의 증가에 효자 역할을 하였다.
특히 자체 수입의 경우 2015년부터 해마다 50억 원대, 60억 원대, 90억 원대, 100억 원대를 기록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세입예산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정부출연금이나 시·도출연금은 현행 유지를 하는 데 그쳤지만, 연구원 자체 수입은 앞으로도 날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세출예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세출예산은 2016년 115억 1,612만 원, 2017년 152억 5,910만 원, 2018년 121억 9,800만 원이었다. 그중 인건비의 비중은 2016년 45.0%, 2017년 55.9%, 2018년 52.6%를 기록해 대체적으로 50%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밖에 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 수탁용역비 등은 10% 안팎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교육연수사업비의 경우 0.5% 미만의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만 조사사업비의 경우 2016년 14.4%, 2017년 16.9%, 2018년 13.3%를 유지하여 대체적으로 1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원의 전체 세출예산 비중으로 따져볼 때 인건비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조사사업비의 지출 비중도가 다른 비용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감지할 수 있다.

3) 기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금적립액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장 6년 동안 276억 6,400만 원을 기록해, 그동안 더 이상의 기금적립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다가 원주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인 2017년 299억 7,500만 원을 기록해 2009년에 달성했던 300억 원대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금적립액에 변동이 없는 상태여서, 정부출연금이나 시·도출연금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적립 또한 늘어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원주시대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청사 건축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민선6기(2014~2018)의 과정 동안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2018년 6월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2016년 9월 개원 32주년 기념식

정치 · 사회 부문 조사 결과

순위	순위 변동	평가 기관	영향력	연구의 질	연구 역량	종합
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4	104	92	300
2	-	한국행정연구원	79	99	106	284
3	↑3	서울연구원	62	69	79	210
4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	59	61	155
5	↓2	한국교육개발원	53	50	48	151
6	↑3	한국법제연구원	22	64	60	146
7	↑6	한국행시정책연구원	27	53	54	134
8	↓1	대외의도연구원	70	29	23	122
9	↑17	대한민국정부 대통령직속 인재개발위원회	61	29	16	106
10	↑10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6	45	30	101
11	↓7	한국학중앙연구원	23	27	42	92
12	↓4	국립보건연구원	10	28	39	77
13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8	23	15	76
1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3	25	27	75
15	↓4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14	35	24	73
16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	20	26	64
17	↓3	희망제작소	29	13	8	49
18	↓4	동북아역사재단	25	6	10	41
19	-	정부연대 부설 정부사회연구소	27	7	3	37
20	↑2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1	2	12	35
21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	12	13	32
22	신규	(사)역사문제연구소	15	0	9	24
23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	6	5	21
24	↓6	한반도선진화재단	6	7	7	20
25	신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	10	8	18
26	↓1	한국도시연구소	2	7	6	15
27	↓3	외교전략연구원	1	2	11	14
27	↑7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7	5	2	14
29	-	서울대 법학연구소	3	0	10	13
30	↓7	바른사회시민회의	7	2	0	9
31	↓10	(사)국가이래연구원	7	0	0	7
31	↑13	한국노인문제연구소	0	7	0	7
31	신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	7	0	7
34	↑8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0	6	0	6
34	↓7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	2	2	6
34	신규	미래정치센터	0	6	0	6
37	↓6	(사)정책네트워크 네집	3	0	2	5
38	↑6	서울대 심리과학연구소	0	4	0	4
38	신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	0	0	4
40	↓2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	1	0	3
41	-	재단법인 동아시아미래재단	0	0	2	2
41	↓14	새로운 모색[연구상을 위한 연구원	2	0	0	2
43	신규	한거래경제사회연구원	1	0	0	1

※ 정치 · 사회 부문은 25위까지 '100대 싱크탱크'에 포함

2017년 싱크탱크 4위 선정

이전, 정착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민선6기는 단체장 직선 20년을 맞이한 이른바 성년 민선시대로 민선의 당사자인 단체장들에 의한 자치분권의 요구가 보다 강화되고, 활동적으로 추진된 시기였으며,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항목을 포함한 헌법개정안이 제시되는 등 자치제도의 질적 변화가 배양된 시기이다.

2017년 10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그간의 분권헌법의지를 반영하여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 개회식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공표하였다. 여기서 4대 협의체는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2018년 1월에는 분권개헌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는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등 분권개헌을 적극적으로 정치 이슈화하였다. 이러한 지방의 요구에 부응하여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개칭하면서 강력한 분권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2018년 3월 26일 대통령발의안으로 제시된 개헌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국가운영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도 하였다.

이후 민선7기(2018~)에 들어와 분권의지는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안전부는 2018년 1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자치분권 관련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획기적인 주민주권의 구현을 위하여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권리 강화,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여 주민주권을 명확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및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개선을 포함하였다.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 사무 등 기본사항과 국가나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다. 세부 운영사항에서는 조례에 위임 등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및 활성화를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근거를 명시하였다.

둘째,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목표로 사무배분 원칙 확립 및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 확대,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등 책임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대 및 협력의무를 신설하였다.

넷째,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방안으로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구체화,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개선, 대도시 특례 부여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변화방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변화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과제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정책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민선6기까지의 자치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민선자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지방자치의 성과와 필요과제를 추출하였다. 또한 그 일환으로 지방분권 개헌 관련 해외 사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 평가,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다양한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즉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인구감소지역 정주공간 현대화 및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 인구감소지역 기초생활시설 공급방향 연구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원주시대의 지방자치 환경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가장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시기이며, 이러한 변화의 모색에 있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다방면에서 직·간접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자로서의 싱크탱크 역할을 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가의 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서 이전 지역인 강원도와 원주 지역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역발전계획을 통하여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및 육성, 주민지원을 통한 지역 공헌,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 등을 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혁신도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2019년 1월 소망주기복지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원주혁신도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19년 1월 장주기요셉재활원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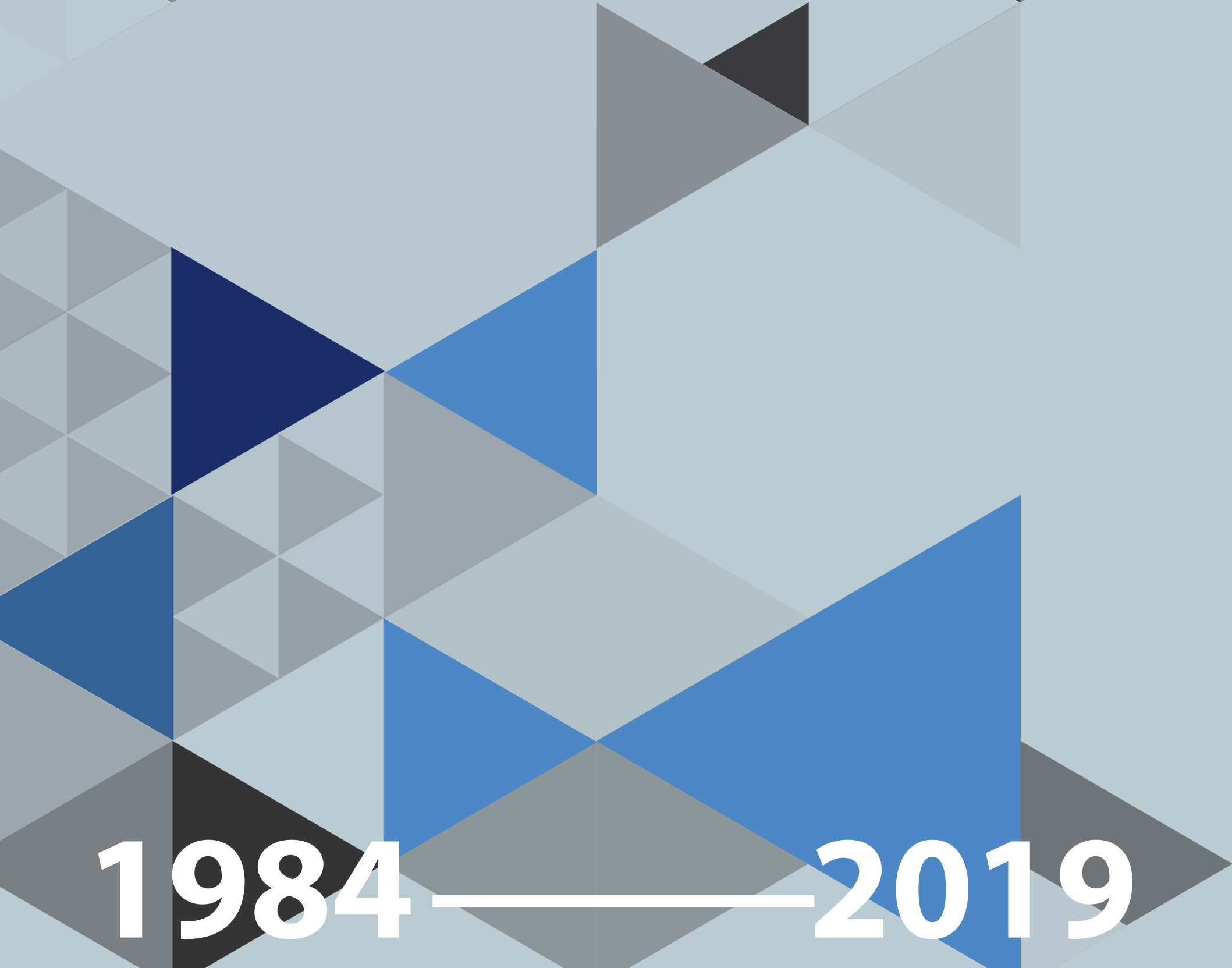
연구원의 역할과 성과

제1장 연구원의 **역할 체계**

제2장 연구원의 **핵심 성과**

제3장 연구원의 **사업별 성과**

제4장 연구원의 **비전**


1984——2019

01 장
연구원의 역할 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제도로서의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으면서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도 확장되어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 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와 연구 및 정책개발 추진과 함께,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연구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모색과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기능 및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관련하여 당면한 주요 현안과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조사 및 연구 수행에 있어서 그간 축적된 연구 경험을 살려 최고 수준의 연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 연구품질 관리시스템 구축과 평가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를 통해 다양한 연구수요에 대응해왔으며, 연구지원시스템 또한 강화해왔다. 우수한 연구품질을 위한 인프라 확보 또한 중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설립 취지에 맞게 연구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와 조사를 통해 실천적 자문 및 경영진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치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의 허브화를 위한 노력은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자문 및 진단사업을 통해 신뢰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지향적이며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지속해왔으며 향후에도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특히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연구개발이나 교육훈련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혹은 관련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 측면에서 과제 제안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간 연구용역 수탁 사업은 수탁 금액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



1992년 21세기의 바람직한 지방행정 발전 세미나

〈연구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



탁 금액보다는 수탁과제의 성격, 중요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 및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 구성원의 수탁과제 수행 여부, 인력, 전문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2014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설립되면서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사업과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수요에 대응하여 집합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지방의회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 및 포럼과 연계한 교육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구용역 발굴과제의 성격이 다양화 및 전문화되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연구진 선정에서부터 경우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연구진에 포함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넷째,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연구원에서는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내외의 빠른 시대적 변화와 정책 수요에 대처해왔다. 이러한 노력과 대응의 경험, 전문성을 기반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새로운 정책수요에 적절히 대처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왔다. 국내 기관으로는 2019년 10월 현재 총 71개 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정부 및 기관 25개, 국내외 대학 18개,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23개, 기타 협력기관 5개 등의 기관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이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어왔으며, 관계기관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연구원을 설립하여 시·도 단위의 정책연구를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시·도연구원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과 연구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동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현안과제나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

향후 IT의 발달 및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연구원에 요구되는 주요 기능과 역할 또한 고도화·전문화·다양화되어갈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연구원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보, 국내외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통해 발전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2016년 제25회 지방자치실천포럼



2017년 한일공동연구회 세미나

02장 연구원의 핵심 성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제도의 발전과 성숙을 한 몸처럼 함께해왔다.

자치행정 부문

01.

민선 지방자치제도의 기틀 마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그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1991년 부활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시대와 부활 초기 및 이후의 성숙기로 구분한다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사도 지방자치의 각 단계별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전단계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의 제도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198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설립한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지방자치의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 설계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설립의 취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은 무엇이고, 적정 대안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의 수행은 연구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서 과거 지방자치의 경험과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등을 광범위하고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적정 대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자치입법의 영역에 관한 연구〉(1988),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1989), 〈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역할재분담에 관한 연구〉(1989),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확충방안 강구〉(1989),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연구〉(1989) 등의 연구과제들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1991년 광역 기초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부터는 정책적 또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색에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일반적으로 제도는 각국의 문화적 토양에 기초하여 운영되므로 다른 나라의 제도를 단순히 이식하게 되면, 다양한 역기능과 부작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시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또는 제도적 대안의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를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1994년에는 연구원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연구기획단을 설치하고, 지방자치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5년 민선 단체장의 선출로 본격화된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각종 지방자치제도를 새롭게 정비한 노력을 들 수 있다. 민선 단체장 체제의 출범에 따라 바로 현실화될 수 있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역할 분담,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역할 분담, 지역이기주의 극복 등의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적정 대안을 강구하려는 연구에 매진하였다. 이를 통해서 실제 1995년 민선 단체장이 선출되고서도 커다란



2017년 2월 강원 원주혁신도시 신청사 개청 기념 세미나





2014년 4월 미래지향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갈등 없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적인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는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확립하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왔다. 민선 단체장의 출범에 따라 변화된 행정운영 기조를 지방행정의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종의 주민편의 시책을 개발하는 연구에 주력하였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인건비제와 총액인건비제 등의 모델을 개발하고, 역대정부별 분권정책과 형정혁신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활동에 주력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건전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분석과 재정분석을 연례사업으로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모니터링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정책기조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여왔다. 최근에는 총량적인 인구감소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성 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대책수립을 연구원의 핵심적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다.

02.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 도입 및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는 2001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따라 시작되었다. 동법 제정과 더불어 자체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 집행한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자체평가 실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자체평가제도를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담당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고자 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지침'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실무자들과의 면담과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에서 자체평가가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매년 초에 실시되는 성과관리 담당자 워크숍에서 자체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요에 대응하여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평가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연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역량강화에 기여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06년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에 따라 성과관리의 제도적 완결성을 더하기 위해 기존의 자체평가 외에 BSC(Balanced Scorecard, 이하 BSC)의 도입·운영이 크게 확대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에 있어 BSC의 도입은 성과평가 결과를 보상체계와 연계함으로써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BSC는 자체평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부서별 성과를 평가하고, 고객관점, 재무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과 성장관점 등 4가지 관점에서의 균형 잡힌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BSC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일 필요가 있었으며, 특히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광역시·도와 시·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표를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BSC 기반의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및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역량강화에 기여하였다.

2019년 현재까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본 연구원이 연구·배포한 표준지표를 활용하여 BSC 기반의 성과측정을 하고 있으며, 변화되는 환경에 맞도록 고도화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BSC 운영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과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인 차원의 연구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단체 간 성과관리제도 운영 수준의 편차는 상당히 크다.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력하여 전국적인 성과관리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결과 공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03.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분석제도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지

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할 책임이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를 지원하여, 2010년부터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직분석·진단지표에 의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자체 기구·인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의 고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201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지표 및 매뉴얼 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약 2년간의 적용 결과 2014년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던 기구·인력 지표가 구조적 지표에 치우치고, 기능분석의 정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려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6년 다시 한 번 지표체계를 업그레이드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2016년부터 기구·인력 지표를 중심으로 조직분석·진단 지표를 통합하였고, 조직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구조지표(기구 부문 6개 지표, 인력 부문 10개 지표 포함)와 조직 운영의 개선 여부를 볼 수 있는 운영지표(기구 부문 6개 지표, 인력 부문 11개 지표 포함)를 함께 제시하였다. 특히 개발된 지표와 자체 진단 방식이 포함된 '지자체 자체 조직분석·진단 매뉴얼'은 매년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어 자체적인 조직진단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지표를 중심으로 보다 상세히 설명해보면, 먼저 구조지표는 기구 부문 6개 지표와 인력 부문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구조지표 중 기구 부문의 지표는 기구효율성에 대한 과·팀 단위 설치 수, 본청 과 단위 평균 정원 등 5개 지표와 사업중심성에 대한 본청 과 수 대비 공통지원기능 과 수 비율지표로 구성된다. 기구지표 중 인력 부문의 지표는 인력효율성에 대한 기준인건비 초과율, 무기계약직 비율 등 8개 지표와 사업중심성에 대한 전체 인력 대비 사업부서 인력 비율 등 2개 지표가 있다.

다음으로 운영지표 역시 기구 부문 6개 지표와 인력 부문 11개 지표로 구성된다. 운영지표 중 기구 부문 지표는 기구효율성을 측정하는 과·팀 단위 설치 변화율 등 5개 지표와 사업중심성을 측정하는 본청 과 수 대비 공통지원기능 과 수 비율 변화지표가 있다. 운영지표 중 인력 부문 지표는 인력효율성에 대한 기준인건비 초과율 변화, 무기계약직 비율 변화 등 9개 지표와 사업중심성에 대한 전체 인력 대비 사업부서 인력 비율 변화지표 등 2개 지표로 구성된다.

이처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자체 기구·인력 지표들을 토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아울러 평가 등급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매해 2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여 지자체 맞춤형 기구·인력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진단·분석을 통해 한국지방행



2017년 10월 제29회 지방자치실천포럼

정연구원은 조직설계의 타당성, 인사운용의 적정성,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 등 다각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운용방식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국정과제 또는 시급한 정책 현안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인력이 충원된 분야를 선정한 후, 이 분야를 중심으로 2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직분석·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읍·면·동 사회복지 분야·치매안심센터 분야·소방 분야·재난안전 분야 등을 중점 진단하였고, 2019년에는 사회복지 분야·도시재생 분야·재난안전 분야 등에 대하여 중점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보다 깊이 있는 제도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조직관리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근본적인 기구·인력 및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4.
법령상 사무총조사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체계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지방자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적정량의 자치사무 확보와 그 자치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법령의 제정 및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지속적으





2017년 4월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

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를 지원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사무배분의 기준과 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해나갔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무배분은 해당 국가의 문화와 관습, 환경적 특성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한 순간에 완벽한 기준과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사무배분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급격한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법령이나 제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무 재배분 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 간의 사무에 대한 적정한 재분류를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사무 분량과 내용, 성질을 현재의 기준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년 이상 축적된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무분류 기준, 단위사무의 유형과 성질 등 사무배분을 위해 필요한 방대한 지식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법령상 사무총조사를 실시해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법령상 사무총조사는 국가와 지방 간의 기본적인 역할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분권의 핵심인 정부 간 사무배분의 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무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 사무배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사무 실태를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국가가 수행해야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기준점을 설정하였다.

국가와 지방 간의 사무배분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범위, 재원부담, 지도·감독 등 법률적 관계 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현행의 지방행정체제가 새롭게 개편될 경우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도 등의 정비에 따른 사무와 인력 재배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국가–광역–기초 간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와 한계의 규정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안에 적합한 국가–지방 간의 사무재배분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법령상 사무총조사의 장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되어 있는 중앙행정부처 소관 법령상의 단위사무에 대하여 사무명·사무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렇게 설정된 기준에 따라 단위사무 전체에 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고, 부처별·법령별 사무현황 파악 및 관련 통계의 현행화를 통하여 국가사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017년 7월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실태를 현재적 시점에서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수의 변화와 단위사무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시책 추진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유형의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05.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도입 및 확산



2018년 7월 업무회의 및 교육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정부가 제공하려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대하여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을 규정하여, 그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공급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온 기존의 행정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고객만족 행정의 구현을 위한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목적은 공공서비스 수혜자의 필요와 요구에 보다 잘 대응하고,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설정하여 고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실천을 약속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고객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헌장제 등 다양한 해외사례를 연구하였다. 특히 영국의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을 벤치마킹하여 고객들의 기본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한국형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제안하였다.

해외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의 7대 원칙으로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원칙,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이 행정서비스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도입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 훈령 제정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1998년 5월 대통령 훈령 제70호인 「행정서비

스헌장 제정지침」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법령 제정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1998년부터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시범실시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시범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으며,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1999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은 1개, 지방자치단체는 1~2개 이상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도록 확대하였다. 이후 2000년에는 중앙행정기관은 그 소속기관까지, 지방자치단체는 10개 이상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도록 확산하였다. 그 결과 2001년도에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내실화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4년도에는 3,994개 기관에서 7,825개의 헌장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실태, 이행표준달성도, 고객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발전시켜나갔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가 수혜자의 필요와 요구에 보다 잘 대응하고, 공공서비스가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8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01.

프로그램(사업) 예산제도 연구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통적인 품목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지난 수십 년간 사실상 본질적인 구조개편 없이 유지되어왔다. 이와 같은 품목예산제도는 세목별 통제와 법규 순응성 등 관리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반면,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면에서는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도에 기존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예산관리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과지향 예산체제인 프로그램(사업)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에 있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기초연구를 비롯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성과관리를 지향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시행해온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사업) 예산제도(Program Budgeting)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는 물론 제도의 정비와 발전을 위한 다수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사업) 예산은 품목예산제도의 '목' 중심 예산관리체제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관리체제로 전환되는 구조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방예산제도를 프로그램 예산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구조와 틀을 성과관리체제로 구조적 개편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의 구조화 및 성과목표의 연계 그리고 예산 관련 주체의 인식 및 행태변화가

지방재정 부문



2012년 10월 아젠다워크숍

요구된다.

이와 같은 핵심주제와 관련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자율과 성과지향의 지방예산제도의 개편방안: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조의 개편방안을 중심으로〉(2004)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과 예산 관련 전문가그룹과 실무자를 중심으로 워크숍과 토론회를 거쳐 지방예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구조,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적용, 지방예산제도의 과목체계 개편 및 법령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 환경국, 건설교통국 및 남양주시를 사례로 프로그램 구조화를 분석하였다.

이외에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예산제도에 관한 제도 정비와 개선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연구원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지방예산제도의 개선방안: 성과측정을 위한 투입비용 산정을 중심으로〉(2000), 〈사업별 예산과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 연구〉(2007), 〈사업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정착방안〉(2008), 〈새로운 지방예산제도〉(2013),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강화〉(2015)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예산제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확산과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여왔다.

정부(행정안전부)는 제도 도입의 본래적 목적인 예산지출의 성과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2016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예산과 직접 연계되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원가정보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사업 성과목표의 수립, 사업구조화와 성과지표의 설정 등이 성과관리 관점에서 관련 재정제도들과 체계적으로 연계·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예산 효율성과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02.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운영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목적으로 1994년에 도입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199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진단을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제도의 정비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진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재정분석은 재정력 측정에 초점을 두어 재정자립도 등과 같은 단일지표를 활용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단일지표로는 지방재정상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없어 다양한 지표로 구성된 종합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 관점



2012년 11월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한 세미나

에서 분석하기 위해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 채무부담 측면까지 고려하여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재정분석·진단제도가 도입·시행되었다. 현재의 재정분석·진단제도는 '재정분석→재정진단→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의 연속적인 단계로 이루어진다.

재정분석의 절차는 우선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이후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진단 단체로 선정하며, 재정진단 단체를 대상으로 정밀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고 계획 기간 동안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한다. 재정분석 결과를 언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재정분석의 모형과 분석지표의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2개 영역(건전성·효율성), 4개 하위영역(자주성·안정성·생산성·노력도)의 측정을 위한 10개 분석지표를 활용하였다.

둘째,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지방재정의 거시적 상태와 실적을 파악하여 측정하는 지표와 지방재정의 미시적 상태와 실적을 파악하는 지표, 주민관심지표, 국가정책 순응도를 파악하는 지표, 세계적 선도 추세를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였다.

셋째, 2008년과 2009년에는 재정분석진단제도에 새로운 방법이 적용되었다. 특히 2008년에는 분석주체가 중앙에서 각 시도로 바뀌었으며, 이 시기에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방식이 전환되었다. 평가지표로는 안정성·건전성·효율성·계획성 등 4개 분야 총 16개 지표가 사용되었다. 2009년에는 분석주체가 다시 중앙으로 환원되었으며, 평가방식 역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되었다.

넷째,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정분석에서는 재정상태를 분석하는 재정건전성과 재정운영의 자구노력을 평가하는 재정효율성 그리고 재정계획성 부문의 총 20개 지표를 활용하여 재정분석진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보통교부세 배분에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세입확보 및 예산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보통교부세 배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2015년 이후부터는 실질적 재정건전성관리와 재정효율성관리 강화를 주요 중점으로 하면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재정책임성 부문이 추가되어 재정분석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현재 위와 같은 변천을 거쳐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등 3개 부문 총 14개 지표를 활용하는 재정분석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몇 차례 운영방식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진화되어 지방재정운영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 7월 지방재정전략과 지방투자사업 발전 공동워크숍



2016년 1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제도공유 워크숍(영남권)

앞으로는 재정분석·진단을 통해 산출되는 양질의 재정자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컨설팅제도나 분석 결과의 환류체계 정비를 통해 재정분석·진단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다.

03.

지방교부세제도 연구

한국의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교부세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에서 부족한 지방세입을 보전하는 재원보장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수직적인 세원불균형을 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는 세원의 지역편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교정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러한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을 통하여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국가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연구를 매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기본연구과제, 학술연구용역, 자료집, 지방행정연구 등 다양한 발간수단을 이용하여 지방교부세의 이론, 주요국 사례조사, 법정률 및 산정방식 등의 제도와 관련된 기반연구를 수행해왔다. 또한 긴급한 정책현안 발생 시 정책연구과제나 정책이슈 리포트 등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노력도 경주하였다. 먼저 지방교부세 총량의 경우 1983년 내국세의 13.27%로 연동하는 법정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1991년에 부활되면서 지방행정의 수비범위가 급격히 확장되자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연구원은 그 당시로서는 최신 기법인 오차수정모형이론을 이용하여 법정률이 15.27%로 인상되어야 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마침 지방자치의 국가적 가치를 중시하였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0년에 법정률이 15%로 인상되었다.

한편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5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하면서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였으며, 이양비용 보전 목적으로 내국세 0.83%의 분권교부세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이 19.13%로 인상되었으나, 이양비용의 추계가 과거 3년의 평균치를 이용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정으로 폭증하는 사회복지비에 대한 재원부족이 심각한 정책현안으로 대두하였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하여 기본연구과제와 KRILA FOCUS 등에서 분권교부세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정률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2006년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이 19.24%

로 인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방교부세의 산정제도나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굵직한 성과를 소개하면, 먼저 낙후지역 기준의 개선을 들 수 있다. 2012년과 2013년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받아 낙후지역 기준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인구와 인구밀도, 지방소득세를 인구밀도와 지방소득세로 간소화하면서 적용 대상도 전체 읍·면의 1/3에서 1/2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2015년에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흡수·통합되면서 측정항목 등 산정제도의 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2016년에는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보정수요 반영비율 조정, 도농복합도시나 장사시설 등 지역균형수요 항목 신설, 신규 지역균형수요 설치 시 3년 일몰제 도입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였다.

한편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서 일선 자치단체의 고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학술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 자치단체를 위한 정책컨설팅과 함께 대정부 제도개선방안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접경지역 시·군협의회, 논산시, 구미시, 영양군 등으로부터 지방교부세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의뢰받아 연구성과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낙후지역 반영비율 인상, 접경지역보정수요 가중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보통교부세 재정형평기능 강화, 지방교부세 거버넌스 재구축을 연구하였으며, 2019년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과 연계한 지방교부세 혁신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연구성과 중 지방교부세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이나 자치단체의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의 거버넌스 재구축의 경우 일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차등산입률 제도 도입이나 재정형평을 전담하는 재정지원제도의 설치 등 제도혁신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





2016년 5월 LIMAC-한국비용편익분석원 공동 세미나

04.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 등을 주민에게로 분권화하는 것이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의 예산편성 기능과 권한 등을 주민과 나누고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시스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행정과 주민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의 통로이며 주민





2011년 6월 정책간담회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과 주민 간의 소통과 책임을 향상시키는 기제이다. 또한 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참여하여 제안하고 토론하고 투표하여 사업과 예산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스템이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의 예산편성 등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나와 내 공동체의 삶의 질 변화와 더 나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예산의 참여는 민주주의 주요 원칙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과 납세자의 의무와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납세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바로 주민이 납세자로서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책임을 물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주민참여예산의 확대 운영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하였으며, 제도 개선 및 컨설팅 등의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서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1990년 후반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3년 3월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고,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313조 원(총계) 중 주민참여예산은 18.7조 원으로 5.9%이다. 이 중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사업과 예산을 결정한 주민참여예산 기본원리에 충실한 주민공모사업이 5,446억 원으로 0.2% 정도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공모사업 외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행 주민참여예산이 기본원리에 충실하지 않고 변형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의 구산동도서관마을은 도서관 건립 제안부터 예산확보, 건립까지 주민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재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외에도 주민커뮤니티공간, 지역정보와 마을자료를 배치하는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홍성군의 '빨간장터'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들이 난상토론을 거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달력의 빨간 날만 장터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및 도시민의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한 주민주도 참여예산의 하나로 되어 있다. 제주도의 강정초록마을은 지역주민의 제안으로 버려진 유휴지에 고구마 등의 농작물과 꽃을 심고, 고구마 캐기 체험, 판매수익금의 장학기금 기여, 힐링 장소를 제공하는 등 젊은층과 노인층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서 지역발전, 세대 간 갈등 및 노인층의 건강 유지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주민참여예산은 현재도 진화 중에 있다.



2011년 10월 정책세미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발전방향

05.

복식부기회계제도 연구

1995년 이후 시민단체, 학자들로부터 정부 부문에 복식부기(발생주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이후,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IMF 등 국제기구에서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정부재정 통계자료 작성을 요청하여 1998년 정식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후 1999년 12월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법령정비, 정부회계기준 제정, 회계정보시스템 개발, 회계교육 실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시험적용(Pilot Project)을 거친 후, 전 자치단체로 시범실시를 점차 확대해나갔다.

이러한 시범단계를 거쳐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은 지방정부가 2007년부터, 중앙정부가 2009년부터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단계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회계법인,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문가그룹, 공무원들과 함께 새로운 제도 도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정부회계 개혁모델에 있어서 기본적인 도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현금주의결산과 발생주의결산을 병행하여 처리하는 이원체제(Dual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세입세출예산에 의한 현금주의(단식부기) 결산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로 자산·부채거래 등을 포함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결산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둘째, 복식부기회계처리와 발생주의 인식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복식부기원리 적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수입과 지출이 아닌 경상과 자본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생성한다. 또한 발생주의 적용에 따라 거래를 현금수수에 관계없이 발생시점에 인식한다.

셋째, 단계적 도입을 채택하였다. 시범운영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린 단계적 도입, 즉 '기반구축 및 시범운영→법제화 및 회계기준 제정→제도시행 및 평가·보완→제도안정화 및 정착·발전'을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과 장애요인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정부회계 분야의 경우 행정학·회계학·경영학·경제학·회계실무 등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은 정부회계제도의 개혁 배경, 정부회계의 환경적 특성,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의 쟁점과 개선점,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안 및 새로운 재무회계모델을 수립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회계법인(산동회계법인)은 회계과목과 실무적인 회계처리기법을 담당하고, 회계정보시스템은 정보기술업체(삼성SDS)가 담당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특히 뉴질랜드·스페인·영국·미국·캐나다·일본 등 선진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우리의 정부회계제도 모델을 정립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하였다. 여기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정 중 연구원이 수행한 대표적인 연구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7월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실무자과정

■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1단계 연구용역)

–수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동회계법인, 삼성SDS

–과업기간: 1999. 12. 1~ 2001. 3. 18(473일)

–사례단체: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강남구

–연구내용: 복식부기제도 도입으로 변화되는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이며 정부회계논점을 도출하고 전문가워크숍과 토론회를 거쳐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안' 도출

■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시험적용(2단계 연구용역)

–수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도회계법인, 삼성SDS

–과업기간: 2001. 11. 12~ 2003. 9. 11(22개월)

–사례단체: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강남구

–연구내용: 1단계 연구결과 산출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회계처리실무규정 및 전산프로그램을 근간으로 하여 이들 기준과 규정을 실제 부천시와 강남구에 시험적용 및 운영함으로써 시험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

■ 자산·부채의 평가관리 기준 수립 및 전산시스템 구축(3단계 연구용역)

–수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도회계법인

–과업기간: 2003. 4~ 2004. 10

–사례단체: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강남구

–연구내용: 공유재산과 물품, 부채에 대한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자산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산의 관리과정별 회계처리기준을 수립

■ 복식부기회계제도 확대시범운영 및 표준화사업(4단계 연구용역)

–수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도회계법인, 지에프시스템

–과업기간: 2003. 10~ 2005. 2

–사례단체: 7개 자치단체(대전시·대전서구·전북도·전주시·정읍시·무주군·순창군)

–연구내용: 시험적용결과를 분석하고 전국 적용을 위한 표준화 방안을 설계(법령체계 정비, 지방예산제도 개선, 중앙과 지방 간 회계기준 연계, 복식부기회계규칙안 설계)

지역발전 부문

01.

지방소멸 인구감소 시책 개발 및 제시

최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주세라면 머지않아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는 예견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지역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지방소멸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국가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인구감소로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지역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국가경제도 존립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삶의 제반 영역인 보건, 복지, 요양, 육아, 청소, 상하수도,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형편에서 지역포용발전실은 인구의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시책을 개발, 제시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의한 소멸지역 분석연구를 필두로, 2017년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 및 시뮬레이션 연구, 인구감소지역 정주공간 현대화 및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정책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2018년에는 인구감소지역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 개발에 대한 연구를, 그리고 2019년에는 부처통합적인 지역인구감소 시책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나 지역 차원에서 지방소멸방지 인구활력대책에 대한 법률 제정의 동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지방소멸방지 시책 추진의 토대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10월 한일지방자치제도연구회

02.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기관이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강화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0년대 이전에 오지개발, 정주자립권, 소도읍 정책을 설계해서 이들 정책추진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발전정책이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어젠다가 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참여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타 국책연구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초안을 연구·개발했으며, 발전의 여력이 부족한 저발전 70개 지역을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신활력사업' 지역 선정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추진 및 평가방안을 제시해서 정책추진의 초석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 후 타 국책연구원과 함께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지자체 간 연계 및 협력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매뉴얼을 개발, 제시하였다. 또한 국민의 체감적 지역발전정책의 향상을 위해 시지역과 군지역이 포함되는 163개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매뉴얼 개발 및 정책시행에도 기여하였다. 아울러 기초생활권 정책의 제도개선,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개발해서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현재는 보다 체감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서 동네 및 근린 단위의 생활 SOC 복합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있다.

03.

도서,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정책개발 및 제도화 기여

지역포용발전실은 본디 발전여건이 떨어지고 있는 도서 및 접경지역 등 낙후



2012년 11월 지역간 상생협력과 공동발전 세미나

지역에 대한 정책을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개발해서, 국가 및 정부의 시책화를 지원하고 있다.

2000년대 이전, 특히 1980년대에는 오지 및 낙도를 중심으로 한 도서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도서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기여했으며, 1984년에는 접경지역 지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등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휴전선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5개 시·군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에 기여한 바 있다.

2010년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이들 지역주민의 삶이 애로를 겪게 되었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인 서해5도의 문화·산업·관광·주민안전·주택·생활과 관련된 발전방안에 대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서해5도 발전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1,400여 개의 섬 지역 생활여건 분석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섬 발전 연구 진흥원'(가칭) 설립 방안을 개발해서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관련법의 법제화와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한 기초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04.

지역의 소득창출 및 생활여건 개선 정책개발 및 지원

2000년 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향토산업 및 연고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의 향토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개발에 힘써, 2005년 '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제화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화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부응하여 지자체 향토자원 개발 등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및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개발·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방안,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법제화를 지원하고 있다. 마을기업 육성방안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지원도 이런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단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들도 수행하고 있다. 청년 파견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방안,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시도의 인구정책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시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지자체의 장기적 전략계획의 수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구미·경산·전주·여주·공주 등 시급 지자체의

전략계획 개발뿐 아니라 고창·거창·울진 등 군급 지자체의 장기적인 먹거리에 해당되는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미래 지역발전의 비전과 미래상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역 간 협력발전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력 발전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을 포함해서 영국·독일 등의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국내에 소개하고 있으며, 지자체들로 하여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개발, 지원하고 있다.

타당성조사사업 부문

01.

타당성 조사 과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서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단계이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판단근거로 활용된다.

> 제37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는 2014년 12월 행정안전부 장관 지정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12월까지 총 216건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다. 실제 조사를 의뢰받은 사업은 338건이지만, 의뢰받은 모든 사업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전절차가 미비한 사업은 사전검토과정을 통해 걸러진다. 이렇게 사전에 걸러진 사업은 총 122건, 약 20조 원에 달한다.



2016년 1월 타당성조사사업 수수료 산정 공청회

타당성조사 약정, 반려 및 철회 건수, 총 사업비

(단위: 억 원, 건)

연도	의뢰 건수	총사업비	약정건수	총사업비	반려 및 철회건수	총사업비
2015년	33	90,620	16	53,537	17	37,083
			48%	59%	52%	41%
2016년	51	75,989	32	37,349	19	38,640
			63%	49%	37%	51%
2017년	71	100,255	47	78,003	24	22,252
			66%	78%	34%	22%
2018년	81	129,727	50	81,798	31	47,929
			62%	63%	38%	37%
2019년	102	166,804	71	109,956	31	56,848
			70%	66%	30%	34%
합계	338	563,395	216	360,643	122	202,752
			64%	64%	36%	36%



2018년 12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세미나

LIMAC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대안을 제시하여 비용을 절감하거나, 수요 대비 과다한 계획으로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사업을 방지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조사를 수행 중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적 대안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4차로로 의뢰된 지방도 확장사업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기술적 검토결과 기존교량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총사업비를 의뢰안 대비 38%(829억 원) 절감한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버스공영차고지 지하에 저류조를 건설하는 복합화사업에서 일체형의 구조물을 제안하여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성과로는 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간의 불합리한 협약내용, 즉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계약사항을 지적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결국은 지방재정의 위험성 감소에 기여한 부분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우발채무 발생 위험성을 경감시킨 사례를 들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의 SPC 출자 비율이 20%임에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의 90%를 책임지는 불합리한 협약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LIMAC에서 타당성조사를 통해 출자비율 내에서 미분양용지의 매입조건 비율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여 최종적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는 최종분양률에 따른 과도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또한 투자사업의 금융구조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금융조건(후순위 대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지자체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02.

지침개발 및 제도연구과제

LIMAC은 조사의 객관성과 사업 간 평가의 일관성을 위해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및 사업 분야별 지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지침 외에 도로 및 교통 부문, 주거 및 상업 부문, 공공청사 부문, 문화·체육·관광 부문, 환경 부문, 산업단지 등 7개의 사업 부문별 지침이 이에 해당한다. LIMAC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는 모두 해당 지침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 지침들은 LIMAC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와 민간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침 외에도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제도개선 관련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도 유지관리비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지방도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원구조를 반영한 재무적 할인율을 추정하였다. 이처럼 LIMAC은 국가 사업과 다른 지방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조사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성을 반영한 맞춤형 타당성조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방안, 재정영향 분석 및 고용효과 분석, 남북경제협력사업 및 북한지역 투자사업 관리방안,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관련 연구까지 연구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갈수록 다양화, 복합화되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침의 개정도 계획하고 있다.



2018년 제2차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문위원회

03.

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 통과 후,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 지연·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차질 및 손실 발생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부지 위치뿐만 아니라, 면적 및 총사업비의 증가, 사업일정 지연 등으로 이어진 사례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실시설계용역 중 주민 반대로 도로 선형을 변경한 경우로 사업비는 38억 원 증가하고 일정은 3년 6개월 지연되었으며, 심지어 예산 미확보 또는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에



2014년 12월 지방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 2)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력관리제도는 2013년 이후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추진상황을 DB로 구축하고,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중단 등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자체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매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때, LIMAC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도별 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2013~2018년 투자심사 통과사업)

구분	대상사업(건)	총사업비(억 원)	완료사업(건)	중단사업(건)	구분	대상사업(건)	총사업비(억 원)	완료사업(건)	중단사업(건)
합계	1,237	777,693	255	67	경기	262	317,362	50	13
서울	62	58,950	4	8	강원	79	21,443	14	2
부산	68	39,305	19	2	충북	76	30,310	13	7
대구	57	44,577	10	4	충남	88	28,093	23	3
인천	35	24,404	8		전북	65	23,835	12	3
광주	34	24,195	8		전남	106	36,130	24	11
대전	34	23,857	3		경북	118	37,667	29	7
울산	41	19,502	14	3	경남	84	36,573	14	3
세종	9	5,359	2		제주	16	6,130	8	1



2018년 제9차 LIMAC 세미나

04.

자체 타당성조사 검토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으로 LIMAC이 아닌 타 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LIMAC에 의뢰하여 중앙투자심사 시에 활용하고 있다. LIMAC은 투자심사 의뢰서와 보고서의 일치성 여부, 총사업비의 적정성, 수요 추정의 적정성,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 의사결정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체 타당성 조사 검토 수행실적은 2017년 118건, 2018년 95건, 2019년 145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추세이다.

05.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LIMAC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상호협력 네트워킹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격월로 공동세미나를 주최하여 협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들의 투자심사제도와 타당성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 권역별 순회교육을 매년 수차례에 걸쳐 개최해왔다. 공무원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2015년에 처음 시작하여 2019년까지 총 16회 실시하였고,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 수는 총 1,500명에 이른다. 2019년에는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도입하여 2019년에만 총 35개 지자체의 사업 41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LIMAC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인정된 전문기관이다.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명실상부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앞으로는 그동안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공무원 교육(강원권)

03장 연구원의 사업별 평가

처음 맡은 용역연구과제 '지방행정 기능 분석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35년간 지방행정, 지방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도출해왔다.

연구원 35년의 연구 성과

01.
태동기(1984~1985)의 연구 성과

1) 연구과제사업

지방행정연구소가 처음으로 맡은 용역연구과제는 〈지방행정 기능 분석에 관한 연구〉였다. 연구 기간은 1984년 10월 5일부터 1985년 5월 31일까지였다. 경기도 및 인천직할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실태분석 및 이양대상 단위사무 발굴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이양대상 총 703건 중 신규위임 227건, 민간이양대상 232건, 유사중복사무 통합조정 224건, 기타 160건의 단위사무를 발굴하였다.

지방행정연구소는 1985년 자체연구과제로 〈2000년을 향한 지방행정목표〉라는 연구과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당시 정석모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영춘 소장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연구소가 제2의 출발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과제는 2000년대를 향한 지방행정의 좌표설정과 민주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단계적 발전방향 제시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대 지방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일이므로, 총 26개의 소과제로 분야가 나누어져 있었다. 따라서 연구소의 연구진 10명과 외부 전문학자 11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198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에 착수하게 되었다.

연구내용은 2000년대의 환경변화와 지방행정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방행정의 목표와 이념, 지방행정수요를 전망하는 부문이었다. 또한 지방행정의 공간조직 및 기능배분 분야에서는 계층구조 및 기능배분, 행정구역, 광역권행정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연구하였다. 지방자치 분야는 지방자치제도, 중앙통제, 주민참여 등으로 소과제를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지방행정조직관리의 경우 지방행정조직, 지방공무원제도, 사무관리, 민원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재정 분야는 지방재정수요, 지방재원, 지방재정조정, 지방공기업, 지방재정운영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1985년에 주로 수행한 위탁연구과제는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두 분야에 걸친 주제였다.

지방행정 분야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비교 및 한국의 지방자치제 실무방안 연구〉, 〈대도시 행정제도 개편방안 연구〉, 〈과거의 지방자치제 운영실태 연구〉,



1993년 5월 지방자치제의 발전방안 공청회

〈지방공무원 의식구조와 인사행정의 개선방향 연구〉 등 4가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재정 분야는 〈지방재정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교육부세제도 연구〉, 〈지방재정수요 예측 및 재원대책방향 연구〉, 〈지방예산 실태분석 연구〉, 〈지방재정기금의 효율화방안 연구〉 등 5가지를 수행하였다.

2) 발간사업

연구소 초창기에는 본격적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데다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간사업 역시 부진한 편이었다. 이 시기에는 연구총서, 연구자료집, 지방행정정보자료 등 3개 분야에 걸쳐 발간사업을 펼쳤다.

먼저 연구총서 분야는 1984년에 연구총서 제1호로 《각국의 지방행정제도 비교》(이규환·박호숙 편)와 제2호로 《각국의 지방재정제도 비교》(이재성·오희환 편)를 펴냈다.

연구자료집은 1985년에 《일본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사무 목록》 등 2권을 발간하였다. 이 연구자료집은 연구소 개소와 함께 시작한 연구과제인 〈지방행정기능 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보조적인 지료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들이었다.

지방행정연구소는 설립 등기 완료 직후인 1984년 8월부터 지방행정연수원의 사업인 《지방행정 정보자료》를 인계하여 제56호부터 매월 출간하였다. 이 발간사업은 연수원에 있던 연구소를 서울시 마포구로 이전하기 전인 1985년 4월부터는 발간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1985년 3월호인 제61호까지만 발간되었다.

02.

마포시대(1986~1996)의 연구 성과

1986년 연구원으로 승격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7년부터 내무부 및 각 시도에서 의뢰한 과제를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특정 자치단체의 현안을 중심으로 한 연구과제보다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주제와 중앙정부가 지방을 관리하기 위한 주제들이 주로 선정되었다.

연구 과제는 크게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개발 3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1993년 8월 국가발전과 지방자치 세미나

1) 지방행정 분야

■ 자치제도

자치제도 부문의 연구실적은 크게 기본과제, 정책과제, 위·수탁과제 세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기본과제 위주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86년 〈2000년을 향한 지방행정좌표〉의 연구 과제를 시작으로 하여 1996년까지 33개의 과제를 맡아 진행하였다. 1년에 적게는 1개에서부터 많게는 5~6개의 과제를 완수하는 실적을 보였다.

정책과제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부터 수행하였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적 수요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들이었다. 정책과제의 수행내용은 주민 참정, 기능 이양, 자치권 강화 및 광역행정 등이었다. 1995년에 〈6.27 4대 지방선거 분석〉 외 1건을 비롯하여, 1996년에 3건을 수행하였다.

위·수탁 연구과제는 1986년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비교 및 한국의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한 해 동안 4개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이후 10년 동안 위·수탁 연구과제는 없었고, 주어진 기본과제에만 집중하였다.



1996년 5월 지방자치시대 공청회

■ 행정운영

기본과제는 1986년 〈지방행정시책 평가측정방법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1996년까지 52개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1991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14개 과제를, 1992년에는 〈지역주민여론의 효율적 수렴방안〉 등 8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위탁과제는 1986년 〈지방공무원 의식구조와 인사행정의 개선방안 연구〉를 비롯하여 1995년까지 총 5건을 수행하였다. 1986년·1989년·1993년 각기 1건씩 그리고 1995년에 2건의 위탁과제가 있었다.

정책과제는 1995년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지원법(안) 제정방향에 관한 검토의견〉을 비롯한 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전에는 행정 분야의 정책과제가 없었는데, 사실상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된 1995년부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지방의정

기본과제는 1988년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와 1991년 〈외국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1994년 〈지방의회의 위상정립방안〉 등이 있었다. 이 연구 과제를 통하여 먼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조정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주민과의 관계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1995년에는 〈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 제고방안〉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맡게 된 정책과제로는 1995년 〈지방의회의 규모조정 방안〉 1건을 진행하였다.
한편 위탁과제로 1992년에 〈지방의회의원 선거분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방재행정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초기에는 주로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소방행정체제의 변화나 민방위 기능의 정립 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다가 도시화의 진전과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이 증가하면서 비로소 방재행정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연구수요가 크지 않아서 이 시기에는 기본과제만을 수행하는 정도에 그쳤다. 1994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방재연구실이 설치되었는데, 그때부터 방재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재해영향평가제도 및 재해보험제도에 관한 도입방안 연구의 수행도 1994년에 이루어진 과제였다.
기본과제는 1990년 〈지방자치제하의 소방행정체제 효율화 방안〉을 비롯하여 1996년까지 1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 방제행정 분야에서 정책과제는 없었고, 수탁 과제로 1996년에 〈무한천 방재종합대책 수립〉 등 2건의 연구가 있었다.



1993년 10월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전략 심포지움

2) 지방재정 분야

■ 재원확충

기본과제로 1988년 〈지방행정서비스와 사용자부담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1996년까지 24개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정책과제로는 1995년 〈지방소비세제도의 도입방안〉을 비롯하여 1996년에 2건 등 총 3건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수탁과제도 수행하였는데, 1995년 〈지방재정보전제도 도입방안〉과 1996년 〈자동차 관련세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맡아 연구하였다.

■ 세출 및 재정관리

세출 및 재정관리와 관련된 과제는 대체로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운영에 대해 효율성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다. 이를 위하여 1987년 〈지방재정력 측정지표 연구〉, 1988년 〈지방정부의 업적평가지표 연구〉, 1989년 〈지방재정분석 모형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연구다. 이를 위하여 1989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1992년 〈지방사업 투자심의제도의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진행하였다.
이들 연구는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데 중요한 관리수단으로 활용되어, 우리나라 지방재정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1994년에는 정책과제로 〈지방재정운영 분석·평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재정지원·협력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연구는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총 29건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 채무관리

기본과제로 1987년 〈지방채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와 1996년 〈지방채제도의 운영·관리 개선방안〉 등이 있었다. 정책과제로는 1995년 〈지방채 발행기준의 개선·보안 방안〉 등 2건이 있었다. 그리고 위·수탁과제로 1986년 〈지방재정의 자금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 재정제도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관계에 대한 연구과제는 재정을 조정하는 문제였다. 대표적 연구과제로 1986년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연구〉와 1990년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 1996년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방안〉 등 4건을 꼽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재정제도의 정책과제로 1996년 〈중앙과 지방 간 부담금재원 배분에 관한 연구〉 1건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반과제로 1994년 〈지방교부세제도의 한·일 비교와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방교부세의 보조금화 방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재정제도의 경우 1986년에 위탁과제로 〈지방재정제도에 관한 연구〉와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연구〉 2건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 예산 및 회계

대표적인 기본과제 연구로는 1987년에 수행한 〈지방예산분류체계 및 재정분석 전산화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사업별 예산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8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분류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88년에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1996년에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편성순기 조정방안〉에 대한 기본과제를 수행하였다.
한편 정책과제로는 1995년 〈지방예산편성의 개선방안〉 1건을 맡아 연구하였다.

■ 지방세제 및 지방세정

기본과제는 1990년 〈정책세제의 효율적 운영방안〉를 비롯하여 1995년까지 총 9건을 수행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본격 실시되면서 지방세제 분야의 정책과제가 생겨 한 해 동안 〈보유세와 거래세의 적정수준에 관한 모형〉 등 4건의 과제를 연구하였다.
특히 지방세정 분야에서는 1993년과 1994년에 일반 연구 2건을 수행하였다. 그중에서 1994년에 수행한 〈체납세의 징세관리 개선방안〉은 국내 최초로 지방세정 분야를 연구한 과제로, 그 이후 지방세정 연구의 모델이 되었다.
1994년에는 용역으로 〈지방세제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또한 수탁과제로 1995년 〈자동차세율의 효율적 조정방안〉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1995년 7월 충청남도 시 · 군의회 의원연찬회

3) 지역개발 분야

■ 도시 및 지역 개발

기본과제는 1986년 〈지역특성개발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비롯하여 1996년까지 총 18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와 규모나 과제 수는 극히 미미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제한적으로 용역과제를 수탁하기 시작하였다. 그 시발이 된 연구가 1993년에 수행한 〈김포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이었으며, 이어서 1994년에도 여주군의 용역을 받아 같은 과제를 수행하였다.

■ 지역경제 및 산업육성

경제발전과 산업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였으므로, 연구원의 과제들도 이러한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기본과제로는 1988년 〈지방공단육성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1996년까지 총 14건을, 위탁과제로 1987년 〈지역경제모형설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도시 및 지역정책

기본과제로 1986년 〈도시비공식부문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1996년까지 총 24건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시기의 중요한 연구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1987년에 수행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개발행정체제에 관한 연구〉인데, 이

는 다가올 지방자치에 대비해 지역개발행정체제에 대한 기초연구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는 특히 경제발전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은 환경오염억제에 관한 연구에도 관여하였다. 대표적 예로 1991년에 수행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종합대책〉은, 상류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에 상응해 하류의 수혜지역 간 수질보전비용을 서로 분담하는 상생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탁과제로 1987년 〈새마을운동 발전방안 연구〉와 수탁과제로 1990년 〈지역균형발전법(안) 작성 연구〉 등이 있었다.

4) 발간사업

1986년 5월 연구원의 법적 지위변경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된 이후부터 1996년까지 발간된 사업은 연구 과제에 대한 보고서 외에도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정보》, 《지방행정문헌목록 및 연구자료집》 등이 포함되었다.
이 시기의 실적물은 《연구자료집》, 《세미나 보고서》, 《공청회·연찬회 보고서》, 《파견연구자 논문집》,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정보》, 《정책의견서》, 《조사보고서》 등이다.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발간된 것은 《연구자료집》과 《세미나 보고서》, 연구논문집인 《지방행정연구》와 《지방행정정보》다. 그 밖의 것은 부정기적으로 발간된 실적물이다.

03.
수원시대(1997~1998)의 연구 실적

1) 지방행정 분야

■ 자치제도

기본과제는 1997년 〈영국의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과정 분석〉을 비롯하여 4개 과제를 연구했는데, 주로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하면 1998년에는 국내 지방자치제도의 각 분야에 걸친 기본과제가 주어졌는데, 〈자치경찰제의 준거 틀과 모형설계〉 등 5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정책과제는 1997년 〈시·군·자치구의 자치제도 비교분석〉 등 4개 과제를, 1998년 〈선거관리위원회,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간 선거집행기능의 재정립방안〉 등 7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주민직접참정제도나 광역행정수행에 관한 연구도 주요 과제로 다루어졌다.

■ 행정운영

기본과제로 1997년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사례 분석〉을, 1998년에는 〈읍·면·동의 기능전환 방안〉과 〈통일대비 지방행정 방안〉 등 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자치제도 실행 현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변혁의 행정운영을 다루면서, 또한 미래의 통일을 대비한 방안까지 마련하는 미시적·거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다.

정책과제는 1997년에 〈지방공무원 표준 정원제도 보완연구〉 등 6개, 1998년에 〈인구수 변수의 표준 정원 산정방법〉 등 8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위·수탁과제는 1998년에 〈표준정원 기능분야별 보조산식 개발〉 등 3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그쳤다.

■ 지방의정

기본과제는 1998년에 〈최근 외국의 지방의회 성과평가 모형개발과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1건을 진행하는 데 그쳤다.

정책과제는 1997년 〈외국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 1건과 1998년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른 의회운영 실태분석〉 1건을 수행하였다.

2) 지방재정 분야

■ 재원확충

기본과제로 1997년 〈담배소비세의 개편방안〉 등 2건, 1998년에 〈지방환경세 도입에 관한 연구〉 등 2건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재원확충 부문의 정책과제와 수탁과제가 없었다. 지방자치제 초기였으므로, 이러한 현실은 지방행정에서 실제적인 재원확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해준다.

■ 세출 및 재정관리

기본과제는 1997년에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체제 개편방안〉 등 3건, 1998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운용 개선방안〉 등 3건의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다.

정책과제는 1997년 〈일본 자치단체의 자금 및 금고운영실태〉 1건과 1998년에 〈일본 자치단체의 적립금제도 운영실태와 제도도입의 방향〉 1건이 있었다.

수탁과제로는 1997년 〈지방재정진단제도의 실용적 실시방안〉 1건이 있었다.

■ 채무관리

기본과제로는 1998년 〈자치단체금고운영의 개선방안〉 등 3건을 수행하였다.



1998년 7월 IMF체제 극복을위한 지방정부의 전략적 경영 세미나

그중에서 〈재정위기에 대비한 지방채 운용방안〉과 〈지방자치단체 해외자본 도입·관리제도의 개선방안〉 과제는 특히 채무관리에 있어서 지방채와 해외자본 도입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정책과제로는 1998년 〈일본 자치단체의 적립금제도 운영실태와 제도도입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시기에 위·수탁 연구과제는 없었다.

■ 재정제도
기본과제로 1997년 〈도세 징수교부금제도의 개편방안〉 등 2건, 1998년 〈중국의 지방재정제도〉 1건 등을 수행하였다. 지방자치제 초기였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관계 조율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 지방세제
지방세의 체계, 세율, 과표, 세원배분 등과 관련된 연구 분야가 지방세제 부문이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 주제로는 재원조달 기능 강화, 복잡한 지방세체계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등을 다루었다.
기본과제로는 1998년 〈부동산 세수구조 조정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등 3건을 수행하였다.

■ 지방세정
지방세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바탕을 둔 실무적 현상이어서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결과 지방세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기본과제로 1997년에 〈체납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 방안〉 1건, 1998년 〈지방세수 예측을 위한 모형의 탐색〉 등 2건을 수행하였다.

3) 지역개발 분야

■ 도시·지역 개발
기본과제로 1997년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의 협력방안〉 1건, 1998년 〈지방도로사업의 효율적 투자방안〉 1건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도시나 지역의 개발사업과 같은 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제적 적용보다는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데 집중하였다.

■ 지역경제·지역산업 육성

기본과제로 1997년 〈도시성장력 평가에 대한 연구〉 1건과 1998년 〈지방자체단체의 벤처기업 육성방안〉 등 2건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기업 유치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확충과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1998년에 수행한 〈지방중소기업자금지원의 효율적 운용방안〉은 바로 그러한 기존의 현실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6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 도시·지역정책

1997년의 경우 기본과제로 〈편익분석을 통한 지방공공시설의 투자결정〉을 연구하였다. 수탁과제로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활성화방안〉 등 3건을 수행하였다.

1998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규제완화 방안〉을 비롯하여 같은 주제로 산업경제를 다룬 기본과제 2건,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 기준작성〉 1건을 수탁과제로 연구하였다.

■ 지역정보화

기본과제는 1997년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1998년에는 〈지역정보종합센터의 설립·운영모형〉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이는 보다 실제적인 지역정보 활용방안에 접근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정책과제는 1997년 〈효율적인 정보화 전담조직 설치방안〉을 비롯한 2건, 1998년 〈시군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지침〉 1건을 수행하였다. 이는 정보화 과정에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역정보에 대한 정책을 운용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였다.

04.
서초시대(1999~2015)의 연구 실적

1) 1999년

■ 기본연구과제

1999년 기본연구과제로 자치제도 분야 1과제, 행정운영 분야 3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1과제,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 1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1과제 등 총 7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행정 분야는 〈조례제정권 범위확대에 관한 연구〉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행정운영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분류체계 개선 방안〉 등 3가지 과제 모두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과제연구였다. 세출 및 재정 분야는 〈지방재정지출수요의 측정모델: 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는 〈신산업체제에 부응한 지방산업단지 개편방안〉, 도시·지역정책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제 및 기법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 정책연구과제

1999년 정책연구과제로 자치제도 분야 11과제, 행정운영 분야 6과제, 지방의정 분야 1과제, 재원확충 분야 1과제, 도시·지역개발 분야 1과제,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 1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1과제, 지역정보화 분야 1과제 등 총 23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제도 분야의 정책과제로는 〈통일시대의 자치행정체제 구축〉, 〈자치단체 기관 간 견제와 균형 확보〉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행정운영 분야의 경우 〈지방공무원 친절도 평가결과 분석〉,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시스템 도입〉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지방의정 분야의 〈지방의회의 대의기능 강화〉, 재원확충 분야의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방안〉,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소도읍 개발과 과소낙후지역 종합대책 수립〉,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정책기능 강화방안〉,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지방 문화·관광 육성〉, 지역정보화 분야의 〈지역정보화의 조기실현〉 등을 연구하였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수탁용역과제는 자치제도 분야의 5과제, 행정 분야의 6과제, 방재재정 분야의 1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1과제 등 총 13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제도 분야의 경우 〈21세기 지방자치발전과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었다. 행정 분야 과제로는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방재재정 분야의 〈소방재원 확충방안〉,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지방재정분석기법 및 재정진단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2000년

■ 기본연구과제

2000년의 기본연구과제로 행정 분야 5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2과제, 지방세제 분야 1과제, 지방세정 분야 1과제,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 2과제

등 총 11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행정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 및 정착방안〉,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지방세제 분야의 〈재산세 과표산정체계의 개선방안〉, 지방세정 분야의 〈지방세 부과·징수체계의 개선방안〉,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의 〈도시재정 지출의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등 주로 기존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추적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 정책연구과제
2000년의 정책연구과제로 행정 분야의 10과제, 채무관리 분야의 2과제, 지방세제 분야의 2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1과제 등 총 15과제를 수행하였다.
행정 분야의 경우 〈복합민원제도 개선방안〉,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대처방안〉 등 다양한 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채무관리 분야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제도 개선방안〉, 지방세제 분야의 〈지방세제 개편방안〉,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 검토의견〉 등의 연구도 수행하였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00년 수탁용역과제로 자치제도 분야의 2과제, 행정 분야의 6과제, 예산 및 회계 분야의 2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2과제, 지역정보화 분야의 1과제 등 총 13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제도 분야의 경우 〈교육자치제도 개선〉, 행정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행정 발전방안 및 경제효과 연구〉, 〈지방자치단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예산 및 회계 분야의 〈복식부기도입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국토 및 도시계획의 방재제도 개선방안〉, 지역정보화 분야의 〈지역정보화 중복투자 해소방안〉 등의 연구도 수행하였다.

3) 2001년

■ 기본연구과제
2001년 기본연구과제로 자치제도 분야 1과제, 행정 분야 2과제, 재원확충 분야 1과제, 채무관리 분야 1과제, 예산 및 회계 분야 1과제, 지역정보화 분야 1과제 등 총 7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제도 분야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기준개발 및 판별시스템 구축〉, 행정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재원확충 분야는 〈재산과세대상의 확대방안〉, 채무관리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 도입방안〉, 예산 및 회계 분야는 〈성과측정을 위한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기반정비 방안〉, 지역정보화 분야는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확산 방안〉 등의 과제를 맡아 수행하였다.

■ 정책연구과제

2001년 정책연구과제로 행정 분야 7과제, 채무관리 분야 1과제, 도시·지역개발 분야 1과제,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 1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1과제 등 총 11과제를 수행하였다.

행정 분야의 경우 〈표준정원산식 개선방안〉, 〈통·리·반장제도 개선방안〉, 〈지방인사행정제도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맡아 진행하였다. 이처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가 많은 것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초기의 지방자치제의 문제점들이 점차 드러나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개선 욕구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채무관리 분야의 〈기채한도액 설정방법 개발〉,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지방소도읍의 효율적 육성방안〉,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의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개발〉,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지역발전계약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등도 수행하였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01년 수탁용역과제의 경우 행정 분야 3과제, 재원확충 분야 1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2과제, 채무관리 분야 1과제, 도시·지역개발 분야 1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1과제 등 총 9과제를 수행하였다.

행정 분야는 〈경기도 2000년도 주민만족도 조사〉, 〈지방자치단체 반부패노력도 평가〉 등의 과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재원확충 분야의 〈지방세·비과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보전 연구용역〉,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실시〉, 채무관리 분야의 〈지역개발기금운영·관리체계 개선〉,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온천의 효율적 이용관리방안〉,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지방도로사업의 추진실적평가 및 발전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4) 2002년

■ 기본연구과제

2002년 기본연구과제로 자치제도 분야 1과제, 행정 분야 1과제, 지방의정 분야 1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1과제, 예산 및 회계 분야 1과제, 지방세제

분야 1과제,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 1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1과제 등 총 8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수행한 과제의 주제를 살펴보면 자치제도 분야의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행정 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기법의 효율화 방안〉, 지방의정 분야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개발과 적용방안〉,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건전 지방재정을 위한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예산 및 회계 분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회계의 연계방안〉, 지방세제 분야의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관련세제의 개선방안〉,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의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2년 5월 베이징 경제개발 심포지엄

■ 정책연구과제

2002년 정책연구과제로 자치제도 분야 3과제, 행정 분야 4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1과제, 재정제도 분야 3과제, 지방세제 분야 1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1과제 등 총 13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제도 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 확대방안〉, 행정 분야의 〈목표관리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개발사례〉,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자치단체사무의 지방공사·공단위탁관리와 직영 간의 효율성 비교분석〉, 재정제도 분야의 〈지방양여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지방세제 분야의 〈시설물과 부수시설물의 과표정산체계 개선방안〉,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외국의 지역개발제도 및 실태연구〉 등을 맡아 연구하였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02년 수탁용역과제로 자치제도 분야 1과제, 행정 분야 11과제, 지방의정 분야 2과제, 재원확충 분야 3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2과제, 재정제도 분야 1과제, 예산 및 회계 분야 2과제, 도시·지역개발 분야 2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1과제, 지역균형발전 분야 1과제, 지역정보화 분야 1과제 등 총 27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제도 분야의 경우에는 〈법령사무 전수조사를 통한 지방이양대상 사무 발굴 연구〉를 맡아 진행하였다. 행정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교통정책 평가체제 구축〉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에 걸쳐 11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방의정 분야의 《강남구의회 10년사》와 《서초구의회 10년사》는 연구보다는 구의회의 역사를 기술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었다. 재원확충 분야의 〈감가상각재산의 취득 재산세 세원화 연구〉,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건전 지방재정을 위한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재정제도 분야의 〈주요 선진국의 지방재정제

도 비교연구〉, 예산 및 회계 분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시험적용〉,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지방소도읍 육성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교통정책 평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 정책추진방안〉, 지역정보화 분야의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운영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5) 2003년

■ 기본연구과제

2003년의 기본연구과제로 자치제도 분야 2과제, 행정 분야 4과제, 지방의정 분야 1과제, 재원확충 분야 1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1과제, 채무관리 분야 1과제, 재정제도 분야 1과제, 예산 및 회계 분야 2과제, 지방세제 분야 1과제, 지방세정 분야 1과제, 도시·지역개발 분야 2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1과제 등 총 18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제도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책임 확보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방안〉, 〈지방공무원 계급체계 개선방안〉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방의정 분야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확대방안〉, 재원확충 분야의 〈지방소비세제도의 도입방안〉,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지방재정의 인센티브·패널티제도의 합리적 관리방안〉, 채무관리 분야의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개편방안〉, 재정제도 분야의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예산 및 회계 분야의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운용 성과분석 및 한국적 적용모형〉, 지방세제 분야의 〈공공주택 재산세 부담 공평성 제고방안〉, 지방세정 분야의 〈지방세정의 발전방향〉,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향토자산 활용 지역축제의 마케팅전략〉,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등의 과제를 맡아 진행하였다.

■ 정책연구과제

2003년 정책연구과제로 자치제도 분야 27과제, 행정 분야 3과제, 지방의정 분야 2과제, 방재행정 분야 2과제, 재원확충 분야 2과제, 도시·지역개발 1과제 등 총 37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제도 분야의 경우 〈자치법규 사정보고제도의 개선방안〉, 〈대도시 행정체제개편방안 연구〉 등 무려 27개의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2003년은 특히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가 중요정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47개의 세부과제를 로드맵으로 작성해 지방자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갔다. 그 일환으로 자치제도 분야의 정책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다. 또한 행정 분야의 〈성과제고를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 지방의정 분

야의 〈지방의회제도의 개선〉, 방재행정 분야의 〈재난유발 위험시설 등에 관한 관리실명제 실시〉, 재원확충 분야의 〈수해복구사업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오지개발대상지구 재선정〉 등의 과제도 수행하였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03년 수탁용역과제로 자치제도 분야 2과제, 행정 분야 3과제, 방재행정 분야 1과제, 재원확충 분야 1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1과제, 예산 및 회계 분야 2과제, 지방세제 분야 1과제,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 1과제, 도시·지역경제 분야 1과제 등 총 13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제도 분야의 〈대도시행정체제 개편타당성 연구용역〉, 행정 분야의 〈충주시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및 적용 외 12개 과제〉, 방재행정 분야의 〈효율적인 소방력 배치 및 운용을 위한 소방력 기준〉, 재원확충 분야의 〈원자력 세제 개선 방안 연구〉,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지방재정분석과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예산 및 회계 분야의 〈자산·부채의 평가, 관리기준 수립 및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지방세제 분야의 〈재산세제도의 개편방안 연구용역〉,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의 〈향토산업 육성방안〉, 도시·지역경제 분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맡아 진행하였다.



2003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가족 만남의날

6) 2004년

■ 기본연구과제

2004년 기본연구과제로 행정 분야 4건, 재원확충 분야 1건,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1건, 예산 및 회계 분야 1건 등 총 7건을 수행하였다.

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재원확충 분야의 〈재산보유과세의 개편에 관한 연구〉,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지방재정 수요의 전망과 정책대응〉, 예산 및 회계 분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분석지표의 설정방안〉 등의 연구도 수행하였다.

■ 정책연구과제

2004년 정책연구과제로 행정 분야 2건,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1건, 지방세제 분야 1건, 도시·지역개발 분야 1건, 지역정보화 분야 1건 등 총 6건을 수행하였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행정 분야의 〈지방인사제도의 개편방안〉,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지방재정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지방세제 분야의 〈지방세원



2004년 3월 태국 공무원 대표단 방문 기념

의 공동활용방안〉,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낙후지역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지역정보화 분야의 〈정보화마을 발전방안〉 등을 맡아 진행하였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04년 수탁용역과제로 행정 분야 7과제, 재원확충 분야 1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2과제, 채무관리 분야 1과제, 예산 및 회계 분야 1과제, 도시·지역개발 분야 1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1과제 등 총 14과제를 수행하였다.

행정 분야의 경우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기법, 지표개발 연구〉 등 7개 과제를 맡아 진행하였다. 그리고 재원확충 분야의 〈국세·지방세 조정 및 지방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안〉,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지방재정 수요의 전망과 정책대응〉, 채무관리 분야의 〈지방채발생 총액한도 도입방안〉, 예산 및 회계 분야의 〈지방예산 편성지침 및 예산과목 구조개편 연구용역〉,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경산장기발전계획(경산비전 21) 수립〉,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낙후지역선정지표 개발〉 등의 과제를 맡아 수행하였다.

7) 2005년

■ 기본연구과제

2005년 기본연구과제로 행정 분야 4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1과제, 지방세정 분야 1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1과제 등 총 7과제를 수행하였다.

행정 분야의 경우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성과의 평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등 4과제를 맡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비용산정체계 구축방안〉, 지방세정 분야의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방안〉 등의 과제를 맡아 완수하였다.

■ 정책연구과제

2005년 정책연구과제로 행정 분야 4과제, 예산 및 회계 분야 1과제 등 총 5과제를 수행하였다.

행정 분야의 경우 〈지방행정혁신 표준모델 개발〉, 〈지방행정혁신 표준매뉴얼〉 등 4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행정혁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행정혁신'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진행된 것이다. 이밖에 예산 및 회계 분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 개선방안〉 연구도 진행하였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05년 수탁용역과제로 자치제도 분야 4과제, 행정 분야 3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3과제, 예산 및 회계 분야 2과제, 지방세제 분야 2과제, 지방세정 분야 1과제, 도시·지역개발 분야 1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1과제, 지역균형발전 분야 1과제, 지역정보화 분야 1과제 등 총 19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2005년에는 기본연구과제나 정책연구과제가 비교적 적은 반면 수탁용역과제가 크게 늘어났다. 연구 영역도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자치제도 분야의 〈자치경찰기구 및 인력편성개발 용역〉, 행정 분야의 〈자치단체 정보화조직 인력진단 용역〉,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계약사무 개선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예산 및 회계 분야의 〈예산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용역〉, 지방세제 분야의 〈종합부동산세 재원 배분방안 연구용역〉, 지방세정 분야의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ACE용인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실태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관계〉, 지역정보화 분야의 〈자치단체 정보화 조직·인력 진단〉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8) 2006년

■ 기본연구과제

2006년 기본연구과제로 자치제도 분야 2과제, 행정 분야 5과제, 지방의정 분야 1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2과제, 재정제도 분야 1과제, 지방세정 분야 1과제, 도시·지역개발 분야 1과제 등 총 13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제도 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행정 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및 정착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전략계획 구축방안〉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방의정 분야의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간 발전적 관계정립 방안〉,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지방투자사업의 평가체제 구축방안〉, 재정제도 분야의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지방세정 분야의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신활력사업의 추진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 정책연구과제

2006년 정책연구과제로 행정 분야 1과제를 수행하였다. 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의 개선〉이었다. 2006년 과제 중에서는 정책연구과제가 적은 반면 수탁용역과제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2006년 6월 상해행정학원 공무원교육 방한



2006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창립(제1차) 포럼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06년 수탁용역과제로 자치제도 분야 3과제, 행정 분야 8과제, 재원확충 분야 1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5과제, 재정제도 분야 1과제, 지방세제 분야 1과제, 도시·지역개발 분야 1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2과제, 지역균형발전 분야 2과제 등 총 24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제도 분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하였다. 그리고 행정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평가개선방안 연구용역〉, 〈지방자치역량 강화방안 연구용역〉, 〈지방행정기능, 인력 적정화 추진방안 등 연구용역〉 등 주로 '연구용역' 과제들이 많았다. 재원확충 분야의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확충방안 연구용역〉도 분야는 다르지만 과제의 성격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경우 역시 〈2006년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2006년 지방재정진단실시 연구용역〉, 〈2006년 지방재정분석실시 연구용역〉 등도 과제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재정제도 분야의 〈주요 선진국의 지방재정분석제도 및 재정규모 비교연구용역〉, 지방세제 분야의 〈지방세제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용역〉,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모델 유형화 및 공모방안 수립〉,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지역개발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자립형 지역균형발전체제 구축〉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9) 2007년

■ 기본연구과제

2007년 기본연구과제로 자치제도 분야 3과제, 행정 분야 6과제, 지방의정 분야 1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2과제, 재정제도 분야 1과제, 예산 및 회계 분야 1과제, 지방세제 분야 1과제, 도시·지역개발 분야 2과제, 지역정보화 분야 1과제 등 총 16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제도 분야의 경우 〈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평가와 과제〉가 대표적인 연구과제였다.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 지원 행정체제 정비방안〉 등 6개 과제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와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관한 연구였다. 그리고 지방의정 분야의 〈지방의회 운영체제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참여정부 재정분권 수준 측정과 평가〉, 재정제도 분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예산 및 회계 분야의 〈사업별 예산과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결산제의 개선방안〉, 지방세제 분야의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모형〉, 지역정보화 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U-City 추진전략과 과제〉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2007년 9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공청회

■ 정책연구과제

2007년 정책연구과제로 자치제도 분야 6과제, 행정 분야 4과제, 재원확충 분야 2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1과제, 예산 및 회계 분야 1과제, 지방세제 분야 3과제, 도시·지역개발 분야 1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3과제, 지역균형발전 분야 1과제 등 총 22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제도 분야의 경우 〈선진국 분권사례 검토〉, 〈선진지방자치 포럼〉 등 6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행정 분야 4개 과제는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방안〉 등 주로 지방공무원의 인사,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밖에 재원확충 분야의 〈자치구 재정지원 방안〉,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민간단체 경비 이전에 관한 연구〉, 예산 및 회계 분야의 〈재무보고서의 결산 심의 개선방안 연구〉, 지방세제 분야의 〈지방세법제 전문화방안〉,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접경지역 발전방안〉,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분석·정리〉,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지역단위 균형발전사업 평가체제 개선방안 연구〉 등의 과제를 맡아 진행하였다.



2007년 5월 LOGOTRI 국제세미나



2007년 7월 상해행정학원 공무원 교육 방한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07년의 수탁용역과제로 행정 분야 7과제, 재원확충 분야 1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6과제, 재정제도 분야 2과제, 도시·지역개발 분야 1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1과제, 지역균형발전 분야 3과제 등 총 21과제를 수행하였다.

행정 분야의 경우 1999년부터 수탁용역과제가 평균 5~10과제로 꾸준히 지속되어 2007년에도 7과제를 맡아 진해하였다. 그중 〈2007년 주민서비스혁신 업무추진 평가실시 연구〉, 〈지방세 조직인력 표준모형개발 연구용역〉 등이 대표적인 연구과제들이었다. 재원확충 분야의 〈옥외광고 개선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연구〉,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2007년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재정제도 분야의 〈갯벌자원 보전에 따른 군 재정수요 부담 개선 연구용역〉,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지역생활여건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전략거점과 지역의 공간 및 주체의 연계 활성화 방안〉 등의 과제를 맡아 진행하였다.

10) 2008년

■ 기본연구과제

2008년 기본연구과제로 행정 분야 5과제, 방재행정 분야 1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1과제, 채무관리 분야 1과제, 재정제도 분야 1과제, 예산 및 회계 분야 1과제, 지방세제 분야 1과제,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 1과제, 도시·지역

정책 분야 2과제 등 총 14과제를 수행하였다.
행정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의 유사중복기능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맡아 진행하였다. 방재행정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채무관리 분야의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지방재정 위기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재정제도 분야의 〈광역경제권도입에 따른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예산 및 회계 분야의 〈사업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정착방안〉, 지방세제 분야의 〈기업 관련 지방세제 개편방안〉,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의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분석〉,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지역브랜드자산 제고를 위한 실행전략〉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 정책연구과제

2008년 정책연구과제로 자치제도 분야 2과제, 행정 분야 2과제, 지방의정 분야 1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2과제, 채무관리 분야 1과제, 재정제도 분야 1과제, 예산 및 회계 분야 1과제, 지방세제 분야 2과제, 도시·지역개발 분야 2과제,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 1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2과제, 지역균형발전 분야 8과제 등 총 25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정책연구 25개 과제 중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8건이 가장 많았다. 이는 2007년 연구원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개설되어 정부로부터 별도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행정자치부가 요청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광역경제권체제의 지역개발사업 재편방안〉, 〈신발전체계하의 광역적 낙후지역 발전체계 구축〉, 〈지역 간 협력사업 활성화 촉진방안〉 등이 모두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과제들이다. 그밖에 자치제도 분야의 〈분쟁조정기능 강화방안 연구〉, 지방의정 분야의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방안 연구〉,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지방기금 성과분석 지표 연구〉, 채무관리 분야의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연구〉, 재정제도 분야의 〈지역발전교부세 및 성과·시책수요 신설〉, 예산 및 회계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평가방안〉, 지방세제 분야의 〈토지분 재산세 과세체계 개선방향〉, 도시·지역개발 분야의 〈지역재생 및 지역활성화사업 시책개발〉, 지역경제·산업육성 분야의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 연구〉,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도시지역 통계 DB구축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과제를 수행하였다.



2008년 7월 선진한국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토론회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08년 수탁용역과제로 행정 분야 2과제, 재원확충 분야 1과제,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 2과제, 예산 및 회계 분야 1과제, 도시·지역정책 분야 1과제 등

총 7과제를 수행하였다.

행정 분야의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지표개발 및 활성화 방안〉, 재원확충 분야의 〈전봇대 도로점용료 현실화〉, 세출 및 재정관리 분야의 〈창원시 재정운영실태 진단〉, 예산 및 회계 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도시·지역정책 분야의 〈지역생활여건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의 과제를 맡아 진행하였다.



2009년 6월 상해행정학원 일행 방문

11) 2009년

■ 기본연구과제

2009년 기본연구과제는 지방행정 분야 9과제, 지방재정·세제 분야 4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3과제 등 총 16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행정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정 6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의 발전과정과 특징, 현행 「지방자치법」이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갖는 기능적인 한계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 「지방자치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연구 등 9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재정 분야에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은 복지수요의 빠른 변화를 수반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중앙 지방 간 재정관계 측면에서도 장단기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연구 등 4과제를 수행하였다. 지역발전 분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인류발전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어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특성 파악과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전략〉 연구 등 3과제를 수행하였다.

■ 정책연구과제

2009년 정책연구과제는 지방행정 분야 17과제, 지방재정·세제 분야 5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10과제 등 총 32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행정 분야에서는 〈국가광역행정기관 설치방안〉,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현황 및 개편사례〉 등 행정안전부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으로 17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재정·세제 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제도(특히 일본)를 살펴보고 배분방식의 단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보통교부세제도 합리적 산정방식 개선〉 연구 등 5과제를 수행하였다.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정책의 효율화와 기초단위의 삶의 공간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지원하고자 〈기초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연구 등 10과제를 수행하였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수탁용역과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모델 개선〉,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분석〉과 충북 진천군에서 의뢰한 〈2009년 군정 자체평가〉 등 총 18과제를 수행하였다.

기타 연구과제로는 특별(자체)연구 2과제, 수시연구 5과제, 연구자료집 7과제, 위탁연구 5과제 등을 수행하였다.

12) 2010년

■ 기본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는 연구 분야별 대과제 형식으로 과제수행 형태를 개선하여 자치행정 분야 3과제, 지방재정·세제 분야 2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2과제 등 총 7과제를 수행하였다.



2010년 KRILA 자치포럼

2010년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대과제 〈2020년 지방자치제도 발전모형〉,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패러다임 전망과 모형설계〉, 〈성과창출형 지방정부시스템 구축〉 등 3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자치의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0년을 목표로 하여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국내외적으로 선진화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모형을 구축하고 실천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대과제 〈2020년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개편〉 등 2과제를 수행하였다. 정치·경제·사회 환경이 급속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재정운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향후 지방재정 운영에 영향을 줄 중요한 요인을 전망하고 현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와 운영구조의 재설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발전 분야에는 대과제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 전략연구〉, 〈녹색성장과 지역특화발전〉 등 2과제를 수행하였다. 지역발전환경을 둘러싼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수립은 단순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 환경변화의 이슈를 찾아내고 미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정책연구과제

2010년 정책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31과제, 지방재정·세제 분야 10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12과제 등 총 53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행정 분야에서는 〈대도시 자치구 조정방안〉,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읍면동 개편모델 연구〉 등 행정안전부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으로 27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재정·세제 분야에서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평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 등 15과제를 수행하였다.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한눈으로 보는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 등 기초생활권 관련 연구를 다수 포함하여 12과제를 수행하였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 과제

수탁용역과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여론조사〉, 〈통합창원시 조직진단〉 등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20과제를 수행하였다.

기타 연구과제로는 특별(자체)연구 2과제, 수시연구 6과제, 연구자료집 4과제, 위탁연구 7과제 등을 수행하였다.





2010년 12월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공공디자인 세미나

13) 2011년

■ 기본연구과제

2011년 기본연구과제는 연구 분야별 대과제 형식의 과제수행 형태로 자치행정 분야 3과제, 지방재정·세제 분야 2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2과제 등 대과제 7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대과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 다원화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등 3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지방 거버넌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거버넌스 사례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지방 거버넌스의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대과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과세자주권 제고와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 2과제를 수행하였다. 대과제 〈과세자주권 제고와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은 통합 취득세의 개선에 관한 연구,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에 관한 연구,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한 주행세 개편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대

과제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연구〉,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 등 2과제를 수행하였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일자리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시장지향형 일자리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2011년 10월 제3차 한일지방자치제도연구회

■ 정책연구과제

2011년 정책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18과제, 지방재정·세제 분야 4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10과제 등 총 32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제도에 관한 연구〉, 〈인감 대체방안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연구〉 등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 깊은 제도 연구 등 18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재정·세제 분야에서는 〈자치단체 적정 재정 규모에 관한 연구〉, 〈지방세 과세품질 제고 방안〉 등 4과제를 수행하였다.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지역연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방안 연구〉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한 연구 등 10과제를 수행하였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 과제

2010년 수탁용역과제는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구역관리체계〉,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의뢰한 〈청주-청원 통합시 모델 제시를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인프라 구축방안〉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를 의뢰하여 52과제를 수행하였다.

기타 연구과제로는 특별(자체)연구 1과제, 수시연구 6과제, 연구자료집 5과제, 위탁연구 1과제 등을 수행하였다.

14) 2012년

■ 기본연구과제

2012년 기본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5과제, 지방재정 분야 3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3과제 등 총 11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행정 분야에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시스템의 다양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주민 지원방안〉 등 5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세계화·개방화에 국가 간 인구이동이 보편화되면서 한국인의 수에 비해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비례해서 이들의 정착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주민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분야의 연구

를 시작하였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재정 분담방안〉,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 간의 연계 강화〉,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등 3과제를 연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방투융자심사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연구가 제도 개편에 큰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연구원이 지방투자사업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지역발전 투자 전략〉, 〈지역쇠퇴 분석 및 재생 방안〉, 〈지역 공동체 주도의 발전 전략 연구〉 등 3과제를 수행하며 지역쇠퇴, 고령화 등에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 및 농촌 할 것 없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쇠퇴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전반의 쇠퇴실태 및 관련 지역재생정책 분석을 통하여 쇠퇴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12년 10월 국가-지방 간 복지 행재정정책의 방향

■ 정책연구과제

2012년 정책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16과제, 지방재정·세제 분야 8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8과제 등 총 32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선진형 지방자치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 5개국의 사례를 요약하여 정리하였고,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령상 사무 재정립에 관한 연구〉로 지방분권, 행정체제 등의 국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무총조사 결과를 지방자치정책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DB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16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지역발전지표 개발방안〉, 〈지방공기업의 사업예산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등 8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류체계와 과목구조, 그리고 원가산정체계를 점검·분석하면서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간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지역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방안 연구〉, 〈서해5도 지원정책 성과 분석〉, 〈4대강 자전거길 조성 현황 분석 및 효과적 관리방안〉 등 8과제를 수행하였다. 2011년에 수행하였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연구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12년 수탁용역과제는 경남 거창군에서 의뢰한 〈경남 거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행정안전부에서 의뢰한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실태 분석·진단〉, 〈20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등 28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평가 등 자치단체 평가와 관련한 과제 수행이 집중되었다. 기타 연구과제로는 특별(자체)연구 2과제, 수시연구 3과제, 출연연구 3과제, 연구자료집 5과제, 위탁연구 1과제 등을 수행하였다.

15) 2013년

■ 기본연구과제

2013년 기본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12과제, 지방재정 분야 5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6과제 등 총 23과제를 1인 1과제로 수행하였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4대 악) 역할 및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등 12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방안에 관심을 갖고 지방의회의 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개선될 것이라 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역량 강화방안을 찾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재정관리체계 개선방안–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 등 5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분권이 촉진되고 시민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방재정 위험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자치단체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 관련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지역주도형 지역산업 육성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불균형 해소방안〉,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 개선방안〉 등 6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과제를 수행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2013년 센터사업보고회

■ 정책연구과제

2013년 안전행정부 정책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20과제, 지방재정 분야 5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4과제 등 총 29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컨설팅 모델 개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헌장의 제정방안〉,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 근로자 인사관리 방안〉 등 21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현안으로 대두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사관리, 국민안전문화 인식 제고 등 안전행정부의 현안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지수 개발 연구〉,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기준의 합리

적 조정방안〉,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등 5과제를 수행하였다. 재정진단 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과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어, 이행과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재정건전화계획 이후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방안〉, 〈어린이 놀이 공간 안전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연구〉 등 4과제를 수행하였다.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의 촉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2013년 5월 9일에 25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제1회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놀이 공간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논의 등이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3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시·도지방자치단체의 현안과제를 제안받아 시·도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도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새롭게 시작하여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기도 등 15개 시·도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신(新) 도시경쟁력지수(지표) 개발〉, 부산광역시의 〈부산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연구〉 등은 자치단체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표 개발을 통해 자치단체의 관심 분야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다.



2013년 9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희망 비전 사전 설명회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13년 수탁용역과제는 충북 청주시에서 의뢰한 〈통합 청주시 4개구 구역획정 및 청사위치선정 연구〉, 경기도 여주군의 〈비전2025 종합발전계획〉, 충북 음성군의 〈2014년 시군종합평가 대비 지표담당자 컨설팅〉 등 28과제를 수행하였다.

시·군자치단체에서는 2014년 시군종합평가를 대비하여 연구원에 지표담당자 컨설팅과 교육을 의뢰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수탁용역도 다수 수행하였다. 기타 연구과제로는 특별(자체)연구 1과제, 수시연구 6과제, 출연연구 3과제, 공동연구 3과제, 연구자료집 5과제 등을 수행하였다.

16) 2014년

■ 기본연구과제

2014년 기본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7과제, 지방재정 분야 3과제, 지역발전 분야 3과제 등 총 13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읍·면자치 도입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칸막이 현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연구〉



2014년 2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과정



2014년 3월 주민행복 마을만들기 교육과정

등 7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3.0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유능하고 서비스 지향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추진전략을 실천하고 있으나, 중앙부처 사업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읍면동 현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칸막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칸막이에 대한 실태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차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원인분석과 관리방안〉,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등 3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지방교육은 지역주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지원 실태 및 사례조사로 나타난 문제점을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 예산·결산 및 성과관리, 지방교육재정 지원체계 개선, 지방재정영향 관리방안, 지방교육 구조개편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지역생활권 삶의 질 분석 및 지역격차 해소방안〉, 〈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창조환경 조성방안〉 등 3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행복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민행복과 삶의 질을 강조한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생활권의 삶의 질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정책연구과제

2014년 행정자치부 정책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20과제, 지방재정 분야 7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4과제 등 총 31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주민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고, 지방규제의 문제점을 전국 자치단체에 제공하여 규제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대구광역시의 〈대구광역시 ODA사업 추진방안〉, 전라남도의 〈초고령사회 대응 전남노인복지 수요 분석〉, 경상북도의 〈행정지원인력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등 16개 시·도 자치단체의 현안 정책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연구하였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안이슈를 처음으로 제안받아 수행하는 성과도 있었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14년 수탁용역과제는 지역발전연구실에서 전북 남원시에서 의뢰한 〈2030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전남 보성군에서 의뢰한 〈2014 보성군 조직개편 진단〉 등 32과제를 수행하며 조직 및 인력진단, 사업 타당성 조사,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조직분석 및 진단 등 지속적인 연구로 연구원의 특화된 분야를 공고히 하였다.
기타 연구과제로는 특별(자체)연구 4과제, 수시연구 12과제, 출연연구 2과제, 공동연구 2과제, 연구자료집 4과제 등을 수행하였다.



2015년 11월 지방재정위기 극복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17) 2015년

■ 기본연구과제

2015년 기본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7과제, 지방재정 분야 4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2과제 등 총 13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연구〉,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등 7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위탁의 경우 자치단체 서비스공급의 대안으로써 의미와 현황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차 공공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비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연구하였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강화〉,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수요 전망과 재원확충 방안〉 등 4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10.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2009년 이후 사회복지비 지출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지방의 사회복지수요 및 세입을 전망하고 지방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중앙의 재정이전 방향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성과창출방안〉, 〈지방 SOC 생산성 분석 및 발전방안〉 등 2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정시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한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지역생활권정책의 핵심사업인 지자체 간 협력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성과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협력사업을 확대·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찾고자 연구하였다.

■ 정책연구과제

2015년 행정자치부 정책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22과제, 지방재정 분야 5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3과제 등 총 30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을 맞이하는 해로, 지난 20년





2015년 9월 한국의 마을살리기 전략

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 20년 평가〉 과제 수행에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총 5권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평가 주체별로 주민생활의 변화와 자치요소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2015년에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경영개선 방안 연구〉 과제를 처음으로 제안받아 수행하였다. 울산광역시의 〈울산광역시 관광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충청남도의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등 17개 시도 자치단체의 현안정책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연구하였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15년 수탁용역과제는 〈인구 120만 광역행정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조정(분구) 연구〉, 〈2030년 공주시 비전계획 수립 연구〉, 〈주의등급단체 심층진단 연구〉,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 등 연구원의 특화된 전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합천군·진주시·가평군·칠곡군 조직진단 등 35과제를 수행하였다.

기타 연구과제로는 특별(자체)연구 2과제, 수시연구 6과제, 출연연구 1과제, 공동연구 2과제 등을 수행하였다.

05.
원주시대(2016~2019)의 연구 실적

1) 2016년

■ 기본연구과제

2016년 기본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7과제, 지방재정 분야 3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2과제 등 총 12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과소지역 맞춤형 행정체제 정립방안 연구〉,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해결방안〉, 〈생활자치의 개념과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등 7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인구구조의 양적 및 질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공급체계 전반에 걸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과소지역(군)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하여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지역(군)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행정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하였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 방향〉,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 3과제를 수행하였다. 2008년도 글로벌 금

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가 증가하였다. 더구나 저성장 기조에 따른 세입의 불안정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재정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등 위험요소가 확대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방재정 건전성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평가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고령화의 지역경제효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방안〉 등 2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나 광역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등 지역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심층갈등 사례 분석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갈등관리 요인을 추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 간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하였다.

■ 정책연구과제

2016년 행정자치부 정책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8과제, 지방재정 분야 6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6과제 등 총 20과제를 수행하였다.

2015년까지 행정자치부 정책과제를 한 해 30과제 내외로 수행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20과제 내외로 축소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연구품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시대에 인구감소지역의 문제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정책 아젠다를 발굴하여 기존의 지방자치·재정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16년에는 광주광역시의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개발〉,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기본계획 연구〉, 강원도의 〈지역개발 제한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융합형 전통시장 육성방안〉 등 17개 시·도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를 수행하였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16년 수탁용역과제는 〈평택항과 연계한 3개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서해5도 종합발전 변경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 〈과거사 정리 등을 통한 사회통합 정책방향 연구〉, 〈폐철도지역 진흥 및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등 25과제를 수행하였다.

2016년에는 상생협력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연구 등이 다양하게 의뢰되었다. 기타 연구과제로는 특별(자체)연구 1과제, 수시연구 9과제, 출연연구 1과제, 공동연구 2과제 등을 수행하였다.



2016년 2월 한국갈등학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동계학술대회



2016년 11월 한일공동세미나

2) 2017년

■ 기본연구과제

2017년 기본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8과제, 지방재정 분야 4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3과제 등 총 15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고령사회 대비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기능 분담방안 연구〉,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저출산 정책의 중앙–지방 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등 8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인구소멸, 지방소멸로 이어지며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원도 이와 관련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적정수준과 관리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중장기전망과 정책대응〉 등 4과제를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는 지방분권 추진으로 자율적 발행 및 관리의 시대가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방채 무관리가 필요하여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설계〉 등 3과제를 수행하였다. 2000년 이후 출생·사망의 자연적 인구증감과 유입·유출의 사회적 인구증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유출의 정량적·정성적 원인 및 인구격차 실태를 분석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7년 3월 제2차 과제선정자문회의



2017년 7월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 기본연구과제 중간보고회

■ 정책연구과제

2017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10과제, 지방재정 분야 3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5과제 등 총 18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신(新)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지방재정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자 정부 간 재정관계 틀 내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상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2017년에는 인천광역시의 〈인천 중구 항동7가 일원 지역주민 정주환경 개선방안 연구〉, 울산광역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연구〉, 충청북도의 〈충북 청년실업과 대응방안 연구〉, 충청남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 등 17개 시·도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과제 중 인천광역시가 의뢰한 정책과제에 주민들이 직접 보고회에 참여하는 등 매우 높은 관심을 갖기도 하였다. 충청남도와는 연구 주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만들어 연구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다.

■ 정책이슈리포트

201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목적에 연구원이 그 역할에 좀 더 충실하고자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과제 수행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안 이슈를 제안 받아 단기 컨설팅 형식으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책이슈리포트' 과제를 신설하였다. 부산광역시의 〈8.2 부동산 대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대구광역시의 〈대구혁신도시 육성방안〉, 경기도의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경상북도의 〈경북 청년발전기금(가칭) 설치 방안〉 등 14개 시·도 자치단체의 현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2017년 6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거버넌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17년 수탁용역과제는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연구〉, 〈지방소멸 대응지역활력특별법 연구〉, 〈재정 효율화를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법제화를 위한 연구〉,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검토 연구〉, 〈세대 간 회계 및 재정준칙 법제화에 관한 연구〉 등 32과제를 수행하였다.

2017년에는 지방재정, 지역발전 분야에서 법제화를 위한 기초적 연구가 수행되어 연구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정책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타 연구과제로는 특별(자체)연구 2과제, 수시연구 8과제, 공동연구 1과제 등을 수행하였다.

3) 2018년

■ 기본연구과제

2018년 기본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7과제, 지방재정 분야 4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3과제 등 총 14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저출산 정책 설계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광역연합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저출산 정책의 중앙—지방 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등 7과제를 수행하였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2018년 5월 제7차 연구심의위원회



2018년 8월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 기본연구과제 중간보고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저출산 정책의 설계 방식과 전달체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정책들을 '유형화'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발전 방향〉, 〈재정분권시대 보통교부세 발전방향—재정형평성을 중심으로〉, 〈세입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제고〉 등 4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실질적으로 작동되어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분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을 찾고자 연구하였다.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사회혁신을 위한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적 추진방안—균특회계를 중심으로〉 등 3과제를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화·저성장·불평등 확대 등 지역발전의 메가트렌드 여건 변화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과 분권형 거버넌스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틀 안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 정책연구과제

2018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는 자치행정 분야 13과제, 지방재정 분야 5과제, 지역발전 분야는 2과제 등 총 20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제 중에서 특히 민선6기 지방자치 평가를 통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전환수준과 공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민선7기의 자치운영에 반영할 시사점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8년에는 광주광역시의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방안〉, 경기도의 〈경기도 주거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등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를 수행하였다. 전라남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인구정책 추진방안, 고령사회 정책현황과 개선방안, 인구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 방향 제시 등 인구감소 관련 정책연구 제안이 많았다.

■ 정책이슈리포트

정책이슈리포트는 울산광역시의 〈조선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경기도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

정 방안〉, 충청북도의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글로벌 방산기업 유치방안〉 등 15개 자치단체의 다양한 연구 요청이 있었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18년 수탁용역과제는 〈니카라과 새마을기반 정책개발 역량 강화사업〉, 〈원주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지방이양일괄법 이양비용 산정 및 지원방안 연구〉,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 및 진단연구〉 등 41과제를 수행하였다.

기타 연구과제로는 특별(자체)연구 5과제, 수시연구 2과제 등을 수행하였다.

4) 2019년

■ 기본연구과제

2019년 기본연구과제는 자치행정혁신 분야 2과제, 자치분권제도 분야 6과제, 지방재정경제 분야 4과제, 지역포용발전 분야는 3과제 등 총 15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치행정혁신 분야에서는 〈문제해결형 사회혁신 실현방안〉 등 2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사회혁신의 이론적 논의 검토를 통해 사회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정책이슈들을 파악하고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사회혁신사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개선 쟁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자치분권제도 분야에서는 〈주민주도의 숙의민주주의 실천방안〉,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등 6과제를 수행하였다. 주민주도의 숙의민주주는 주민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하여 지역사회의 변화 동력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실천을 위해 주민참여 및 숙의과정에 대한 법제도 분석 및 운영 실태분석, 정부주도의 숙의과정 참여자와 비참여자에 대한 인식분석으로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방재정경제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 등 4과제를 수행하였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의 추진과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 간 재정관계의 변화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경제적·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정치적 측면까지 고려한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종합적 재정관계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역포용발전 분야에서는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



2019년 1월 제1차 연구심의위원회



2019년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교류 협약체결 및 공동세미나

응방안〉 등 3과제를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비전으로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용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여, 사회·경제·지역적 배제 없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였다.

■ 정책연구과제

2019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는 자치행정혁신 분야 4과제, 자치분권제도 분야 5과제, 지방재정경제 분야 6과제, 지역포용발전 분야는 5과제 등 총 20과제를 수행하였다.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2018. 4. 27) 이후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평화시대를 열기 위한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지방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다. 2019년에는 강원도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추진전략〉, 전라남도의 〈전남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방안〉, 경상남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남만의 맞춤형 부동산 대책〉 등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를 수행하였다.

■ 정책이슈리포트

정책이슈리포트는 부산광역시의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모델 개발〉, 대구광역시의 〈안전부패 사례를 통한 안전감찰업무의 선제적 대응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시 합리적인 리·통·반 설치기준 마련〉, 충청북도의 〈생활 SOC 정책의 긍정적 효과(사례) 및 효율적 운영방안〉 등 17개 시·도 자치단체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2019년 7월 기획세미나 '한국형 고향납세제도 가능성을 논하다'

■ 수탁용역과제 및 기타과제

2019년 수탁용역과제는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지역혁신 종합계획 연구〉,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외교부–지자체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등 23과제를 수행하였다.

기타 연구과제로는 특별(자체)연구 6과제, 수시연구 10과제 등을 수행하였다.

01.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일 양국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정보교류를 통한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2009년 12월 15일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와 MOU를 체결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연구회(1~2회)와 세미나(1회)를 개최·운영하고 있다.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는 일본 지역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조직체로 1988년 7월에 설립되어 서울을 비롯한 뉴욕·런던·파리·싱가포르·시드니·베이징 등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2010년 9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일 지방행재정제도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제1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주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민선5기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이에 대한 효과적 응전을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이 공동세미나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앞당기고,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연구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지방분권동향〉을 주제로 한 야마다 게이지 일본 교토부 지사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세미나는 두 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분과에서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시군통합 사례분석과 정책과제〉, 요코미치 기요타카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가 〈일본의 시정촌 합병의 구체적 효과〉를 발표하였다. 제2분과에서는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의 인구정체, 고령화와 지방재정의 과제〉를, 기무라 요코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장이 〈일본의 재정건전화〉를 각각 발표하였다.

제2회 공동세미나는 2011년 11월 17에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한일 지방자치단체 재난방지대책 연구〉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前) 일본총무대신이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대응과 교훈〉을 발표하였다. 또한 제1분과에서는 〈한·일 대형재난 사례 및 대책〉을 주제로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일본 고베 대지진 사례에 대한 양국 대표의 발표가 진행되었고, 제2분과에서는 서울과 동경의 수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 도시형 수해사례 및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일 양국은 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대형 피해를 경험했고, 그 피해가 인접 국가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각종 재난에 의한 예방과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 세미나는 양국의 저명인사와 전문가가 허심탄회하게 재난 예방과 극복을 위한 특별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제3회 공동세미나는 2012년 10월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가–지방 간 복지 행·재정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주제는 초고령 사회 진



2013년 11월 한일공동세미나 :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입과 출산율 감소 등의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쯔즈미 슈조 오사카대학대학원 인간과학연구과 교수가 〈일본의 복지 서비스 방식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1분과에서는 〈고령자 정책에 따른 국가–지방 간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양국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제2분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사회복지에 대한 공통적 고민과 과제를 나누며 양국의 경험에 기초해 사회복지가 안고 있는 난제들을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제4회는 2013년 11월 20일 한국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제5회는 2014년 11월 20일 The–K호텔 서울 한강홀에서 〈한·일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렸다. 당시 우리나라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창출의 애로에 직면해 돌파구 중 하나로 규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었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행사였다. 일본도 오랜 저성장과 경기침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 관련 9개 법률안을 개정했고 6개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는 등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세미나는 두 개 주제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지역발전연구실장의 〈한국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일본정책대학원대학 우메타니 겐지 교수가 〈일본 경제회생을 위해 전진하는 특구의 새로운 구조〉 발표가 이어졌다.

제6회는 2015년 11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저출산 등 인구감소와 함께 노령화라는 인구구조의 급변이 더욱 심화되어, 대도시·중소도시·농촌지역 할 것 없이 국토 전반에서 지역쇠퇴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처방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된 세미나였다.

세미나는 1개의 기조강연과 2개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일본 사가현지사 야마구치 요시노리가 〈사가현의 지방창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이어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다카다 히로후미 교수가 〈일본 지방창생 대응〉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이소영 실장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생 방안〉을 발표하였다.

제7회는 2016년 11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세미나로 한국과 일본의 현안인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정책〉





2015년 11월 한일공동세미나 :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

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날 한국과 일본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일본 히로시마현 유자키 히데히코 지사가 〈히로시마현 저출산·인구감소대책〉을,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종시의 노력〉을 제목으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기조강연에서 히로시마현 지사는 2010년부터 2040년까지 히로시마 고령자는 18만 명이 증가하는 반면, 총인구는 47만 명, 생산연령인구는 51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한편 육아지원 강화에 따라 합계출생률은 2005년부터 회복세를 보인다고 말하였다. 1990년 현역세대 5명이 고령자 1인을 부양하는 반면, 2060년에는 1.3명이 고령자 1인을 부양해야 한다며 저출산 대응책으로 만남, 결혼, 임신 출산, 육아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춘희 시장은 출산가정 120만 원 지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제발표는 먼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가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대응〉을 발표하였다. 2030년에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특히 소군 지역은 고령화율이 42.2%에 달해 지방정부 지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대응방안으로 세대 간 가치관 공유, 사회보장제도 개혁, 일·가정 양립방안, 국적법·이민법 등 사회 인프라 개선, 지방분권형 지방행정체제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일본정책대학원대학 다카다 히로후미 교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인구감소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자체 인구감소 요인을 저출산과 젊은이의 대도시 유입으로 진단을 토대로 일본의 저출산·인구감소 현황, 인구감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자녀·육아지원 신제도 본격 시행, 남녀 근무방식 개혁, 젊은 세대 결혼지원, 다자녀 가족 우대 등 일본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공유하였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현안이슈로 양국은 대안 마련을 위해 현재까지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시점에서, 당시 세미나는 양국의 경험과 노력을 공유하고 특히 적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담론의 장이 되었다.

제8회는 우리사회에서 대응이 시급한 〈인구감소에 대응한 관광진흥 및 지역자원개발〉을 주제로 2017년 1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며,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세미나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CLAIR 서울사무소 대표단 방문 간담회



2019년 5월 도쿄 CLAIR 본부 방문



2018년 10월 한일공동세미나 : 한일 지방자치단체 재해 대책

먼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전라북도 토탈관광 진흥정책〉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닷소 다쿠야 일본 이와테현지사가 〈인구감소에 대응한 후루사토 진흥 및 관광진흥〉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주제발표는 다카다 히로후미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가 〈인구감소에 대응한 관광진흥 및 지역자원개발〉을 주제로, 이영주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감소에 대응한 강원도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제9회는 매년 발생하는 여러 재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10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일 지방자치단체 재해 대책〉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근래 우리나라의 잇따른 지진과 최악의 폭염, 그리고 일본의 지진과 태풍피해 등 각국은 대응을 위해 한국과 일본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기조강연으로 일본 오니시 가즈후미 구마모토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대책〉을 주제로 연설을 하였고, 이어 허성무 창원시장이 〈기후변화와 재난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주제발표는 가기야 하지메 아토미학원여자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대책-지구방재계획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여협력연구센터장이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지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한일 양국은 태풍·지진·폭염 등으로 인한 대형 피해를 경험했고,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면에서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특히 이 세미나는 양국의 저명인사와 전문가가 허심탄회하게 양국의 경험과 사례를 되짚어보고 방재대응정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소중한 지혜를 모으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2019년은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및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과의 교류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3개 기관 10주년 공동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인구감소와 지역격차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대책〉을 대주제로 11월 26일 1일차에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교류 10주년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양측 기조강연으로 고이케 노부유키 히로시마시 부시장과 이상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연설하였다. 또한 11월 27일 2일 차는 서울 NPO센터에서 제20회 한일지역정책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연도(회차)	일시(장소)	주제	기조강연
2010년(1회)	9. 17 13:30~17:30 (국회 헌정기념관)	한 · 일 지방행재정 제도 비교 연구	야마다 게이지 (일본 교토부 지사)
2011년(2회)	11. 17 13:30~17:40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한 · 일 지방자치단체 재난방지대책 연구	가타야마 요시히로 (前 일본총무대신)
2012년(3회)	10. 11 13:30~17:40 (국회 헌정기념관)	국가-지방 간 복지행·재정정책의 방향	쯔즈미 슈조 (일본 오사카대학대학원 교수)
2013년(4회)	11. 20 13:30~17:30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 이이즈미 카몬 (일본 도쿠시마현 지사) • 임수복(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4년(5회)	11. 20 14:00~17:40 (더케이호텔 한강홀)	한 · 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5년(6회)	11. 11 14:00~17:50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한국과 일본의 지방(지역)재생 및 창생 방안	야마구치 요시노리 (일본 사가현 지사)
2016년(7회)	11. 30 14:00~18:00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 인구감소 대응정책	• 유자키 히데히코 (일본 히로시마현 지사)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2017년(8회)	11. 15 14:00~18:00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인구감소에 대응한 관광진흥 및 지역자원개발	• 송하진(전라북도지사) • 닷소 다쿠야(일본 이와테현 지사)
2018년(9회)	10. 19 14:00~18:00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한 · 일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 허성무(창원시 시장) • 오니시 가즈후미 (일본 구마모토시 시장)
2019년(10회)	11. 26 14:00~18:0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인구감소와 지역격차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대책	• 이상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 고이케 노부유키 (일본 히로시마시 부시장)

02.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과는 2009년도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비교 연구를 시작으로 양 기관의 학술교류 확대를 위해 2013년에 MOU를 체결한 후 매년 정례적으로 한국과 일본 교차 방문을 통해 두 차례 지역정책연구회

를 개최해오고 있다.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은 1997년 창립된 정책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국립대학으로 정책 및 정책 혁신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자국 및 세계의 민주적 통치의 발전과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초의 공동사업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양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일지방자치제도연구회'라는 명칭으로 2010년 11월 30일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도쿄 본교에서 제1회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요코미치 기요타카 일본정책대학원대학교수가 〈일본의 지역주권 개혁의 최신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지방체제 개혁의 최신동향〉을 발표하였다.



2011년 1월 제3차 한일지방자치제도연구회

제2회는 2011년 1월 1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초 본원에서 지방재정 분야의 대주제하에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신두섭 수석연구원이 〈지방재정위기와 대책방안〉을, 그리고 일본정책대학원대학의 하타케야마 에이스케 교수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유바리시(市)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하였다.

이 공동연구회의 연구 결과물 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발전적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양 기관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2013년 6월 24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 비교 연구 및 본격적인 정보교류 확대를 위하여 양 기관은 협약 체결식 및 공동연구회를 함께 개최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술 교류협력 확대, 세미나·컨퍼런스·연구회 공동개최, 상호 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이었다. 협약 체결식에 이어 〈신정부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정책 전망〉이라는 주제하에 제7회 연구회가 두 개의 분과로 진행되었다. 제1분과는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가 〈신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 현재 지방분권 수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를, 제2분과는 일본 히토츠바시대학대학원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기무라 슌스케 교수가 〈정권교체 시대의 지방자치 과제〉를 각각 발표하였다.

공동연구회는 제12회까지 '한일 지방자치제도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되다, 제13회부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사례 연구를 목적으로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교류 1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11월 27일 제20회 한일지역정책연구회가 서울 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일본 측은 토모노리 이즈미 히토츠바시대학 교수, 이치로 마쓰오카 홋카이도 히가시카와 정장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한국 측은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가 각각 발표하였다.

회차	일시	주제	개최지
제1회	2010. 11. 30 13:00~17:00	한 · 일 지방행정 비교 연구	GRIPS 본원
제2회	2011. 1. 18 14:00~17:30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사례 연구	서초 본원
제3회	2011. 6. 30 13:30~18:00	한 · 일 지역발전정책 비교 연구	GRIPS 본원
제4회	2011. 10. 14 14:00~17:30	커뮤니티의 과제와 대응책	서초 본원
제5회	2012. 5. 10 14:00~17:30	한 · 일 지방자치단체 특례제도	제주 그랜드호텔
제6회	2012. 10. 26 14:00~17:30	한 · 일 대도시 및 특별자치시 제도	GRIPS 본원
제7회	2013. 6. 24 14:00~18:00	신정부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정책 전망	서초 본원
제8회	2013. 10. 7 14:00~17:30	주민등록 및 주민 서비스 관련 IT 활용과 문제점	GRIPS 본원
제9회	2014. 5. 9 13:30~17:00	지방자치단체와 의료보장제도	서초 본원
제10회	2014. 10. 31 14:30~18:00	농산품 판매 · 관광증진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노력	일본 아오모리
제11회	2015. 6. 3 14:00~18:00	신정부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정책 전망	수원시청
제12회	2015. 10. 14 14:00~18:00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재생제도	일본 다카마쓰
제13회	2016. 6. 13 14:00~18:00	지역발전 및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울산광역시
제14회	2016. 10. 21 13:30~18:00	진정한 富의 사회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본 홋카이도
제15회	2017. 6. 13 14:00~18:00	공공서비스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민관협력(PPP)	일본 히로시마
제16회	2017. 10. 19 14:00~18:00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발전사업	원주 본원
제17회	2018. 5. 30 14:00~18:00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일본 오카야마현
제18회	2018. 11. 8 14:00~18:00	지역 간 균형발전방안	전주 국민연금공단
제19회	2019. 5. 29 14:00~18:00	한 · 일 지역거버넌스와 자치분권 발전의 노력과 성과	GRIPS 본원
제20회	2019. 11. 27 14:00~18:00	인구감소와 지역격차에 대응한 지역활성화 대책	서울 NPO지원센터

03.

중국행정학원(상해행정학원·북경행정학원·길림성행정학원)



2018년 11월 한중공동세미나(상해행정학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중국 상해행정학원과 학술교류 협의 목적으로 2001년도 6월 상해행정학원을 첫 방문하면서 교류를 시작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LOGOTRI(Network of Local Government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s in Asia and the Pacific) 의장기관이 되어 국제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중 심포지엄은 2002년 〈북경의 경제발전전략〉을 주제로, 2003년에는 중국 북경대학원, 상해행정대학원, 길림행정대학원을 초청해 〈국가균형발전〉의 주제로 각각 연구원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그 이후 중국과는 상호 인적 교류,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를 위한 상호 방문 및 상해 공무원 교육을 위한 초청행사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을 해오고 있다.

2018년 11월 27일 〈대도시의 혁신적 발전과 지방의 효율적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상해행정학원에서 한중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분과에서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분권개혁과 대도시의 정책변화〉를, 조기현 연구위원이 〈대도시 거버넌스: 주민참여예산〉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2분과에서 저우징 상해행정학원 부연구원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상하이〉를, 장펑 상해행정학원 부교수가 〈스마트화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 정밀화 추진 연구—상하이 양푸구 쿵장로 사례 기반 실증분석〉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하였다.

북경행정학원과는 1999년 임성일 선임연구위원 파견 및 마점온 교수, 산아이홍 교수 초청을 통한 인적 교류를 시작으로 하여, 그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길림성행정학원은 2001년 김병국 선임연구위원을 파견 및 한중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교류 활성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상해행정학원

연도	시기	내용
2001년		연구진 파견(이삼주 선임연구위원) 교수 초청(센시강 교수)
2004년	7월 10월	부원장 일행 연구원 방문 및 시찰(제주도) 교수 초청(류찬성 교수)
2006년	9월 11월 12월	한중세미나 공동주최 및 참가 상해 국제학술심포지움 참가 상해공무원 교육연수

연도	시기	내용
2007년	4월 7월 10월 12월	상해 고위공무원 교육연수
2008년	4월 9월	상해 고위공무원 교육연수 한중세미나 공동주최 및 참가
2009년	6월 8월 9월	부원장 일행 연구원 방문 및 시찰(제주도) 교수 초청(보씨준 교수) 상해 국제학술심포지움 참가
2010년	4월	부원장 일행 연구원 방문 및 시찰(서울/수원)
2011년	10월	교수 초청(관진성 교수) 상해 국제컨퍼런스 참가
2012년	7월 10월	교수 초청(야오 베이싱 교수) 상해 국제컨퍼런스 참가
2013년	10월	상해 국제컨퍼런스 참가
2014년	10월	상해 국제컨퍼런스 참가
2016년	10월	상해 국제컨퍼런스 참가
2018년	11월	'대도시의 혁신적 발전과 지방의 효율적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연구' 한중공동세미나(상해행정학원 방문)

북경행정학원

연도	기간	내용
1999년		연구진 파견(임성일 소장) 교수 초청(마점온 교수, 샨아이홍 교수)
2004년	10월	부원장 일행 연구원 방문 및 시찰(제주도)
2009년	12월	교류활성화 목적 북경행정학원 방문 및 시찰

길림성행정학원

연도	기간	내용
2001년		연구진 파견(김병국 박사)
2007년	6월	원장 일행 연구원 방문 및 시찰(제주도)
2008년	7월	연구진 길림성 방문 및 강의
2009년	8월	한중 학술세미나 참석
2011년	9월	부원장 일행 연구원 방문 및 시찰(제주도)

04.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활동은 2017년 5월 10일 UCLG ASPAC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문화를 위한 약속과 실천〉을 주제로 한 제2회 UCLG 문화도시정상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세계 도시·지방정부·문화전문가들이 도시(지역사회를 의미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문화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책수립 시 폭넓은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행사다. 이 행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문화정책과 거버넌스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국제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19년 5월 22일에는 UCLG ASPAC 집행부 회의에 참여하여 회원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은 국외 유수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교류를 활성화하고 세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간 공통 당면문제·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소통, 회원기관 국제회의 개최 및 참여, 연구인력 상호 교류, 회원기관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 연구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향후 연구역량의 국제화를 통한 당원의 선진화 및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치분권과 사회혁신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많은 연구결과물들이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살아 있는 지역, 혁신하는 지역이 자치분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핵심적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자치분권과 사회혁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기존에 진행되던 '지방자치실천포럼'을 2019년부터 새롭게 확대·개편하여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치분권과 사회혁신에 대한 새 길을 찾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방자치실천포럼'은 2013년 창립포럼이 구성되어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 확산 및 담론 형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국민 관심 제고, 지방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철학 공유 및 실천적 대안 논의의 장 마련, 지방적 현안과제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학계–민간단체·언론–연구원 등 관계자 간의 소통기회 및 적실성 있는 대안모색의 장 마련에 운영 목적을 두었다.

2013년 창립포럼 구성은 총 46인으로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실천포럼'의 포럼 대표는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으로 구성되었다. 2017년까지 총 27회 포럼을 열었다. 또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포럼을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2019년 6월 제3회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 (좌) 박원순 서울시장, (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2019년 11월 제7회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

2019년부터 새롭게 확대·개편한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은 자치분권 및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 확산 및 담론 형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 제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및 사회혁신 실천 지원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논의의 장 마련, 학계–관계–언론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으로 포럼이 운영되고 있다.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의 구성원은 자치분권 및 사회혁신 리더, 관련 학회장 및 학계 전문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유관·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포럼대표는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전 서울과기대 총장)이며, 포럼위원은 8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의 운영 방식은 매월 1회 기조발제 및 전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2019년부터 새롭게 진행된 포럼은 총 7회로 포럼 발표 내용을 보완하여 책으로 발간 및 배부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을 통해 자치분권과 사회혁신이 보다 실효성 있게 논의되고 살아 있는 지역을 위한 혁신의 장이되는 길을 찾는다.

발간물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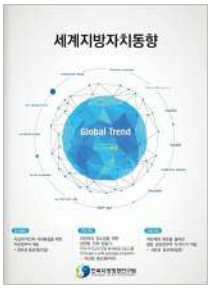
01.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관련 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해 1986년부터 발간해온 학술지다. 지방자치 관련 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 분야의 수준 높은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하고 있다. 2007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2013년, 2017년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등재를 유지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18년 12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02.
세계지방자치동향



세계지방자치동향

국내외 지역의 다양한 정책 동향들을 공유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며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세계지방자치동향》을 발간하게 되었다. 해외 주요국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통신원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역발전 사업 및 정책 등 이슈가 되고 있는 동향을 자유롭게 보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 3인, 독일 1인, 오스트리아 1인, 프랑스 1인, 일본 3인 등 총 9명의 통신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3건의 원고를 웹진 형태로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03.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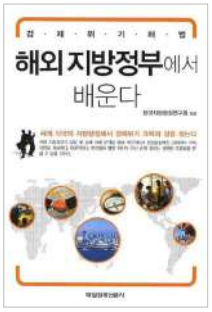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09년에 단행본《경제위기 해법 지방정부에서 배운다》를 발간하였다. 클라우스 로어만, 조슈아 오지미, 가와세 미츠요시, 쟝 미셸 르무안 드 포르쥬, 김경수, 이효, 김필두, 이상묵, 박승규가 집필하였다. 해외 지방정부의 주거, 노동, 교육, 도시정책들의 다양한 실제 예를 들어가며 지방정부의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현 경제위기에 대한 과도한 우려나 근거 없는 낙관을 경계하면서, 해외의 사례들과 석학들의 조언으로부터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는 2010년에 연구원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이미 추진하였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시(市)·정(町)·촌(村), 영국의 단층제, 그리고 독일의 게마인데 등의 분석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과 목적, 그리고 개편과정에서 초래되는 갈등들을 해소하는 각국의 정책들을 담았다. 또한 최근에 추진되는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개편과 독일의 주(州) 통합 및 프랑스의 개편계획 등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통합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최근의 동향을 고찰하고 있다.

2010년에 발간된《지역주권형 도주제 안내서》는 일본의 PHP연구소에서 도주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한《지역주권형 도주제 안내서》를 편역한 책이다. 도주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효과 및 도입 절차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2011년 연구원에서 발간한《지역 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은 사구치 카즈로 편저, 권영석 번역, 강재호 감수한 단행본이다. 도시와 고용의 문제를 전통적인 산업정책론이나 인적자원관리론의 틀을 벗어나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지방도시의 과제와 고용정책을 다면적이고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실증 분석한 책이다. 지방에서의 고용정책이라는 관점을 근저에 두면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역할자인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주민자치회, NPO 등 도시를 구성하는 조직 간의 상호연계(협동) 관계를 논하고 있다.

2014년에 출간한 단행본《지방3.0의 이해와 적용》은 지방3.0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이해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3.0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다. 임성일·금창호·김필두·서정섭·이효·오은주·고경훈·김대욱·배정아·손화정·윤영근·이희재·



경제위기 해법 해외 지방정부에서 배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지역 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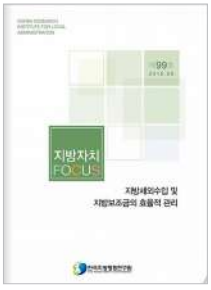
새로운 지방예산제도

전대욱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지방3.0의 이해와 적용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론서라고 할 수 있다.

04.
잡지발행



지방자치이슈와포럼



지방자치 FOCUS



지방자치실천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이슈와포럼》이란 잡지를 2016년 3월에 제1호를 발간하였다. 이 잡지는 2005년부터 발행해오던 기존의 《지방자치 FOCUS》를 통합하여 《지방자치이슈와포럼》이란 제호로 변경, 새롭게 출간한 것이다.

기존의 《지방자치 FOCUS》는 지방자치의 이슈만을 주제로 다룬 잡지로, 2005년 1월에 《KRILA FOCUS》란 제호로 제1호를 발행한 것이 시초였다. 2009년 2월까지 제32호를 발행했으며, 2009년 3월부터는 제호를 《e-KRILA FOCUS》로 바꾸어 제1호를 다시 발행, 2011년 2월까지 제41호를 발행하였다. 그러다가 예전의 제호인 《KRILA FOCUS》로 돌아가 2009년 2월 제32호로 그친 것을 2011년 3월 제33호로 이어서 간행, 2015년 12월 제102호까지 발행하였다. 《KRILA FOCUS》의 제호를 《지방자치 FOCUS》로 변경한 것은 2012년 2월 제41호부터이며, 제102호를 마지막으로 종간되고 《지방자치이슈와포럼》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2016년 3월 제1호부터 발행하게 된 《지방자치이슈와포럼》은 기존 《지방자치 FOCUS》에서 다루던 지방자치의 이슈는 물론 단체장 인터뷰, 논단, 지자체 탐방, 우수사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본격화된 지방자치 잡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이슈와포럼》은 잡지로 출간함과 동시에 이메일 서비스도 실시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요 홍보매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주요 독자는 국회, 중앙부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중앙·지방 공무원교육원, 지방 4대 협의체, 경제사회연구원, 전국대학 도서관 및 행정학과 등의 모든 관계자들이다. 책자는 격월간으로 홀수 달에 1,000부씩 발간하였으며, e-book으로 이메일 1만 1,000건을 발송하고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04장 연구원의 비전

연구원의 비전은 그동안의 시대적, 사회적 환경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부단히 진화해왔다. 오늘날 연구원은 보다 국민 지향적이되 세계적 연구기관을 지향하는 비전 아래 혁신, 전문성, 신뢰를 핵심가치로 두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비전과 핵심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틀 속에서 지방행정 당면과제에 대한 다수의 조사·연구, 자문 및 경영진단, 연구용역 수행 및 교육훈련사업,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여왔다. 연구원의 비전은 연구원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환경변화와 요구에 대응하여 부단히 진화되어왔다. 현재 연구원은 보다 국민 가까이에서,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션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천적 연구"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전을 "고품질의 연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직전까지 연구원의 비전이었던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보다 국민 지향적이고, 국내를 넘어 세계적 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전을 구성하는 핵심가치 역시 혁신(Inovation)·전문성(Expertise)·신뢰(Credibility)를 제시하였다.



2019년 3월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 대토론회 :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또한 비전의 실천을 위한 전략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최고 수준의 연구품질 확보다. 이를 위하여 연구품질 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연구 성과물의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둘째, 안정적인 연구 인프라의 확보다. 원주시대에 대응하여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우수인력 확보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재정확충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강화를 통하여 연구환경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다.

셋째, 분권과 균형발전 연구의 허브화다. 연구원은 그동안 축적되어온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주제의 다각화 등을 통하여 정책영역은 물론 학계의 선도적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 있는 사회적 가치의 구현이다. 연구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함은 물론,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역시 충실하게 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비전 및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천적 연구"

고품질 연구를 통해 국민 신뢰 받는 최고 수준 연구기관

핵심가치 01	혁신	핵심가치 02	전문성	핵심가치 03	신뢰

전략목표	전략과제
최고 수준의 연구품질 확보	· 연구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 연구성과물 평가체계 강화
안정적 연구 인프라 확보	· 우수 연구 인력의 지속적 확보 · 재적 확충 및 연구지원시스템 강화
분권과 균형발전 연구의 허브화	· 국정과제, 정책과제의 체계적 지원 · 연구주제 다각화 등 선도적 연구 촉진
지속성 있는 사회적 가치의 구현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연구과제 발굴

경영전략 01	경영전략 02	경영전략 03
지속 가능한 연구원 인프라 구축 위한 핵심역량 집중	시스템 구축 및 활용통한 연구원 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	다양한 외부기간과의 네트워크 강화 통한 연구원 가치 극대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비전은 완료·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단히 발전하고 진화해왔으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울러 그만큼의 연구역량과 연구성과물에 대한 신뢰를 축적해나가는 것이 필요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이 기반되지 않은 비전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고품질의 연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이 되고자 하는 비전하에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이러한 연구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비전을 성장·발전시켜나갈 것이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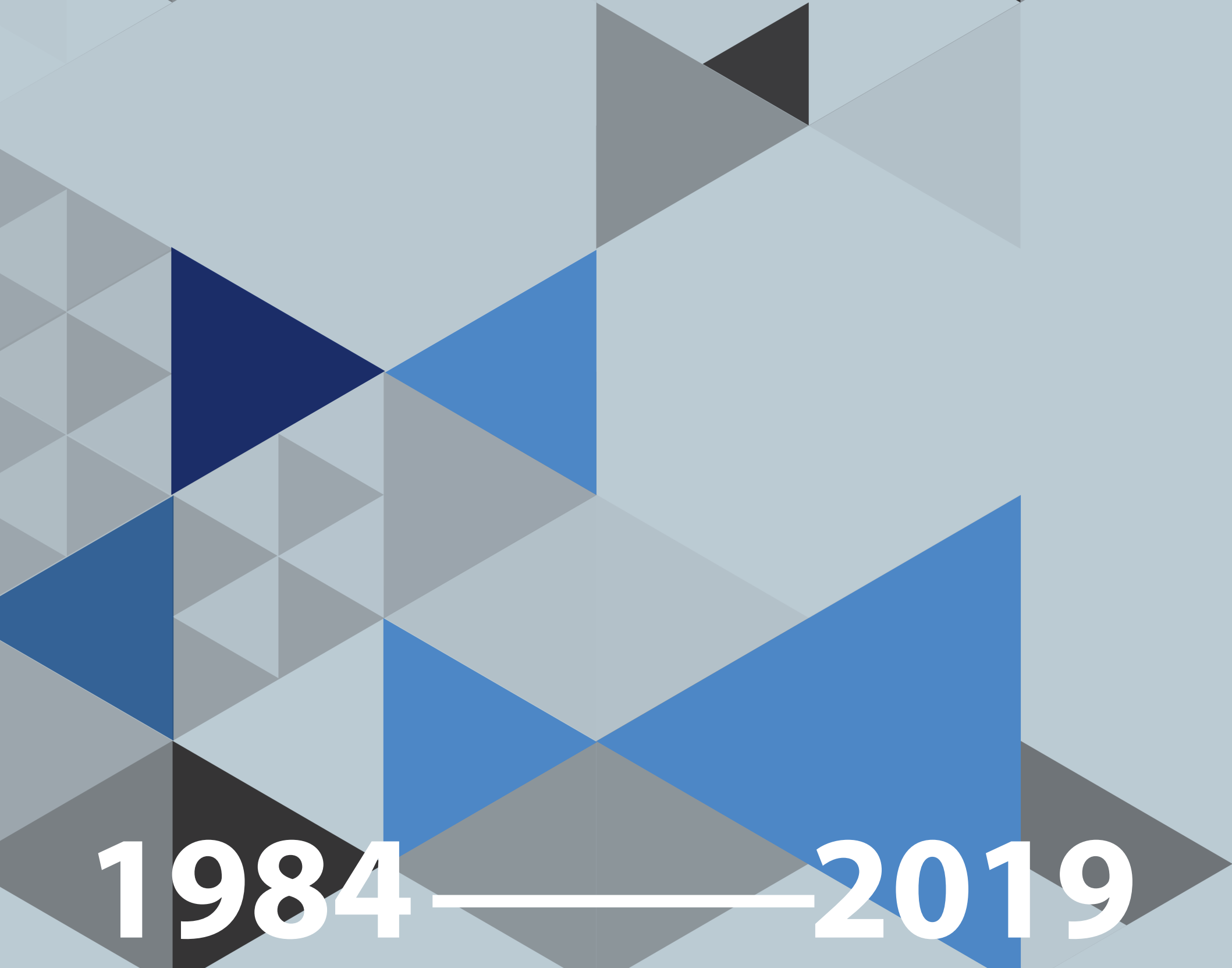
연구원에 대한 회상과 미래

35년을 넘어 더 먼 미래를 이끈다

제1장 연구원에 대한 회상 과거 그리고 현재

제2장 연구원의 미래 특별 인터뷰

제3장 35주년 기념 직원들의 한마디


1984——2019

1984 — 2019

01 장

연구원에 대한 회상

과거 그리고 현재

Episode 1



연구원과 나와의 35년 깊은 인연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현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

마포구 시절부터 맺어온 인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난 35년을 되돌아볼 때, 어쩌면 그 기간은 나의 대학교수 40년 전 생애와 맞물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1984년 지방행정연구소가 출범하고, 그 다음 해인 1985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시대가 열릴 때부터 나는 연구원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200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정년한 후 지금까지도 본 연구원과 이런저런 인연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2008년경부터 2017년까지 연구원의 비상근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20년 전부터 연구원에서 그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단'의 단장직을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 맡아왔다. 그리고 2014년 출범한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LIMAC)'의 자문위원장직을 부족하나마 지금까지 맡고 있다.

내가 몇 년 후면 80세가 되고 하니 연구원과의 공식적인 인연도 곧 끝날 것이지만, 아무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사는 나 개인 역사와 함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원주에서의 도약과 발전을 기원하며

2006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시상식(2007년 3월 26일)이 가장 먼저 기억에 떠오른다. 아마도 이때가 최우수 자치단체에게 20억 원의 시상금을 준 처음이자 마지막인 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우수상은 충청남도에게 돌아갔고, 그래서 충남도청에서 성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깃발 등을 들고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무언가 지방자치단체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기대감도 컸는데, 그 이후로는 좀 시들해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여 보다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제18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윤태범 원장님은 내가 평소 가까이 지낸 분으로, 이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연구원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한다.

Episode 2



스티븐 코비식 '사명감과 원칙'으로

김 병 국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현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원장

곡절 많던 청주시·청원군 통합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 구역 확정 당시 양측은 동상이몽에 의한 갈등이 연속적으로 빚어져 문제였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청원군과 청주시는 청주군으로 출발한 후 1946년 청주군 청주읍이 청주부(1949년 청주시로 개칭)로 승격되고, 잔여 지역이 청원군으로 개칭되었던 곳이다. 이들의 통합은 청주시의 시대적 과제였던 면적의 제한성으로 인한 발전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단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원군은 공직자의 불안과 주민 세금 증가로 인한 문제, 도농격차 및 차별대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입후보자들의 반대 주장과 청원군민들의 걱정으로 인하여 줄기차게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1994년 정부의 통합 권유에 의한 청원군민의 의견조사 결과 65.7%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차로 2005년 청주와 청원의 합의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통합 주민투표를 건의하였고, 주민투표 실시 결과 청원군민 53.5%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되었다. 그 후 2008년 청원군이 '청원시' 승격을 주장하면서 논쟁이 일어났고, 2009년 행정안전부가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대상 지역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2009년 11월에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청원군의 무응답 결과를 뺀 사건'이 발생하여, 이듬해 추진된 지방의회 의결에서 청원군의회의 반대로 3차 통합 시도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8월에 충북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합의문 공동서명으로 4차 통합을 시도하게 되었다. 2012년 청주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청원군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79.03%가 찬성함으로써 지루하고 우여곡절 많았던 통합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연구용역은 수주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통합청주시의 밑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었다. 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행정구역 개편 및 시·군통합 관련 정책연구의 본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통합청주시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청원군청에서 있었던 제안발표를 통해 연구용역을 수주하였다. 그러나 막상 용역연구의 책임을 맡고 보니 걱정이 앞섰다. 연구 개시 바로 전에 행정

안전부의 마지막 노력 및 대안 제시에도 마음을 전혀 열지 않고 반대만 하던 청원군민들과 지역시민단체들을 설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였다. 그리고 양 기관 공무원들의 통합에 대한 속마음을 어떻게 표출시켜 동참을 유도할 것인지, 그리고 통합청주시의 미래 모델을 실용적으로 그려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려내야 할지,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통합인센터브로 무엇을 어떻게 받아와야 하고, 청원군민들의 불만을 해결해줄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스티븐 코비'에게서 얻은 통합의 힌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군을 지역별로 나누어 직접 면담을 이행하고, 통합추진위원회 위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청주시와 청원군의 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역면담에 있어서 2곳은 사전에 알리고 통합추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찾아갔으나, 워낙 반대가 심하여 지역 접근이 어려웠으므로 지역민과의 대화조차 제대로 나눌 수 없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 많았고, 어렵게 대화를 한 곳에서도 너무나 많은 통합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것에 대한 요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실천하기 어려운 사안과 추후 해결해야만 하는 사안들도 많았다. 이를 처리해야 할 방도를 찾기 위해 연구진들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산하게 되었다.

나는 여기서 문제점과 요구만을 이야기하고, 양 지역과 그 주민들의 갈등 구조하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스티븐 코비(Stephen Covey)의《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에서 답을 찾았다. 원칙중심적으로 일하고, 스스로 사명감을 갖고 문제 해결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연구진들에게 함께 공유토록 하고, 공무원들에게 우리의 자세를 알렸으며, 주민참여가 이루어진 많은 간담회 및 회의 등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였다. 결국 현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많은 고비를 넘기며 양질의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다.

행정구 획정 연구로 그린 통합청주시 밑그림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2단계 작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통합 청주시의 인구가 약 83만 명으로 50만 기준의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산하에 행정구를 두게 되어 있었다. 문제는 행정구의 수를 3개 혹은 4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행정안전부 등에서 있었다. 그렇지만 통합청주시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2014년 3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의 행정구 획정을 승인받았다.

마침내 4개로 구분되는 행정구 획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에 재차 착수하게 된 것이다. 지역 현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북발전연구원·충북대와 함께 지역의 행정구역 구획에 대한 논의를 하고, 명칭 확정을 위하여 충북 내 문학과 향토문화 전문가 등과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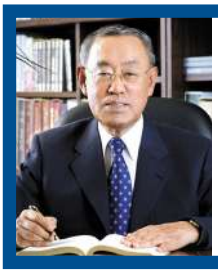
현장탐방 및 조사, 주민의견조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나는 동서남북형의 구획을 제안하였고, 그 명칭을 청원구·상당구·서원구·흥덕구로 확정지었다. 그리고 청사 입지선정 및 그 방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제 통합청주시 밑그림이 완성된 것이었다. 이 연구과제는 지방행정사에서 의미 있는, 그리고 자율적 통합이 된 유일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작업을 2년에 걸쳐 현장에서 추진하면서 정말 보람된 연구를 한 경험을 갖게 된 것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자긍심 느꼈던 인생의 경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1985년 6월에 입사하여 직할시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는 것에서 연구에 대한 쾌감과 책임감을 느낀 이후 오랜만에 통합청주시 탄생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나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 줄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사적 사실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 연구자', '연구의 실용성을 추구한 한 명의 학자'로서 잊기 어려운 연구였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4차례 통합 실패 경험을 갖는 현장에 용감하게 뛰어들어갔고, 이를 2년에 걸쳐 차분하게 완성하였다는 점이야말로 스티븐 코비의 '사명감과 원칙'을 내가 몸소 실천하였기에 얻어진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 속에서도 지속적 연구를 해야 할 평생연구자인 나는 '사명감과 원칙'을 문제 해결의 열쇠와도 같은 인생의 철칙으로 삼게 되었다.

Episode 3



원장의 소신을 지켜준 장관

김 안 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7대 원장, 현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자문·편집에 이어 원장으로 이어진 인연

학술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9월 7일에 창립되었으니, 금년으로 만 35년이 지났다. 창립 당시는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4년 차이고, 제42대 주영복 내무부장관 시대였다. 나는 출범 당시부터 자문위원·편집위원·집필위원 등으로 연구원과 직접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왔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92년 7월 21일에 나는 제6대 김양배 원장에 이어 본 연구원의 제7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하고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한국지방행정회관 내의 연구원 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5년 차였으며, 제55대 이동호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발령장을 받았다. 이어 1993년 2월부터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에 의한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본 연구원의 직속 감독기관인 내무부는 제56대 백광현 장관과 제57대 이해구 장관을 거쳐 1993년 12월 22일에는 제58대 최형우 장관이 취임하였다.

원장으로 취임하고 보니 연구원이 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았다. 전년도에 구성된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구축과 의원 및 시민교육, 그리고 각급 의회의 요구 등을 처리하고, 1995년의 민선자치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련해야 했다. 아울러 전국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구성, 연구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준비,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 장기계획의 수립 등도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연구원 역사가 일천한 까닭에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부분과 부족한 영역이 많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크게 필요하였고 보다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었다. 사무실 확보와 원가(院歌)·원기(院旗) 및 영자명(英字名)의 제작, 연구부장제 도입과 신규 인력 보강 및 자체 인사조치 등도 매우 시급했다. 특히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인력 확보는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유력 인사의 청탁 앞에 난감했던 순간

1994년 봄에 연구원 및 일반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부문별로 많은 사람이 응모하였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다. 어느 날 연구원의 직속감독부서인 내무부장관의 비서실 직원이 찾아왔다. 이력서 두 통을 주면서 장관의 부탁이라고 연구원의 연구직으로 채용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장관은 김영삼 대통령의 '좌동영(左東英), 우형우(右炯佑)'라고 불릴 정도의 막강한 실세였던 최형우 장관이었다. 정치가이자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로 인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가능하면 최 장관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다.

두 사람의 이력서를 국·실장 회의에 회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부탁까지 하였다. 학력과 경력, 성품과 인간관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또 사람을 보내 장관의 부탁 말씀을 거듭 전했다. 그런데 실무책임자들의 검토 결과는 만장일치로 '부적격'이었다. 며칠 고민하다가 우리 연구원에 오기는 적절치 못하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답변을 올렸다. 그랬더니 다음 날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는 전갈이 있어, 이번에는 직접 그 불가함을 설명하였다. 전공과 배경이 서로 맞지 않고, 시험도 없이 특채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직원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며, 들어와서도 직원들과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활동에까지 지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세

세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채용한다면 연구원은 물론 최 장관님의 명성과 정치적 위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파하였다.
최 장관은 한참 숙고한 끝에 "이번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세요!" 하는 결단을 내렸다. 대정치가다운 결정이었고, 원장의 입장을 살려준 현명한 처신이었다.

많은 일이 있었던 2년의 시간

2년의 세월이 흘러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최형우 장관과 이효계 차관으로부터 내게 임기 2년의 원장직을 한 번만 더 맡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밖에서 그 자리에 오려는 사람이 많았고 자기들이 앉히고 싶은 사람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심으로 붙들고 싶어 했다. 당시 서울대학교에서는 2년 이상 파견 또는 휴직일 때는 사표를 내도록 되어 있어, 고맙지만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떠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그러면 1년만 더 해달라고 하였다. 내가 웃으면서 "국무총리 자리를 주시면 서울대학교에 사표를 내고 오겠습니다"라고 답변했더니 그때서야 포기한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관의 공로패를 받았고, 연구원에서는 송별회도 마련해주었다. 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나는 무리한 언행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던 연구부장의 사표를 받았고, 중장기 지방자치발전계획도 수립하였으며, 10주년 기념행사 준비도 완료하였다. 후임 원장을 위해 나에게 배정된 판공비도 상당량 남겨주었다. 1994년 7월 20일 이임식을 갖고 여러분들의 아쉬운 작별을 받으며 본 연구원을 떠났다.

Episode 4



KRILA는 내 인생의 최고 무대

라 휘 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연구원을 떠난 지 16년이 넘었다. 10년을 넘어 20년이 가까워지는데도 나의 머릿속 많은 부분에는 'KRILA'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다. 나는 1995년 5월에 입사하여 2004년 2월까지 거의 10여 년의 시간, 그리고 내 인생에서의 30대를 연구원과 함께하였다. 연구원이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있을 때 입사하여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으로 이전하였고, 다시 서울시 서초동으로 이전하는 동안을 모두 함께하였다.

꿈에 그리던 독립청사시대

연구원은 이전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소망으로 간직하였던 독립청사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 독립청사를 갖기 이전에도 선배님들은 지방자치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독립청사를 가진 이후에는 선배들이 쌓아놓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연구에 매진하였고, 많은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산출물들을 만들어냈다. 연구원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방자치의 싱크탱크(Think-Tank)인 연구원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지방행정,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학생·실무자 그리고 지방자치를 이해하려는 주민은 연구원에서 발간한 논문과 보고서를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30대를 온통 차지한 연구원의 시간들

연구원과 나는 10여 년의 시간, 그리고 나의 30대 인생을 함께하였다.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선배님과 후배님,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때로는 의기투합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온몸을 던질 것처럼 하다가도 간혹 의견의 차이로 인해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연구원의 구성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가족'이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하여 먼저 도와주려고 하였다.

1996년 10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화성시 소재 가족묘에 아버님을 모실 때 연구원의 모든 식구들이 장대비를 맞으면서 함께했던 시간은 나에게 여전히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다. 비를 흠뻑 맞은 후 포장마차에서 대하와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해주는 동료들을 보면서 더욱 소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운 식구가 연구원에 들어오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이벤트를 열기도 하였다. 웃으면서 적응한 친구들이 지금은 연구원의 중심이 되어 있다. 이런 연구원이기에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무대는 KRILA"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인생의 최고 무대야말로 KRILA가 되기를 희망한다.

인생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KRILA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동안 쌓아온 가족 같은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해본다. 어떤

경우에도 구성원들은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이를 위해서는 기쁨과 어려움을 구성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생일을 맞이한 동료의 방을 깜짝 방문하여 초코파이에 성냥을 꽂고 함께 웃으면서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난다.

둘째, 연구원의 기능은 학술 및 연구활동에 있으므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재정적 여건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는 학술과 연구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술과 연구활동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원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연구원의 기능을 재편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부와 교수부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연구원에 몸담고 있을 때 교수부의 설치를 시도한 적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지방자치와 관련된 연구와 다양한 경험을 한 다수의 연구진들이 교수부에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 등에게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전파하는 것도 연구원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원은 복식부기와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다수의 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넷째, 연구원의 위상을 현재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일본·중국 등 다수 국가의 지방자치 관련 연구원 또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다수의 국가와 연계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연구수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내의 지방자치 관련 다수 학회·유관기관 등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하여야 하며, 연구원 출신들과의 연계 고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원 35주년, 새 출발의 기회가 되기를

연구원이 설립된 지 35년이 되었다. 현재 연구원은 타 연구원의 비약적인 성장,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재정적 어려움의 지속, 우수인재 충원의 곤란 등 다양한 위기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 지방자치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로 인해 연구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즉, 연구원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구성원들은 연구원을 지방자치의 메카로 인정하는 많은 응원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원주혁신도시로의 이전, 그리고 개원 35주년이 많은 어려움을 딛고 연구원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개원 35주년을 축하하며, 구성원들의 인생 최고 무대가 KRILA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pisode 5



서초동 먹자골목에서 있었던 일

박 완 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사람도 35세면 만사에 의욕을 갖고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할 나이듯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개원 35주년을 맞이하여 기어를 한 단계 높여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원하면서 내가 연구원과 맺은 인연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중앙대에서 시작한 직장생활

나는 1985년 말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이듬해 3월부터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조교수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 중앙대학교에는 흑석동과 안성 등 두 개의 캠퍼스가 있었다. 양 캠퍼스에 모두 경제학과가 존재하였으며, 경제학과 교수는 모두 합해 20여 명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학부 교과목으로 재정학과 후생경제학이, 대학원에도 재정학이 개설되어 있었다. 이들 과목은 지역경제학(Regional Economics)이나 화폐금융론(Money and Banking)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강의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고 나서 2~3년 뒤 강의를 맡고 있던 선배 교수님들이 이들 과목을 내게 양보하셔서, 나는 운 좋게도 내 전공과목을 빨리 강의하게 되었다. 학과 내 어떤 선배 교수님은 거의 퇴임하실 때까지 자기 전공 분야 강의를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양 캠퍼스 통틀어 재정학을 전공한 교수는 나 혼자여서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는 교내에서는 전공 분야인 재정학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 학문적 외톨이라는 생각도 들었었다.

워크숍 토론자로 시작된 연구원과의 인연

그러던 중 1992년 3월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긴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연구원이 주도하는 여러 협동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즉, 〈21세기를 대비한 지방자치 발전 10대 과제〉(1997),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발행제도 개선방안〉(2000),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확충방안〉(2006) 등등의 성과물을 낼 수 있었다. 또한 연구원 발간 학술지인 《지방행정연구》에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분석과 재정진단 관련 연구용역에도 연구원 관련 박사들과 함께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야 밝히지만 연구원 박사들이 작성한 수많은 연구보고서의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때로는 악역을 수행한 적도 있다. 아무튼 연구원 내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나는 학교에서의 학문적 외톨이 신세를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연구원 내의 박사들과 학문적 교류만 한 것은 아니고 문화적(?) 교류도 활발하게 가졌다. 연구원이 공덕동에 소재할 때부터 서초동 먹자골목 인근에 있을 때까지 모임이 끝나면 소주 한잔 하면서 정을 나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여 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다.

끈끈한 유대관계로 더욱 발전할 것

서초동 시절에 한 가지 재미있었던 일은 연구원 바로 앞 한정식 집에서 회식을 했는데, 나올 때 보니 유독 내 구두만 없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그 집 손님은 우리와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하던 또 다른 연구원 식구들뿐이었다. 그래서 우리 일행 중 한 사람이 마침 차를 마시러 간 그쪽 사람들한테 연락해보니, 그중 한 사람이 내 구두를 바꿔 신고 간 것이었다. 발이 평균보다 작아 남겨진 헌(?) 구두는 내게 너무 컸다. 그래서 내 구두를 신은 사람이 금방 자기 것이 아닌 줄 알았을 텐데, 용케도 그것을 신고 커피숍까지 갔다고 하니 대단한 인내의 소유자였던 것 같다.
내가 느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가장 큰 매력은 끈끈한 유대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개인 혼자의 지혜보다는 여럿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에 우리 모두 이견이 없다면, 이것은 매우 뚜렷한 장점이자 타 연구원과 차별이 되는 점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 훌륭한 전통을 만들고,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 분야 최고의 연구기관이 되기를 기원한다.

Episode 6



지방자치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박 재 영
광주대 부총장

35년을 이어온 인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개원 35주년을 맞았다고 하니, 나 개인으로 정말 감회가 새롭다. 연구

원과 처음 연을 맺은 것은 1986년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 발령을 받으면서다. 지방자치 실시를 준비하는 자치기획단에 4년여를 근무하면서 솔직히 지방자치에 대해 처음으로 공부하고 〈독일·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읍·면·동 자치가능성분석〉 등의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난다. 그 뒤 지방기획과 자치제도담당, 기획담당, 군수, 자치제도과장, 기획예산처 균특예산국장, 행정자치부 균형발전본부장,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을 지냈고 최종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지 만 5년이 다 되었지만, 현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사 겸 자문위원장으로 있으니, 실로 그 인연은 35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최상위 연구원 자격 갖췄지만

사실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는 연구원과 관계가 매우 깊다. 연구원 설립 시 주무부서이기도 하고 연구계획, 재정 등에 대해 연구원과 긴밀히 협의를 하기도 했다. 실제 지방행정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시 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정말 중요하고 정책에 많이 반영된다. 여기서 지방행정이라 하면 지방의 행정·재정·세정·경영·정치·경제·의회·문화 등을 총망라한다. 설립 이후 35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결과가 연구원에 집적되어 있어서 지방행정에 대한 어떤 문제나 정책도 그간의 연구물에 나와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 당시보다 박사급 연구원도 훨씬 많고 운영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초창기는 연구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 등으로 고생했지만 그간 기금 확충, 조직 확대 등으로 어느 정도 최상위 연구원의 자격을 갖추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지방자치처럼 끊임없이 인재확보, 연구의 질 향상, 원주의 위치적 단점 극복 등 할 일도 매우 많다고 생각된다.

시·도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등 연계 강화,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정책과제 공동연구 등은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본다.

지방자치 실태 연구에 힘써야

한국의 지방자치는 1995년 민선이 다시 시작된 이래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부족하거나 부정적인 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4개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이 서로 협력하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선순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4개 수레바퀴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연구하여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의 민선자치 장점은 더욱 키워나가고, 부정적인 면은 개선해나가는 데 힘쓰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도약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3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Episode 7



재정으로 살펴본 연구원 35년

유순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입원하여 살림살이를 맡은 지 34년 차다. 초기 내무부에 의지하는 안정된 재정상황에 비해 1998년 IMF 시대를 겪으면서 광역시·도 출연 중단으로 재정여건은 어려워졌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해 수탁연구용역을 과도하게 늘렸는데 연구활동이 수탁용역사업에 치중되다 보니 용역기관으로 전락하여 연구원 정체성의 문제는 물론 과도한 연구량으로 연구품질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개된 2005년부터 약 15년간의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참으로 파란만장하였으며, 임직원의 노력 또한 눈물겨웠다. 그 시기, 그 상황의 중심에서 일을 했던 입장으로서 몇몇 에피소드를 적어보고자 한다.

IMF와 함께 찾아온 재정위기

우리 연구원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 초기부터 광역시·도의 출연금으로 운영재원을 충당하여 왔으며, 그중 여유금액으로 적립한 기금에서 일부 이자수입을 취하는 재정구조였다. 그런데 IMF 구제금융시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광역시·도의 출연금마저 중단되는 결과를 맞았다. 출연금 중단 초기만 하더라도 아직 시중금리가 20%를 상회하는 고금리시대라서 이자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었고, 부족한 재원은 약간의 수탁용역사업으로 가능하였다. 이 시절 은행 고금리로 인하여 개인은 힘든 반면 연구원은 짧은 기간이나마 자금력이 풍부해 재정적으로는 행복한 시기였다. 이런 상황이 1999년 전후 각 부처의 국책연구기관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거절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 잘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한국이 IMF 체제를 단기에 벗어났듯이, 고금리시대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기금운영 수익률이 2005년 5%대로 하락하게 되니, 2006년 예산편성 시 기금이자수입이 필요한 세입의 35%밖에 충당할 수 없었다. 그나마 이전에 적립해둔 여유자금이 있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러나 여유자금도 몇 년 사이에 소진되었기 때문에 자구적인 노력 차원에서 2007년에는

수탁용역사업을 무리하게 34억 원을 계상하였다. 따라서 연구사업이 기본과제·정책과제 등 본연의 연구활동 보다는 수익사업에 연구역량이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연구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 국가의 재정 지원 신설, 광역시·도의 출연금 재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고 부단한 노력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어려웠던 국가 출연금 지원

먼저 2005년에 국가지원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국가지원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 기획예산처 → 국회를 거쳐야 하는, 지금 생각해도 재시도가 망설여질 정도로 그 과정이 녹록하지 않았다. 당시 김주현 원장의 주도하에 행정자치부 2006년 예산(안)에 민간경상보조비로 10억 원을 반영하고, 실무추진팀 3명(공재광 과장(행정자치부 파견), 최대환 팀장, 유순기 팀장)이 전력하여 기획예산처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설득하고 최종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에 상정되었는데 이건 거의 성공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다. 아~, 그런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민간경상보조비로는 반영이 되지 못하였다. 결국 2006년에는 행정자치부 예산에 용역사업비로 계상되어 지원을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국가 지원의 단초를 만들었다는 희망을 가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2006년 3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국가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법 개정을 통해 2010년까지 민간경상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남의 돈을 가져오는 게 순탄할 리 만무, 이 또한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연구원 보조비를 일몰제 해당사업(3년 후 일몰)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조만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지원의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해 2011년 3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국가가 출연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재차 개정하였다. 두 번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개정작업과 매년 반복되는 예산활동은 기획재정부의 살벌함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회를 설득한 당시 원장(김주현, 유정석, 한표환)과 김형선 정책협력관(행정안전부 파견),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주재복, 이상용, 이삼주, 한부영)의 노력은 실로 눈물겨웠다.

약 6년간 김상우 사무원과 함께 실무책임자로 상기 분들을 보좌한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순간에 드린다.

광역시·도 출연금 재개를 통한 활로 모색

두 번째로 광역시·도 출연금 재개를 추진하였다. 본 사안의 경우 어찌 보면 광역시·도 지원은 국가지원보다 더 어려운 면이 있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연구원의 재정이나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시·도에 대한 현안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거와 같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15개의 전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기획차장이던 나는 국가 지원을 실현시

킨 자신감이 있기에 한표환 원장께 조르다시피 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출연금 재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고, 2013년 예산에 10억 원(시·도당 7,000만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격년 증액을 하여 2019년에는 41억 5,000만 원이 확보된 바 있다. 이 또한 당연히 한표환 원장의 관심과 뒷받침, 한부영 기획조정실장의 인맥과 발로 뛰는 노력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다.

특기할 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설립과 재정 지원에 서울특별시가 빠져 있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었다. 그런데 이승종 원장께서 2015년부터 서울을 출연기관에 포함시키고, 하혜수 원장께서 신설 광역단체인 세종시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승종 원장, 하혜수 원장, 김선기 원장대행, 권오철·조기현·김현호 기획조정실장이 참 많은 노력을 하였다.

나아진 재정, 해결해야 할 숙제들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은 자화자찬 같지만 과거 어려운 시절에 비하면 한결 나아진 것으로 본다. 국가와 광역시·도의 지원규모도 증가했고, 그로 인해 수탁용역사업에 투입되었던 연구역량을 본연의 정책연구과제 수행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핵심적 불안요인은 변함없이 연구원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것은 재정 지원이 이전보다 약간 원활할 뿐이지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연구품질에 대한 외부의 평가와 행정안전부 및 광역시·도 등 각각의 이해관계 기관이 출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기여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 점은 앞으로 연구원이 현명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큰 숙제임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역대 원장님과 주요 보직자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할 분들이 있다. 기관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연구업무의 폭증, 인력 부족과 열악한 업무환경 등과 같은 여건하에서도 어려움을 감내하며, 본인이 맡은 임무가 기관의 재정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부탁한 활동을 연구원의 같은 식구라는 이해심으로 적극 지원해주신 전·현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pisode 8



세미나를 통한 지방의회와의 첫 만남

이 상 용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나의 연구원 생활은 30대 초입에 시작하여 40대, 50대를 보내고 60대 초에 정년퇴직으로 마감을 하였다. 그러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내 인생의 추억에 대한 저장고이기도 하고, 아련한 고향과 같은 그리움의 대상과 같은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것은 나의 인생에서 직장생활의 전부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루어졌고, 퇴직하기 전까지 연구원과 인연을 맺었거나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과의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명감만은 넘쳤던 지방자치 초기

지난 30년의 연구원 생활을 나는 마포·북수원·서초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까지 보냈던 마포시절, 지방의회와의 첫 만남을 특히 잊을 수가 없다. 그 일화를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1961년 지방의회 해산 후 30년 만에 부활한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제도적 준비가 마련될 때(1995년)까지 미루어졌고, 우선 지방의회부터 구성하게 되었다. 즉, 1991년 3월 기초의회, 6월 광역의회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무보수·명예직의 지방의회 의원 4,000여 명의 상당수는 그 의무나 역량 등에서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당선인들은 새롭게 부활한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의 여건상 지방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을 어떻게 배우고, 깨우쳐야 하는지 막막할 따름이었다. 물론 정부나 일부 정치권 그리고 학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 관련 자료야 있었겠지만, 의회 운영의 경험이 전혀 없으니 이들의 걱정은 태산 같았을 것이다. 또한 초대 지방의원의 자부심이나 의욕이 너무 지나쳐 국민의 눈총을 받거나 언론의 비난을 받는 사례도 더러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을 주어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미리 준비해둔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별로 없었다.

세종문화회관을 채운 세미나의 열기

1991년 10월, 바야흐로 초대 지방의회는 각 의회별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의정활동을 개시해야 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지방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이나 연찬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우리 연구원은 연례적 행사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관련 세미나 개최 계획을 세웠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세미나의 개최기관은 방청객 수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세미나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에 우리 연구원을 홍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참석 권유 공문을 전체 지방의회에 보낸 바 있었다.

세미나 개최 장소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은 약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러나 세미나 개최일자가 다가오자 2~3일 전부터 지방의회에서는 참석자 수를 공문으로 회신해오는데, 짐작컨대 500명 이상이 참석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참석 자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세미나 행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민을 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때 김양배 원장님은 세미나 개최일 약 1개월 전에 사임을 하셨고, 공교롭게도 당시 행정 경험이 있는 수석연구원이었던 김기옥 임시 직무대행은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는 날이었다. 연구원 식구들은 대다수가 30대 초반 또는 그 이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따라서 30대 중반의 수석연구원이고 실장이었던 나는 행정직원들과 함께 이 현안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예정대로 1991년 10월 11일 세미나는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 전개〉라는 대주제하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개최되었다. 일찍부터 전국 지방의회에서 세미나 참석자들이 몰려들었으므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는 수용인원 250명 외에 빈 공간에 50개 접이의자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그 의자도 다 차서 빈 공간에 서서 참석한 방청객도 다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장외 홀에 급히 모니터를 통해 시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세종문화회관 입구 계단이나 주차장 등에서 서성이는 세미나 참석자들도 있었다.

숙제로 남은 지방의회와의 관계

아무튼 성황리에 세미나는 끝났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할 일인지, 문제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그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하였을까? 짐작컨대, 당시 지방의원의 역량 확충이나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 없이 지방의원 당선자들이 세미나 안내문을 받고서 그 행사를 자신들의 당선 축하를 위한 자리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자리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아무튼 이러한 지방의회의 욕구를 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수용하여 적극적인 고객관리가 필요하다는 많은 아쉬움과 문제점을 남긴 세미나였다고 생각된다.

지방의회와 우리 연구원의 첫 만남에서, 지방의회 측에서는 연구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후 연구원의 예산은 시·도의 출연금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시 협조가 중요한 문제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첫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 진한 아쉬움이 남게 되었다.

이 세미나 이후 약 9개월의 원장 공석 기간(직무대행은 현 국회의원인 이은재 수석연구원이었음)을 지나 1992년 7월 김안제 원장님이 부임하고 나서부터 약 3~4년간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찬회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접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는 다소 부족한 연찬회로 인식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 및 연찬을 대행하는 역할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연구소에서 주로 수행되었고, 현재까지도 우리 연구원과 지방의회와의 관계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한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연구원이 지방의회 지원과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애정으로 '연구원의 소'를 키워나가길

끝으로 퇴직자로서, 아니 지연회의 현 회원으로서 연구원에서 보냈던 지난 세월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가기도 하고 지난 세월의 덧없음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한편 선배 은퇴자로서 서초시대를 마감하고 원주시대가 개막되면서 현재 연구원 문화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원주시대의 완벽한 정착에는 그 기간이 아직 일천한 만큼 직원의 직주분리로 인한 근무형태, 지방연구원과의 관계설정, 연구원 과제 발굴 및 수행방식 등에서 과거보다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연구원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동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때 유행했던 말로, "연구원의 소는 누가 키울 것"인지 걱정된다. 따라서 선배로서 지금 기대하는 바는 우리 연구원이 희망이라는 인식하에 직장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키우고, 가족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Episode 9



수원의 독립청사 건립 비화

임 경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9대 원장

취임과 함께 마주한 독립청사의 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9대 원장으로서 취임했던 때가 벌써 4반세기인 25년이 되어가고 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 직접 설립한 초대 경기개발연구원장을 퇴직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것은 큰 영광이었다. 왜냐하면 공직생활 중 연구원과는 많은 인연을 갖고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5년 5월 지방행정연수원 연구발전부장 재직 시에는 당시 전영춘 지방행정연구소(초창기에는 연구소였음) 소장과 각별한 관계를 가졌기에 지방행정연구소의 운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후 지방세제국장과 지방재정국장 재직 시에는 연구원의 당연직 이사로서 관여하였고, 차관보 시절에는 연구원의 지도·감독을 하는 운영 책임자로서 전력을 다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연구원장으로 취임한 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파악하는 중에 연구원 독립청사 건설 계획이 제기되었다. 사실상 그동안 역대 원장들이 연구원 독립청사를 마련하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문제해결 위해 동분서주한 시간들

당시 연구원은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지방행정공제회를 임대하여 사용하였는데, 연간 임대료가 2억 원대를 넘어 전체 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가뜩이나 예산 부족에 시달려온 연구원 운영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재임 중에 독립청사를 마련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결행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첫째, 건립자금 확보 문제였다. 당시 연구원 자체 자금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문제였기에 당시 김우석 장관(작고)님을 설득, 간청하여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박승주 지방기획과장(전 여성부차관)의 협조와 지원이 많았다.

둘째, 건립 위치와 토지 확보 문제였다.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나로서는 건립 위치는 서울 근교로 하되 토지는 공공용지로 확보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수원시로 결정하게 되었다. 수원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연구인력을 이용함과 동시 연구협력을 위해서도 좋은 위치였다. 그리하여 1997년 3월 우여곡절 끝에 지방행정연수원 입구에 있는 도유지를 도지사 재직 덕분에 감정가

격에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독립청사의 준공과 이전(이사) 시기 문제였다. 당시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이었기 때문에 재임 중에 준공·이전하겠다는 의지로 1997년 6월 13일 강운태 장관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서둘러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12월 연말에 반드시 준공·이전하겠다는 각오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건축 상황을 점검하며 지도·감독도 하였다.
1998년 12월 22일에 이전할 계획으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연구원의 연구요원 중에서 수원 통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국장에게 빠른 시일 내에 연구원 공개채용을 하도록 지시하였더니, 불응자들이 연구원 방침에 따르겠다고 하기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다.

숙원사업 해결, 오늘의 청사 탄생으로 이어져

199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연구원 준공과 아울러 이사도 서둘러 하였다. 그리하여 조해영 내무부장관님을 모시고 1998년 1월 9일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청사 준공식을 갖게 됨으로써 13년 만에 독립건물을 마련 후 연구원장직을 퇴임하였다.
그 후 후임인 이달곤 원장(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원에 있는 청사 건물을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 비싼 가격(?)에 매각한 후, IMF 와중에 부동산 값이 폭락한 것을 계기로 서울시 서초동에 6층 건물을 값싸게 매입(?)하여 서울로 다시 이전(환도)하게 되었다. 이달곤 원장은 당시 최인기 장관으로부터 역대 원장 중 '재테크의 명수'(?)라는 칭찬을 공식석상에서 듣기도 하였으며, 그때 매입한 서초동 건물은 현재 웅대한 원주청사 건물로 탄생하는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Episode 10



무주 송어장과 백련사, 행복이 충만했던 하루

임 성 일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과거를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행복감을 주는 일이다. 원래 좋았던 일은 그 느낌을 오래 간직할 수 있어 행복하고, 그렇지 못했던 일은 이제금 여유를 갖고 그때를 되돌아보게 하여 또

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하여 이제는 20년도 더 된, 좋았던 그 어느 봄날의 일을 새삼 추억의 산실로부터 끄집어내어 잠시나마 행복감에 취해보려고 한다. '무주 구천동 백련사'의 추억을 되새겨보고 싶은 것이다.

봄날을 장식한 연수대회

어느 아름다운 봄날, 연구원 식구들은 일상을 뒤로 하고 모처럼 연수대회를 떠나게 되었다. 더할 나위 없이 파란 하늘이 봄철 산하와 잘 어우러진 5월 어느 날로 기억된다. 서초동을 출발한 관광버스는 마치 봄날의 훈풍을 타고 달리듯 산뜻하게 목적지 무주 구천동으로 향했다. 그때는 연구원도, 우리도 모두 젊었다. 어쩌면 산하를 영롱하게 물들이는 새봄의 꽃과 초목만큼이나 우리 또한 젊고 싱싱했는지 모르겠다. 하여 달리는 버스 안이 결코 조용할 수 없었다. 자연과 계절이 좋았고, 젊음의 열정이 충만했기 때문일 것이다.

차 안은 누가 무슨 말을 하기만 해도 그저 즐겁고 유쾌했다. 좌석별로 정담이 오가는가 하면, 차 뒤쪽에서는 일찍부터 포커 플레이가 한참이었다. 이따금 호쾌한 웃음소리가 한바탕 차를 뒤흔들었다. 누가 대박을 터뜨렸던지, 아니면 누가 쪽박을 찬 것이 틀림없다. 장외꾼들은 궁금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그 주인공인지를 알고 싶어 했다. 불과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박장대소했다.

구천동 계곡을 울린 권주가 한 자락

예나 지금이나 주당(酒黨)들은 흡사 버스가 기름을 마시듯 오전 장부터 맥주를 주거니 받거니 했다. 중간에 잠시 휴게소에 내렸다. 그때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표정에는 오늘 무언가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아니 예감하고 있었다는 말이 더 맞을 듯하다. 5월과 젊음, 해방과 자유, 익숙한 사람들과의 여정,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정녕 앞으로 있을 좋은 추억의 실타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후 한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잊지 못할 명장면, 두고두고 회자될 추억의 베스트 사건이 마치 태아가 잉태되듯 조금씩 형상화되고 있었다.

구천동 계곡은 바위와 넘실대는 옥빛 물살만으로도 충분히 자태를 뽐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계절이 계절인 만큼 단연 압권은 그것을 내려다보는 산비탈을 수놓은 형형색색 봄꽃들이었다.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들의 기분을 한껏 끌어올려주기에 충분했다. 점심은 특식이었다. 산채 비빔밥이었던 것 같고, 양식 송어회와 매운탕이 일미로 추가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송어장 음식점이었다. 이미 고속도로에서 탈속(脫俗)이라도 한 듯 마음을 풀어놓은 식구들, 자연과 어우러진 풍성한 식단을 대하자 빨리 회포를 풀고 싶었던 모양이다. 마음은 진작부터 유쾌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음식은 맛있는 자연식에 싱싱한 회가 일미였다. 돌아

보니 연구원의 친숙한 얼굴들, 어이 이태백의 장진주사(將進酒辭)가 터져 나오지 않겠는가? 몇 사람의 건배사와 권주가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우리 모두는 목청이 터져라 화답했다. 쉴 새 없이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리고 술잔은 빠른 속도로 벌써 몇 순배나 돌았다. 여럿이 하나 되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타임캡슐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완만하고 단아했던 백련사길

당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식후 덕유산의 명찰 백련사를 다녀오는 산행이었다. 그런데 백련사를 향해 출발할 시간, 산행에 나선 사람의 수는 손을 꼽을 정도였다. 대다수 연구원 식구들에게 산행은 이미 영원히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이대로가 좋고, 지금이 너무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그때 즐거워하던 전체의 모습, 그리고 몇 사람의 너무나 해피(Happy)한 모습은 지금도 또렷이 떠올릴 수 있다. 화가는 아니지만 누가 그 광경을 그려내라고 하면 나는 자신 있게 그려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행복 프로그램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5~6명 남짓한 동료들과 함께 백련사 산행에 나섰다. 사랑하는 동료들 수십 명은 송어장의 송어를 모두 거덜낼 듯 회로 잔칫상을 벌였고, 식당의 소주와 맥주를 다 비워버릴 듯한 기세로 그렇게 기분 좋게 떠들고 또 깔깔거렸다. 웃어대는 그 소리들은 우리들이 저만치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귓전에 들려왔다.

백련사 가는 길은 완만하면서도 단아했다. 숲이 깊지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일들을 문득 문득 생각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산 아래 동료들이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는 만큼 지금 산 중턱을 오르는 동료들 또한 대화하고 노래하며 명상하는 고즈넉한 행복을 즐기고 있었다.

버스는 떠나지 못하고

우리가 백련사에서 내려왔을 때 가히 진풍경이 벌어져 있었다. 여전히 송어장 식당에서 그토록 긴 세월을 태백촉월(太白捉月)이라도 할 듯이 술과 대화를 즐기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행방불명이었다. 조직은 어디로 가고, 각자가 자유를 찾아 방황하는지 아니면 탐닉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문제는 타고 온 전세 버스가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에 당도하였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몽롱했다. 그래도 행사를 주도한 원우회 간부를 중심으로 구천동 주차장 주변 곳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결코 일이십 분에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인근의 다방, 상가, 주점, 음식점, 계곡 물가, 정원의 나무 밑 등등…. 사람을 찾는 수색작전은 끝없이 이어졌다. 심지어 주차 광장 주변에서는 아마도 수십 번 이상 확성기 소리가 울려퍼졌을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여러분 이성을 찾고, 승차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행 버스가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낙오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다. 그날 해 대신 별들이 하나둘 봄밤의 창공을 수놓을 무렵에야 버스는 간신히 출발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꿈꾸면서 본래의 자리 서울 서초동으로 향했다.

풍성한 감성과 동료애로 활력 가꾸길

오늘 나는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지성과 감성을 나누고, 때로 좋은 감정과 불편한 감정들이 교차했던 젊은 날의 삶의 편린, 즉 인연의 한 자락을 조심스럽게 건드려보았다. 글을 써내려가면서 피식 웃었다. 좋았다는 의미다.

훌륭한 연구기관은 아카데미아(Academia)와 또 다른 지성과 지식의 전당이어야 한다. 지성은 현실 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서서 현재와 미래의 정부정책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리딩 섹터(Leading Sector)로서의 실용성과 실천성을 요구한다. 지식은 국민과 정부 당국이 신뢰할 만한 당대 최고의 지적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열정과 서로 존중하는 풍성한 감성과 동료애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성과 지식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부단히 샘솟게 하는 활력의 원천이다. 그날 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성과 감성 모두를 만져볼 수 있는 행운과 행복을 함께 향유했었다.

Episode 11



일본 지진 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들'

하동현
안양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유학을 마치고 자격 있는 연구자로서 시작한 첫 직장이기에, 항상 나의 출발점이자 친정으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가끔씩 서초역 부근의 옛 연구원을 지날 때마다 각양각색의 추억들이 아스라이 요동친다. 동료들과 술잔을 부딪치며 즐겁게 담소하고 어깨동무를 했던 공간들이 나의 기억에 맴돌곤 한다.

입사 1년 차, 부담스러운 일본행

내가 입사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일본 게이오대학의 G-COE와 MOU를 체결, 협

정식과 기념 공동세미나를 도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일본 측의 초청으로 한표환 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9명(한표환, 김병국, 한부영, 권오철, 주재복, 박해육, 서정섭, 김현호, 하동현)이 행사 참석 출장자로 정해졌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나는 일본 측과 상호 연락을 하면서 행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자체 일정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원장님과 많은 선배 연구자들을 모시고 해외에서 행사를 무사히 치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신출내기 연구원이었던 나로서는 매우 긴장되고 부담 또한 느껴지는 행사였다.

2박 3일 일정으로 2011년 3월 9일에 출국하였다. 3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공동세미나가 시작되었고 오후 6시까지 양측의 발표와 상호 토론이 이어졌다. 한일 양국이 지닌 지방자치제도의 특징과 논점을 파악하고 상호 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루 종일 열띤 세미나를 마치고 게이오대 근처의 중식당에서 저녁 만찬회를 가졌다. 돗토리현 전 지사이자 전 총무대신이었던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교수 등 다수의 일본 측 인사들도 늦은 시간까지 참석하여 우리를 배려하였다. 이로써 공식 행사는 무사히 종료되었다.

적색의 아카렌가 앞에서 만난 지진

운명의 2011년 3월 11일이 밝았다. 귀국 전 일정으로 가나가와현 청사를 방문하여 유학 시절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은 지사와 만나고 인근의 미나토미라이를 둘러보는 계획을 세웠다. 숙소에서 현청이 위치한 요코하마로 이동하여 마츠자와 시게후미 지사를 만났고, 미리 부탁한 현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청사 근처에 위치한 동양 최대의 차이나타운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미나토미라이는 볼품없는 해변가에서 도심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여 요코하마의 대표적 핫스팟으로 변신을 시도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식사 후 연결된 산책로를 따라 미나토미라이로 향했다. 야마시타 공원, 여객터미널, 아카렌가 등 근대 개항기의 정취와 현대성이 뒤섞인 멋진 풍경들이 펼쳐졌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적색의 아카렌가가 가까워지는 바로 그때였다. 갑작스럽게 땅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오랜 일본 유학 생활로 지진에 어느 정도 익숙한 터라 진도 3~4의 약한 지진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지진을 처음 겪은 선배들이 '어이쿠'라며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고, 나는 웃으면서 이런 지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호기를 부렸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멈춰야 할 흔들림이 더 세어지면서 아이들이 뛰는 바운스에 올라온 느낌이 들 정도로 반동이 심해졌다. 더구나 그곳은 매립지여서 가라앉을 수도 있고, 지대가 낮으므로 쓰나미가 몰려오면 대책이 없다는 두려움도 순간적으로 뇌리를 스쳤다.

여진의 위험 속에 숙소 복귀

황급히 주변의 일본인에게 지진 강도가 몇 도냐고 물었는데, 그때 여진이 몰아치자 여기저기서 깜짝 놀라 경악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여 연구원 선배님들에게 전철역으로 빨리 이동하자고 재촉하였다. 사쿠라기초역 부근에는 이미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고, 유선전화를 걸기 위해 100여 미터의 긴 줄이 서 있었다. 역 출입구의 TV 화면에는 해안 마을을 삼키는 검은 쓰나미의 거침없는 진격이 여과 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미 전철은 멈추어 서 있었고,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는 긴급 공지만이 흘러나왔다.

나 역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순간 멍한 상태로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일단 원장님과 상의하여 인근의 가게로 들어갔다. 교통수단이 모두 차단된 상황이라 식사라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였다. 오랜 시간이 흘렀건만 교통 재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두어 곳의 가게를 옮겨가면서 재개를 기다렸건만 거의 밤 10시가 되어서도 깜깜무소식이었다.

원장님께서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노선이 교차하는 큰 역으로 가자고 제안하셨다. 다행히 1~2정거장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도심은 차량 이동도 거의 없는 비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걷기를 1시간 정도 했을 때 인근 역에서 도쿄로 들어가는 지하철이 밤 12시 무렵부터 운행한다는 공지가 나왔다.

도쿄 방향의 지하철을 무조건 탑승하였고, 숙소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역에서 하차하였다. 내리고 나서도 숙소까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걷기를 1~2시간 정도 하여 새벽 2~3시쯤 머물렀던 호텔로 돌아올 수 있었다. 3월 11일 저녁이 원래 귀국하는 날이므로 우리는 체크아웃을 하여 짐만 맡겨져 있는 상태였다. 호텔 로비에는 우리와 같은 오갈 데 없는 (전) 투숙객들로 넘쳐나서 변변히 앉을 만한 곳도 없었다.

숙제가 된 귀국길

다행스럽게 일본 측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게이오대의 해당 프로젝트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 팀이 비교적 안전하고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일단 확보된 셈이었다. 그렇게 그곳에서 하룻밤을 꼬박 새우면서 나는 귀국 비행기 편을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비행기는 결항 상태였고, 일부 특별기가 운항될 예정이었다. 수소문 끝에 원장님의 비행 편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의 탑승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출국 전부터 나와 주재복 박사님, 박해육 박사님은 자료 수집 등을 겸하여 이틀 정도 더 체류하는 일정을 잡았었다. 날이 밝으면서 방문단은 귀국파와 체류파로 나뉘었고, 원장님 등을 제외하고는 탑승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원들은 일단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다.

남은 우리들 세 사람은 미처 숙소를 잡고 오지 못해, 이 상황에서 숙소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 걱정하면서 게이오대 주변을 거닐고 있었다. 그러다가 방문연구원으로 와 계신 김순은 교수님과 우연히 마주쳤다. 다행히 김 교수님께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셨고, 때마침 우리에

게 잘 아시는 인근의 료칸을 소개해주셨다. 하루가 지나도 대지진의 충격파와 여운이 가시지 않았고, 교통도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다. 택시 자체가 운행되지 않았다.

배려와 지혜로 극복한 재난

교통과 통신이 두절된 상태지만, 도쿄 자체는 물리적 피해가 거의 없는 평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철은 조금씩 구간별로 정상화되어갔다. 그날 저녁에는 마침 출장을 오신 연구원 OB이신 임승빈 교수님과 지방의원들과 연락이 닿아 신주쿠에서 식사를 함께하였다. 식사 시간 동안에도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건물 안전등이 흔들흔들 하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다음 날 우리는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다. 탑승 예정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배치되었다.
티케팅을 하려는 순간, 아……, 나는 저 앞에 지친 기색의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제 공항으로 가셨던 한부영 박사님과 김현호 박사님이셨다. 예정된 항공편이 지금까지 연기되면서 공항의 임시 피난소에서 1박을 하셨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에, 한편으로는 미안함에 멋쩍은 웃음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우리보다 뒤편이긴 하지만 곧 좌석이 배정되었다. 김현호 박사님은 귀국하시고 바로 연평도 출장이 예정되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당시 연평도 폭격 등으로 서해 발전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가시는 출장이었다. 재난지역에서 재난지역으로 움직이는 종군기자 같은 이동경로였다.
2011년 3월 사상 최대의 연구원 방문단은 3·11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재난을 만났고, 서로의 배려와 지혜로 다소의 혼란은 있었지만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모두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지금은 웃으면서 생사고락의 무용담을 나눌 수 있는 그리운 '전우들(?)의 추억'이 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주 본원 전경



2019년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체회의 모습

1984 — 2019

02 장

연구원의 미래

특별 인터뷰

“선도적·창의적 지방자치 연구 기대”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약력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

2016. 2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지방행정정책관

2016. 6~2018. 7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2018. 7~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실장

연구원은 지난 35년간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한국지방자치연구에 있어 연구원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고, 자치분권 · 재정분권 ·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와 자치단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를 설립하여 자치단체 투자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직무연수를 제공하는 등 연구원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핵심 연구기관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015년에 자치제도정책관으로 있을 때 연구원과 함께 우리 지방자치 2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작업을 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고,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가지는 의미와 주요 추진과제는 무엇입니까?

“재정분권은 ‘지방의 일은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재정분권이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첫째, 1단계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총 8.5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확충 추진(2018년 지방소비세 4%p 기(旣) 인상, 2019년 지방소비세 6%p 추가 인상)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소비세가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 · 도 소비지출에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배분(※수도권 : 광역시 : 도 = 1 : 2 : 3)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도권 자치단체의 세수 일부(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지원할 계획(※지방소비세 비중 변화)입니다. △(지역별 소비지출 적용) 수도권 : 비수도권 = 55 : 45, △(지역별 가중치 적용) 수도권 : 비수도권 = 37 : 63,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 배분) 수도권 : 비수도권 = 22 : 78. 넷째,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 지방재정의 자율성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갑작스러운 지방재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환된 계속사업의 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비를 보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 ·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연구원의 연구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겠지만, 특히 향후 연구원의 역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이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연구원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저출생 ·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 문제입니다. 저출생 · 고령화는 복지지출의 증가와 세수 감소를 야기함으로써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소멸은 자치단체 간 격차를 극대화시켜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이러한 위기를 조기에 분석하고, 미래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또한 향후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와 연구원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데이터 기반 행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와 스마트한 의사결정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지방행정과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만간 공무원들이 연구원 도움 없이 직접 AI를 활용해 정책을 분석하고 예측해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연구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도적 · 미래지향적 연구과제 선정이 중요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지방자치의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지방자치 연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미래예측기법을 활용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원의 정책연구 상당수는 '행정' 분야만 다루고 있으나, 이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드론 등 신기술 · 신산업 분야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선도적 · 창의적인 지방자치 연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향후 연구원이 정책 대응력 및 연구품질을 보다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연구원의 정책 대응력과 연구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원주에 위치하여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우나, 이는 보수 인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력이 연구원 개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원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정부정책에 적

절히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 차원의 국정철학 · 국정기조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정기조와 연구원의 미션 · 성과목표를 연계, 정부정책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품질 향상을 위해 시 · 도 연구원 등 다양한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지역 연구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도 현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연구원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자치 · 균형발전을 추진해온 동반자적 관계에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정책에 대한 학문적 ·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지만,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생 · 고령화, 지방소멸, 4차 산업혁명 등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대안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안전부와 연구원은 데이터와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하게 협업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교류, 학계 · 공무원의 합동 연구 등을 통해 상호간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5주년을 맞이한 연구원에 당부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그간 지방자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지방분권 · 재정분권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지방분권 실현을 희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신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하며, 연구 네트워크 강화, 연구역량 제고 등을 통해 지방자치 정책연구 선도기관에서 대한민국 핵심 정책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연구원 맏형 노릇해야”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학회장

약력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정책학박사

1994~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1~20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2014~2016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는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연구원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학회와 연구원 양 기관 간 관계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25년간 진행된 자치분권의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면서 학회 차원과 주요 학회원들의 집단 · 개인적 차원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과 공동세미나, 공동연구사업을 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양 기관이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현재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와 공동의 활동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에는 정례적 협력사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차 사업에 대하여 행정학회원이 일정 비율 참여하는 것을 규정화하는 일 같은 것입니다.”

연구원의 지난 35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가능하겠지만, 한국행정학회장의 입장에서 본 연구원의 역할과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연구원이 1984년 개원 이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1995년 민선단체장의 선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제도에서의 개선해야 할 점들을 지속적으로 분석 · 정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정책으로 성안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연구원은 국가 차원에서의 균형발전정책 어젠다도 많이 발굴하여 정부의 선



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연구원은 행정안전부만이 아니라 국토부 · 산업부 · 국무조정실 등 범 부처적인 정책연구 지원을 하고 국회와 정당에 대한 정책 제언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그에 대응하여 복잡 · 다양한 행정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 중 핵심적인 것을 몇 가지 든다면 어떤 것들이 우선적인 검토 주제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입니다. 지방정부의 구성 · 기능 등 거버넌스부터 중앙정부의 기능이 대폭 지방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조직운영 · 인력관리 · 재정운영 등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단기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중기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의 쇠퇴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원은 군 지역의 초고령화, 인구소멸 현상, 중소도시의 침체, 수도권 팽창과 신도시 건설 추세 등에 중기적 대응 전략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사회 통합 추세입니다. 현재는 한국이 북한 · 중국 · 일본과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 일본 · 중국이 하나의 동북아시아 경제권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연구원은 한국 · 북한 · 일본 · 중국의 도시 간, 지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수요에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제에 대해 언급해주셨는데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은 어떠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자치분권의 확대 추세에 대하여서 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의 이양사항을 분석하는 한편 시 · 도, 시정 발전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차별적인 이양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두 방향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중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원은 새로운 거버넌스 구성,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은 계속해야 합니다. 중기적인 수도권 집중, 지방인구 고령화와 소멸 현상에 대하여서 연구원은 단기 중기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정부, 지방정부, 일반 국민에게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원의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동북아 경제통합 현상에 대하여 연구원은 일본 · 중국 · 북한 관련 연구기관과의 데이터, 지식 교류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과의 협력은 정부, 정책연구기관과의 정례화된 행사가 있으나 중국과의 협력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자치행정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갈 때 자치행정의 거버넌스에 외국인이 참여하게 되고, 공식 문건과 서비스 제공에서 한국, 한국어만이 아니라 외국어 병기가 일반화되면서 인력구성에서도 다국적 · 다문화가 따르게 됩니다. 연구원의 인력구성에서도 다국적 · 다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원의 정책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또 달리 고려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6개 각 광역단체(대전, 세종은 공동 운영)와 4개 100만 도시(수원 · 용인 · 고양 · 창원) 총 20개 지역 연구원의 연계를 하고 맏형 노릇을 지방행정연구원이 해야 합니다. 연구협의체가 있다면 그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연구원 간의 공동연구와 연구진 상호 파견제도 도입, 지역순회 정기 연구발표 행사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선도적 제안과 사업에 따른 초기 재원 확보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5주년을 맞이한 연구원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5주년 생일 축하드립니다. 50주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일본 · 중국 · 북한에서도 연구원의 생일을 축하하도록 도약적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싱크탱크 역할해"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약력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2005. 3~2006. 2 감사원 특별조사국 직무감찰 자문위원

2005. 12~2007. 11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2006. 1~2008. 12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먼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연구원 간 연구협력관계에 대하여 잠깐 소개해주시겠습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박사님들이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학술대회에서의 논문 발표 및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연구원이 원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학회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지금까지도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동학술대회 및 공동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사업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연구원의 노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유지해왔으며, 그 결과 주요한 권한이나 재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달성한 짧은 기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었지만, 지방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른 행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권적 행정체제하에서 분권적 사고가 매우 드물었던 시기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왔다고 평가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잘되려면 중앙의 권한

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그 권한을 주민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주민참여가 전제돼야 합니다. 또 권한이양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주민 입장에서도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주민의 지방정치 참여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연구원의 역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이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전함으로써 행정안전부와 연구원 간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훨씬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향후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기능 중복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 수요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복지수요를 비롯한 재정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모두 재정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갈등도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앞의 질문과 관련하여 연구영역에 있어 향후 연구원에 어떠한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논리 및 대안 마련이 보다 정교해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과의 통합 혹은 역할 분담 논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감소가 지방행정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수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분권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기는 했으나, 이 과정에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세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연구원이 정책 대응력 및 연구품질을 보다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35주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 선발된 연구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세계적 연구동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원이 이제까지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구원 기능 강화 위해 함께 노력할 것”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약력

경찰대학교 법학과

201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행정실장

2018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2018. 8~현재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35년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연구원의 이러한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35년 동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싱크탱크로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분야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균형적 연구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종합적 · 실천적 사항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치동향 분석 및 정책화, 지방자치 정보의 축적,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 등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행정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연구원과 다양한 인연을 맺어오셨을 텐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스쳐지나가는 에피소드 중 울산 기획조정실장을 할 때 연구원에서 울산의 컨벤션센터 설립 관련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연구원을 여러 번 방문하였으며,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이승종 원장님 시절 연구원 기금사용 문제로 국회에 가셨을 때, 제가 제도과장 시절이었는데 임시 기금활용과 인력증원 문제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대학원의 논문 지도교수님이신 요코미치(Yokomichi) 교수님께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의 부학장으로 울산에서 개최한 연구원과의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되어 교수님과의 끊길 뻔한 인연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연구원의 역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이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에 따른 전문적 연구가 필요해졌고, 지방발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미래를 위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 및 과비용 문제 발생으로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 불투명해진 바, 더 큰 효율을 위한 광역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의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야할 것입니다."

앞의 질문과 관련하여 연구영역에 있어 향후 연구원에 어떠한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연구원의 주요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핵심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문제를 지방의 시각에서 연구하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매진해야 합니다. 실제 행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연구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자체와 주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준 높은 연구과제 발굴과 연구로 연구원 고유의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자치 정책에 관한 연구와 실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구원은 시 · 도와 다양한 연구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9월 시 · 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다른 국책 연구원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원의 주요 핵심 기능은 첫째 연구기능으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 제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기능으로 국내외 지방행정의 동향을 분석,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및 지방공무원의 의견 조사, 지방시책의 실태 분석을 위한 기초 조사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기능으로 중앙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과 경영진단, 국내외 유관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 협력 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핵심 기능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 · 도의 지방자치 정책 지원 강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현재 시도별로 독자적인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시 · 도별로 각각의 연구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지원기관으로 통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체 시 · 도를 위한 정책연구 및 지원 기관 역할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향후 연구원이 정책 대응력 및 연구품질을 보다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지방자치 전담 연구기관으로 확대 및 육성이 필요합니다. 싱크탱크 역할과 국제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연구기관의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분권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역량이 필요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지

방자치 연구기관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지방정부연합연구소(미국), 지방자치행정시스템연구소(일본), 지역행정연구원(프랑스), 지방공동체위원회(독일), 지방정부경영협의회중앙연구원(영국) 등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위한 전문 연구원으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자치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있어 주민 의견 · 참여의 필요성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더해 지방의회 · 재정 · 세제 · 개발 등 지방자치제도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공동체로서 지자체와 연구원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외 자치동향을 분석하고 정책화할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와 자료 축적도 중요합니다.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위한 방향 설정 또한 필요합니다. 경남도에서도 타 시 · 도와 함께 연구원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해야”



변성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약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2017. 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관

2018. 8 행정안전부 대변인

2019. 1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35년을 맞이한 연구원에 대하여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개원 이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환경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지방자치가 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확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에 담고 학술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은 국가와 시 · 도의 출연기관으로서 시 · 도와도 다양한 연구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그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와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급변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해왔습니다. 각 시 · 도에서도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에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정책이슈리포트, 연구과제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 및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하는 등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연구원의 성과물이 시 · 도의 정책적 수용성과 실행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

행정분야의 연구를 이끌어가는 핵심연구기관으로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각 시 · 도에서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정책제안 및 실행으로 연구 성과물이 실질적인 시정운영 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연구원은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향후 연구원 역할에 중요하게 미칠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방행정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행정에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 재정분권 확대 등 실질적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길 핵심과제들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현안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주도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는 경계를 허물고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협력하여 함께 연구하고 현안에 공동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연구품질 혁신을 통해 연구 성과의 질을 제고하고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정책 제시 등 정책수요에 대한 현안 대응력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각종 학술행사, 국제 세미나 개최 등 연구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행정 역량을 키우는 데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의 대표적 싱크탱크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정책대응력 및 연구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1세기의 핵심 트렌드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가장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환경변화에 가장 적응을 잘한 종이 살아남는다'라는 찰스 다윈의 말처럼 환경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직 · 인력 등을 수시 현안에 적기 대응토록 유연하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혁신하고, 전문가 공동연구 확대와 연구 결과 책임성 강화 등 연구역량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5주년을 맞는 연구원에 당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0여 년 동안 수많은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관련 분야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간 지방자치 역사에 다양한 성과와 자취를 남겼듯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지역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연구원이 더욱 성장·발전하길”



서정섭
지방재정경제실 재정분석센터
선임연구위원

약력

단국대학교 행정학 박사(지방재정 전공)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건전성 소위원회 위원

위원님께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초기에 입사하여 30년 넘게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원 35년 역사를 거의 함께 해오신 셈인데, 초기와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1987년이니까, 올해로 32년입니다. 처음에는 위촉연구원으로 입사했어요.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망설이기도 했는데, 공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입사를 했죠. 그 당시 연구원 규모는 지금과 비교해서는 아주 작았고, 정규직원 외에 위촉연구원이 한 열 명 정도 됐어요. 지방자치 실시 전이니까 제도 실시 준비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했어요. 저는 재정확충방안 같은 재정 분야를 맡았습니다. 초기 선임연구위원이었던 이상용 박사님 밑에서 사사를 받았고요.”

연구원에 오래도록 계시면서 연구원의 청사 이전과정을 모두 함께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마포 시절에 입사해 수원 청사로 갔다가 서초로 이전하고, 다시 원주로 왔네요. 원래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는데 서초 시절에 외부 인사들을 만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외향적인 부분이 커졌어요. 어울릴 일이 많아지니 자동으로 바뀌더라고요. 사실 책상에서 하는 일이 잘 맞는 편이고, 연구가 성격에 잘 맞아서 오래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도 처음에는 재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라서 고생도 좀 했죠. 1989년에 처음 혼자 과제 수행을 하게 됐는데 그게 예산분석이었거든요. 잘 몰라서 고민을 하

고 있는데 과장님이 일본의 예산분석 책을 추천해주셔서 도움을 받았죠. 초기 연구는 대부분 해외 선진국 연구를 번역하고 분석하는 거였거든요. 자료도 별로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해서 재정분석 진단을 제가 제일 오래한 셈이 됐는데, 해보니 재미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아, 이 제도가 잘되면 좋겠다' 하는 게 생겼고요. 쭉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도 지방자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우리도 해외처럼 재정위기가 닥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재정위기가 찾아왔어요. 공부를 해둔 게 빛을 보기 시작했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해외 사례도 더 찾아보고 출장도 가고. 당시 우리 경우는 해외처럼 자치단체가 넘어갈 정도의 재정위기는 아니었는데, 자꾸 관련 연구를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쪽으로 연구를 계속했죠. 그런데 2012년도인가,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거예요. 그걸 계기로 위기시스템을 만들 때 함께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연구 일을 맡았어요. '더 센 것'을 만들라고 해서 큰 위기를 상정하고 연구를 계속했죠."

연구를 하면서 이건 정말 보람이다, 싶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복지재정 문제가 생길 때 논리적인 부분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2005년도인가? 참여정부 때 지방으로 행정사무를 이양하고 2006년도에 그 연구를 하게 됐어요.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거는 국가로 되돌려 보내라는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정책감사를 하면서 그 연구를 보고 정부에 권고를 했더라고요. 큰 거는 국가로 돌리라고. 그게 계기가 돼서 복지업무의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그때부터 여기저기 불려 다녔죠. 부르면 또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게 위안이더라고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컨설팅을 해주고 연구 결과를 전달하면 보고 적용을 하거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결과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만들지만 연구가 바탕이 됐다고 하니까, '뭔가 남겨질 연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보람인데, 나를 좀 덜 보살핀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쉬워요."

30여 년의 기간을 연구원에서 보내면서 보람이 있는 만큼, 힘든 일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근 30년을 재정위기 관련 제도를 연구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는데 한 번 안 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서초에 있을 때인데, 제도 설계하고 만드는 게 재미있으니까 밤을 새워 해도 사우나 가서 샤워 하고 나오면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진단시스템을 만들 때였는데, 2006년 초쯤이었나. 그 시스템으로 재정분석을 하는데,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분석이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정밀한 시스템 설계, 세 번째는 위기관리 시스템, 네 번째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인데, 그걸 쭉 연구했거든요. 그날도 이틀 밤을 새우고 새벽에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거든요. 국회 쪽에 보면 올림픽대로 굽어진 데가 있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졸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훅 갈 뻔했죠. 죽을 뻔했다 생각하고 나니 '나 이제 이거 안 해'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5년 시스템 관련 연구 말고 다른 걸 했어요. 근데 결국 또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직접 연구는 안 하고 자문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후배들이 워낙 잘하니까요."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연구원이 그동안 이렇게 달라졌구나 체감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 측면에서 과거에는 과제나 일이 적어서 그랬는지 서로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어요. 항상 일이 우선이긴 했지만. 근데 요즘은 규모도 커지고 업무도 많아져서 그런지, 연구하는 데 시간을 거의 다 투자하느라 그런 건지 소통의 기회가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관계를 돈독히 할 기회가 줄어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연구능력은 사실 점점 발전해서 전에는 한 사람이 2~3개 업무를 진행했다면 요즘은 혼자 10~20개 연구를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진 영향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워낙 잘 알아서 하고 연구역량도 커졌어요."

후배 연구원분들과 함께하면서 아쉽거나 바라는 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특별히 뭐 하나가 걸린다, 하는 건 없는데 가끔 그런 건 있어요. 같이 열심히 하고 자꾸 뭘 요구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협업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얘기를 해야 좋은 선배가 되는 것일 텐데 그게 참 어려워요. 꾸짖는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고, 내용적으로 조언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선뜻 나서려고 하면 달라진 환경이나 세대차이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야 '다 얘기해놓고 발뺌한다' 그럴지도 몰라요."(웃음)

우리 연구원이 진짜 이건 정말 잘한다, 남보다 낫다고 자랑을 한마디 하신다면요?

"우리 연구원은 전에 규모가 작을 때도 그랬지만 내가 볼 때는 타 기관에 비해 비교적 관계가 돈독하거든요. 원주로 이전하면서 주거분리 등의 문제가 있어서 예전보다 좀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고 잘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성원 간의 관계가 좋아야 연구협업도 잘 이루어지고 공동진행도 잘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구하는 게 지방자치라는 제도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신나게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연구원은, 고객이라고 해야 하나요.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중앙부처, 그중에도 특히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243개, 또 사회과학 쪽, 지역발전이나 시민 · 행정 · 재정 · 발전 등 범주가 아주 넓어요. 연구도 아주 다양하게 하고. 다른 기관들보다 폭넓게 접촉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분야를 아우를 수 있죠. 앞으로 그런 관계를 잘 다져나가고 연구도 성실하게 하면 우리 연구원이 훨씬 명성도 높아질 거고, 또 규모도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재원 문제가 하나 걸리긴 하지만, 그것만 해결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군대 갔다 와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정말 운 좋게 연구원에 입사를 했어요. 공부도 원 없이 하고 승진도 했고, 내가 연구한 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런 과정들이 다 보람 있고 애정으로 남았습니다. 정말 나가라고 등 떠밀 때까지는 연구원에 있고 싶다 할 정도로 연구원에서 보낸 시간이 즐거웠어요. 지금 원장님이 연구원에 오실 때 우리 연구원을 성장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인력도 좀 늘리고 재정도 확충하고 규모를 키워서 연구에 내실을 기한다면 앞으로 연구원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연구원이 더욱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5년 능가하는 발전 기대”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약력

성균관대 행정대학원(행정학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책임연구원

국무총리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

교수님께서는 연구원 초창기부터 연구직원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연구원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연구원과 관련하여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과거(1988~1994년)에는, 그 당시는 초창기로 연구 부문의 연구인력과 지원 부문의 행정직원들 간에 거의 가족같이 친밀하게 지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특히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고, 주말에는 산행이나 회식을 통해 유대감을 키워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서로 간에 스킨십이 많이 적은 것 같아 아쉽군요. 특히 지나치게 엄격한 원장님 재임 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시 주례회의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반인데, 자가용이 없던 시절이어서 지각하지 않으려고 지나가는 화물차를 세워 타고 온 기억이 생생합니다.”

연구원 내외적인 경험을 통하여 연구원의 연구과제 운영과 성과관리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원은 연구 성과의 품질로 평가받게 되는데, 지나치게 정량적 성과 평가에 몰입되어 연구원 본연의 긴 호흡의 중장기 과제 발굴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의 과제 성격에 따라 연구 자문위원이 공동연구원의 수준으로 참여하여, 연구 결과물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과제 자문회의와 평가방식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

원) 수행과제의 양이 지나치게 많고 연구 기간 역시 지나치게 짧아 농익은 연구 결과물의 생산이 불가할 정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외부 연구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연구과제의 유형별로 외부 교수와 연구진의 활용비율 등을 잠정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준점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5년간 연구원이 수행해온 역할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35년 간 연구원이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분야에서 거둔 업적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며, 모든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의 기초 연구와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시 · 도 산하의 서울연구원과 경기연구원 등 관할 연구원 등이 신설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역시 수원시정연구원과 고양시정연구원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연구원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한국행정학회와 지방자치학회 등 각종 유관학회와의 관계 설정 역시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에 기회 및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구원을 중심으로 수직적 · 수평적 연계 및 유대관계의 설정과 활용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연구원의 역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이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간 관계 및 지방정부의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향후에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보다 구체적인 행정수요와 이슈들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개발연대를 지나면서, 아직까지 미비한 상하수도와 쓰레기처리장, 취수장 및 분뇨처리장 등 각종 지역의 각종 인프라를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개선할 필요도 제기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문제와 지방의 '빈집 은행'을 통한 활용이나, 유휴시설의 재활용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한국' 이후의 지방 문제와 대응방안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의 질문과 관련하여 연구영역에 있어 향후 연구원에 어떠한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연구원의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 등 3연구실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제기될 여지도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행 · 재정 및 주민들의 역량 함양과 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수용에 대해 여하히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일과 연구원에 대한 당부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연구원의 충분한 재정확보가 전제되어야만 나머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원주시대를 맞이하여, 공간적 이질감과 격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및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른 행안부와의 협력 및 강원도로부터의 지원 확보 등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사기 앙양 및 소속감 증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

요가 있습니다.

35주년을 맞는 연구원에 대해 무한한 축하와 지대한 애정을 표하는 바이며, 앞으로 35년 역시 이전에 비해 훨씬 능가하는 발전과 비상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과 자긍심이 내외부 연구원의 위상과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다 나은 연구원으로 우뚝 설 것을 의심하지 않는 바입니다. 동시에 OB모임인 '지연회'를 여하히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의 역사는 지방자치의 역사”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6대 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약력

노스웨스트대학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2013~20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2016~2018 시군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장

2016~201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교수님께서는 연구원 출신이시면서, 다시 원장으로 역임하게 되어 여타의 원장님들과는 남다른 감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임 원장으로서 재직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보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쉬움으로 남는 일도 있을 것 같네요. 몇 가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연구원 출신이면서, 이후 연구원장을 역임하다 보니 나름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통하여 연구원의 역할 확대를 이끌어냈다는 점, 그리고 기존 서울시를 제외한 여타 시 · 도의 출연에서 서울시를 포함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시 · 도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동출연의 연구원이란 점을 명확히 한 사실 또한 연구원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실천포럼의 출범을 통하여 지방자치 분야의 학계 · 실무계 · 언론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슈를 선도해온 점 역시 보람으로 남는 일입니다. 더불어서 연구원의 원주 이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원주청사의 설계작업이 진행된 것 또한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역량 있는 유명 건축가를 모시고, 친환경적이고 비용절감을 통하여 공공발주의 모범적 사례를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실제 건축과정에서는 건축이 지연되고, 마감이 매끄럽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한 것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으로 남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장직을 그만두시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셨는데, 밖에서 보실 때 지난 35년간 연구원이

자치분권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연구원의 역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제도화와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 연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이 적은 인원, 한정된 예산으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올 수 있었던 것은 소속 연구원 모두가 일당백의 역량을 갖춘 연구인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관련 유능한 연구자의 상당수가 연구원 출신이라는 사실은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연구원의 역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이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행정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소멸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방법의 재설계는 물론, 행정체제와 구역 문제 등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연구원과의 협력 역시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원 역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지방자치단체와는 현재와 같은 정책과제의 대응방식에 더하여 인적교류, 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파견제 도입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적인 유대강화방안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실천적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과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방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방자치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강화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연구원을 홍보하고 전국에 연구원에 대한 우호관계를 확장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 연구원들과의 관계정립을 통한 역할 변화가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싱크탱크는 집중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싱크탱크를 설치한 상황이므로 이들 간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와 조정은 아무래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연구원이 정책대응력 및 연구품질을 보다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연구원이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력이 담보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원 재정을 위하여 여타의 연구기관보다 많은 용역과제를 소화해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책대응력이나 연구품질의 제고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 출연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부터, 지방자치 평가 및 컨설팅, 조직진단 등의 공식기관화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탕 되어야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우수인력의 확보 또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연구원의 원주 이전은 기회와 위기 요인은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를 발판으로 역할의 확대와 변화의 기회를 가지는 반면, 인재 확보의 어려움,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 활성화 곤란 등은 해결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위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원이 기회를 살리고,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기존의 제도중심 지방자치에서 주민중심의 생활자치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지원적인 연구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단기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두는 정책과제의 수행과 함께 보다 장기적이며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기본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컬러, 연구 브랜드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연구회–학회 간 상호 보완관계 유지해야”



임경수

성결대 국제개발협력학부 명예교수,
한국지역개발학회장

약력

중앙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

2008~2010 한국도시행정학회장

2011~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외부 임의직)

2016~2018 통일부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

교수님께서는 오랜 기간 연구원과 인연을 맺어오셨는데 소개를 부탁드리고, 그간 지켜본 연구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연구원과의 인연은 매우 오래됩니다. 제가 2009년부터 한 3년간 초빙연구원으로 있었고, 2011년부터 연구자문위원으로도 있었고, 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사로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어떤 곳보다 애정이 많은 연구원인데, 그래서 그런지 연구원이야말로 지방행정 분야의 명실상부한 톱 싱크탱크(Top Think Tank)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동안 연구원에서 생산해 낸 연구보고서나 《지방행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피인용지수를 보면 다른 학술지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연구원의 기여도가 크다는 증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지역개발학회와 연구원 간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며 향후 협력사업, 또 이를 강화해나갈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이죠. 이런 데 비해 우리 한국지역개발학회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지방재정), 환경, 부동산 등등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원과 학회 간의 협력사업은 그간 학회의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거나 각종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더 한 차원 높은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원과 학회가 상호 보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기관 대 기관의 협력사업이 행해질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연구원의 역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 문제는 인구감소에 따른 과소지역의 확대현상입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듯이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1곳(약 5%)이 소멸고위험지역이고, 소멸위험지역은 약 78개(약 34%), 그리고 소멸주의단계지역이 78개(약 3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향후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40%의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이나 인구유입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거대한 환경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변화를 볼 때 행정수요도 단순히 물량적 수요 개념에서 질적 개념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러한 질적 전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물을 생산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AI, IoT 등은 행정수요의 공간적 ·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고 따라서 온라인(On-Line)에 의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생산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이거버먼트(E-Government)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전혀 다른 행정수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전혀 다른 플랫폼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은 범정부적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얼핏 일자리 창출은 기업 내지는 지역경제에 관련된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의 범위가 행정행위 부분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사회는 경제문제에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고 연구원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백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질문 드린 것과 관련하여 연구영역에 있어 향후 연구원에 어떠한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연구수요와 지방정부의 연구수요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필요한 정책대안을 잘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사회의 변화는 그 속도에 있어서나 질적 차원에 있어서 과거 흐름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연구원도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조직 내부의 변화와 외부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변화가 다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 환경 변화는 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기에 조직원의 의견 통일이 수월할 수 있지만, 내부 변화에는 쉽지 않은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차

원에서 연구원의 융복합 협동연구를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 연구원 내에서 또는 연구원 간의 협동연구보다, 국책연구기관, 특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국책연구원들과 융복합 연구를 통해 미래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적극적 연구 거리를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연구원이 정책대응력 및 연구품질을 보다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첫째, 양질의 연구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연구 성과물의 정책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중앙정부+지방정부) 중심의 니즈가 충분히 반영되는 연구와 해외사례의 적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연구원 퇴직 후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책연구원 연금제도를 창설하든가 아니면 공무원연금제도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연구원 위상 제고를 위해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편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연구원은 이제 지난 35년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며 연구원이 중점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국민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에 배어 스며들 수 있는 연구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우리 같이 지역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연구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당부는 아래 두 가지가 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원은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출연 50%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당연직 이사의 경우 각 시 · 도의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직급을 부지사급으로 올리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당연직도 차관급이나 차관보급으로 상향시키고요. 그렇게 되면 재정 확보도 좀 용이해지고 나아가 연구원을 국책연구원급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속으로 편입시키는 문제도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구성이 상향직급으로 조정된다면 아무래도 연구원의 여러 의사결정이 좀 더 무게감이 있을 것이고, 실제 지방의 문제와 연계된 정책대안일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의라든가 실천 단계에서의 여러 절차적 해법 제시가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연구원은 보다 적극적인 국제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지자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나 연구 성과물의 국제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조직기구표에는 국제 분야가 없는데 국토연구원의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CC)'와 같은 기구를 두어 개도국의 지역 및 지방행정에 관한 개발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구원에서도 하고, 지방의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KOICA에서 개도국 초청연수를 할 때 지방행정연구원도 방문하여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대한 안내를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앞으로 이러한 수요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국제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리적 한계 극복하고 세계적 도약 이루길”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약력

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1990. 6~2002. 3 한국일보 기자

2002. 3~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2019. 2~ 제23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구원은 오랜 기간 연구협력의 유대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연구원과 학회 간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며, 향후 양 기관 간 관계 발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구원과는 창립 초기부터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동연구과제 수행, 학회 운영 등에 매우 밀접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마치 형제관계와도 같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방자치 이슈와 현안에 대해 연구원에서는 처방적 대안 모색이라는 현실 문제 해결에 비중을 두어왔다면, 우리 학회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론적 · 정책적 대안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두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맥락과 관점에서 협력이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5년간 연구원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역할해온 것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연구원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데 있어 연구원은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설계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론적 · 실천적 노력을 경주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

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연구원의 역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이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환경의 변화 가운데서도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가장 중대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인구감소입니다.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대응전략과 자치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방안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이후 남북한 연방제 체제하에서의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운용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모색도 필요합니다. 최근의 국내외 정치사회환경의 변화로 앞으로 연구원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의 질문과 관련하여 연구영역에 있어 향후 연구원에 어떠한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와 과소지역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도설계가 필요합니다. 현재도 이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정부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지방정부가 협약제도 등 보다 정치한 제도설계와 시나리오 개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도 역동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 간 관계의 변화에 따른 자치지형에 부응하는 연구과제의 개발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방제하에서의 정부 간 관계와 남북한 지방자치제도 등에 대한 긴 안목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연구원이 정책대응력 및 연구품질을 보다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현재의 조직구조를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 조직을 미래 환경 변화와 연계한 대응팀으로 편성하고, 사회학 · 정치학 · 미래학 · 인구학 · 환경 분야 등 융합연구를 위한 인력채용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행정학과 경제학자 중심으로 연구진이 구성되어 있어서 학제적 · 통섭적 연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 · 도연구원과의 유대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현실적합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청사와 세종청사에 연구원의 분원 또는 센터를 설치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선도하는 연구과제 개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이 서울과 세종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은 데다 정부와 학계 등과의 정보교류의 부족으로 인한 정책과제 개발에도 차질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5주년을 맞는 연구원에 당부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연구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설계와 시스템 구축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지만, 강원도 원주 이전 이후에는 연구역량과 역동적 대응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의 유수한 지방자치연구원과 비견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 재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연구진을 해외 유수 연구원에 보내는 파견근무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최근의 해외 연구동향과 선진 자치제도를 종합해서 소개하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연구 발굴하길”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약력

피츠버그대학 공공국제대학원(Graduate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행정학 박사
2016. 1~현재 서울특별시 분권협의회 위원
2016. 2~현재 한국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장
2016. 9~현재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교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원과 인연을 맺어오셨기 때문에 많은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특별히 어떤 한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지난 20여 년간 늘 제 연구와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처음 방문한 것은 제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1996년에 돌아온 직후입니다. 저는 그때 한국행정연구원에 수석연구원으로 봉직하게 되었는데 첫 연구과제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이 〈시 · 군 통합에 의한 지방행정구역개편의 영향 평가〉였습니다. 당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조석주 박사가 〈도농복합형태시의 운영성과 분석〉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 사정에 밝지 못해 연구과제 수행에 걱정이 많았던 제게 조 박사와 김병국 박사의 자상한 조언은 연구의 틀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주로 지방행정 관련 연구과제를 맡았었고, 또한 행정자치부에 대한 정책자문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제가 몸담았던 한국행정연구원보다 오히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여러 박사들과 협업할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아마도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위원도 한국행정연구원보다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쪽에서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때론 제가 한국행정연구원 OB가 아니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OB가 아닌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서 오랜 기간 다양한 연구사업에 참여해오시면서, 사업내용이나

사업운영방식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과제들은 기본과제와 정부로부터 의뢰받는 정책과제, 일반 용역과제로 크게 구분됩니다. 저는 기본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문위원으로 개별과제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전반적인 자문 의견을 개진하였고, 정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특히 행정안전부의 과제 평가회의를 통해 의견 개진과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일반 용역과제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 유형별로 개선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과제의 경우 사업내용의 선정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큽니다. 기본과제의 경우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지방분권의 큰 틀을 잡아줄 수 있는 키워드를 발굴하고 이슈 팔로어가 아니라 이슈 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과제가 매년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그 내용이 설정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정책과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액션플랜까지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허용하는 과제 수행 기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범위를 다루기보다는 작은 부분이라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가져다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용역과제의 경우 사실 연구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용역과제로 인해 오히려 기본과제에 대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연구원의 35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그 흐름을 함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어떤 역할을 하였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984년에 설립되었으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자치분권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화와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의 2019년 100대 싱크탱크 조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정치사회분야 39개 연구원 중 1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조사에서 43개 연구원 중 17위에 랭크된 것보다는 약간 상승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포함한 지방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행정연구원, 서울연구원과 함께 3대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전문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장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 분야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위상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연구원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이슈를 충분히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연구원의 역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이슈들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원의 핵심적인 연구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그 설립취지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모색 및 장기비전 제시'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전략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천적 연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제도적 측면에 더해서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실제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를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자치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각종 폐단에 더 노출되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앞으로 보다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연구를 발굴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만 상대해왔다면, 이제는 주민을 고객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주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연구원의 향후 발전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원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연구원이 수원에 독립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한 적이 있었지만 불과 2년도 안 되어서 서울 서초동에 청사를 구입하여 재이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주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연구자문위원이나 연구지원인력의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서울 양재동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두고 연구자문회의 등을 서울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원내 연구원들에게는 이동에 따른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구원과 가장 밀접한 협업이 요구되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이동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연구원의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3 장

35주년 기념 직원들의 한마디



강대운

앞으로도 한국의 지방행정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강영주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강정희

창사 35주년을 맞이하여 애쓰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고경훈

연구원 개원 35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로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고광주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와 원칙의 조직문화 창출!



권경철

지방자치 실천의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정진해나아가길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 제게는 삶의 터전이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금창호



연구원 개원 35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35년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

기현주



거대담론보다는 생활 속 주민들과의 동고동락…, 지향점이자 우리의 다짐.

김건위



35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50주년,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김기민



지난 35년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기여해온 지역균형발전, 지방재정 및 자치행정 관련 역량으로 앞으로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남주



배려와 화합으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욱





김도균

지방자치의 정착 ·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도형

어느덧 장년을 맞이했지만, 항상 청년의 정신으로 더욱 도약하는 연구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봉균

개원 3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의 질과 폭을 더욱 향상 및 확장해나아가길 바랍니다.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개원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원 100년까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봅니다.



김상민

연구원 개원 35년을 축하하며, 더 소통하고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김상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천적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파이팅~!

연구원 앞날에 영광을 기원합니다.

김서경



지방행 · 재정 ·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꾸준히 성장해온 우리 연구원! 앞으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하여 자치발전을 위해 쭉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김성주



지속성 있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모두 파이팅입니다.

김우현



개원 35주년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의 길잡이로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김유숙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해온 노력과 이룩한 성취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35년간 지난 발전을 뛰어넘는 위대한 도약을 기대합니다.

김제국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보다 더 많은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됩니다!

김지선





김지수

개원 35주년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지훈

지난 35년처럼 앞으로도 지방행정연구원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김정숙

우주 최고 스타 연구원(研究院, 研究員)이 됩시다!



김한일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김한준

연구원 3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연구의 선두 주자로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호

또 다른 35주년으로 日就月將 하길!

今天不走，明天要跑.

김희우



지방행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깊은 35주년을 축하합니다.

박선영



지금까지의 발전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박소연



35주년을 축하드리며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시대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승규



35주년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박용덕



뜻깊은 연구원 35주년 기념일을 연구원 가족과 함께 자축합니다. 더욱더 전 직원 모두 일치단결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한층 눈부신 연구원으로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박재만





박재희

야구는 선동렬, 농구는 이충희, 행정은 KRILA… 나는? … 나지 뭐. ^^



박종하

직원 모두가 서로서로 지금보다 노력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눈부신 연구원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현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모든 행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축하받고 격려받아, 앞으로도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 더욱 사랑받는 연구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정화

개원 35주년을 축하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원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박지훈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해육

개원 35주년 열렬히 축하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와 함께 뛰어온 우리 연구원, 35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축하합니다.

서정섭



소통과 협력이 연구공동체의 주된 동력이 되길 기원합니다.

손화정



지방자치 구축과 발전에 선도적 기관으로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송윤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일원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파이팅~!

송지영



誠心誠意로 이룬 35년의 연구원 역사가, 初志貫徹하여 70년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두섭



지방자치와 행정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는 연구원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심희철





안혜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5년 동안 지방행정 분야에 있어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구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껏 많은 선배님들의 열정과 노고가 함께 어우러져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뒤를 이어 더욱 노력하는 연구원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규동

하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고, 우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네. 내 인생에서 당신과의 만남은 큰 기쁨이며 행복이네. 앞으로도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자.



여효성

그간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연구원의 35주년 이정표를 축하하며, 그동안의 전통을 이어나가 더욱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원혜정

어려운 세월을 이겨낸 연구원 35주년, 앞으로도 노력하여 밝은 미래로 나갑시다



유순기

개원 35주년을 맞이하기까지는 전임 임직원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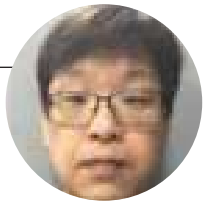


윤성일

우리나라 지방자치시대 도래에 일조한 우리 연구원,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설립 35주년을 맞이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구성원임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섭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연구원의 35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효



35년에 귀가 열리고 지방분권에 길이 열린다. 앞으로 35년이 더 기대되는 기관.
추카추카!

이삼주



K게 웃어 주세요. 개원 35주년 기쁘지 아니한가요!
RI더들이 가득한 研究院 자랑스럽지 아니한가요!
LA일락 꽃향기처럼 온 세상 행복이 기대되지 아니한가요!

이용애



35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이장욱



개원 35주년을 축하하며, 연구원이 시대를 선도하는 리더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재용





이지형

앞으로의 35년은 연구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혜선

Best Qualities in Social Accountability, Training & DB Hub, Assets and Reserch.



임민정

개원 35주년을 축하하며, 국민의 희망과 행복을 키우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장순옥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동수

더 많은 성과를 이루시고 더욱 큰 영광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35살이 될 때까지 함께한 분들에게 감사를, 앞으로 35살을 더 만들어주실 분들에게 지혜를.

연구원 구성원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방행정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며 포용적이고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성애



연구원의 35주년을 맞이해 그간 이룩한 많은 업적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길 기원합니다.

조현민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행정 연구기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35년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주재복



다가온 35년, 다가올 35년을 향해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지석준



연구원 35주년…, 내가 입사한 지 33년…. 33년을 연구원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개원 35주년을 축하합니다. 연구원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새 길을 여는 연구기관이 되길 기원합니다.

최대환



35년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온 KRILA! 21세기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연구기관이 되길 기원합니다.

최성원





최인수

연구원 35년의 역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혁신하고 혁신하라!



최지민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한 35년의 시간,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더 큰 발자취를 남기길 소망합니다!



탁영지

우리나라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대표하는 우리 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합니다!



함윤주

오늘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있기까지 노력해오신 선배님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홍근석

연구원 35주년을 축하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연구를 보다 많이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수정

100년의 깊은 역사가 만들어질 때까지, 연구원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35년간 지방자치를 위한 연구원의 발자취에 존경을 표하며 선배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명성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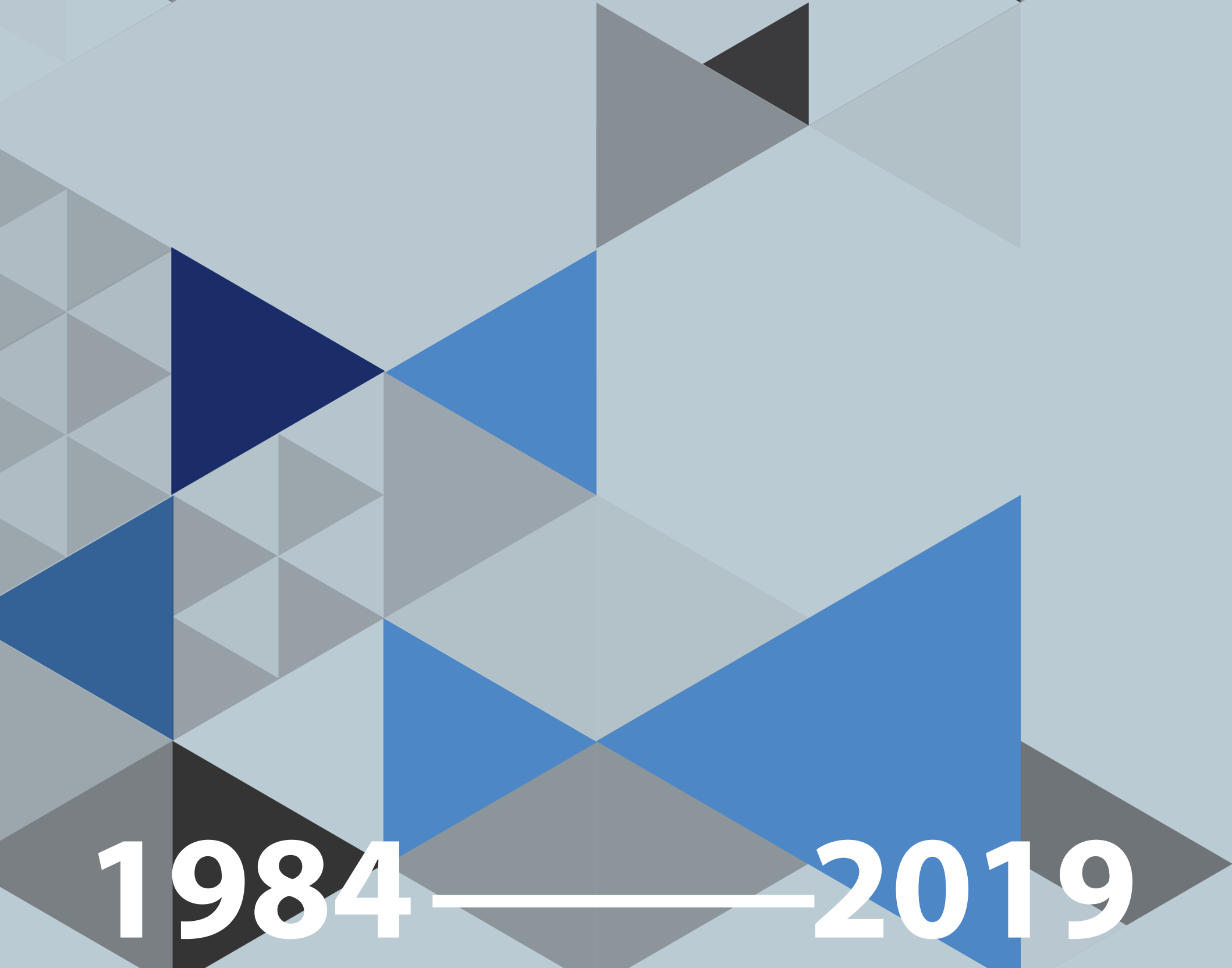
황재민



부록

자료로 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

- 일반현황
- 직급명칭 변천과정
- 역대 원장
- 역대 연구자문위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관 및 직원 포상
- COP 활동현황
- 발간자료 목록
- MOU 현황
- 연구과제 목록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과제 목록
- 연표


1984——2019

일반현황

설립 취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4년 9월 시·도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 발의·출연하여 설립하였다.

■ 설립근거 관련법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관 련 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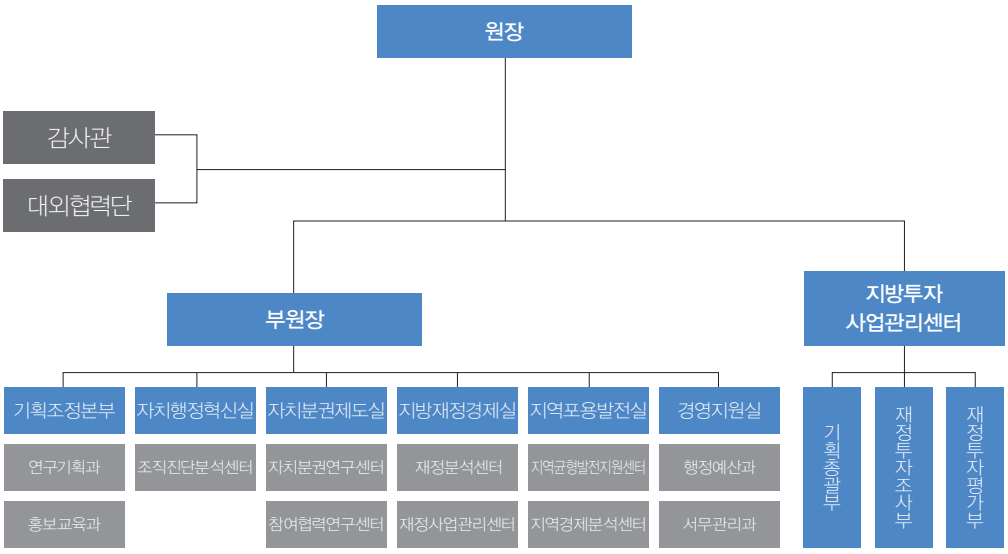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기능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모색 및 장기비전 제시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훈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조직도



직원 현황(2019년 현재)

(단위: 명)

정원	현원	원장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투자분석직
102	83	1	49	17	1	15

시설 현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구분	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비 고
원주 본원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 (반곡동)	3,874㎡	1,655㎡	지하 2층 지상 3층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구분	소재지	연면적	사용면적	비 고
서초 분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7길 16 (서초동, 파크빌딩) 2층	17.225㎡	1.996㎡	임차

직급명칭 변천과정

구 분	직급명칭					
	1994. 1. 이전		2000. 1. 1	2002. 12. 5	2004. 4. 23	2009. 2. 27
원장	원 장		–			
연구직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원		–			
관리직	사무원	사무국장		행정실장		행정실장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4급
	전산원	2급				5급–가
		3급				5급–나
		4급				
	사서원	2급				2급
		3급				3급
		4급				4급
	기능원	1종				2급
		2종				3급
						4급
전문직	–				전문원가급	가급
	–				전문원나급	나급
	–				전문원다급	다급
투자분석직						

구 분	직급명칭					
	2014. 12. 18	2015. 2. 24	2017. 12. 15	2018. 4. 18	2019. 10. 18	
연구직	선임연구원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수석연구원				전문연구원	선임전문연구원
						책임전문연구원
	연구원					전문연구원
사무원 (행정직)	1급		1급		사무원 사서원 전산원	1급
	2급		2급			2급
	3급		3급			3급
	4급		4급			4급
	5급-가		5급-가			5급-가
	5급-나		5급-나			5급-나
			5급-다			5급-다
전문직	가급				전문원	가급
	나급					나급
	다급					다급
투자분석직		선임전문위원		선임전문위원	투자분석원	선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분석원		전문분석원		전문분석원
				분석원		분석원

역대 원장

구분			재임기간	학력	경력
1대	장병구		1984. 9. 5~ 1984. 10. 9	서울대 행정대학원	대구시장 지역정보화지원재단 이사장
2대	이창수		1984. 11. 5~ 1985. 4. 11	서울대 법과대학	대구시장 새마을중앙연수원 원장
3대 4대	전영춘		1985. 4. 12~ 1989. 4. 11	서울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인천시장 지방행정연수원 원장
5대	손재식		1989. 4. 12~ 1990. 8. 19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토통일원 장관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6대	김양배		1990. 8. 20~ 1991. 9. 5	서울대 정치학과	보건복지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구분			재임기간	학력	경력
7대	김안제		1992. 7. 21~ 1994. 7. 20	미국 신시내티대 대학원 지역경제학(박사)	대통령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장 신행정수도건설추진 자문위원회 위원장
8대	정문화		1994. 10. 5~ 1996. 1. 12	한양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서울대 행정학과	부산직할시 시장 제15대 국회의원
9대	임경호		1996. 1. 13~ 1998. 4. 9	서울대 행정대학원 단국대 행정학(박사)	경기도지사 경기개발연구원 초대 원장
10대	이달곤		1998. 4. 10~ 2000. 4. 9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정책학(박사)	제18대 국회의원 안전행정부 장관
11대	박우서		2000. 7. 10~ 2002. 7. 31	미국 뉴욕대 대학원 도시행정 (박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지도교수

구분			재임기간	학력	경력
12대	김흥래		2002. 8. 1~ 2005. 7. 31	미국 뉴저지 주립대 정책학 (석사)	행정자치부 차관 목포시장
13대	김주현		2005. 7. 1~ 2008. 7. 22	중앙대 행정학(박사)	독립기념관 관장 행정자치부 차관
14대	유정석		2008. 8. 11~ 2010. 1. 5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 국제경영학 경영학(박사)	해양수산부 차관 국무총리실 총괄조정관
15대	한표환		2010. 1. 5~ 2013. 1. 5	UNI. of California, Irvine (사회생태학 박사)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
16대	이승종		2013. 3. 4~ 2015. 3. 4	노스웨스턴대 대학원 정치학(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

구분			재임기간	학력	경력
17대	하혜수		2015. 4. 13~ 2017. 5. 14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
18대	윤태범		2018. 2.~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정부혁신조직 분과위원장

역대 연구자문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1984. 9. 5~1986. 9. 4
노융희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안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정세욱	명지대 교수	
박문옥	단국대 교수	
최창호	건국대 교수	
이문재	경희대 교수	
김보현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원장	1985. 8. 7~1988. 9. 4
박문옥	단국대 교수	1986. 9. 5~1988. 9. 4
이문재	경희대 교수	
이현재	서울대 교수	
서원우	서울대 교수	
김안제	서울대 교수	
노융희	서울대 교수	
박동서	서울대 교수	
최창호	건국대 교수	
김안제	서울대 교수	1988. 9. 5~1990. 9. 4
노융희	서울대 교수	
박동서	서울대 교수	
서원우	서울대 교수	
박문옥	단국대 교수	
이문재	경희대 교수	
최창호	건국대 교수	
황명찬	건국대 교수	1988. 11. 28~1990. 9. 4
이상희	토지개발공사 사장	1989. 11. 9~1990. 9. 4
김보현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원장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1990. 7. 19~1992. 10. 22
손수익		
김용래		
김원	서울시립대 교수	1990. 9. 5~1992. 10. 22
박윤흔	경희대 교수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정세욱	경희대 교수	1990. 9. 5~1992. 10. 22
한영환	경희대 교수	
서원우	서울대 교수	
최창호	건국대 교수	
박문옥	단국대 교수	
이문재	경희대 교수	
김안제	서울대 교수	
노융희	서울대 교수	
박동서	서울대 교수	
황명찬	건국대 교수	1990. 12. 8~1992. 10. 22
박동서	서울대 교수	1992. 10. 23~1994. 10. 22
노융희	서울대 교수	
김보현	백제문화개발연구원	
박윤흔	경희대 교수	
장병구	지방자치경영협회 회장	
최창호	건국대 교수	
김광웅	서울대 교수	
김수학	새마을중앙협의회 회장	
이창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원장	
조창현	한양대 교수	
유훈	서울대 교수	
김동건	서울대 교수	
김수근	아주대 교수	
박종기	인하대 교수	
조정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권태준	서울대 교수	
김원	서울시립대 교수	
안충영	중앙대 교수	
이정전	서울대 교수	
황명찬	건국대 교수	1993. 1. 14~1994. 11. 10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김상규	동국대 교수	1993. 10. 14~1994. 11. 10
김의원	경희대 대학원장	
선우중호	서울대 교수	
이규환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이원환	연세대학교 교수	
박동서	前 서울대 교수	1994. 11. 11~1996. 11. 10
노융희	前 서울대 교수	
김보현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원장	
김안제	서울대 교수	
박윤흔	경희대 교수	
장병구	지방자치 경영협회장	
최창호	건국대 교수 회장	
김광웅	서울대 교수	
김수학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이창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원장	
조창현	한양대 교수	
유훈	서울대 교수	
김동건	서울대 교수	
김수근	아주대 교수	
박종기	인하대 교수	
조정제	KDI 연구위원	
권태준	서울대 교수	
김원	서울시립대 교수	
안충영	중앙대 교수	
이정전	서울대 교수	
황명찬	건국대 교수	
이원환	연세대 교수	
김상규	동국대 교수	
김의원	경희대 대학원장	
선우중호	서울대 교수	
이규환	지방행정연구원 교수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김동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1999. 5. 18~2001. 5. 17
김영기	경상대 교수	
김홍명	조선대 총장	
박동수	전주대 교수	
박찬석	경북대 총장	
임길진	KDI 국제대학원 원장	
조창현	한양대 부총장	
곽태원	서강대 교수	
하태권	서울산업대 교수	
정문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영달	국민회의 국회의원	
류자효	SBS 해설위원	
고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흥래	행정자치부 차관보	
김수진	충청남도 부지사	
권경석	경상남도 부지사	
유일호	조세연구원 원장	
미셸스	한스자이델재단 서울사무소 소장	
강상주	서귀포 시장	1999. 6. 15~2001. 5. 17
김종웅	송파구의회 의장	
심기섭	강릉시 시장	
이계석	경기도의회 의장	
이시종	충주시 시장	
전진	부산시 부시장	
정장식	포항시 시장	
노융희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2003. 2. 11~2005. 2. 10
이승종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진광	경원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2003. 5. 18~2005. 5. 17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2003. 5. 18~2005. 5. 17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김미경	상명대 경상행정학부 교수	
김현구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노화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수근	아주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종순	건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소진광	경원대 교수	
허재완	중앙대 도시 및 지역경제학과 교수	
박우서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2006. 3. 1~2008. 2. 29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오제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기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차의환	청와대 혁신비서관	
하태권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구정모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박재완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영진	계명대 교수	
김대영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기획지원부장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	
이성근	영남대 행정학부 교수	
권혁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2007. 5. 9~2007. 9
정남준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장	2007. 5. 9~2008. 2. 29
박성중	서울시 서초구 구청장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박영순	경기도 구리시 시장	2007. 5. 9~2008. 2. 29
김순은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2008. 3. 1~2010. 2. 28
남궁근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박우서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백운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부 교수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문병근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완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이삼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경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박성중	서울시 서초구 구청장	
박영순	경기도 구리시 시장	
이성근	영남대 행정학부 교수	
정철모	전북대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교수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2009. 3. 1~2010. 2. 28
이원호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 원장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장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박종화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김광순	한국왓슨와이어트 지사장	
표인수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	
谷 史郎(Tani Shi Ro)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소장	
박우서	연세대 교수	2010. 3. 1~2012. 2. 29
이기우	인하대 교수	
김순은	동의대 교수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이원호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2010. 3. 1~2012. 2. 29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 원장	
윤석완	전북대 교수	
문병근	부산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교수	
유경문	서경대 교수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장	
이재은	경기대 교수	
이성근	영남대 교수	
박성중	서울시 서초구 구청장	
박영순	경기도 구리시 시장	
정철모	전주대 교수	
박종화	서울대 교수	
김광순	한국왓슨와이어트 지사장	
표인수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	
谷 史郎(Tani Shi Ro)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소장	
이규환	중앙대 교수	2012. 3. 1~2013. 12. 31
최영출	충북대 교수	
심익섭	동국대 교수	
최병대	한양대 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	
윤영진	계명대 교수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완규	중앙대 교수	
손희준	청주대 교수	
주만수	한양대 교수	
김성배	숭실대 교수	
김의준	서울대 교수	
소진광	가천대 교수	
김혜천	목원대 교수	
임경수	성결대 교수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	2014. 1. 2~2015. 12. 31
오영균	수원대 교수	
유재원	한양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최영출	충북대 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손희준	청주대 교수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	
윤석완	전북대 교수	
김성배	숭실대 교수	
박인권	서울시립대 교수	
배준구	경성대 교수	
소진광	가천대 교수	
신혜란	서울대 교수	
임경수	성결대 교수	
박재영	서울대 교수	
이주석	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권경득	선문대 교수	2016. 1. 1~2017. 12. 31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김철회	한남대 교수	
박재영	광주대 부총장	
유재원	한양대 교수	
이종수	연세대 교수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정홍상	경북대 교수	
최승범	한경대 교수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2016. 1. 1~2017. 12. 31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손희준	청주대 교수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	
이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주만수	한양대 교수	
김성배	숭실대 교수	
김성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 서울대 명예교수	
박인권	서울시립대 교수	
배준구	경성대 교수	
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 가천대 교수	
신혜란	서울대 교수	
이원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	
권경득	선문대 교수	2018. 2. 21~2019. 12. 31
김철회	한남대 교수	
박재영	광주대 부총장	
유재원	한양대 교수	
이종수	연세대 교수	
정홍상	경북대 교수	
최승범	한경대 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	
박기관	상지대 교수	
소순창	건국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최진혁	충남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2018. 2. 21~2019. 12. 31
손희준	청주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	
이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곽채기	동국대 교수	
김태영	경희대 교수	
배득종	연세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김성배	숭실대 교수	
김성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신혜란	서울대 교수	
이원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훈	대구대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세종대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관 및 직원 포상

1. 기관 대외 포상

일자	훈격	내용
1987. 10. 22	한국은행총재	저축우수기관 표창
1996. 7. 1	내무부장관	지방자치우수기관표창
2002. 4. 10	기획예산처장관	2001년 경영혁신 우수기관 표창
2004. 6. 30	기획예산처장관	2003년 경영혁신 우수기관 표창
2018. 12. 31	강원도지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홍보와 성공적 개최 기념 공로 감사패
2019. 1. 5	서울특별시장	2018 서울국제갈등포럼 참여 성공개최 공로 표창

2. 직원 대외 포상

■ 훈장

일자	직급	성명	훈격	내용
2016. 10. 27	선임연구위원	임성일	국민훈장 목련장	지방자치발전(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2017. 10. 26	선임연구위원	김선기	국민훈장 목련장	지방자치발전(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2019. 10. 30	선임연구위원	서정섭	국민훈장 석류장	지방자치발전(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 포장

일자	직급	성명	훈격	내용
2013. 10. 29	선임연구위원	이상용	국민포장	지방자치발전(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2015. 10. 29	선임연구위원	김병국	국민포장	지방자치발전(제3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 대통령표창

일자	직급	성명	훈격	내용
1999. 7. 27	연구위원	임성일	대통령	지방재정운영유공
2001. 12. 31	선임연구위원	이상용	대통령	지방재정운영
2002. 3. 6	수석연구원	황아란	대통령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유공
2002. 6. 7	연구위원(팀장)	한표환	대통령	국민포장
2002. 11. 27	수석연구원	김성호	대통령	지방이양추진유공
2004. 9. 7	연구위원	김병국	대통령	개원20주년기념유공

일자	직급	성명	훈격	내용
2004. 11. 3	연구위원	박희정	대통령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유공
2009. 9. 7	선임연구위원	임성일	대통령	개원25주년유공
2015. 10. 29	연구위원	조기현	대통령	지방자치발전(제3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2016. 10. 27	연구위원	김현호	대통령	지방자치발전(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2018. 10. 30	연구위원	안영훈	대통령	지방자치발전(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 국무총리표창

일자	직급	성명	훈격	내용
2000. 7. 3	수석연구원	서정섭	국무총리	지방재정운용
2001. 12. 31	수석연구원	이효	국무총리	지방재정운영
2002. 4. 11	연구원	조기현	국무총리	행정서비스헌장유공
2002. 12. 31	수석연구원	이창균	국무총리	2002 지방재정운영유공
2003. 3. 18	수석연구원	금창호	국무총리	행정서비스헌장유공
2004. 9. 7	연구위원	김선기	국무총리	개원20주년기념유공
	3급 사무원	유순기		
2005. 11. 7	수석연구원	이병기	국무총리	2004 시·도국정시책합동평가유공
2007. 11. 14	연구위원	이영희	국무총리	표창장(정부혁신참여)
2009. 9. 7	선임연구위원	이상용	국무총리	개원25주년유공
2013. 2. 15	수석연구원	전대욱	국무총리	정부업무 평가 추진유공
2016.12.21	연구위원	신두섭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유공
2018. 12. 31	선임연구위원	이삼주	국무총리	지방재정발전유공

■ 장관표창

일자	직급	성명	훈격	내용
1987. 12. 31	연구원	김병국	행정자치부장관	내무행정유공
1988. 12. 31	연구원	오희환	행정자치부장관	내무행정유공
1989. 12. 31	연구원	이수장	행정자치부장관	내무행정유공
1990. 12. 31	연구원	이수장	행정자치부장관	내무행정유공
	2급 사무원	서용주		
1991. 12. 31	수석연구원	이상용	행정자치부장관	내무행정유공
1993. 12. 31	책임연구원	한표환	행정자치부장관	내무행정유공

일자	직급	성명	훈격	내용
1994. 10. 25	수석연구원	김선기	행정자치부장관	내무행정유공
	3급 사무원	최대환		
1995. 12. 30	책임연구원	박희정	행정자치부장관	내무행정유공
	4급 사무원	유순기		
1996. 7. 1	연구원	서정섭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연구유공
1996. 12. 31	수석연구원	임성일	행정자치부장관	내무행정유공
	3급 사서원	박길성		
1997. 12. 31	책임연구원	이효	행정자치부장관	내무행정유공
	기능원 1종	김흥영		
1998. 12. 31	수석연구원	김선기	행정자치부장관	내무행정유공
	연구원	이삼주		
	2급 사무원	전한규		
1999. 12. 31	책임연구원	안영훈	행정자치부장관	내무행정유공
	책임연구원	라휘문		
	4급 사무원	김희우		
2000. 5. 31	수석연구원	라휘문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서비스제도개선유공
	수석연구원	황아란		
	연구원	금창호		
2000. 12. 26	연구위원	한표환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업무발전유공
	수석연구원	조석주		
	3급 전산원	심정주		
2001. 12. 31	수석연구원	권오혁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업무발전유공
	연구원	장은주		
	기능원 1종	김선혜		
	수석연구원	라휘문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서비스헌장 자문위원
	3급 사무원	유순기	행정자치부장관	2001 행정자치부 정기감사유공
2002. 4. 10	연구위원	이영희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유공
	수석연구원	조석주		
	수석연구원	김홍석		
	4급 상당	김성주		

일자	직급	성명	훈격	내용
2002. 12. 31	4급 전산원	이용애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이양추진유공
	수석연구원	김성호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제도발전유공
	수석연구원	권오철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업무발전유공
	수석연구원	김대영		
	4급사무원	정은숙		
2003. 3. 18	수석연구원	한부영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유공
	수석연구원	이삼주		
	수석연구원	김태영		
	객원연구원	김영희		
	객원연구원	고승희		
2003. 12. 31	연구위원	김선기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업무발전유공
	수석연구원	김필두		
	3급 사무원	최대환		
2004. 5. 4	수석연구원	김대영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유공
	수석연구원	조석주		
	계약직(4급 상당)	김성주		
	사무보조원	김상우		
2004. 9. 7	연구위원	임성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원20주년기념 유공
	수석연구원	안영훈		
	기능원	황동철		
2004. 12. 31	수석연구원	박해육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업무발전유공
	수석연구원	이병기		
2005. 5. 10	수석연구원	주재복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유공
	수석연구원	조기현		
2005. 12. 30	수석연구원	김현호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업무발전유공
	4급 사서원	이은아		
2006. 8. 21	4급 사무원	김인경	행정안전부장관	2006 행안부 정기감사 유공
2006. 12. 31	수석연구원	금창호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업무발전유공
	3급사무원	김희우		
	4급사무원	김상우	행정안전부장관	살기좋은지역만들기지원유공
2007. 3. 30	수석연구원	조기현	행정안전부장관	2006 지방재정발전 유공
2008. 3. 31	수석연구원	하능식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분석유공

일자	직급	성명	훈격	내용
2008. 12. 31	4급사무원	김상우	행정안전부장관	2008 행정안전부 정기감사유공
	수석연구원	주재복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업무발전유공
	수석연구원	류영아		
	4급사무원	안민철		
2009. 9. 7	연구위원	김필두	행정안전부장관	개원25주년기념 유공
	수석연구원	신두섭		
	2급사무원	최대환		
2009. 12. 31	수석연구원	김건위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업무발전유공
	수석연구원	오은주		
	3급사무원	김인경		
2010. 12. 31	연구위원	한부영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업무발전유공
	수석연구원	박해육		
	5급사무원-나	김우현		
2011. 12. 30	선임연구위원	김병국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업무발전유공
	선임연구위원	김선기		
	연구위원	이효		
2011. 12. 30	3급사무원	이용애	행정안전부장관	2011 행정안전부 정기감사유공
2012. 12. 31	수석연구원	박진경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업무발전유공
	4급사무원	김상우		
2013. 2. 15	연구원	김성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발전유공
2013. 10. 29	연구위원	한부영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발전(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2013. 12. 31	선임연구위원	금창호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 업무발전유공
	수석연구원	박승규		
	3급사서원	이은아		
	연구위원	이효	안전행정부장관	지방회계운영발전유공
	수석연구원	신두섭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재정운영발전유공
	4급사무원	권경철		
2014. 12. 31	연구위원	주재복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업무발전유공
	연구위원	이소영		
	2급사무원	전한규		
2014. 12. 31	선임연구위원	서정섭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운영발전유공
	2급사무원	유순기		
	3급사무원	김희우	행정자치부장관	2014 행정자치부 자체감사유공
	4급사무원	이혜선		

일자	직급	성명	훈격	내용
2015. 12. 31	4급사무원	김유숙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업무발전유공
	연구위원	박해육	행정자치부장관	자치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유공
	수석연구원	이희재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발전유공
	수석연구원	손화정		
2016. 12. 31	연구원	김도형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업무발전유공
	수석연구원	윤영근	행정자치부장관	자치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유공
	선임연구위원	이삼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발전유공
	수석연구원	김대욱		
	4급사무원	김우현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업무발전 유공
2017. 2. 24	3급사무원	김상우	행정자치부장관	원주 신청사 건립이전유공
2017. 12. 31	수석연구원	전대욱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발전유공
	전문직다급	탁영지	행정안전부장관	2017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유공
	연구위원	주재복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업무발전유공
	4급사무원	기현주		
2018. 12. 31	연구위원	조기현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발전유공
	수석연구원	김상기		
	수석연구원	강영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업무발전유공
	수석연구원	이제연		
	2급사무원	이용애		
2019. 12. 31	부연구위원	여효성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발전유공
	부연구위원	송지영		
	부연구위원	김봉균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업무유공
	연구위원	김필두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업무발전유공
	부연구위원	김상민		
	부연구위원	함윤주		

■ 광역시·도표창

일자	직급	성명	훈격	내용
2005. 6. 13	연구위원	김병국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공로패(민선지방자치 10주년)
2017. 2. 24	관리소장	박종하	강원도지사	원주 신청사 건립이전

COP 활동현황

■ 2007년

구분	명칭	목적	운영장	회원수
계	7개			
연구회	STATCRAFT	통계프로그램과 기법 학습	하능식	8명
동호회	ARTCRAFT	문화공연, 공통적 취미생활 공유	강인성	8명
	KRILA산악회	심신단련과 연구원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	한표환	20명
	다습다락	다양한 분야 학습, 경험	이용애	6명
	사진동우회	사진예술 발전 및 친목 도모	김희우	9명
	여행동아리	건전한 여가활동 및 친목 도모	최대환	5명
	향토자원연구회	향토자원에 대한 현실감각 향상 및 친목 도모	고경훈	12명

■ 2008년

구분	명칭	목적	운영장	회원수
계	6개			
연구회	STATCRAFT	통계프로그램과 기법 학습	하능식	6명
	행정사례연구회	조직 및 인사 등과 관련한 각종 원리, 제도, 사례 등에 대한 학습	박지환	8명
동호회	ARTCRAFT	문화공연, 공통적 취미생활 공유	강인성	13명
	KRILA산악회	심신단련과 연구원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	한표환	12명
	사진동우회	사진예술 발전 및 친목 도모	김희우	10명
	여행동아리	건전한 여가활동 및 친목 도모	최대환	8명

■ 2009년

구분	명칭	목적	운영장	회원수
계	3개			
동호회	예사랑	연구원 내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체험함	이상묵	11명
	KRILA PHOTO CLUB	직원상호 간에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사진예술의 발전에 기여함	김희우	14명
	KRILA 산사랑	등산을 통한 심신단련 및 조직원의 화합과 단결 도모	조석주	13명

■ 2010년

구분	명칭	목적	운영장	회원수
계	4개			
동호회	KRILA 사진 동우회	직원 상호 간에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사진예술의 발전에 기여함	김희우	12명
	예사랑	연구원 내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연구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목적	신두섭	16명
	KRILA 산악회	등산을 통한 심신단련 및 조직원의 화합 도모	조석주	18명
	국내외 여행 동아리	직원 상호 간에 친목 도모와 건전한 여가활동	최대환	8명

■ 2011년

구분	명칭	목적	운영장	회원수
계	5개			
동호회	낙후 지역탐방	직원 상호 간에 친목 도모와 낙후지역 탐방	조기현	5명
	다습다락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회원 스스로 체험과 참여 의식을 함양하여 조직생활의 활력을 이끌어 내고 직원 상호 간의 이해와 친목을 도모	주재복	9명
	답사와 르뽀	평소 방문하고 싶었으나 개인적으로 방문하기 힘들거나 혹은 엄두가 안 나던 시설 및 장소 등을 선정하여 답사 및 간단한 취재, 소감 등을 나눔으로써 견문과 창의성을 넓히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	전대욱	10명
	사진 동우회	직원 상호 간에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사진예술의 발전에 기여함	김희우	13명
	예사랑	연구원 내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연구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목적	신두섭	13명

■ 2012년

구분	명칭	목적	운영장	회원수
계	7개			
동호회	KRILA 산악회	직원 개인의 체력 증진 및 직원 간 화합 도모	유순기	9명
	KRILA 사진 동우회	사진예술 증진 및 직원 간 화합 도모	김희우	7명
	예사랑	우리 옛 것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여 개인의 교양을 높이고자 함	안영훈	14명
	탁구 동우회	소프트한 체력단련 및 유대 강화	서정섭	10명
	프레미엄 잉글리쉬	고급 영어 청취, 발표, 라이팅 능력 습득 이를 통한 국제회의 참여 등 해외 대응력 향상	안영훈	5명
	쭝구어반	중국 관련 어학, 동정기사 스크랩 등 중국관련 능력 습득 및 대응력 향상	최인수	4명
	재난안전 정책 연구회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위기관리 등과 관련된 정책개선을 위한 연구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 연구학습 동아리	안영훈	4명

■ 2013년

구분	명칭	목적	운영장	회원수
계	4개			
동호회	다습다락	회원의 재능을 회원 간 상호 기부 및 공유	주재복	11명
	답사와 르뽀	평소 방문하고 싶던 시설 및 장소 등을 선정하여 답사 및 간단한 취재, 소감 등을 나눔으로써 견문과 창의성을 넓히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	고경훈	7명
	역사문화 탐방	역사문화탐방	김희우	8명
	예사랑	우리 옛것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여 개인의 교양을 높이고자 함	이희재	6명

■ 2014년

구분	명칭	목적	운영장	회원수
계	3개			
동호회	혁신도시 이전과 적응전략 및 사회봉사 방안 연구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대응전략 토론 논의 등	최대환	5명
	인문사회 독서 토론회	인문사회(교양 포함) 주요 저작에 대한 독서 및 토론	이은아	5명
	일본어 학습	일본어 학습 및 논문 및 잡지 해석	이희재	6명

■ 2015년

구분	명칭	목적	운영장	회원수
계	2개			
동호회	인문사회 독서 토론회	인문사회(교양 포함) 주요 저작에 대한 독서 및 토론	권오철	5명
	사회적경제와 마을회복력 증진을 위한 학습 모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지역연대경제의 의미와 마을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방안들을 학습	최인수	5명

■ 2016년

구분	명칭	목적	운영장	회원수
계	6개			
동호회	다습다락	회원의 재능을 회원 간 상호 기부 및 공유	주재복	5명
	문화산책	연구원 인근 공연장,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및 관람	함윤주	9명
	문화예술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토론, 지역 문화예술 관련 답사, 향토자원 등 조사	고경훈	3명
	탁구볼링	탁구 및 볼링 등 기초체력과 친목 도모, 직원 상호 간의 교류 및 단합 도모	김희우	7명
	파워워킹	파워워킹을 통한 체력 증진	이은아	5명
	힐링요가	힐링요가, 빈야사요가, 필라테스 등을 통한 체력단련	박진경	7명

■ 2017년

구분	명칭	목적	운영장	회원수
계	5개			
동호회	독서 토론과 지식공유	분야별 인문사회, 교양, 전문도서 구독과 지식 공유 습득 지식과 업무 연계를 통한 융합적 사고능력 배양	기현주	8명
	문화산책	공동체의식의 확대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예술 공연(영화, 연극 외) 및 미술관 관람 등 문화 체험 활동 수행	김기민	8명
	생활체육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여러 가지 생활체육활동 수행	이효	9명
	탁구볼링	탁구 및 볼링 등 기초체력과 친목 도모, 직원 상호 간의 교류 및 단합 도모	김상우	7명
	나누미소	아동보육, 양육시설 후원 및 자원봉사(재능기부)	탁영지	8명

■ 2018년

구분	명칭	목적	운영장	회원수
계	6개			
동호회	생활 스포츠	체력단련과 회원 간의 화합 도모	김상우	10명
	시네마 천국	공동체 의식의 확대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예술 공연(영화) 등의 문화체험활동	김우현	6명
	문화산책	공동체 의식의 확대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예술 공연(영화, 연극 외) 및 미술관 관람 등 문화 체험 활동 수행	전성애	11명
	생활체육	건강 증진 및 친목 도모를 통한 체육활동	김남주	9명
	소망주기	독거노인 봉사활동	김희우	8명
	행복공감	봉사활동	김우현	8명

■ 2019년

구분	명칭	목적	운영장	회원수
계	11개			
동호회	문화산책	공동체 의식의 확대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예술 공연(영화, 연극 외) 및 미술관 관람 등 문화 체험 활동 수행	전성애	14명
	문화탐방	서울 곳곳의 이색 명소 탐방	김남주	11명
	재정연구실 영화이야기	영화감상·토론 및 친목 도모	윤태섭	9명
	시네마천국	공동체 의식의 확대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예술 공연(영화) 등의 문화체험활동	김우현	10명
	씨네에듀	영화 관람을 통한 사회 이해 및 토론, 관점 및 시각 공유	임태경	8명
	생활체육	체력단련과 회원 간의 화합 도모	지석준	7명
	지역자원 독서토론과 현장탐방	연구원 인근 지역자원 지식 습득 및 융합적 사고능력 배양	신두섭	9명
	연구와 삶	관심 연구주제 공유 및 토론, 친목 도모	최지민	9명
	인문사회 과학 고전읽기	인문, 고전 서적 읽기를 통한 행정 및 정책문제 진단, 해법 모색	박재희	11명
	행복공감	사회봉사	김우현	6명
	소망주기	사회봉사	김희우	11명

발간자료 목록

1. 지방행정연구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09. 6 제23권 제2호 (통권 제77호)	기고논문	제주특별자치도 시·군통합의 성과평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성과분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의 성과와 과제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메커니즘과 구조적 맥락
		지방소비세 도입의 논리와 한계, 그리고 극복방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분석
		지방정부 위원회제도 개선방안
		중국의 행정감독과 행정문책제도
2009. 9 제23권 제3호 (통권 제78호)	기고논문	한국의 분권과 자치 : 발전론적 해석
		지방자치법 60년 회고와 과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활용의 영향요인 분석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조직시민행동 선행요인들의 영향관계 분석 : 서울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주민소환제의 집행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2009. 12 제23권 제4호 (통권 제79호)	기고논문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방향 : 전략분석 게임론적 시각에서
		구청공무원 윤리적 판단의 성별 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다면평가 운영에 대한 공무원 인식도 실증연구 : 경상북도청을 중심으로
		성과관리의 공정성 인식이 도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유용성 인식과 대응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공갈등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 사례
		주민소환 청구주체와 소환대상의 활동사례 비교연구
		민원서류 발급수요 감축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민원인 현장인터뷰 자료분석을 기초로
		정책이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융정책과 자본시장제도화를 중심으로
		세계화 시대의 지역 브랜드 : "표현"의 세계화, "의미"의 지방화
		System Dynamics를 활용한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동태적 효과 분석
2010. 3 제24권 제1호 (통권 제80호)	기획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 비교론적 시각에서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과 정보제공 효과
	기고논문	동사무소행정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 대기시간을 중심으로
		행정구역개편과정에 관한 다중합리모형 분석 : 삼려(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대도시권 거버넌스 비교연구 : 미국 미니애폴리스와 피츠버그의 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0. 3 제24권 제1호 (통권 제80호)	기고논문	미국 플로리다주 지방정부의 정치, 제도, 도시개발에 관한 공간회귀분석연구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GRDP(지역 내 총생산) 추정을 통한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분석
		발생기준, 복식부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재무비율의 정규분포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생산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 상수도 생산원가 비교 분석 : 광역상수원과 자체생산 간의 비교
		국고보조금의 분권교부세 전환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2010. 6 제24권 제2호 (통권 제81호)	기고논문	정책집행조직에 의한 정책변동 유형 분석 : 서울특별시 조례산출과정에 대한 EAI 모형의 적용
		기관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 경영평가지표 및 등급부여 개선방안의 제시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은평구 15개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조직지원인식 및 정서적 안녕감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Mediating regression model을 이용한 일선 관료들의 정서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국내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분석 : 집적경제에 대한 실증연구 중심으로
2010. 9 제24권 제3호 (통권 제82호)	기획논문	"장소의 번영"과 "사람의 번영" : 두 접근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론과 사례
		향토산업의 선정과정과 선정기준의 영향력 분석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를 사례로
	기고논문	행정구역 개편의 학습 정보로서 시·군 통합의 효과 분석 :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대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중심으로
		시계열분석과 패널분석을 통한 지역 간 소득 유출효과 및 세출 외부효과 분석
		한국과 일본의 지역적 불균형 현황 및 지역정책 연구 :수도권 비대화와 도주제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출을 위한 협력적 서비스전달기제의 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니가타현 이와후네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소방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담배에 대한 과세 필요성과 그 실행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 : 의회, 위생, 여성,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Q방법론을 활용한 서울시 미래 대기환경 위험요인 도출 및 정책과제 분석
2010. 12 제24권 제4호 (통권 제83호)	기획논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론적 검토
		지방행정체제 개편 : 미미한 성과 그리고 기나긴 여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 발상의 전환
	기고논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개편 성과만족에 대한 평가 연구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0. 12 제24권 제4호 (통권 제83호)	기고논문	지방의원 보수제도 개선 전후 의정활동 만족도와 장애요인 비교분석 : 2002년과 2010년 실증조사를 중심으로
		산불재난 대처를 위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연구 : 양양산불사례를 중심으로
		새마을 조직의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경상북도 새마을 조직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의 결정요인과 지역 간 분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의 연계성 분석 : 지방세수입의 소득탄력성 추정을 중심으로
		지방탄소세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법적 형평성 제고 방안 : 독일의 이원화된 하수도 사용료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테크노파크 지원서비스 이용기업의 특성, 경영 및 기술혁신 수준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충청권 개발 정책의 경제적 효과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여성신규인력채용의 결정요인연구 : 서울시 기업체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도시 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지방 정치와 다세대 주택 관계에 관한 연구 : 정치 시장론을 중심으로
2011. 3 제25권 제1호 (통권 제84호)	기획논문	공정사회의 논리와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지역사회 내의 공정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역할
	기고논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검토요건과 적정대안 : 최근의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주제, 자치계층, 행정구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파트너십의 특징 비교분석
		4대강 살리기 사업 효과에 대한 시행 지역 주민의 기대심리 분석 : 충주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제고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통합창원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특성 유형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계 분석
		지역개발정책의 변동에 관한 유형 분석 :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에 대한 수정된 Hogwood & Peters의 이론 적용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유인기재로서 재정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문화도시는 문화에 돈을 쓰는가?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외국인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
2011. 6 제25권 제2호	기고논문	지방재정 위기와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
		바람직한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과제
		스위스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논쟁과 대안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1. 6 제25권 제2호 (통권 제85호)	기고논문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실태에 관한 진단 : 경기도 K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강화방안 :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군 간의 상호 연계성 분석 : 201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통한 분석
		DB-DC CVM을 적용한 함양산삼축제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거래세율 인하가 주택거래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을 활용한 갈등행위자 인식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중심으로
		지식공유 의도에 대한 관계적 요인의 영향 분석 : 지방정부 관료의 지식공유 의도 예측변인으로서 상호작용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미래유망기술의 혁신기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6T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의 소관이전에 관한 사례연구
		주민지향적 도시재개발 및 재생정책을 위한 실증연구 : 쇠퇴지표에 의한 지각차이를 중심으로
		생태발자국 기반 환경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따른 맞춤형 정책방향 : 충청북도를 사례로
		서울시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분석 : 이분산성을 고려한 패널데이터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2011. 9 제25권 제3호 (통권 제86호)	기획논문	지방자치역량 및 지역 리더십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기관구성을 중심으로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관계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기고논문	행정구역 통합의 효과분석 :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행정기구 변화에 대한 연구 : 행정수요와 지방자치제도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 : 조직문화의 조절효과와 조직신뢰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지방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의 가치평가 : 조건부가치평가법 접근
		지방자치단체 여성팀장 공무원의 리더십 역량 연구
		지방세의 누진세율체계와 재정력격차
		한국적 타운미팅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 평택 채소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분석
		좋은 일자리 분포의 지역별 변화와 이행과정의 결정요인
		국내외 물가상승압력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산업연관분석의 적용
		수도권 공업입지규제가 주변지역 제조업 입지에 미친 효과 분석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1. 9 제25권 제3호	기고논문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이용가치 손실 평가에 관한 연구 : 한강수계 하남시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시설이 환경보호 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공간회귀모형의 활용
2011. 12 제25권 제4호 (통권 제87호)	기획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체제 : A시의 새터민 행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기고논문	도시계획체제의 거버넌스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 고양시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조직 문화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대구광역시 소방 조직을 중심으로
		판단분석을 통한 조직진단 가중치 부여에 관한 실증연구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행위자 네트워크거버넌스의 협력요인 분석 : 2009년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2010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평가와 과제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성과분석 연구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중심으로
		대중의 시정인식과 홍보내용 수용의 차별성 분석 :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한계비용을 고려한 화력발전과세 확대에 관한 연구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지방 R&D사업의 효율성 분석
		동북아 연해거점도시의 광역권 발전전략과 거버넌스 : 다롄, 후쿠오카, 블라디보스토크 광역권의 특성 비교
2012. 3 제26권 제1호 (통권 제88호)	기획논문	주민주권론과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자치제도하의 주민주권 확보방안 : 시론적 연구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주권의 강화
	기고논문	지방분권 전후 시기의 공공자본의 생산성과 공간적 배분 효율성 비교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중앙–지방 간 정책갈등에 관한 권역별 비교 연구
		동태적 패널 분석을 이용한 광역자치단체 투자적 지출의 지역경제 성과 분석
		조세감면 프로그램 채택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플로리다 카운티정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의 내향적 국제화 수준과 그 영향요인 : 거주외국인과의 "접촉과 화합"을 위한 과제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과와 과제 : 서울특별시 사례의 진단·평가를 중심으로
		학교자율화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인식 분석
		영국자치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2. 6 제26권 제2호 (통권 제89호)	기획논문	지방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분석
		국제적 메가이벤트 유치전략의 쟁점과 정책적 함의
	기고논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경로진화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대한 연구 : 프랑스를 중심으로
		2008년 감세정책이 시·군 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미친 영향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정실태와 통제방안
		셀프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관료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제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할 가능성 탐색 : 중앙·지방 공무원의 거버넌스 인식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중앙·지방정부 민간단체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 관변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법적 관점
		고령집단의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 : 티부의 가설을 중심으로
2012. 9 제26권 제3호 (통권 제90호)	기고논문	농촌 어메니티를 이용한 농촌활성화 정책 방향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본 새마을 운동
		청주-청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정책효과 추정
		지방행정구역 통합요인이 주민의 인식에 미친 영향 : 영주시-영풍군 도농통합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 대법원 제소 조례의 유형 분석과 함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조산업의 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적 통제시스템에 관한 인식 연구
		지방시설관리공단의 재무성과 측정을 위한 대안적 지표에 관한 연구 : 재무제표의 활용과 측정방법의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중국 지방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상수도 서비스의 생산비용 및 요금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지역보건정책 실행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방안 연구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사례에 대한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통치스타일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거버넌스 인식 차이 분석 : 2005년과 2010년 충주시와 홍천군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정책확산에 대한 네트워크 외부효과의 영향 : 이론적 탐색과 연구 아젠더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 분석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2. 9 제26권 제3호	기고논문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테크노파크의 기능분석 : 경북테크노파크를 사례로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방안
2012. 12 제26권 제4호 (통권 제91호)	기고논문	지방선거와 현직효과 :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 지방공무원의 승진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비교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단체와 정부 관계의 결정 요인 : 참여, 규제, 상호의존, 제도화 및 정부 수준에 따른 다양성
		지방자치단체통합에 따른 조직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 공무원의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성 효과에 관한 연구 : 공급비용과 배분방식을 중심으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투자가용재원 증대방안 연구 :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획기적 감축을 중심으로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혐오시설이 주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립승화원 사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부천시 공무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생태축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함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의 서비스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인식 차이 분석을 바탕으로
2013. 3 제27권 제1호 (통권 제92호)	기획논문	국가 및 지방정부간 위기관리 협력체계에 관한 연구
		지역안전거버넌스의 구축의 한계와 과제 : 정책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기고논문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담론과 패러다임의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미셸 푸코 사상의 도시계획에의 함의
		공직사회 성차별의 양가적 차원과 요인 검증 :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갈등 분석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과성 지각에 관한 실증연구 : 임금님표 이천쌀을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구축효과(驅逐效果) 분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관규모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관료들의 혁신행동 의지 영향요인 탐색 : 핵심자기평가와 셀프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3. 3 제27권 제1호 (통권 제92호)	기고논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지방정부의 산업간 연쇄효과 분석 : 중앙정부와의 비교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례연구 : 인천시 남동구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재정력과 보조금 반환금 규모의 관계 분석 :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인도 지방자치에서 주민총회(Gram Sabha)에 대한 연구
2013. 6 제27권 제2호 (통권 제93호)	기획논문	지방정부 3.0 이론과 과제
		국민행복시대의 지방정부 구현 : 협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의 영향요인 분석과 행정구역통합에의 시사점 논의
		새터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유관기관 간 협력연결망의 메커니즘 분석 : 네트워크의 구조변수에 대한 ERGM의 적용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Vo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지방공기업 부채 특성과 관리방안에 대한 소고
		DHP를 활용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평가지표 개발
		국민의 공공적 삶 만족도 측정 연구
2013. 9 제27권 제3호 (통권 제94호)	기획논문	주민행복과 창조적인 지방정부3.0의 이론적 토대
		지방3.0의 효율적 추진체제 설계를 위한 시론
	기고논문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연구 : 여수시 횡령사건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사업유형 선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영향력과 활동에 대한 공무원 인식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비교 연구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역자산 활용 : 자산기반 지역공동체 발전 관점에서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 보건정책 분석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직무특성이 공직동기에 미치는 영향 : 윤리풍토의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별 보건의료서비스 효율성 격차 비교분석 : 자료포락분석(DEA)의 적용
		시·도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 탐색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여성친화적 정책도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제4섹터 주도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 : 강원도 화천군 관광개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성과정보 활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지방소비세의 지방정부별 재원배분 효과 분석
		행정구역 자율통합정책의 비판적 고찰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3. 12 제27권 제4호 (통권 제95호)	기획논문	중앙 지방 간 세출 및 채무관리방안
		복지재정 수요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기고논문	농촌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이동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사회보장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승진만족도가 조직 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방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거래비용 요인이 지방정부의 정책도입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부 간 수자원관리 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 수자원관리 담당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2014. 3 제28권 제1호 (통권 제96호)	기획논문	단체장의 성향과 역할 수행
		선거제도와 여성참여
	기고논문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성 결정요인 분석 : 혁신성 고-저에 따른 비교분석
		국가별 관심 편중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측정 : 대구 달서구 사례의 실증 분석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통계적 산출과 지역발전 정책의 함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셀프리더십 및 조직시민행동간 관계의 구조모형 분석 : 지방정부 관료들의 셀프 리더십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환경규제 수단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 지방분권화, 입법주체 및 규범형식을 중심으로
		한국과 영국의 지방자치단체평가 제도 비교
		지방자치단체 경제개발 네트워크 역량의 결정요인
2014. 6 제28권 제2호 (통권 제97호)	기획논문	지방직영기업의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 요금현실화를 중심으로
	기고논문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입지 만족도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인천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 연구 : 2012년 서울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
		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로서 지방행정서비스요인의 적합성분석 : 경쟁가설모형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비교를 중심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복지 및 자율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소고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정책추진방향 : 신규과제와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실태 분석
2014. 9 제28권 제3호	기획논문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 시범실시 사례 분석 : 역촌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주민자치회제도의 향후 방향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4. 9 제28권 제3호 (통권 제98호)	기고논문	우리나라와 일본의 근린자치 제도의 경로진화 비교 연구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퇴직관리 : 실태와 정책적 지원
		주민선호를 고려한 지방정부의 적정 인구규모 모색
		사회통합요인과 지역사회갈등의 영향력과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 : 충주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미국 지방정부 재정위기원인 분석 :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2014. 12 제28권 제4호 (통권 제99호)	기고논문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 지방행정의 혁신
		커뮤니티 웰빙의 다면적 주관적 인식 및 객관적 조건과 비교
		역대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정책 비교평가
		지방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선호 : 개발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영향 비교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대한 도시 및 지역계획 관점의 연구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복지 분야 민간자원연계체계에 관한 지역별 비교사례 연구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간 복지의식 비교 : 중소도시 공무원, 복지위원 및 기관종사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도시 로고의 특성 및 효과 탐색 연구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 사무관 리더십에 대한 탐색적 분석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근로자의 행정가치 인식에 관한 연구 : 지방공무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 절차에 관한 연구 : 디트로이트 시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납세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과 영향요인 분석 : 기초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통합성과보고시스템구축과 활용방안 : IIRC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발전방안 연구
2015. 3 제29권 제1호 (통권 제100호)	기획논문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방안 : 주인-대리인이론 관점에서
		『지방행정연구』지의 게재논문 분석(1986~2014)을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연구동향 분석
	기고논문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신문기사 텍스트 분석 : 1970년~2012년
		지역 간 격차와 지역내 격차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 경기도 31개 시·군을 사례로
		주관적 웰빙과 소득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의 한계성 및 상대성 검증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5. 3 제29권 제1호 (통권 제100호)	기고논문	지방행정 조직성격과 리더십 및 공무원 직무만족의 관계
		6·4 지방선거에 나타난 정책이슈의 역동성 : 민선6기 지방선거공약의 내용 및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일자리 확대 가능성 영향요인 탐색 : 충남 지역 협동조합 경영진 조사를 중심으로
		임파워링 리더 행동과 창의성과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 : 지방정부 관료들의 창의성 영향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 지방의 세계화 수준을 중심으로
		정부 노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도·농지역의 차이 비교
		행정구역 통합의 영향요인 분석
		지방투자사업의 유형별 투자심사 도입에 관한 연구 : 공공 청사의 적정규모 산정을 중심으로
2015. 6 제29권 제2호 (통권 제101호)	기획논문	지방자치단체 공직개혁의 주요 쟁점과 방향 : 공무원 역량강화의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퇴직관리 효율성 확보방안
	기고논문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환경형평성을 고려한 서울시 공원입지 분석 : ArcGIS의 중첩분석 및 접근성분석기법의 응용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한 「지방행정연구」지의 연구경향 분석
		기초지자체 에너지 소비 변화 요인 및 특성 분석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중규모도시의 경쟁력 수준 비교·분석과 충주시의 발전방안 연구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파트너십에 대한 상호 인식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프로세스 분석
		시장(市長)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회계성과의 탐색 : 2014 지방선거와 지방재정분석 결과의 분석
		한국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 2002년~2014년 사회과학분야 논문을 중심으로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진성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 : 조직지원인식의 매개효과
2015. 9 제29권 제3호 (통권 제102호)	기고논문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의 당락과 현직효과 : 1998년~2014년 통합자료 분석
		지방의회 지원기구 직무역량 및 직무만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정책 채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지방정부의 간접흡연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정태적, 동태적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 경남 지방보건소를 중심으로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5. 9 제29권 제3호 (통권 제102호)	기고논문	지방 남북교류협력의 태동(胎動) 요인과 민관협력 양상 : 1998~2000년 강원도, 제주도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탄력세율 활용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지역혁신을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의 효과 분석 : 입주기업의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복지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요인 탐색 :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2015. 12 제29권 제4호 (통권 제103호)	기획논문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협력방안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 협력 방안
	기고논문	주민만족도를 통한 지방행정서비스 평가 :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문제점과 해결방안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트리플 힐릭스 모형(Triple Helix Model)을 활용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집단 간 상호작용 분석 : 경기도 A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의 성공적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과제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과 운영성과 :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주체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에 관한 연구
		지방공공기관의 운영효율성과 기술격차 평가 : 전라북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 연장운행의 정치경제학 : 원전 주변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차별지각을 중심으로
2016. 3 제30권 제1호 (통권 제104호)	기획논문	지역발전 패러다임 연구
		도시공동체의 주민자치와 사회자본 :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기고논문	프레임의 명명과 전환 및 검증에 관한 연구 : 영국 스코틀랜드의 지방자치와 독립논의를 중심으로
		지니계수를 활용한 지역의 행복불평등 수준 분석 :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복불평등지수 산출
		정부(政府)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分權型) 국정운영 체제 모형 탐색
		새마을운동 발전단계 구분과 구분유형에 관한 연구 : 새마을운동의 추진체제의 변화와 지리·공간적 확산을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원리에 입각한 취득세 세율구조 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지역문제 해결의 Co-creation 접근 : 안전도시사례를 중심으로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한 규제정치 비교 분석 :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의 시장구조 및 생산구조가 지방상수도공기업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규모의 경제, 밀도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중심으로
		PLS 기법을 이용한 임파워링 리더십과 심리적 주인의식 및 지방정부 고객접점 관료들의 고객지향 경계확장행동 간 구조적 관계분석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6. 3 제30권 제1호 (통권 제104호)	기고논문	노인 노동력활용에서 나타나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 문제 연구 : 일본 실버인재센터의 복지와 노동 통합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 특별시 및 광역시 소속 69개 일선구청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지역경제성과에 미친 효과 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16. 6 제30권 제2호 (통권 제105호)	기고논문	정부 간 역할과 재정책임분담 : 누리과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례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그 영향요인
		공공갈등 진단 체크리스트 개선을 위한 연구 : 서울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새마을리더, 새마을조직,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새마을운동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청도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한 Charter School 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미국 플로리다주 Charter School을 중심으로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공요인이 실제 정보화마을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경기도 세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자간 공공갈등 조정과정 분석 : 울진 원전 주변 거주 문제 갈등조정회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참여와 지방공무원의 도구적 합리성
		지방공기업 부채가 운영 효율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지방하수도 공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2016. 9 제30권 제3호 (통권 제106호)	기고논문	지역기업의 입지 만족도와 역외 이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입지요인별 만족도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개발정책과 복지정책 간 예산심의의 성격 비교 : 경기도의 2007~2014년 예산심의를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연구소 구축사업 성과평가 : 산청한방약초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홈-룰 차터의 법률적 지위 검토 :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헌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조직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혁신행동의 구조적 관계 분석 :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경기도 기업의 녹색경영 효과분석 : 녹색기업 인증을 중심으로
		선거구제와 여성대표성 : 기초의회 여성의원을 중심으로
		대학의 새마을 교육·연구사업과 학문화에 관한 의미망 분석
		지역 사회자본의 노인문제 대응 :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2016. 12 제30권 제4호 (통권 제107호)	기획논문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방안 고찰
		적극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개선과제
	기고논문	지방복지의 개념 도입과 관점에 관한 연구 : 기초연금을 대상으로 행정학자들과 사회복지학자들의 관점 차이를 중심으로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6. 12 제30권 제4호 (통권 제107호)	기고논문	공정성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과관리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신규공무원 교육훈련 전이효과 영향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
		지역소득에 대한 세수의 탄력성 분석 : 세계 금융위기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지출액과 fungibility의 비선형성 분석
		프랑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회계원의 역할강화에 대한 연구
		경제위기와 지역의 경제적 탄력성 : 경험적 분석
		철도역 중심의 복합개발 관련 정책갈등 사례연구 : 양정역 중심 복합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장소애착이 도시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 함평나비축제를 사례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의 영향요인 연구 : 무엇이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가
2017. 3 제31권 제1호 (통권 제108호)	기획논문	고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 대책 : 일본 로컬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의 시사점
	기고논문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재정형평화 효과 비교분석
		학생수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역 간 형평화 효과 분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Ways of Life)'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요인에 대한 의원과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연정을 중심으로
		국토환경에 대한 정책관 형성의 영향요인 : 낙동강 대권역 47개 지자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2017. 6 제31권 제2호 (통권 제109호)	기고논문	중국 민족구역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장 협의체에 대한 비교연구 :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한계 :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 특·광역시와 도 지역 간 비교 연구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주민의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 새마을운동의 역할과 관련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공천자·낙천자 간의 경쟁력 인식을 중심으로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7. 6 제31권 제2호 (통권 제109호)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정책 역량에 대한 연구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역 간 재정형평화
		지역 소방조직 내 세대 간 갈등 유발요인 분석 : 제도, 업무 인식 및 직무동기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증진 조례의 협동조합 활성화 효과 : 공간회귀모형의 활용
		지역 금융 협동조합의 조합원 참여가 책임성을 매개로 신뢰에 미치는 효과분석 :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017. 9 제31권 제3호 (통권 제110호)	기획논문	신정부 분권과제와 추진방향 : 자치분권
		신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한 소고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 설계의 쟁점 분석 : 정책의 추진시스템을 중심으로
	기고논문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동향 및 특성 분석
		주민자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광역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 16개 광역시·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특성이 커뮤니티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통교부세 보정계수의 정책기능 회복을 위한 대안 모형에 관한 연구
		세입 구조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특징에 관한 연구 :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중심으로
		고향기부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험과 지방분권 원리에 기초하여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역할 재조명 : 메타평가 관점에서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본 개발촉진지구정책과 신활력지역정책의 도입특성 비교
		전남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만족도 영향요인 및 정책시사점
2017. 12 제31권 제4호 (통권 제111호)	기고논문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공공정책 맥락
		Charter School 성장에 대한 패널데이터 분석 : 학교, 교육자치구, 그리고 학교관련 공동체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의 접근방법과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문화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는 왜 '글로벌'해지려고 하는가? :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자매·우호도시 결연관계 결정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경쟁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 정당 간 경쟁과 후보자 간 경쟁이 갖는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수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조직혁신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외부지향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환경규제가 한국의 제조업부문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논의
		지역재난대응 민관협력 재난구호 네트워크체계 분석 : 인지정확도 모형을 중심으로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8. 3 제32권 제1호 (통권 제112호)	기고논문	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생적 추진전략
		재정분권의 원리와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 평가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개혁을 위한 기초
		비용 지불의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선호 집단 발견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재정분권화시대 신세원 발굴에 관한 연구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방안을 중심으로
		마을기업에서 혁신적 지역리더의 역할 : 일본 이로도리 주식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입법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경기도의회의 연정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문화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2018. 6 제32권 제2호 (통권 제113호)	기고논문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과제 : 정책선거 강화를 중심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입법권 확대방향 연구 : 조례(안) 재의를 중심으로
		재정분권에 대한 소고 :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지리적 분산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세종시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보조금 반환 : 부유한 지방정부가 과연 더 많이 반환하는가?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 : RBID 방법론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 연구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비교 연구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연구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연구 : 공무원의 소속부서와 제도 운영의 주도부서가 제도 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018. 9 제32권 제3호 (통권 제114호)	기고논문	'생활자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
		민선7기 지방선거과정에 나타난 정책이슈의 역동성 분석 : 정당별 보도 자료 및 트위터(Twitter)의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에 대한 평가와 삶의 만족
		소셜 빅데이터로 본 경기도 행복지도, 2013~2017
		전통시장 재생, 관광매력성, 만족도,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 :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을 사례지역으로
		지방정부형태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 시지배인 제도 형태의 지방 정부가 재정 성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8. 12 제32권 제4호 (통권 제115호)	기고논문	생활자치지방의회 조례안 처리기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당선결정요인, '제도'인가 '개인'인가 :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의원을 중심으로
		조직성과가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측정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이 이웃관계를 매개로 하여 지역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이미지 비교 분석 : 금천구청과 중구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인상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보조금이 저신용 자영업자 사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2019. 3 제33권 제1호 (통권 제116호)	기고논문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3동을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의 성격특성과 양성평등의식 및 행동의 관계
		지방보조금 운영의 책임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상수도공기업의 효율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게임교차효율성을 적용하여
		IPA분석을 통한 지방분권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실증분석
2019. 6 제33권 제2호 (통권 제117호)	기고논문	소방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 관계에서 조직 환경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읍·면·동 법적지위 전환문제의 개선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개선방향
		재정분권의 강화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이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연구
		끝나지 않은 딜레마 : 영남권 신공항 선정 갈등
		지역공동체 주도의 자원순환형 지역재생 모델 연구 : 일본 다카마츠시(高松市)의 사례
		협동조합의 조직성과와 영향요인, 그리고 유형의 조절효과 : 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 도시공간 관리의 넛지 방식 탐색 : 한국 지역사례의 예비적 고찰
2019. 9 제33권 제3호 (통권 제118호)	기고논문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 2002년(유아기)과 2019년(청년기)의 지방자치 수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간 사드 배치 갈등 분석 : 협상론적 시각에서
		항만분권의 핵심 의제는 무엇인가? : 프랑스 항만법전에 대한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상사 적합성의 조절효과 : 경기 남부지역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자	논문구분	제목
2019. 9 제33권 제3호 (통권 제118호)	기고논문	사업특성에 따른 신속집행제도의 운영효과 분석 : 불용률을 중심으로
		제도변화에서 제도적 논리의 역할에 대한 사례분석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결정요인 연구 : 정치적 요인의 탐색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영향을 중심으로
		준실험설계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평화시대 지방자치단체 남북한 교류의 방향 : 동서독 및 남북한 과거 교류경험의 비교를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2019. 12 제33권 제4호 (통권 제119호)	기고논문	독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개혁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의무고용 준수 영향요인 연구 : 2016~2017년간 시·군·구 비교분석
		공직의 성별 다양성 인식과 성과의 구조적 관계 :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 정치와 행정 행위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수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 대한 부정성 편향 분석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도시재생 협업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대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부사업의 반복된 철회가 마을주민에게 미친 심적 영향 분석
		지속 가능한 도시의 유형과 속성 및 문화적 요소의 발견 : 지역에 따른 문화적 기반(속성) 차이는 도시의 지속가능 방향설정 및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인 가구의 이웃관계 영향요인 연구 : 경기 북부-남부의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2. 지방자치이슈와포럼

■ 2016년

월/호수	주제	주요내용
3 vol. 1	생활자치	• 특별대담 : 21세기형 최첨단 산업문화도시, 좋은 도시 편한 진주 • 이슈 : 지역공동체 소유권(community ownership)과 자산화 전략
4 vol. 2	지역협력	• 특별대담 : 올림픽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평창군 • 이슈 : 마을 속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추진방안
5 vol.3	국고보조금	• 특별대담 : 합천군 新성장동력 개발로 100년 청사진 구축 • 이슈 : 국고보조금의 보조실태와 지방 시각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관리방향
6 vol.4	총선과 지방자치	• 특별대담 : 21C 新해양실크로드 건설로 • 이슈 : 4·13 총선 공약을 통해 본 지방자치
7 vol.5	지속가능한 섬	• 특별대담 :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 목포 건설 • 이슈 : 제4차 도서종합 10개년 계획 수립방향
8 vol.6	공공기관 민간근로자 계약 및 활용	• 특별대담 :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희망찬 행복 남구 • 이슈 : 지방자치단체 민간근로자 활용과 개선방향
9 vol.7	지방상수도	• 특별대담 : 세계 속의 강릉,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강릉 건설 • 이슈 : 지방상수도 당면 현안과 발전방향
10 vol.8	지역공동체 기본법	• 특별대담 : 한국 속의 한국, 행동하는 전라북도 • 이슈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자
11 vol.9	지방자치 단체 민간 투자사업	• 특별대담 : 살고싶은, 품격있는 통영시 • 이슈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의 비교
12 vol.10	혁신도시 성과와 과제	• 특별대담 : 지역발전의 구심적 역할, 혁신도시 • 이슈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 2017년

월/호수	주제	주요내용
2 vol.11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 특별대담 : 지역발전의 구심적 역할, 혁신도시 • 이슈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4 vol.12	지방분권과 국가발전	• 특별대담 : 대한민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 / 지방분권 개헌 없는 국가발전 없다 • 이슈 : 지방분권의 두 가지 접근—중앙에서 지방으로, 정부에서 주민으로
6 vol.13	인구활력	• 특별대담 :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교육행복도시 • 이슈 :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방안
8 vol.14	일자리 창출	• 특별대담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고용노동부) 3년 연속 최우수상 • 이슈 :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
10 vol.15	재정분권과 재정책임성	• 특별대담 :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 그 견인차로서의 재정분권을 말하다." • 이슈 : 지방재정의 현실과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확대방안
12 vol.16	신정부의 균형 발전정책	• 특별대담 : "국민모두가 어디서든 살기 좋은, 사람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 이슈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

■ 2018년

월/호수	주제	주요내용
2 vol.17	지방분권형 개헌과 향후 과제	• 특별대담 : 지방분권형 개헌–쟁점별 주요 내용 • 이슈 : 지방분권형 개헌과 향후 과제
4 vol.18	지방행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특별대담 :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마련에는 상호 간 신뢰가 핵심입니다 • 이슈 : 문재인 정부의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6 vol.19	주민참여 예산제	• 특별대담 :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들 • 이슈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8 vol.20	민선7기 지방정부에 바란다	• 특별대담 : 민선7기 지방정부에 바란다 • 이슈 :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발전과제 실행을 위한 제도적 강화 방안
10 vol.21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 특별대담 : 사회혁신을 위한 여정은 계속 되어야 한다 • 이슈 : 사회혁신과 참여적 지역거버넌스
12 vol.22	남북 교류·협력	• 특별대담 :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길 • 이슈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방향과 개선과제

■ 2019년

월/호수	주제	주요내용
2 vol.23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특별대담 : 혁신적 포용국가와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 이슈 :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성과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4 vol.24	포용성장과 지역발전	• 특별대담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현황과 미래지향적 방향의 길 • 이슈 : 포용적 지역발전, 쟁점과 과제
6 vol.25	생활SOC	• 특별대담 : 생활SOC 사업 • 이슈 : 지속가능한 생활SOC사업을 위한 논의–사업개요 소개 및 고려되어야 할 정책사항
8 vol.26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 특별대담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 이슈 : 자치분권 시대에 어울리는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10 vol.27	지방자치 단체 재난 안전관리	• 특별대담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 이슈 : 자치분권 시대에 어울리는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12 vol.28	주민참여와 공론화	• 특별대담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경험과 지방자치단체 공론화의 나아갈 방향 • 이슈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론화 프로세스 운영 원칙과 방법

3. 지방자치정책브리프

■ 2016년

월	일	발행호수	주제
4	30	제1호	지방자치단체 조직효율화를 위한 공공위탁 활용방안
5	17	제2호	지방재정준칙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가
5	31	제3호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소멸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6	22	제4호	생활자치실천의 요체,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6	30	제5호	인구절벽 대비 군단위 자치단체의 행정운영 효율화방안
7	19	제6호	지방자치단체 채무 및 부채, 바람직한 관리 방향은?
7	29	제7호	Rainydayfund와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방안은?
9	19	제8호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서개발사업 개편 시급하다
10	14	제9호	지방규제개혁 '간주규정' 도입 등 소극적 행태 개선
10	26	제10호	인감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로 개선 필요하다
11	14	제11호	시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지평, 대성동 민관협력 프로젝트
11	28	제12호	지방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시급하다
12	15	제13호	중앙투자심사결과 분석과 시사점

■ 2017년

월	일	발행호수	주제
1	16	제14호	변화하는 재정환경,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	1	제15호	지방상수도 운영개선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필요하다
2	17	제16호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이제는실천해야
3	9	제17호	지방자치단체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제, 개선 필요하다
3	29	제18호	지방소멸위기, 특별법 제정으로 극복하자
4	13	제19호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4	28	제20호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나 세출효율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5	22	제21호	이주민사회 통합은 지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5	25	제22호	포용적 낙후지역 발전정책, 시급히 추진해야
6	15	제23호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7	10	제24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8	10	제25호	지방보조금성과 평가결과 활용 제고를 위한 제언
8	22	제26호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급방안
8	31	제27호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활력증진 : 영국 커뮤니티 앵커의 시사점

월	일	발행호수	주제
9	14	제28호	지방자치단체 저출산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
9	25	제29호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 : 사회성과보상사업
10	16	제30호	자치단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정책방안
10	30	제31호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방향
11	14	제32호	주요 외국의 금고제도 운영 및 시사점
11	23	제33호	우리동네 재난대피소 조성방안
12	7	제34호	공유재산 위탁개발제도의 활성화방안
12	20	제35호	농촌지역의 6차 산업화를 위해 마을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2	28	제36호	지방분권 시대에 생활자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 기본구상과 실천전략

■ 2018년

월	일	발행호수	주제
1	23	제37호	지방자치단체의 열린혁신 추진전략
2	2	제38호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2	21	제39호	청년일자리 지원정책방안
3	8	제40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3	27	제41호	2017년 지방재정분석결과와 시사점 : 양호한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함께 개선되고 있는 세출효율성
4	11	제42호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30	제43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지위와 역할 강화방안
5	18	제44호	지방정부는 지역청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5	31	제45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내실화를 위한 성찰 및 핵심이슈
6	15	제46호	4차 산업혁명 도래와 지자체 일자리 쟁점과 과제
6	29	제47호	지방재정 장기 전망과 지자체 대응전략
7	17	제48호	지방투자사업관리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7	31	제49호	주요 지방재정사업의 성과평가와 예산의 효율적 연계방안
8	16	제50호	판문점 공동선언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8	31	제51호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숙의형 주민참여 프로세스 설계의 5가지 원칙과 과제
9	13	제52호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재투자법의 필요성
10	14	제53호	지자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0	17	제54호	주거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월	일	발행호수	주제
10	25	제55호	재정분권 시대 보통교부세의 발전방향
11	30	제56호	하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연계방안 필요하다
12	20	제57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이해 및 개선방향
12	28	제58호	지방투자사업이력관리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 2019년

월	일	발행호수	주제
1	18	제59호	2017년 지방재정 분석결과와 시사점 : 건전재정운영원칙에 입각한 재정건전성 유지와 세입효율의 증진
2	20	제60호	지방분권 시대의 국정통합성 확보방안
3	7	제61호	지역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성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3	29	제62호	재정분권추진과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
4	19	제63호	지방행정에서의 블록체인기술 활용방안–기회와 도전
4	29	제64호	도시재생에 도시숲조성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5	17	제65호	광역자치단체, 자체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이 필요하다
5	31	제66호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 방안
6	14	제67호	마을기업, 사회적 성과측정이 필요하다
6	28	제68호	자치분권사전협의제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권 강화
7	16	제69호	저출산정책, 정책설계만 문제인가?–전달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8	2	제70호	지방자치단체 생활SOC 운영이 더 중요하다 – 문화·체육시설 중심으로
8	14	제71호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으로서의 복수주소제(Second Address) 도입 방안
8	30	제72호	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개선방안
9	20	제73호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 개선방안
9	30	제74호	안전한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인력 확충이 시작이다
10	10	제75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민행복도 조사를 위한 지표체계 제안
11	19	제76호	국가 및 지역연계를 통한 미세먼지 대응방안 구축 필요
11	28	제77호	지방예산 분류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12	6	제78호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 위한 다각적인 접근 필요하다
12	13	제79호	지역사랑상품권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12	20	제80호	생활SOC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12	27	제81호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를 위한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12	30	제82호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있어서 LIMAC의 역할과 제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제언

4. 세계지방자치동향

■ 2019년

월	제목
8	〈자치행정〉 독일의 시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과 국내 도입 방안
	〈지방재정〉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이점과 폐단
	〈지역발전〉 일본의 주민자발적 어촌 활성화 사례 〈도쿠시마현 미나미초 이 자리〉
9	〈지방재정〉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방안(미국사례 중심)
	〈지역발전〉 댈러스 시(City of Dallas)의 쿨 루프 계획(Cool roofs initiative)
	〈지역발전〉 미국의 민관협력형 지역재생 사례 : 〈신시내티 오버-더-라인 지구〉
10	〈자치행정〉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지방재정〉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지역 만들기
	〈지방재정〉 해외 통신원세계의 지방자치 관련 최신 이슈를 웹진으로 발행
11	〈지방재정〉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숙박세 도입 현황과 과제
	〈지역발전〉 뮤니시팔리즘(Municipalism) 에서 배우는 도시 공간정책
	〈지역발전〉 아스펜 시(City of Aspen)의 재생에너지 저감 프로그램(Renewable Energy Mitigation Program; REMP)
12	〈지방재정〉 오스트리아 빈의 Joboffensive 50plus(50세 이상 실업자를 위한 취업 공략)
	〈지역발전〉 세금감면을 통한 민간주도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지역발전〉 일본,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공공시설 재편

5. 뉴스레터

■ 2009년

월	주제
4	일자리 창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녹색성장, 한국의 성장동력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가장 유효한 수단
6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방향
7	제주특별자치도 3년,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8	U-City는 지방경쟁력의 핵심입니다-중앙과 지방의 종합적 추진 필요-
10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새로운 국가경영 구조를 짜는 것입니다
	지역경쟁력은 지역교육의 승패에 달려 있다
11	내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12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기대하며

6. 지방자치실천포럼

■ 2010년

월	주제
6	선거공약의 이행력 확보방안
7	민선5기 지방정부의 새로운 과제
9	민선5기 지방의회의 과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
11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
12	공정한 사회와 지방정부

■ 2011년

월	주제
1	희망 원년, 일자리로 보답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정착
3	구제역 재앙과 향후 대응방안
4	서민물가의 현황과 해결과제
5	재난에 대한 중앙-지방의 효율적 대응 방안
6	지방정부 보육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
7	지역의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전략
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 스포츠이벤트 개최와 지역발전
9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만들어지는 생태도시
10	시군구 통합기준 관련 주요 쟁점 및 통합 추진 방향
11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면 실시에 거는 기대
12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반, 커뮤니티 비즈니스

■ 2012년

월	주제
1	2012지방자치의 전망과 과제
2	지방재정의 건전성
3	근린자치 활성화
4	지역브랜드
5	성인지예산제도
6	지방행정체제 개편
7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8	지역공동체 활성화
9	국고보조금제도의 당면과제

월	주제
10	다문화사회 육성
11	지역 간 상생발전
12	2013 지방자치 전망과 과제

■ 2013년

월	주제
1	신정부에 바란다 1
2	신정부에 바란다 2
3	신정부에 바란다 3
4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정책 방향
5	국정현안 과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대응방안
6	지방의회 활성화
7	지방재정 투명성
8	지역공동체 활성화
9	지방3.0
10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11	지역행복생활권
12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 2014년

월	주제
1	지방3.0 실현과 주민참여예산제도
2	단체장 연임제
3	교육자치
4	재정책임성
5	규제개혁
6	재난안전
7	민선6기
8	지역발전 격차
9	국가혁신 : 공직개혁
10	지방자치 연구지원기능
11	통일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2	지역공동체

■ 2015년

월	주제
1	재정투자사업관리
2	복지재정
3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4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방향 정립
5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6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7	공동체정원
8	주민자치회
9	지방보조금
10	공유재산
11	골목경제
12	마을만들기

7. 지방자치포커스

■ 2009년

월	제 목
3	최근 일본의 시정촌 합병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4	세입·세출분권 괴리 축소를 위한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
	지방재정 조기집행, 그 실태와 정책효과
5	지역브랜드와 창조성
	경제위기 대응 지방재정지출의 쟁점
6	한국사회의 부패 방지 메커니즘 모색
	결혼이민자 지원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7	지방의 적자예산 위기의 원인과 대응
	녹색성장, 지역의 삶과 번영의 길
8	주민소환제의 쟁점과 개선 방안
	최근 프랑스 지방행정체제개편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9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성과와 과제
	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디자인보다는 공공성을 높이자
10	독일의 자전거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지방행정체제개편, 재정이 중요하다
11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효율적인 추진방법은?

월	제 목
1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강화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되어야

■ 2010년

월	제 목
3	성과관리제도의 벤치마킹 –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라북도의 통합직무성과평가
4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위상 정립방안
	성공적인 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
5	지역산업 및 경제를 고려한 산업별 고용자수의 산정
	지방세분법의 의미 및 향후과제
6	자치단체 사업별 예산관리의 쟁점과 정책방향
	지방소득세의 성격과 발전 과제
7	생활공감정책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과도기적 희망근로의 연착륙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8	창조지역사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9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정체성의 강화
	특화형 도서개발사업의 추진 방향
10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성공적 추진방안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이슈와 정책과제
11	새로운 국민운동 전개의 필요성과 과제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12	지역 간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11년 지방세제 개편의 의의와 발전 과제

■ 2011년

월	제 목
1	기초생활권 특성화 발전의 과제
	일본 지역주권개혁의 동향(1)
2	일본 지역주권개혁의 동향(2)
3	광특회계 운용체계와 신규사업 발굴전략
4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실태 및 대응전략
5	지역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관리전략 탐색

월	제 목
6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7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정책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8	시·군통합의 전략적 탐색
9	지방관리도로의 투자환경 변화와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10	2012 지역발전 동향 및 전망
11	2012 지방재정 동향 및 전망
12	2012년 자치행정의 동향 및 전망

■ 2012년

월	제 목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2	감사원 감사결과의 반복지적사항 실태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향
3	2012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용과 평가
4	지방행정체제 및 자치구개편 동향과 정책 제언
5	지역행복을 위한 낙후지역 정책의 모색
6	통합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중앙–지방간 업무 재설계
7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 방안
8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 방안
9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0	걷는 길 조성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 방안
1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발전 방안
12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편성

■ 2013년

월	제 목
1	국민통합과 주민 행복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
2	국가브랜드로서의 새마을운동 정책 방향
3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기능의 발전 방향
4	회복가능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시론적 연구
5	영국의 시민보호를 위한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7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활성화 방안
8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9	지역행복 생활권의 도입과 정책방향

월	제 목
10	정부3.0시대의 중앙-지방 간 소통 및 협력 강화방안
1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산업 활성화방안
12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방안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제도의 효율적 활용 방안

■ 2014년

월	제 목
1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1) 지역복지형과 안심마을형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투명성 진단 및 정책과제
2	지역공동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지방자치에 대한 한·일 지방공무원들의 인식 비교
3	교육감의 위상과 선임방식의 개선방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2)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평생교육형, 지역자원형, 다문화어울림형을 중심으로
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5	지방자치단체 코피티션(Coopetition) 향상 방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국 네트워크 형성과 정책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기반 인적자원 관리(CBHRM)와 인사역량평가
6	건강보장과 지방자치
	6·4 지방선거의 결과 분석 및 함의
7	재난안전대책의 현재와 미래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사회복지재정의 다각화 방안
8	지역주민 행복도 지수 도출 개념 및 측정방안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현실과 개선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정책
	우체국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제공방안
10	책읽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공공정책의 생태계 조성 전략과 회복력(Resilience)의 개념적 적용
11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추진방안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커뮤니티매핑
12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새마을운동의 미래와 방향

■ 2015년

월	제 목
1	2015년도 지방자치의 쟁점과 방향
2	2015년도 지방재정 정책의 운영방향
3	지방자치단체 성과예산제도의 도입 쟁점 및 정책방향
4	국제통계로 본 대한민국의 자연재난 및 사회안전 수준
5	공공체육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
6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7	지방투자사업의 투자심사 동향 및 개선방향
8	주민자치와 마을 사업에 대한 사회성 보상방식의 지원제도 도입
9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10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지방자치
11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현황과 과제
12	지방자치 20년 :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8. 단행본

■ 2009년

월	일	제 목	내용
4	30	경제위기해법 해외 지방정부에서 배운다	해외 지방정부의 성공 및 실패 사례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경제위기 극복대안을 제시하였다.
12	31	재정분권과 지방소비 소득세	『재정분권과 지방소비 소득세』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의 추진배경과 논의를 정리하여, 관련 이론을 기존 논문의 정리와 더불어 최근에 제시된 재정분권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소비지표 개선, 지방소득세의 세율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 2010년

월	일	제 목	내용
2	20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 사례에서 길을 찾다	향후의 지방행정체제는 미래의 사회변화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한다. 특히 선진각국의 개편사례를 충분히 깊게 검토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유용한 시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10	지역주권형 도주제 안내서	일본의 PHP연구소에서 도주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주권형 도주제 안내서』를 발간한 자료를 편역. 도주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효과 및 도입절차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월	일	제 목	내용
12	31	녹색성장과 지역특화발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기 그리고 수석연구원 박진경, 박승규, 전대욱의『녹색성장과 지역특화발전』. 지역의 녹색성장 잠재력을 평가한다. 녹색성장 잠재력의 지역발전 효과분석은 물론, 녹색성장형 지역발전 사례분석 등을 담고 있다. 녹색성장 잠재력에 기초한 지역특화발전의 방향과 추진전략을 살펴본다.

■ 2011년

월	일	제 목	내용
7	30	지역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	『지역 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은 도시와 고용의 문제를 전통적인 산업정책론이나 인적자원관리론의 틀을 벗어나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지방도시의 과제와 고용정책을 다면적이고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실증분석한 책이다. 지방에서의 고용정책이라는 관점을 근저에 두면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역할자인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주민자치회, NPO 등 도시를 구성하는 조직 간의 상호연계(협동) 관계를 논하고 있다.
12	31	지방세제의 선진화 : 자율성과 책임성제고	『지방세제의 선진화 :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 증진이나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의 통합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주요 3세목을 중심을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 현황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 2012년

월	일	제 목	내용
12	5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지역주민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지방자치단체 40개 지표로 보는 일본 지자체의 행복도 순위『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지역주민』. 호세이대학 대학원 시즈오카캠퍼스에서 개설하고 있는 지역경제학을 수강하고 있는 사회인 석사과정 학생과 과목을 이수한 사회인 학생이 지역경제의 분석·평가기법을 배우면서 강의시간 내외의 활동을 통해 분담, 집필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지역주민의 행복도를 중시한 지역 만들기를 주야로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013년

월	일	제 목	내용
2	8	새로운 지방예산제도	『지방예산제도』는 예산과정, 예산과목체계, 성과관리, 예산정보의 공유·공개, 기타 운영방식 등 다섯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지방예산제도 간의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 새로운 지방예산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 2014년

월	일	제 목	내용
3	25	지방 3.0의 이해와 적용	지방 3.0에대한 정확한 개념적 이해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3.0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MOU 현황

일자	대상 기관	주요 협력 내용
1999. 8. 30	북경행정학원(BAC)	연구원 파견, 한중세미나 개최를 통한 학술·인적 교류
2000. 가입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 교육 및 연구기관 연합회(LOGOTRI)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지방자치 연구 및 지방공무원 교육의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
2001. 6. 16	길림성행정학원(JAC)	한중세미나, 파견 강의를 통한 학술·인적 교류
2001. 9. 18	상해행정학원(SAI)	한중세미나 개최, 중국 공무원 연수를 통한 학술·인적 교류
2003. 11. 20	럿거스대학 National Center for Government Services(CGS)	연수프로그램 교환등 학술·인적 교류
2005. 4. 26	마쯔야마대학 (松山大學校)	특강지원, 연구자 상호 교환 및 방문시 상호 협조를 통한 학술·인적 교류
2009. 6. 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연구협력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실천성 있는 지방행정 부문의 이론 개발 및 정책사례개발을 통하여 지방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
2009. 7. 10	산업연구원	연구협력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실천성 있는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의 이론과 정책사례 개발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
2009. 7. 16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협력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실천성 있는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의 이론과 정책사례 개발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
2009. 7.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협력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의 이론과 정책개발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
2009. 8. 11	법무법인 조은	연구원의 기본 운영방안이나 정책적 연구방안, 연구원 발간물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양 기관의 상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
2009. 8. 20	법무법인 (유)태평양	연구원의 기본 운영방안이나 정책적 연구방안, 연구원 발간물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양 기관의 상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
2009. 8. 28	국토연구원	연구협력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정책 분야의 이론과 정책개발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
2009. 12. 4	충북대학교	연구협력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방자치 분야의 이론과 정책개발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및지방자치발전에 기여
2009. 12. 15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CLAIR) 서울사무소	양 기관의 상호 긴밀한 협력 및 정보교류의 협약을 통한 상호 발전에 기여
2009. 12. 24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양 기관이 연구협력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행·재정, 지역정책 분야의 이론과 정책개발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
2010. 4. 29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양 기관이 연구협력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행·재정, 지역정책 분야의 이론과 정책개발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
2010. 4. 30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양 기관이 연구협력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행·재정, 지역정책 분야의 이론과 정책개발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

일자	대상 기관	주요 협력 내용
2010. 6. 18	럿거스대학 National Center for Public Performance (NCPP)	연수프로그램 교환 등 학술·인적 교류
2010. 6. 23	경원대학교	양 기관이 연구협력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행·재정, 지역정책 분야의 이론과 정책개발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
2010. 8. 30	경남 창원시	창원·마산·진해 3개 도시의 문화적·화학적 통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
2011. 3. 10	게이오대학 GCOE.CGCS	공동세미나 개최 및 학술교류
2011. 11. 22	경북 울진군	울진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지원
2012. 2.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학술교류협력 협약(MOU) 체결을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정보공유 등 폭넓은 연구학술 교류 수행
2012. 3. 20	영동전통시장(논현동)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2013. 5. 20	지방행정연수원	상호 긴밀한 연구협력과 정보교류
2013. 6. 20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창조적 지식기반구축을 위한 공동목표 아래 공동학술 및 지식정보 공유
2013. 6. 26	영남대학교	양 기관의 학술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인적자원의 공동 활용
2013. 6. 28	한국슬로시티본부	상호 긴밀한 연구협력과 정보교류
2013. 6. 24	일본정책대학원대학(GRIPS)	상호 긴밀한 연구협력, 학술교류 및 정보 교류
2013. 11. 12	충남 서산시	서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지원
2013. 11. 28	충남 논산시	논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지원
2013. 12. 11	전남 신안군	신안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지원
2014. 4. 8	한국행정학회	상호 긴밀한 연구협력과 정보교류
2014. 4. 30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상호 긴밀한 연구협력과 정보교류
2014. 4. 24	국민대학교	상호 긴밀한 연구협력과 정보교류
2014. 11. 13	전북 남원시	남원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지원
2015. 5. 19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 및 조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5. 6. 2	원주혁신도시 기관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015. 6. 5	한국감정원	건전한 부동산 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공공사업 추진 협력
2015. 7. 20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연구사업, 학술행사 등의 협력
2015. 10. 23	제주발전연구원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상생을 위한 협력
2015. 12. 8	울산중구청	자치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2016. 1. 19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공동학술연구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서

일자	대상 기관	주요 협력 내용
2016. 3. 10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지원
2016. 3. 22	경남 합천군	합천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지원
2016. 3. 25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지원
2016. 5. 11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개발 연구 및 컨설팅 지원
2016. 7. 11	네덜란드 CREARE 재단	상호 긴밀한 연구협력, 학술교류 및 정보 교류
2016. 7. 1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재정성과연구원	기관의 공동이익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 투자에 기여
2016. 7. 26	강원도 양구군	정책개발 연구 및 컨설팅 지원
2017. 4. 17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공동학술연구 및 연구협력 추진
2017. 8. 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제주연구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2018. 4. 25	서울연구원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및 양 기관 발전을 도모
2018. 9. 28	제주연구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2019. 2. 22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희망제작소,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2019. 3.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2019. 4. 2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덕구	'주민주도 참여예산제' 공동 연구 · 확산 및 주요 정책과제 컨설팅을 통한 3개 기관의 공동 발전 도모
2019. 5. 22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권역 (UCLG ASPAC)	국외 유수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지속적인 연구교류 활성화
2019. 6. 18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친화형 마을 조성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2019. 7. 2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2019. 10. 24	하노이 건축대학교(HAU)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원과 베트남 하노이 건축대학교의 학술교류 강화
2019. 12. 12	강원도인재개발원	자치분권의식 확산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및 운영

연구과제 목록

■ 1997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개편방안
기본과제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체제 개편방안
기본과제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기본과제	기준재정수요산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기본과제	담배소비세제의 개편방안
기본과제	체납지방세징수의 민간위탁방안
기본과제	지방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기본과제	편익분석을 통한 지방공공시설의 투자결정
기본과제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영국의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과정 분석
기본과제	외국 지방선거제도 분석
기본과제	외국 지방자치제도와 기관구성
기본과제	프랑스 행정계층 간 기능배분에 관한 분석
기본과제	외국의 대도시 구제도 분석
기본과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사례분석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 모델개발
기본과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연구자료집	Local Government in Korea
연구자료집	韓國 地方自治
연구자료집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제도
연구자료집	영국의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과정
연구자료집	미국 대도시의 지방자치
연구자료집	현지에서 본 일본의 지방자치 실제
연구자료집	현지에서 본 일본의 지방자치 실제〈부록〉
연구자료집	현지에서 본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연구자료집	현지에서 본 독일 지방자치제도
연구자료집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변화(II)
연구자료집	미국 도시재정위기의 발생과 대응사례
연구자료집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자료집	일본의 지방재정분석지침
연구자료집	일본의 지방예산편성방법
연구자료집	일본의 제3섹터사업
연구자료집	일본의 지방세제도
연구자료집	미국의 지방세제도
연구자료집	캐나다의 조세제도
연구자료집	최근 외국의 도시개발전략
연구자료집	현지에서 본 일본지방자치의 실제(2)
용역과제	자동차관련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용역과제	한국과 외국의 지방자치 행정환경 차이점 비교분석
용역과제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방안(1)
용역과제	지방화시대의 새마을금고 경영활성화 전략(3)
용역과제	무한천 방재종합대책 수립(3)
용역과제	지방재정 진단제도의 실용적 실시방안
용역과제	옥외광고제도 개선방안(19)
정책과제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도 보완연구
정책과제	외국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정책과제	시·군·자치구의 자치제도 비교분석
정책과제	자치단체 "경쟁력 10% 향상시책" 추진상황의 평가모델 개발
정책과제	동행정운영 개선 방안
정책과제	지방공립대 설치·운영의 바람직한 방향과 인천전문대의 산업대 개편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선진국의 지방행정에 대한 지도 감독 실태분석
정책과제	통일 독일 지방행정체제 재구축과정분석
정책과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지방자치–시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일본 지정시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일본 자치단체의 자금 및 금고운영 실태
정책과제	효율적인 정보화 전담조직 설치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기능의 민간위탁, 이양–경기도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한 지침

■ 1998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읍·면·동의 기능전환방안(I)
기본과제	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모형
기본과제	통일대비 지방행정 통합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운영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운영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기본과제	부동산세수구조 조정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기본과제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기본과제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운영모형
기본과제	지방도로사업의 효율적 투자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방안
기본과제	1998년도 6·4지방선거 분석
기본과제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기본과제	최근 외국의 지방의회 운영사례
기본과제	재정위기에 대비한 지방채 운영방안
기본과제	중국의 지방재정제도
기본과제	긴축재정을 위한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 방안
기본과제	토지세원의 공동활용
기본과제	지방세수 예측을 위한 모형의 탐색
기본과제	과세자주권 확충방안
기본과제	교통세의 세원배분방안
기본과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규제완화 방안
기본과제	산업경재력 강화를 위한 도시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기본과제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차단체 해외자본 도입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기본과제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
연구자료집	IMF의 극복
연구자료집	행정계층간 사무처리실태총람–자치법규상의 사무를 중심으로
연구자료집	프랑스 임명도지사 제도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자료집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연구자료집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실태분석
용역과제	표준정원 기능분야별 보조산식개발
용역과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 기준작성(3)
용역과제	안성군 관리시설물 및 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3)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평가표준모델정립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문화의 집 설치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인구수]변수의 표준정원산정방법
정책과제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른 의회운영 실태 분석
정책과제	전자주민카드제 시행에 관한 검토의견
정책과제	선거관리위원회, 행자부, 지방자치단체간 간 선거집행기능의 재정립방안
정책과제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확대
정책과제	증명민원제도 개선방안
정책과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선방안
정책과제	광역행정수행특별법(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방안
정책과제	외국의 국가위기 극복운동 사례
정책과제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방안
정책과제	파리시의 특별지위에 관한 연구–프랑스 파리코뮨의 구(준자치구)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인 만족도 조사에 대한 표준 모형 개발
정책과제	효율적인 광역행정수행체계 확립방안
정책과제	일본 자치단체의 적립금제도의 운영실태와 제도도입의 방향
정책과제	정부 간 사무재배분 경비부담의 재조정
정책과제	지방세 체계의 개편방안
정책과제	세수결손에 따른 재원대책 –시·도 본청 중심–
정책과제	시·군·구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지침
기본과제	공장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효과분석
특별과제	일본 제5차 정원모델 보고서
특별과제	지방자치행정50년사

■ 1999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한국 지방도시의 사회구조와 변동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조례제정권 범위확대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분류체계 게선 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역량 평가체제의 구축 및 활용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기능 강화방안
기본과제	지방재정지출수요의 측정모델
기본과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방목적세제의 평가와 효율적 운용방안
기본과제	지방세체계 조정의 재정효과 분석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및 기법개발
기본과제	신산업체제에 부응한 지방산업단지 개편방안
연구자료집	행정서비스헌장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용역과제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
용역과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시행 공공근로사업 사업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과제	소방재원 확충방안
용역과제	행정계층 간 합리적 사무기준 개발과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재산정 방법 재개발
용역과제	지방재정 분석기법 및 재정진단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99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지방정부성과 공시제도 도입방안연구
용역과제	지역정보화 중복투자 해소방안
용역과제	21세기 지방자치발전과제
용역과제	1999년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용역과제	'주민헌장제' 실천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영암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용역과제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2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지방세원확충 및 지방세제의 선진화 기반구축
정책과제	통일시대의 자치행정체제 구축(22p)
정책과제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정책과제	지역개발지원금고 설치
정책과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상호 연계 강화
정책과제	지방채의 적극활용과 관리개선
정책과제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경제정책기능 강화
정책과제	지방문화·관광 육성
정책과제	소도읍개발과 과소, 낙후지역 종합대책 수립
정책과제	지역정보화의 조기실현
정책과제	김해시 산업고도화 비전과 실천전략-바이오메카(Bio-Mecha) 프로젝트 21-
특별과제	지방공무원 친절도 평가결과 분석
특별과제	자치단체 기관 간 견제와 균형 확보
특별과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시스템 도입
특별과제	자치단체 상호 간 창조적 협력관계 형성
특별과제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적법성 확보
특별과제	지방의회의 대의기능 강화
특별과제	지방선거의 저비용·고효율화
특별과제	주민직접참정의 확대
특별과제	행정자치분야 현안과제(1)
특별과제	행정자치분야 현안과제(2)
특별과제	「행정자치부소관 정책과제」 추진상황평가-지방재정 확충, 건전화 부분-
특별과제	자치단체 감사시스템 고도화
특별과제	직업공무원제 정착 및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특별과제	계층구조발전 방안
특별과제	표준정원모형(LSPV)에 의한 표준정원 재산정방안 및 개선방안
특별과제	지방행정조직의 지역중심적 조직전환 검토
특별과제	(가칭) 시·도지사협의회 조직과 운영방안
특별과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평가계획

구분	연구과제명
특별과제	지방자치단체 경영진단 메뉴얼
특별과제	지방자치구조의 개편방안
특별과제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방안
특별과제	21세기 지방자치 발전과제
정책과제	행정서비스헌장 평가결과

■ 2000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 및 정착방안
기본과제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기본과제	지역NGO의 지방자차단체 정책참여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변화관리를 위한 전략적 기획의 활용 방안
기본과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방예산제도의 개선방안
기본과제	재산세 과표산정체계의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세 부과징수체계의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문화산업 육성방안
기본과제	도시재정지출의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식경영체제 구축방안
연구자료집	행정서비스헌장 어떻게 실천하여야 하는가
연구자료집	미국 캐나다의 민간위탁제도 : 운영실태 성과
연구자료집	대만해협터널 학술토론회 논문집
용역과제	지역정보화 중복투자 해소방안
용역과제	정부조달고객서비스 헌장의 실천시스템 구축과 평가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달성도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관련 이행기준달성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복식부기도입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용역과제	국토 및 도시계획의 방재제도 개선 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전라북도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도농복합형태시의 제도분석과 발전방안
용역과제	지방자치행정 발전방안 및 경제효과 연구
용역과제	지적측량대행제도 개선방안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실시
용역과제	지방세제 개편방안
용역과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제도 개선방안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제 개선방안
용역과제	생태도시구축을 위한 조직역량평가 및 능력배양방안
용역과제	교육자치제도 개선
용역과제	민선자치 5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용역과제	광역시와 자치구 간 지방세 세목조정방안(이월)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제 컨설팅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우수사례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제 개선방안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용역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채인수 전담기구 설립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평가
용역과제	철도고객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2000년도 주민만족도 조사(2001년으로 이월)
용역과제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행정자치부의 역할과 과제
용역과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연구(2001년으로 이월)
정책과제	복합민원제도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에 관한 추진방향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의 입법화 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시책의 합리적 분류방안
정책과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대처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지방공무원 정원모형 개발보완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평가관련 제도개선 및 기초자치단체 평가모형개발
연구자료집	민선자치 5년, 그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과제	지방자치제도 개선
정책과제	행정계층 간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실태조사
정책과제	재정진단 대상단체선정 및 지방재정진단실기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조회
정책과제	98 회계연도 재정진단 체크리스트 검토의견
정책과제	200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실시(8개 단체 재정진단결과)
정책과제	지방재정건전화측정 관리지침(안)에 대한 의견조회
정책과제	행정서비스헌장 평가결과 보고서
정책과제	99회계년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관련 의견조회
정책과제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 검토의견
정책과제	군용시설관련 주민피해 최소화 및 지역발전촉진 방안
특별과제	지역데이터베이스 구축

■ 2001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기본과제	평가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모형
기본과제	성과측정을 위한 지방 예산회계제도의 기반정비방안
기본과제	재산과세대상의 확대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제도 도입 방안
기본과제	지역 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확산 방안
기본과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기준개발 및 판별시스템 구축
연구자료집	행정서비스헌장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가
용역과제	복식부기도입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계속사업)
용역과제	동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평가
용역과제	200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광역시와 자치구간 지방세 세목조정방안(2000년 이월)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연구(2000년에서 이월)
용역과제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지방도로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및 발전방안
용역과제	지역개발기금 운영·관리체계 개선
용역과제	부천·동두천·여주 3개 시·군 지방재정진단
용역과제	온천의 효율적 개발이용관리 방안
용역과제	의정부시 행정환경 종합진단연구
용역과제	2000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실시
용역과제	복합민원처리제도 개선
용역과제	2001년도 조달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21C 조직 진단모델개발 연구
용역과제	영암군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평가 연구
용역과제	2001 지방자치단체항목 평가가지표 및 자체평가모델
용역과제	함안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인천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및 고객평가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노력도 평가(I)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용역과제	고양시 행정환경 종합진단연구
용역과제	전라북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태평가
용역과제	창원시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공유수면 등 바다의 자치단체 구역설정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제도 발전연구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모형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간이모델(설명서), 결과보고서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용역과제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진해시 행정서비스헌장
용역과제	행자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결과보고서
용역과제	2001 헌장컨설팅 및 고객평가
용역과제	우체국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평가 용역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경기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제 개선방안 및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충청북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이행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장성군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
정책과제	표준정원산식 개선방안
정책과제	통·리·반장제도 개선방안
정책과제	통리장제도 사례연구
정책과제	기채한도액 설정방법개발
정책과제	지방교부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정책과제	민원자동동의제 연구
정책과제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평가
정책과제	지방소도읍의 효율적 육성방안
정책과제	광역자치단체 평가백서
정책과제	주요 국가의 지방재정제도
정책과제	지방정부 행정성과 평가 및 적용모형 연구
정책과제	총액한도제 도입방안
정책과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사업 개발
정책과제	지역발전계약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특별과제	지방인사행정제도 개선방안
특별과제	지방행정기관의 영문표기
용역과제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행정자치부의 역할과 과제
용역과제	지방자치발전 연구

■ 2002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기법의 효율화 방안
기본과제	건전지방재정을 위한 투자심사제도의 개선 방안
기본과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개발과 적용방안
기본과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회계의 연계방안
기본과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세제의 구축방안
기본과제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기본과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연구자료집	Local Government in Korea(소책자)
연구자료집	Public Service Charter in Korea(소책자)
용역과제	지방자치발전연구
용역과제	법령상 사무전수조사를 통한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연구(2001년도 이월사업)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교통정책평가체계 구축(2001년도 이월사업)
용역과제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따른 지방재정보전방안(2001년도 이월사업)
용역과제	목표관리제의 성공적 정착사례 정립(2001년도 이월사업)
용역과제	200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2001년도 이월사업)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2001년도 이월사업)
용역과제	2001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2001년도 이월사업)
용역과제	강남구의회 의회 10년사(2001년도 이월사업)
용역과제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적용(2001년도 계속사업)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2001년도 이월사업)
용역과제	2002 목표관리제 도입컨설팅(2001년도 이월사업)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평가(2001년도 이월사업)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2001년도 이월사업)
용역과제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2001년도 이월사업)
용역과제	경상남도 2001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평가(2001년도 이월사업)
용역과제	하동군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및 고객평가(2001년도 이월사업)
용역과제	과천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지방소도읍 육성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및 이행달성도 조사
용역과제	전라남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의회 10년사(서울 서초구 의회)
용역과제	해운대구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과제	복권시장의 안정화와 자치복권의 발전방안
용역과제	부산광역시 동구청 신청사 건립에대한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행정사 자격제도 활성화방안
용역과제	경기도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운영방안
용역과제	홍천군 행정환경 종합진단
용역과제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주요 선진국의 지방재정제도 비교연구
용역과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방안
용역과제	포항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과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재산세 세원화 연구
용역과제	기초자치단체 평가방안
용역과제	2002년도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 및 제도개선 등 연구
용역과제	오지 낙후지역의 효율적 개발방안
용역과제	2002년도 조달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강릉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
용역과제	남북화해협력시대의 민방위 발전방안
용역과제	200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조합제도 발전방안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감사실효성 확보방안
용역과제	지방통합재정분석기준 설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과제	당진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
용역과제	남양주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과제	수원시 행정기구조직진단연구
용역과제	경상남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
용역과제	중랑 작은도서관 및 면목1동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해상경계설정 방안연구
용역과제	영암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옥천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
용역과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이 지방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과제	진해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
용역과제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창원시 행정조직진단
용역과제	인천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
용역과제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간이모델, 결과보고서)
용역과제	충북 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평가
용역과제	경기도 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태평가
용역과제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장성군 행정서비스헌장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기법개발
용역과제	조치원읍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서귀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평가
용역과제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용역과제	옹진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과제	전라남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조사
용역과제	양주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안산시 상록구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보고서
용역과제	안산시 단원구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보고서
용역과제	의왕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의왕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보고서
정책과제	시설물과 부수시설물의 과표산정체계 개선방향
정책과제	목표관리제 성과목표·성과지표 사례개발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 상근인력 균형관리 및 시간제 활용방안
정책과제	자치단체사무의 지방공사·공단위탁관리와 직영 간의 효율성 비교분석
정책과제	행정구역 경계분쟁조정절차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역낙후지수의 개발과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방양여금 지방비 부담 적정 및 개선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외국의 지역개발 제도 및 실태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 확대방안
정책과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방안
정책과제	지방양여금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정책과제	자치법규 사전보고제도의 운영실태분석
특별과제	2002년도 6·13 지방선거분석
수시과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실현을 위한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중점과제 (제41회 정기총회 및 동북아 연구위원회 국제세미나)
수시과제	한국도시연감 활용도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용역과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사례
재정컨설팅사업	타당성조사 핸드북
재정컨설팅사업	지방자치단체 재정컨설팅 매뉴얼
행정진단사업	행정조직진단 매뉴얼

■ 2003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방안
기본과제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기능 재조정 방향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책임 확보방안
기본과제	지방공무원 계급체계 개선방안
기본과제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기구 및 정원관리개선 방안
기본과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확대 방안
기본과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기본과제	재정보전금제도의 개선 방안
기본과제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운영 실태분석 및 한국적 적용모형 탐색
기본과제	복식부기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분류와 관리 방안
기본과제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방안
기본과제	지방양여금제도의 정책방향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안
기본과제	향토자산 활용 지역축제의 마케팅전략
기본과제	공동주택의 재산세부담 공평성 제고방안
연구자료집	지방세정의 현황과 발전과제
용역과제	김포시 행정기구 조직진단연구
용역과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용역과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용역과제	재산세제도의 개편방안
용역과제	울산광역시 제2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보고서
용역과제	수원 근로자 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보고서
용역과제	음성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제주형 지방자치모형개발 등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남양주 향토사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보고서
용역과제	자산·부채의 평가관리 기준 수립 및 전산시스템
용역과제	신안군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보고서
용역과제	아산시 행정서비스헌장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중랑구 문화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보고서
용역과제	성남시 민간위탁대상사무 타당성 검토
용역과제	대도시 행정체제개편 방안연구
용역과제	효율적인 소방력배치 및 운용을 위한 소방력기준
용역과제	지방재정분석과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과제	군위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보고서
용역과제	동작구 노인휴양소 시설확충에 따른 타당성조사 보고서
용역과제	당진군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외부평가
용역과제	단양군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고객평가
용역과제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진해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평가
용역과제	경상남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용역과제	영암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용역과제	향토산업육성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옥천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북제주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및 행정서비스 군민평가제
용역과제	2003년도 시도 합동평가 지표 및 매뉴얼개발
용역과제	영등포구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용역과제	강릉시 행정기구 조직진단연구
용역과제	인천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충주시 자체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적용
용역과제	2003 서천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원자력의 세제개선방안
용역과제	조달서비스 개선효과 측정을 위한 여론 평가
용역과제	경기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운영실태평가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 확대시범운용 및 표준화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결과보고서, 간이모델설명서)
용역과제	2003년 부산 남구청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장성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서귀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평가
용역과제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남해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용역과제	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용역과제	전라남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재해복구기금조성 및 활용방안
정책과제	자치법규 사전보고제도의 개선방안
정책과제	오지개발지구 재선정
정책과제	국민신분증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정책과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개선방안
정책과제	대도시 행정체제개편방안 연구
정책과제	수해복구사업의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지방소비세의 세입배분방안
특별과제	Local Government in Korea
특별과제	Local Public Finance in Korea

구분	연구과제명
특별과제	Local Development in Korea
특별과제	지방재정전문선택과정교육교제
특별과제	컨트리리포트(한국의 지방자치)
특별과제	복식부기 표준교재개발
특별과제	2003년 국정과제
특별과제	지방분권의 추진방향과 과제
수시과제	중앙정부기능 외에는 지방업무로 규정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수시과제	주민직접 참정권 확대 : 주민투표·주민소환
수시과제	총체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난관리조직의 위상과 기능 강화
수시과제	재난유발 위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실명제 실시
수시과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수시과제	성과제고를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
수시과제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방안
수시과제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수시과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수시과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개선
수시과제	기금 및 특별회계제도 개선
수시과제	지방예산편성지침제도의 성격과 내용
수시과제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의 구축
수시과제	종토세·재산세 과표현실화
수시과제	취득세·등록세의 과표조정과 세율인하
수시과제	지방소비세의 도입
수시과제	탄력세율제도의 활성화 방안
수시과제	국고보조사업제도의 합리적 개선
수시과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수시과제	성과 제고를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
수시과제	주민투표·주민소환
수시과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수시과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수시과제	지방행정 구역 및 계층구조 개편방안 모색

구분	연구과제명
수시과제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수시과제	지방의회제도의 개선
수시과제	지방소득세의 도입
수시과제	탄력세율제도의 활성화 방안
수시과제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수시과제	사후적 재정통제장치의 강구
수시과제	복식부기제도의 단계적 도입
수시과제	대통령주재 시도지사 회의 정례화 및 지역별 광역행정협의회 기능강화
수시과제	자치조직·인사권 등 잔존하는 중앙의 사전규제적 기능 지방에 대폭 이양
수시과제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
수시과제	지방의 낙후지역 이전기업 등에 국가균형발전보조금 차등지급
수시과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및 지역개발사업 간 연계강화
수시과제	지역사업 발굴, 중앙예산 지원창구 일원화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구(RDA) 설립
수시과제	자치입법권의 신장
수시과제	조직·인사권의 강화
수시과제	합리적 기능배분
수시과제	국가의 지도·감독완화
수시과제	중앙감사기능의 재조정
수시과제	'지방자치단체 4단체협의회'의 활성화
수시과제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수시과제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수시과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
수시과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수시과제	신행정수도의 건설
수시과제	공공기관 및 민간중추기능의 이전
수시과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수시과제	낙후지역개발의 촉진
수시과제	지방인적자원의 개발
특별과제	이제는 지방분권시대
지방분권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지방분권	지역 내 전문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 참여실태 및 확대방안
지방분권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지방분권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방안
지방분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지방분권	사무구분 및 배분체계 재정립방안
지방분권	지방감사체계 개선방안
지방분권	지방자치제도의 다양화방안
지방분권	지방세정제도 개선방안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활성화방안
지방분권	경찰사무 중 자치사무발굴방안
지방분권	지방자치권 강화방안1 : 자치조직, 인사권 강화방안
지방분권	지방자치권 강화방안2 : 도시계획권 강화방안
지방분권	지방의정 활성화방안

■ 2004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개선 방안
기본과제	고객서비스 스탠더드 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기본과제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초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사회복지지원업무와 복합민원처리업무를 중심으로
기본과제	지방재정 수요의 전망과 정책 대응
기본과제	재산보유과세의 개편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분석지표 설정방안
연구자료집	일본의 시정촌 합병사례연구
연구자료집	외국 행정서비스 기준의 실제
연구자료집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매뉴얼 번역발간
연구자료집	영국의 지방공공서비스 협약(Local Public Services Agreement)
용역과제	남양주시 영상단지 사업 타당성조사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의왕시 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도입방안
용역과제	옥천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과제	충주시 자체평가시스템구축 및 연구
용역과제	200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용역과제	곡성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자율과 성과지향의 지방예산제도의 개편 방안
용역과제	김천 실내수영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연기군의 미래대비 발전방안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기법·지표 개발 연구
용역과제	경산 장기발전계획
용역과제	국세와 지방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용역과제	낙후지역 선정지표개발
용역과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을 위한 연구
용역과제	청원군 2004년도 자체평가 연구
용역과제	Online Training Course
용역과제	광역교통행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과제	문화재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평가
용역과제	2004 광명시 자체평가 실시
용역과제	진주시 실내체육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2004년 단양군 군정자체평가 실시
용역과제	안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과제	광주광역시 시정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기법개발
용역과제	충청북도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도민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기초자치단체 지표개발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 발전방안
용역과제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2004년도 진해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평가
용역과제	2004년도 진천군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
용역과제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및 고객만족도평가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충청북도 자체평가 지표개발 연구
용역과제	2004년 부산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평가
용역과제	2004년 보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
용역과제	2004년도 옥천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
용역과제	평가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
용역과제	2004년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북제주군 행정서비스 군민평가(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2004년 단양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대행평가
용역과제	아산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남제주군 종합스포츠센터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존관리역량 실태조사
용역과제	문경시 2004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평가
용역과제	아산시 청사증축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부산광역시 시정주요업무 평가지표 개발 연구
용역과제	영암군 행정서비스헌장
용역과제	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용역과제	2004 자치단체 국정시책합동평가 개발
용역과제	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구미시 2004 행정서비스헌장 추진평가에 따른 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예천군 2004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및 고객 만족도 평가
용역과제	장성군 2004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경상북도 2004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영등포구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용역과제	충청북도 주요시책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강남구 행정기구 조직진단
지방분권	지방인사제도의 개편방안
정책과제	지방4단체협의체 기능활성화방안
정책과제	낙후지역 실태분석 및 발전전략
정책과제	지방재정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지방세원의 공동활용방안
정책과제	정보화마을의 발전방안
수시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년사 기록제본
수시과제	신국토 구상 전략보고서 집필
수시과제	한국의 지방자치 영문소개자료
수시과제	LOGOTRI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수시과제	2004년도 합동평가 과제선정 업무
수시과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이론과 실무
위탁과제	중앙권한 차등이양방안(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포함)
위탁과제	사무구분체계와 기관위임사무 정비

■ 2005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성과의 평가
기본과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에 있어서 BSC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방안
기본과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비용산정체계 구축방안
정책과제	지방행정혁신 표준모델개발
정책과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산제도 개선방안
수시과제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사업
수시과제	담배소비량 전망 및 담배소비세에 미치는 영향
수시과제	고객맞춤형 행정에 관한 연구
수시과제	동네(마을)자치 모형개발
수시과제	지방행정혁신표준매뉴얼(2)
연구자료집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 발전방안–이제는분권시대 II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자료집	사무구분체계와 기관위임사무 정비
연구자료집	중앙권한 차등이양방안(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포함)
연구자료집	교육자치
연구자료집	자치경찰 도입방안
연구자료집	지방소비세도입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자료집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안
연구자료집	지방공무원제도 개선
연구자료집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 발전방안–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중심으로
연구자료집	지방선출직에 대한 후원회제도 도입방안
연구자료집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
연구자료집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의 자율적 책임성 확보방안
연구자료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제도 개선방안
연구자료집	주요국의 보유세 제도
용역과제	2004년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실시
용역과제	부천시 고강다목적 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화순군 청사 및 의회건축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원주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과제	수정·중원구 공동화방지 및 시청사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단양군 2005년도 군정자체평가 연구
용역과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실태분석 연구
용역과제	울산광역시 제2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수정본)
용역과제	2005년도 지방재정진단실시 연구
용역과제	충청북도 주요대민업무 청렴도 측정 연구
용역과제	종합부동산세 재원배분방안 연구
용역과제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과제	소지역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용역과제	서신복합문화센터(도서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ACE 용인을 위한 용인비전2020 중장기발전계획
용역과제	자치경찰기구 및 인력편성개발
용역과제	영양군의 혁신적인 행정기구 조직진단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2005년 진천군 자체평가
용역과제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용역과제	자치단체 정보화조직·인력진단
용역과제	지방분권·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중 '지방분권정책의 진단·평가'
용역과제	안양시 시립평촌도서관 증축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2005년도 지방재정분석 실시 연구
용역과제	충청북도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계약사무 개선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과제	서천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조사
용역과제	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음성군 2005년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옥천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용역과제	2005년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개발
용역과제	청주시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 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예산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
용역과제	북제주군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달성도 및 행정혁신활동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2005년도 순천시 행정서비스 운영실태 및 고객만족도 평가
용역과제	광양시정 경영진단 연구
용역과제	2004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용역과제	2005년 보성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영월군 실내체육관 및 청소년수련관건립 타당성
용역과제	2005년 문경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및 고객만족도 평가
용역과제	중장기 지방세 혁신방안 연구
용역과제	선진 지방자치 비전 및 정책토론회
용역과제	2005년 남해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
용역과제	도정 주요시책 주민만족도 조사
위탁과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시범적용을 위한 학술연구

■ 2006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고객만족(CS)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고객관리(PCRM) 도입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및 정착방안
기본과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간 발전적 관계정립 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기본과제	자체평가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기초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전략계획 구축방안
기본과제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기본과제	신활력사업의 추진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수준 진단과 발전방안
기본과제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기본과제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 간 재정분담구조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기본과제	지방투자사업의 자율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기본과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세원배분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의 개선–지방자치단체 평가기본법(안) 구상
수시과제	고객맞춤형 행정에 관한 연구
수시과제	동네(마을)자치 모형개발
수시과제	지방행정혁신표준매뉴얼(2)
수시과제	업무설계의 모형과 과제
수시과제	지역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격차 분석
수시과제	한국의 지방재정개혁과 최근 동향(일본어)
연구자료집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용역과제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확충방안
용역과제	2005 시·도국정시책 합동평가실시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평가, 진단 연구
용역과제	정선군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2006년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연구
용역과제	2006년 지방재정진단 실시연구
용역과제	제주도특별자치도 관련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용역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용역과제	조직운용 및 재설계 연구용역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지방기록관리 혁신 연구
용역과제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과제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지방화 진단과 대응과제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 인력진단 및 적정화방안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역량 강화방안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평가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지방행정혁신 평가지표 개발연구
용역과제	자립형 지역균형발전체계 구축연구
용역과제	용인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과제	전라북도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 연구
용역과제	2006년 지방재정분석
용역과제	장항1공영주차장빌딩 건립 민간투자사업
용역과제	2006년도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개발 연구
용역과제	광명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의왕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모델 유형화 및 공모방안 수립 연구
용역과제	지역생활여건 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6대 생활서비스 DB구축 연구용역
용역과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방안 연구
용역과제	화성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과제	2006년 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주요 선진국의 지방재정분석제도 및 재정규모 비교 연구
용역과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용역과제	2006년 기금운영성과분석결과 확인평가 연구용역
용역과제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연구용역
용역과제	영암군 행정조직 경영진단 연구용역
용역과제	시정 조직진단 연구용역
용역과제	2006 청주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용역과제	음성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용역
용역과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연구
용역과제	삼척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업무 추진평가

■ 2007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평가와 과제
기본과제	협력적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한 광역행정체제 연구
기본과제	지방의회 운영체제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 행정체제 정비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U-City 추진전략과 과제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시스템 구축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성과중심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기본과제	참여정부 재정분권의 수준 측정과 평가
기본과제	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 표준모델 개발 및 활용을 통한 투자가용재원 확충방안
기본과제	사업별 예산과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결산제도의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
기본과제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모형
기본과제	어메니티 기반적 지역발전방안
정책과제	선진국 분권사례 검토
정책과제	실질적 조례제정범위 확대방안
정책과제	선진지방자치 포럼
정책과제	광역지방정부 역할 재정립 방안
정책과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방안
정책과제	사무조사를 통한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 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방안
정책과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지방공무원 보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품질평가제 도입
정책과제	민간단체 경비 이전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재무보고서의 결산 심의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배분 개선 방안
정책과제	유치시설에 대한 과세방안
정책과제	지방세법제 전문화방안
정책과제	등록세 세율개선 방안
정책과제	사업소세 확대 개편방안
정책과제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분석정리
정책과제	도서지역 등 BTL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타당성 분석
정책과제	법령과 제도의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강구
정책과제	지역단위 균형발전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자료집	Local Government in Korea
연구자료집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법적 원리–독일기본법 제29조를 참조하여
연구자료집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재정립을 위한 계약방식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자료집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방안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자료집	지방자치단체의 자산부채실사 결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특별과제	클러스터정책을 고려한 수도권 산업생산성 분석
위탁과제	일본의 공공혁신과 지방정부 성과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마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용역과제	2006년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실시 용역
용역과제	2007년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연구
용역과제	2007년 지방재정진단실시 연구
용역과제	갯벌자원 보전에 따른 군 재정수요 부담 개선 연구
용역과제	전략거점과 지역의 공간 및 주체의 연계 활성화 방안
용역과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제	양주시 재정운영실태진단
용역과제	국제컨퍼런스 Section별 용역
용역과제	2007년 지방재정분석 실시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충청북도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태백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용역과제	영주시 행정조직 진단 연구용역
용역과제	옥외광고 개선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연구
용역과제	제주도 한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2007 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 연구
용역과제	2007년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평가지표 개발 연구
용역과제	지역생활여건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보성군 조직진단 연구용역
용역과제	도산공원지하주차장건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평가
용역과제	2007년 주민서비스혁신 업무추진 평가실시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
용역과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적정 소방력 기준산정 관련 연구
용역과제	지방세 조직인력 표준모형개발 연구
용역과제	천안시 불부합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과제	시·군·구 유형별 민관협력체계 실태 및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용인시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
용역과제	지역생활여건개선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마련 연구용역
용역과제	자치경찰 인적자원 확충 및 능력개발방안 연구
용역과제	천안시 일반구청사 위치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과제	지역균형발전 중장기 어젠다 연구

■ 2008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지방행정의 유사중복기능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연구 :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기본과제	자치경찰제도 확대 및 강화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기본과제	사업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정착방안
기본과제	광역경제권도입에 따른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기본과제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방안
기본과제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지방재정 위기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기본과제	지역 간 경제협력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기본과제	지역 브랜딩 활용 실태와 실행전략 연구
기본과제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분석 변화분석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기본과제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설정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분쟁조정기능 강화방안 연구
정책과제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일반구–대동제 비교연구
정책과제	시·도–시·군·구 간 인사갈등 해소방안 연구
정책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여론조사 및 심층조사
정책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효과분석
정책과제	지방기금 성과분석 지표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평가방안
정책과제	토지분 재산세 과세체계 개선방향
정책과제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연구
정책과제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에 따른 운영 방안 마련
정책과제	지역발전교부세 및 성과시책수요 신설
정책과제	지역재생 및 지역활성화사업 시책개발
정책과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촉진방안
정책과제	도서지역 통계 DB구축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연구
정책과제	기초생활권형성 및 발전촉진방안
정책과제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정책과제	지역 간 협력사업 활성화 촉진방안
정책과제	지역갈등사업 협력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정책과제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자체과제	사무조사를 위한 법령입력 및 사무배분기준(안)에 관한 연구(II)
자체과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
용역과제	2008 충청북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용역과제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지표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용역과제	예산군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용역과제	해남군 행정조직 경영진단 연구용역
용역과제	용인시 종합복지센타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용역과제	2007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
용역과제	전봇대 도로점용료 현실화
용역과제	창원시 재정운영실태 진단
용역과제	2007년도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용역과제	2008년 군정 자체평가 연구용역
용역과제	낙후지역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용역과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용역과제	2007년 하반기 합동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용역과제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 광역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를 위한 BSC 표준지표 개발
용역과제	2008년도 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기초생활권 계획수립을 위한 매뉴얼 개발
용역과제	충청북도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만족도 조사
용역과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용역
용역과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수시과제	광역경제권의 추진체계 – 포괄보조금 및 광역본부 설치

구분	연구과제명
수시과제	2008년도 지방재정분석기준과 지표선정 및 절대기준 설정
수시과제	광역경제권 발전의 추진기구
특별과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안
특별과제	미래공공서비스– 지방분권 분야 추진체계
특별과제	실용정부시대의 지방행정조사 중 '전국 214개 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의식조사'
특별과제	새 정부에 바란다–지방자치를 중심으로

■ 2009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재정분권과 지방소비 · 소득세
기본과제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지방자치법 60주년의 회고와 과제
기본과제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역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기본과제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운영실태 및 효과성 분석
기본과제	유비쿼터스 기반의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를 중심으로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질서 확립방안–주차질서를 중심으로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례연구
기본과제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성과 및 행정발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전략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자산 측정 및 관리방안
기본과제	저탄소녹색성장의 지역경제발전효과 추정 및 극대화 방안
정책과제	경제살리기 3대 분야 '2009년 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 가중치 선정
정책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소방행정제도 개선방안
정책과제	자치단체 통합을 둘러싼 갈등해소 방안
정책과제	국가광역행정기관 설치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국가–지방 간,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재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자치단체 통합기준 및 통합방안 연구
정책과제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현황 및 개편사례
정책과제	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방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교육 효과 분석
정책과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방안
정책과제	조례입법권의 실효력 확대
정책과제	지방소득·소득세 도입관련 핵심쟁점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범위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정책과제	지역협력촉진 법령연구 및 시안마련
정책과제	자전거제도 해외사례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지표개발
정책과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실행방안
정책과제	희망근로프로젝트의 투입모형 및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정책과제	시·도 교육훈련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정책과제	기관위임사무 및 법령수임사무에 대한 행·재정 지원방안
정책과제	국제화시대의 효율적 주민관리제도 연구
정책과제	효율적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조직 개선방안
정책과제	선진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준 조사분석 연구
정책과제	공직사회 활력제고 방안
정책과제	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과와 개선과제
정책과제	지방공무원 보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보통교부세제도 합리적 산정방식 개선
정책과제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진단지표 개발
정책과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경영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운영개선방안
정책과제	지역발전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역통계 재정비 방안
자체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
수시과제	수도권 규제 합리화 효과 측정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수시과제	신국민운동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완
수시과제	성장촉진지역 발전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수시과제	비닐하우스 CO_2 저감방안
수시과제	합동평가 적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지표
공동과제	정부간 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공동과제	군사시설 관련 갈등관리 실태진단
공동과제	북한지방행정체제의 실태 및 향후 대책
특별과제	지방행정체제개편
연구자료집	해외 지방정부에서 배운다
연구자료집	알기 쉬운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자료집	지방행정체제개편 해외사례(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찾다)
연구자료집	지방재정이슈 모음집
연구자료집	안전도시 만들기
연구자료집	외국의 지방재정개혁 사례
연구자료집	지방소득·소비세 길라잡이
용역과제	미래지향적 지방세 비과세·감면 모델 정립을 위한 용역
용역과제	가평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기능 및 인력진단 용역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모델 개선(대외비)
용역과제	공유재산 위탁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용역과제	고창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용역과제	낙후지역 중소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용역과제	2009년 재난안전정책연구사업
용역과제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예방체계구축 연구
용역과제	도시안전을 위한 방범CCTV 구축의 과학적인 계획 및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연구개발
용역과제	국가위기유형별 핵심보존가치 및 지표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국가 재난관리 표준개발
용역과제	안전관리표준화연구
용역과제	재난 및 안전관련 효율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용역과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분석 연구용역
용역과제	2009년도 진천군 군정 자체평가 연구용역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법령상 사무 총조사 연구용역
용역과제	고질적, 반복적 비리 발본색원을 위한 지자체 내부통제 강화방안 연구용역
용역과제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연구용역
용역과제	경기도 인력관리계획 수립용역
용역과제	2009 기초생활권 정책추진 교육위탁사업 용역
용역과제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주민 의견조사
용역과제	제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용역과제	200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용역과제	성과관리시스템 지표품질향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위탁과제	지방세 체납관련 세무행정의 개선방안(지방 출연금 집행 과제)
위탁과제	지방분권과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지방 출연금 집행 과제)
위탁과제	부동산 보유세체계 개선방안 연구(지방 출연금 집행 과제)
위탁과제	지방세법규정보시스템 구축(지방 출연금 집행과제)
위탁과제	외국의 광역권 행정체제와 시사점(OB 과제)

■ 2010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2020년 지방자치의 발전모형
기본과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패러다임 전망과 모형설계
기본과제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 구축
기본과제	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기본과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개편
기본과제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신지역개발정책연구
기본과제	녹색성장 잠재력에 기초한 지역특화발전 전략
정책과제	기형적 행정구역 조정
정책과제	대도시 자치구 조정방안
정책과제	지방행정체제개편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정책과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융합관리 방안
정책과제	시·군 통합 효과분석 모델개발
정책과제	통합시 행정에의 주민참여 제고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읍·면·동 개편모델 연구
정책과제	주민자치회 설치모형 및 시범실시
정책과제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제도 보완 연구(대외비)
정책과제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정책과제	DB 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방안
정책과제	대도시 사무특례 발굴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과소군의 행정효율화 방안(대외비)
정책과제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문제와 특성분석
정책과제	경제활동과 지방세원의 연계 문제(위탁연구)
정책과제	채무과다지역 심층분석 및 조치방안
정책과제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 실태 분석(대외비)
정책과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 방안
정책과제	자치단체 분쟁·갈등의 해결지원 강화 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사회단체장 겸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외비)
정책과제	주민등록표 수기원장의 효율적 관리방안(대외비)
정책과제	새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운동 추진방안 연구(대외비)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개발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방안(대외비)
정책과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확대방안
정책과제	생활공감정책 활성화 방안연구
정책과제	공무원 생활실태조사(대외비)
정책과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 향상 방안
정책과제	2000~20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대외비)
정책과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다른 행·재정 수요 판단
정책과제	지방재정분석제도 개편
정책과제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 평가
정책과제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감면조례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지방소비세 시·도별 안분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외비)
정책과제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 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지역자원시설세의 개편 방안
정책과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체계 개편 방안
정책과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방안 연구(대외비)
정책과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지방세제 개편 방안
정책과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세원이양에 대한 연구
정책과제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정책과제	시·군·구 지역경제력지수 개발 활용
정책과제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활용한 지역성장동력 제고방안
정책과제	세계자전거대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정책과제	자전거보유 및 이용실태 종합분석
정책과제	바람직한 광역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발전방안 연구
정책과제	기초생활권 재정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과제	한눈으로 보는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
정책과제	지역발전정책 활성화 관련 교육교재 개발
정책과제	도서지역 개발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역개발사업 성과평가 문제점 및 분석지표 개발
정책과제	자립형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자체과제	조직진단 매뉴얼의 재설계 방안
수시과제	지자체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 전략
수시과제	지역개발사업 유사중복 문제 및 개선방안
수시과제	외국의 지방자치 추진실태 분석
수시과제	행정안전부 핵심브랜드 선정
수시과제	통합 창원시의 문화적 통합을 위한 컨설팅 지원계획
수시과제	서민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방안 검토(비공개)
특별과제	자치연감
용역과제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용역과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여론조사
용역과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추가 여론조사(2차)
용역과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추가 여론조사(3차)
용역과제	경쟁원리 도입 및 재정성과 반영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친환경·녹색 재산세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과제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연구용역
용역과제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
용역과제	기초단체장 직무가이드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실태 분석 진단
용역과제	2010년 지방재정분석
용역과제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산업육성 개선방향 연구
용역과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용역과제	통합창원시 조직진단
용역과제	품격 높은 도시 창조, 일 중심의 행정조직 설계
용역과제	희망군위 일 중심의 행정조직 설계
용역과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방법 연구
용역과제	2010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진단
용역과제	인허가관련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
용역과제	지방의 복지재정수요 대응 분권교부세 개선과제
연구자료집	지역주권형 도주제 안내서
연구자료집	일본 지방공무원의 인력관리 특징과 시사점
연구자료집	중국의 현재와 지방재정
연구자료집	ICLEI 녹색성장 해외 사례
위탁과제	주요국의 지방선거제도 비교연구
위탁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관련 법률개정방안
위탁과제	소방인력 3교대 충원실태 분석진단(행안부 자치제도과 대외비 요청)
위탁과제	보건진료소 기능인력 운용실태 분석진단(행안부 자치제도과 대외비 요청)
위탁과제	법령상사무총조사 시스템 고도화
위탁과제	금융기관에 대한 지방세 과제적합성에 관한연구(정책과제로 대체)
위탁과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지방세제 개편방안 연구(정책과제로 대체)

■ 2011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1.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기본과제	2.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기본과제	3.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기업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기본과제	4.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기본과제	5.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기본과제	1. 단일의 직접공급 방식 : 사회복지서비스의 바우처 방식을 중심으로
기본과제	2. 단일의 간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 민간위탁 발전 방안
기본과제	3. 협력적 직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 공공위탁을 중심으로
기본과제	4. 협력적 간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기본과제	1. 기획관리 역량 강화 전략
기본과제	2.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 관리역량 강화 전략
기본과제	3.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리역량 강화 전략
기본과제	4. 지방자치단체 갈등 관리역량 강화 전략 : 지역갈등 관리를 중심으로
기본과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기본과제	1.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 확충 방안
기본과제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영향분석과 구조개선 방안
기본과제	3.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 개선 방안
기본과제	4.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내부 견제시스템 확충방안
기본과제	5.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개편 방안
기본과제	6. 지방재정준칙의 도입 방안
기본과제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포괄보조금제도 발전방안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기본과제	과세자주권 제고와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기본과제	1. 통합 취득세 개선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2.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3.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한 주행세 개편 방안
기본과제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연구
기본과제	1.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성 분포특성과 증대방안
기본과제	2. 창조자원을 활용한 걷는 길 사업의 개선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3.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 방안
기본과제	4.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사례와 활성화 방안
기본과제	5. 지방자치단체 문화개발사업 개선 방안
기본과제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
기본과제	1. 한국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육성방안
기본과제	2.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성과분석 및 활성화 전략 :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을 중심으로
기본과제	3. 지역 특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
기본과제	4. 지역 녹색일자리 육성방안 연구
정책과제	지방행정의 공정성 체감도 조사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정책과제	세종시 읍·면·동 경계조정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통합 정책효과 분석
정책과제	지자체 행정 컨설팅 매뉴얼 개발(행안부 인쇄)
정책과제	2011년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및 서비스 제공방안
정책과제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제도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인감 대체방안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연구
정책과제	자치단체 보수관련 해외사례 비교 연구
정책과제	특수경력직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인사 공정성 제고 방안
정책과제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방안 연구
정책과제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 보좌인력 채용제도 개선
정책과제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을 통한 사회통합지원정책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기초 예시 사무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방재정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기준 개선에 대한 연구
정책과제	지방세 과세품질 제고 방안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지역자원의 상품화 개발지원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과제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 금고 적정규모 연구
정책과제	지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방도로 재원지원 방안
정책과제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지역 발전정책의 구상
정책과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방안
정책과제	화장실의 국제적 수준 제고를 위한 시설비교
정책과제	지역연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과제	DMZ 일원 통합 정보화 기반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정책과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과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금 조성
정책과제	이·통장의 법률근거 마련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특별과제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의견조사(매경 공동)
수시과제	2012년 지방자치 전망
수시과제	2011년 지방재정분석 방향과 지침
수시과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기관 지정 요건
수시과제	성별영향평가와 지방성인지예산제도의 쟁점과 과제
수시과제	중미 국가의 지방행정체제 비교
수시과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지표개발
위탁과제	OECD 국가의 내무행정 조직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강화군 조직진단 학술연구
용역과제	경북교육청 산하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과제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구역관리체계
용역과제	청주·청원 통합시 모델제시를 위한 연구
용역과제	수원·화성·오산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주민의견 조사
용역과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핵 의학·과학 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서초구민회관 재건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수수료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
용역과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및 사무국의 위상정립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위한 일부 부문별 발전계획 및 계획의 집행방안 연구
용역과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수요예측 및 표준모델 구축방안 연구용역
용역과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현황 분석 및 재정지원방안 연구
용역과제	해양국립공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용역과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발전 모델 연구
용역과제	거창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연구
용역과제	낙후지역 발전모델 개발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인프라 구축방안
용역과제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연구
용역과제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과제	대도시 특례 확대 연구
용역과제	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과제	저탄소 녹색마을조성 시범사업 기본조사 및 타당성
용역과제	2011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실태 분석·진단 연구
용역과제	행정안전부 반부패 청렴도 향상방안
용역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방안
용역과제	부산사회체육센터 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여론조사 연구
용역과제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성 확보방안 연구
용역과제	내진설계 건축물 지방세 지원방안 연구
용역과제	지방세 정액세율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2011년도 지방재정 분석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 검토 연구
용역과제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연구
용역과제	통일준비 부처별(행정 및 사회) 정책과제 개발
용역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용역과제	2011 지역발전 컨퍼런스
용역과제	행정계층별 기능분석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11년도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확산 노력 평가
용역과제	시·군·구 간 경계조정 추진방안
용역과제	연구용역 읍·면 순회 설명회
용역과제	특·광역시 자치구 및 군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과제	지역 공공문화 기반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연구
용역과제	포괄적 안보개념의 국민보호를 위한 기반구축
용역과제	청원시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과제	201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용역
용역과제	금대리 저탄소 녹색마을 기본조사 및 타당성연구
용역과제	재정지표 부진단체 재정건전성 분석 및 평가 매뉴얼설계
용역과제	지역유형별 자치제도 개선
용역과제	저탄소 녹색마을사업 운영정관 및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연구자료집	일본의 기구 및 정원관리
연구자료집	한국의 지방자치(영문 소책자)
연구자료집	한일지방자치제도 연구토론집
연구자료집	일본 지방교부세제도 운영 매뉴얼
연구자료집	지역일자리 창출의 미래전략

■ 2012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시스템의 다양화 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구성과 활용 방안
기본과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 방안
기본과제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기본과제	새로운 지방예산제도
기본과제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기본과제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기본과제	지역쇠퇴 분석 및 재생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지역 공동체 주도의 발전 전략 연구
정책과제	자치단체 도시행정의 한계와 지원기능 강화 방안
정책과제	결혼이민자의 지역정착과 지원방안 연구
정책과제	자치단체 성과관리 미래모델(IPRM) 개발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행정사 전문자격서비스의 시장 전망 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정책과제	나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과제	국가정책의 "(가칭)지방 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정책과제	선진형 지방자치제도(독일)
정책과제	선진형 지방자치제도(프랑스/미국)
정책과제	선진형 지방자치제도(일본/영국)
정책과제	대도시 일반구 제도개선 방안
정책과제	2012년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령상 사무 재정립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일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연구를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지방공무원 복리후생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정책과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분쟁조정기능 제고방안 연구
정책과제	우체국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 방안
정책과제	동의 합리적 규모 연구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 성과 비교분석 연구
정책과제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지역 발전 지표 개발 방안
정책과제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방안
정책과제	자치단체 이전재원 활용 분석
정책과제	지방공기업의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추진전략 연구
정책과제	국민운동단체 국고보조금 평가지표 설정 연구
정책과제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사업 구조화 방안
정책과제	지방상수도 운영의 다각화 방안
정책과제	자치단체 브랜드 세계화 전략 수립 및 관리 방안
정책과제	자전거길 안내표지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정책과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의 역할
정책과제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방안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4대강 자전거길 조성현황 분석 및 효과적 관리방안
정책과제	자연체감형 자전거길 조성실태 분석 및 지역경제 연계 방안
정책과제	자전거길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운영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정책과제	서해5도 지원정책 성과 분석
정책과제	광역자치단체의 삶의 질 지표 측정
용역과제	2012년 조직진단 용역
용역과제	광양시 조직진단
용역과제	2011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용역과제	거창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용역과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방안
용역과제	서초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자료 작성
용역과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용역과제	호남권 기초지자체 연계협력사업 발굴
용역과제	재원조정교부금 재원변경에 따른 재원비율 분석 및 산정방법 개선
용역과제	지방녹색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지속발전방안 연구
용역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원수대금 원가산정 및 부과체계 개선
용역과제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재정지표 부진단체 심층진단
용역과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용역과제	예비군 중대의 운영과 역할 연구
용역과제	지방공무원 생애주기를 고려한 합리적 교육과정 개편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실태 분석·진단
용역과제	20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용역과제	2012 지방재정분석
용역과제	미래를 창조하는 지역 간 상생협력과 공동발전 전략
용역과제	상각자산 등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연구용역
용역과제	2012년 지역발전 연계협력사업 교육위탁
용역과제	의무·재량지출 구분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구조 비교분석
용역과제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용역과제	도서지역 교통여건 개선 및 개발활성화 방안연구
용역과제	2012 시·군 종합평가 대비 시책담당자 워크숍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성동소방서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점검·평가 및 재정위험 자체점검 매뉴얼 개발
용역과제	재정진단 자치단체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연구
수시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 제고방안
수시과제	울진군 EXPO 기본계획 수립
수시과제	울진군 해양경찰서 입지 타당성 검토
연구자료집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지역주민
연구자료집	해외 자치단체 성과관리 제도
연구자료집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전략
연구자료집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매뉴얼
연구자료집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시범적용 결과분석 및 시사점
자체과제	격차인식과 지역상생
자체과제	남북 교류협력 분야별 실태점검 및 추진방안
출연과제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 특화지역 조성
출연과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명품화 전략 개발
출연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시·군 통합 대응전략
위탁과제	스페인·인도의 지방자치제도
위탁과제	인도의 지방자치제도

■ 2013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지방3.0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와 운영전략 연구
기본과제	정부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방안
기본과제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기본과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기본과제	새마을운동 재조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본과제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해 주민안전망 구축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4대 악) 역할 및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기본과제	지방재정관리체계 개선방안–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기본과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
기본과제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방안 –지역균형수요와 차등산입률 제도를 중심으로
기본과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본과제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본과제	지역주도형 지역산업 육성방안
기본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불균형 해소방안
기본과제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정책과제	청소업무 외부용역 수행과 직접 고용 비교 분석
정책과제	행정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실태 및 정비방안
정책과제	2013년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령상 사무 재정립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 운영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컨설팅 모델 개발
정책과제	지방의회 지원체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안심마을 만들기 표준매뉴얼
정책과제	불법 주정차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표면재) 수수료 산정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운영실태 및 발전·지원방안 연구
정책과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 근로자 인사관리 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지방자치헌장의 제정방안
정책과제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주민청구요건 분석과 시사점
정책과제	정부 3.0 구현을 위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연구
정책과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시설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방재정건전성 분석지표 개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분법화 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정책과제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정책과제	어린이놀이공간 안전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연구
정책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방안
정책과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자전거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글로벌 도시 대구 조성 기본구상
정책과제	경계지역 마을만들기 추진모형 개발
정책과제	경기도 지방교육자치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 확충방안 –지방세무 조직·인사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과제	경상남도청 서부청사의 효율적 운영 및 조직구성 방안
정책과제	행정시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 설치·운영방안
정책과제	섬지역활성화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정책과제	과태료 부과·징수제도 개선방안–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新 도시경쟁력지수(지표) 개발
정책과제	부산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연구(I)
정책과제	울산광역시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
정책과제	충청북도 융복합관광 발전전략 수립
정책과제	광주 빛고을 3.0 추진전략 및 과제
정책과제	강원도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지방3.0 구현을 위한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출연과제	울진군 장기종합계획 수립
출연과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출연과제	신정부 정책변화에 대응한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수시과제	공중화장실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효과성 연구
수시과제	경찰직급구조 개편방안
수시과제	지방자치단체 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 통합방안
수시과제	지방재정 현안과제 분석과 정책방향
수시과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구
수시과제	201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연구자료집	미국의 정부 간 관계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자료집	지방3.0 구현을 위한 매뉴얼
연구자료집	지표로 보는 지방자치연감
연구자료집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한·일 지방공무원 인식조사
연구자료집	한국의 지방자치(Local Government in Korea)
공동과제	주민체감형 지역격차 인식과 지역상생 발전방안
공동과제	지역에서 바라본 중추도시권 추진 구상
공동과제	분권교부세가 지방재정운영에 미친 영향
자체과제	새마을운동 ODA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용역과제	통합 청주시 4개구 구역획정 및 청사위치 선정 연구
용역과제	공동체 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
용역과제	통합 청주시 조직설계 연구용역
용역과제	삼척시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한강수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구의 개편방안
용역과제	2012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 총괄 분석 연구
용역과제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정공시 개선방안
용역과제	재정지표 부진단체 심층진단 및 재정진단평가 모형 설계
용역과제	마을진단 지표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비전 2025'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용역과제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예산군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
용역과제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세부기준 마련 연구
용역과제	신도청시대 대비 효율적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과제	지역행복도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용역과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용역과제	수원권 광역행정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용역과제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용역과제	국고보조사업 종합진단체계 구축 및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2014 시·군종합평가 대비 지표담당자 컨설팅
용역과제	새로운 판별기준에 따른 국가 총사무 재배분조사표 작성 용역
용역과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용역과제	예산군민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
용역과제	지역 창조경제 발전 추진방향 및 과제 발굴 연구
용역과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방안 개발
용역과제	2014년 시·군 종합평가 대비 정성평가 지표담당자 컨설팅

■ 2014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자맞춤형 서비스공급 구축방안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분석
기본과제	읍·면자치 도입방안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칸막이 현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중간관리자의 역할 및 행태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원인분석과 관리방안
기본과제	지역생활권 삶의 질 분석 및 지역격차 해소방안
기본과제	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기본과제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창조환경 조성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평가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지표 및 매뉴얼 개발
정책과제	인구 50만 이상 시의 대동제 실시방안 연구
정책과제	① 주민번호 외 개인식별 방안
정책과제	② 현행 주민번호의 변경허용 범위 및 방법
정책과제	③ 신규번호 및 증 발행번호 적용대안
정책과제	④ 각국의 신분증 제도 연구
정책과제	⑤ 주민번호 외 개인식별 번호도입의 비용추계 방안
정책과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정책 수행 실태조사
정책과제	CCTV 설치사업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정책과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
정책과제	설문조사 – 지방자치발전 인식 조사
정책과제	원스톱 민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명확화 방안
정책과제	희망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해외 주요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제도 연구
정책과제	미국·일본·독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체계 및 운영현황 연구
정책과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지방조직 컨설팅
정책과제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여건 및 전망분석을 중심으로
정책과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가칭)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방안
정책과제	재무결산 정보의 이해도 제고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방안
정책과제	긴급재정관리제도 외국입법 사례조사 및 정책제언–긴급재정관리제도 법제화 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Ⅰ)–현재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우발부채 관리방안 연구
정책과제	재정진단 자치단체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정책과제	지방규제 실태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정책과제	새마을금고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2008~2017) 계획 변경(안) 타당성 검토
정책과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부산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연구(II)
정책과제	대구광역시 ODA사업 추진 방안
정책과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마을복지문화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정책과제	대전광역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점검·개선 모델 개발
정책과제	도시경쟁력과 행복결정요인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방안
정책과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정책과제	오송전시관 설립 기본구상 연구
정책과제	충청남도 에너지비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정책과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추진방향 마련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초고령사회 대응 전남노인복지 수요 분석
정책과제	경북형 경로당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경상남도 행정지원인력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무기계약근로자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개인재산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가칭)세종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자체과제	지방자치발전 기본계획
자체과제	지역축제 분석 및 발전방안
자체과제	지방재정사 발간 계획수립
자체과제	2014 지방재정분석 지표개선 및 평가방법 개편
수시과제	자치단체장 연임제도 검토방안
수시과제	지방3.0 실천매뉴얼 개발
수시과제	지방3.0 평가체계 개발
수시과제	도로명주소 신분증 기재 및 라벨부착 실태조사

구분	연구과제명
수시과제	제2차 도로명주소 신분증 기재 및 라벨부착 실태조사
수시과제	왕피천유역 생태문화 체험벨트 조성
수시과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지방자치 이슈의 변화–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수시과제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수시과제	정부 세출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영향 및 지자체 대응방안
수시과제	울진군 청사 이전 타당성 검토
수시과제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표준 매뉴얼
수시과제	특수상황지역 주민 만족도 조사분석
연구자료집	재난대응 민관협력실태 자료집 –"세월호"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자료집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 변화와 동향
연구자료집	생활권협력사업 사례자료집
연구자료집	2014 정책아이디어 자료집
공동과제	지방3.0 지역 유형별 모델개발
공동과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출연과제	울진군 해양관광·레포츠 및 스포츠 마케팅 발전방안
출연과제	울진군 농촌형 고령친화사업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모델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안 후속조치 방안 연구
용역과제	지자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방안 연구
용역과제	지역주민 행복도 조사
용역과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2단계)
용역과제	논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및 재설계 연구
용역과제	국가안전지수 개발 연구
용역과제	경기도 간접고용 근로자 고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정읍시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
용역과제	옹진군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지자체 통합지출관제도 운용방안 연구
용역과제	2013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총괄분석
용역과제	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2030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제	농업회사 빛그린매실(주) 현물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과제	2014년 음성군정 자체평가
용역과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용역과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 및 진단 연구
용역과제	예천군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생활권 선도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용역과제	선진형 지역공동체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용역과제	정읍시 공동체육성 활성화사업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2014 보성군 조직개편 진단
용역과제	안성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용역과제	도시철도의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과제	공공도서관 행재정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경제자유구역 사무 및 일부 완료지구 졸업 등 관리제도 개선방안
용역과제	지방3.0 지역유형별 모델 개발
용역과제	특별법 제도개선 제주-국회의원 공동세미나

■ 2015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연구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기본과제	국가 재난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활용 방안
기본과제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기본과제	과소군의 행정관리 효율화 방안
기본과제	지역공동체와 리빙랩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 도입방안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스마트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공공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강화
기본과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기본과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개편방향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수요 전망과 재원확충방안
기본과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성과창출방안
기본과제	지방 SOC 생산성 분석 및 발전방안
정책과제	이북5도위원회 발전방안
정책과제	소방인력 배치기준 연구 및 개선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 20년 평가
정책과제	국정협력의 평가제도 연구
정책과제	지방공무원 직렬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아파트 단지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정책과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정책과제	지자체 조직·인사정보 공개지표 개선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일하는 방식 컨설팅 매뉴얼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기구 책정 기준 다양화
정책과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소통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지방공무원 성과평가지표 개선 연구
정책과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검토 및 개선
정책과제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법정화 및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보통교부세 표준행정수요 산정모델 개발 연구
정책과제	공유재산의 유형별 효율적 계약방법 개선방안
정책과제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
정책과제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향교·서원 및 도심 폐공장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구
정책과제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경영개선 방안연구
정책과제	부산지역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진단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지방교육재정 전출제도 개선방안
정책과제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표 개발 및 실태 분석
정책과제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개선방안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중심으로
정책과제	울산광역시 관광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정책과제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조기 일시납부 할인제도와 체납액 해소방안
정책과제	동계올림픽 이후에 대비한 강원도 재정운영 발전방안 모색
정책과제	충청북도 남부 · 북부권 중핵도시 육성방향
정책과제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정책과제	전라북도 BSC직무성과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책과제	청년층 농산업 분야 취농 · 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2015년도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검증 연구
정책과제	경상남도 재경학숙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과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립 · 운영 방안
자체과제	2015년도 지방자치연감 지표로 보는 한국의 지방자치
자체과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자치단체 행정수요
수시과제	지방도로 관리재원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수시과제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수시과제	지방자치 비전 체계 및 선언문(안)
수시과제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산정방식 개선
수시과제	책임읍 · 면 · 동(행정복지센터) 성과분석 및 주민 · 공무원 만족도 조사
수시과제	지방특수상황지역 주민 만족도 조사
공동과제	도시 및 지역재생 전략
공동과제	지역주력산업의 ICT 융합사례와 발전 전략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재정한계능력 도출 및 평가
용역과제	2015년 지역생활권 지표 개발 및 주민행복도 조사
용역과제	의성군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및 평가
용역과제	인구 120만 광역행정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조정(분구) 연구
용역과제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방안 연구
용역과제	2015년 합천군 조직진단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행정자치부 규제의 비용총량제 및 비용분석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방안
용역과제	지역생활권 운영실태 분석 및 선도사업 평가지표 개발
용역과제	지방자치 20년 평가 연구
용역과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평가 및 전달체계개편 모형 개발 연구
용역과제	2030 공주시 비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제	2015년 생활권 주민행복도 DB구축 및 사례조사
용역과제	부천시 행정복지센터 시행방안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 및 진단
용역과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용역과제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적정 조직운영방안
용역과제	2014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총괄분석
용역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강화연구
용역과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용역과제	효율적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과제	도서관리 효율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용역과제	지역공동체행복지표(특성) 개발 연구
용역과제	주의등급단체 심층진단 연구
용역과제	도시가스사 안전지수 고도화 및 측정 용역 과제
용역과제	지방이양 완료사무 효과분석
용역과제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
용역과제	세월호 피해관련 안산지역 공동체회복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체복합시설 설치방안
용역과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모니터링 방안 연구
용역과제	2015년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조직정밀진단 연구용역
용역과제	진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용역과제	가평군 조직진단 연구용역
용역과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영향연구(OGI) 2차 보고서 작성 용역
용역과제	칠곡군 조직진단 연구용역
용역과제	한국해운거래정보원 법인 설립 방안 연구
출연과제	남원시 지방보조사업의 평가기준 설정방안

■ 2016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과소지역 맞춤형 행정체제 정립방안 연구
기본과제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해결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통합정책 연구–한국과 독일의 사례 비교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개선방안–대체인력뱅크 제도를 중심으로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성공요인 분석 연구
기본과제	기초의원 자체역량 강화방안 연구
기본과제	생활자치의 개념과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적 관리방안
기본과제	고령화의 지역경제효과분석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방안
정책과제	하부행정기관 업무·사무량 비교분석 및 외국사례연구
정책과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시·도–시·군·구–읍·면·동의 기능조정방안 연구 – 보건, 복지, 여성, 가족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인감증명의 기능 및 활용분야의 비교분석을 통한 인감증명서 요구 최소화 방안연구
정책과제	직렬과 실제업무간 불일치 실태조사 및 인식·만족도 조사
정책과제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 개발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이·통장 운영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예시 보완
정책과제	지방공무원 직위분류제 확대 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
정책과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간 사업중복 최소화 방안
정책과제	전지역 공통수요 지역개발 사무 투자현황 조사
정책과제	지방채무 총량관리방안
정책과제	재정진단 자치단체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정책과제	광역–기초 간 지방 공동재원 운영방안 연구
정책과제	마을기업 신유형 연구
정책과제	새마을운동 ODA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정책과제	섬의 인구변화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지자체 주민생활공간 디자인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정책과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정책과제	지방분권 실태 진단분석–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정책과제	산업단지 조성시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구축방안 마련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정책과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개발
정책과제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본구상 연구
정책과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의 합리적 운영 방안–적정 자동차 공채매입율을 중심으로
정책과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기본계획 연구
정책과제	경기도 과적차량 단속 지원체계 구축방안
정책과제	지역개발 제한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 MRO 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핵심지원시설 구축 타당성 분석
정책과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추진전략–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전라북도 조직개편(안)의 타당성 검증
정책과제	문화예술융합형 전통시장 육성방안 연구
정책과제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방안 검토 연구
정책과제	경남대표도서관 발전전략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정책과제	「헌법」에 기초한 특별자치 외국사례 조사 및 제언
자체과제	2016년 한눈으로 보는 지방자치연감
수시과제	남원시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 신규사업발굴 컨설팅
수시과제	통일 이후 북한의 지방자치제도 실시방안
수시과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관련 서베이 조사
수시과제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수시과제	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 도입방안 연구
수시과제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실적 평가지표 개발
수시과제	온천이용자 만족도 설문항목 개발
수시과제	사회통합 관련 어젠다 및 세부사업 발굴
수시과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관련 지역주민 의견조사

구분	연구과제명
공동과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공동 대응방안 마련
공동과제	시·도연구원 수행 정책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방안 분석
출연과제	2015년 남원시 보조사업 평가
용역과제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체계 개선
용역과제	포항시 조직, 인력진단 연구
용역과제	함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용역과제	평택항과 연계한 3개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연구
용역과제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
용역과제	신안군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보통교부세의 합리적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빗물이용시설 효과 분석
용역과제	스페이스 살림 경제성 확보 및 차별화 전략 수립
용역과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중간평가 연구
용역과제	서해5도 종합발전 변경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
용역과제	위탁개발사업 매뉴얼 구축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용역과제	주요복지사업 지방비 부담개선방안
용역과제	청주시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및 평가
용역과제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용역과제	지역맞춤형 선도사업 성과창출 연구
용역과제	세종형 자치행정 모델 개발 연구
용역과제	과거사 정리 등을 통한 사회통합 정책방향 연구
용역과제	보통교부세 보정계수와 보정수요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용역과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 및 진단 연구
용역과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
용역과제	폐철도지역 진흥 및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주민생활환경지표 개발연구
용역과제	주의등급단체 심층진단 및 진단제도 개선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보완 연구

■ 2017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고령사회 대비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기능 분담방안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 평가 및 발전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적정인력규모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기본과제	지방분권체제 강화를 위한 헌법 비교연구 –프랑스 헌법과 미국 뉴욕 주 헌법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관리방안
기본과제	저출산 정책의 중앙–지방 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 전략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적정수준과 관리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효율성 제고 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중장기전망과 정책대응
기본과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기본과제	공간정보를 활용한 주민생활서비스 접근성 연구
기본과제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설계
정책과제	협업조직 확산을 위한 시설·인력 공동활용 모델 설계
정책과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마련
정책과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전문직공무원 도입방안 연구
정책과제	도서·벽지지역의 지방공무원 채용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정책과제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방안
정책과제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도입방안 연구
정책과제	지방분권 개헌 해외사례(연방제형) 연구조사(I)
정책과제	지방분권 개헌 해외사례(준연방제·자치강화형) 연구조사(II)
정책과제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
정책과제	재정진단 자치단체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정책과제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정책과제	인구감소지역 정주공간 현대화 및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
정책과제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DMZ, 통일을 여는길'거점센터 운영방안
정책과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
정책과제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제도 및 운영에 관한 비교 연구
정책과제	부산시 협치제도의 실태와 지속가능한 협치행정 방안 연구
정책과제	신천·금호강 등 하천둔치를 활용한 방재공원 조성방안
정책과제	인천 중구 항동7가 일원 지역주민 정주환경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효율화 방안 연구
정책과제	국민행복민원실 발전방안 연구–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연구
정책과제	주민참여형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방안 연구
정책과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정책과제	강원도의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및 평가
정책과제	충북 청년실업과 대응방안 연구
정책과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
정책과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발전방안 – 장학숙 이전 등 건립계획을 중심으로
정책과제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이혼율 저감 방안
정책과제	경상북도 열린혁신 추진계획 수립연구
정책과제	경남 농업·농촌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정책과제	민간위탁 효과분석 정책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사무를 중심으로
수시과제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사례 분석
수시과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수시과제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경비부담 기준 재설정
수시과제	국고보조사업 사무유형 조사
수시과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예측·분석
수시과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연구
수시과제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 개선방안
수시과제	특수상황지역 주민 만족도 조사
이슈리포트	8·2 부동산 대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슈리포트	대구혁신도시 육성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이슈리포트	유해화학물질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광주광역시 인구현황 분석 및 인구정책 추진 방향
이슈리포트	울산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수요 분석
이슈리포트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세종형 주민자치위원회 모형 정립
이슈리포트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이슈리포트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정책 개발 및 행정서비스 개선
이슈리포트	지방분권 확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 균형발전 모델 제시(지방자치단체조합)
이슈리포트	전남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이슈리포트	경북 청년발전기금(가칭) 설치 방안
이슈리포트	선도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분권촉진 방안
이슈리포트	제주 인구 통계 종합 분석
자체과제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조직진단모형개발연구
자체과제	2017년 한눈으로 보는 지방자치연감
공동과제	지방자치단체 인구소멸 방지 대책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기준경비 개선
용역과제	2017년도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시·도, 시·군·구 조직의 재정지원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 제도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논산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2016년도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과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 및 진단연구
용역과제	남양주시 조직진단 및 행정복지센터 발전방향 연구
용역과제	지방소멸대응지역활력특별법 연구
용역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용역과제	고흥군 무인기(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
용역과제	슬로시티청송 제2기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재정 효율화를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법제화를 위한 연구
용역과제	충청남도 시·도 시범 재정컨설팅
용역과제	영덕군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자치구 통합 및 대도시 관련 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검토 연구
용역과제	친환경에너지타운 중장기 발전방향
용역과제	부천시 광역동(행정복지센터 중심)시행방안 연구
용역과제	주의등급단체 심층진단 및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방안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개발 연구
용역과제	국고보조사업 정비기준 마련 연구
용역과제	2017년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과제	다수부처 서비스 전달체계 협업모델 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
용역과제	세대 간 회계 및 재정준칙 법제화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지방의원 보수체계 및 의정비 산식 개선연구
용역과제	김천혁신도시 지역발전 전략개발 연구
용역과제	합천군 관광 분야 시설 운영방안 검토
용역과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활용 연구

■ 2018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 설계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기본과제	광역연합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기본과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정책의 성공적 정착방안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방식의 민주적 혁신에 관한 연구–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기본과제	지방공무원 공직가치 영향요인분석 연구
기본과제	스마트 사회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강화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혁신방안
기본과제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
기본과제	재정분권시대 보통교부세 발전방향–재정형평성을 중심으로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기본과제	사회혁신을 위한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기본과제	인구, 물가, 최저임금 변화에 의한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기본과제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적 추진방안–균특회계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미래상 구상
정책과제	자치분권에 맞는 지방인사제도 발전방안
정책과제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
정책과제	지자체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현황 및 단체교섭 사례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읍·면·동 중심의 지역사회보장 민관협력 모델 구축방안 연구
정책과제	외국인가정 민원사각지대 해소방안
정책과제	민선6기 지방자치 평가
정책과제	주민 체감형 지방행정혁신 과제 연구
정책과제	자치단체 국정통합성 확보 정책사례 연구
정책과제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상향식 규제혁신 제도화 방안 연구
정책과제	일반구 및 대동제 등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방안
정책과제	자치단체 적정인력 산정 등 기준인건비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
정책과제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 및 개선방향
정책과제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정책과제	재정진단 자치단체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정책과제	인구감소지역 기초생활시설 공급방향 연구
정책과제	섬 발전진흥원 기초조사
정책과제	자치분권에 부합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정책과제	공항운영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방안 연구
정책과제	수변공간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정책과제	인천지역 중심의 특행기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추진 전략
정책과제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범위확대 방안
정책과제	울산 청년층 주거실태분석 및 주거복지 안정화 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2017년 세종시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과제	경기도 주거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정책과제	산지의 합리적 관리 및 효율적 이용 방안 연구
정책과제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정책과제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재정분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제도 역할 재정립방안
정책과제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정책과제	공익활동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정책과제	경상남도 고령사회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제주 인구의 유 · 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 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
수시과제	자치분권 제도화 방안 연구를 위한 해외(일본) 자료 조사
수시과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혁신과제 및 추진체계 정비방안
이슈리포트	서울시립노인요양시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이슈리포트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해양 · 항만산업의 발전 전략
이슈리포트	서해안권 개발관련 연계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이슈리포트	조선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이슈리포트	세종특별자치시의 읍 · 면 · 동장 시민추천제 도입방안
이슈리포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방안
이슈리포트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도형 공모사업 추진 방향
이슈리포트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글로벌 방산기업 유치방안
이슈리포트	행복도시(세종시) 출범이 충청남도에 미친 영향력 분석
이슈리포트	저출산 정책분석 및 광역 · 기초지자체 간 연계협력방안
이슈리포트	전남만의 도시재생사업 연계형 도시숲 유형 개발
이슈리포트	사회혁신 추진관련 경남에 적합한 시민사회조직 활성화 방안
이슈리포트	경북형 청년 귀촌 모델 구축 및 공모사업 추진 방향
이슈리포트	경상남도 사회혁신 추진관련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 방안
이슈리포트	제주형 도민행복지표 개발
자체과제	평화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자체과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성과평가 및 정책방안 연구
자체과제	자치분권 제도화 방안 연구를 위한 미국 지방자치 관련법 자료 조사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자체과제	자치분권 제도화 방안 연구를 위한 해외(독일) 자료 조사 연구
자체과제	2018년도 한눈으로 보는 지방자치연감
용역과제	성주군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청주시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지방분권시대 선도를 위한 순천시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니카라과 새마을기반 정책개발 역량 강화사업 PMC
용역과제	2018년 지역대표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과제	2018년 시·군 재정컨설팅
용역과제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지방공기업 평가제도 혁신
용역과제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연구
용역과제	문화균형교부세 도입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법령개정 방안
용역과제	파주시 재정사업 평가
용역과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운영사례연구 및 효과성 분석
용역과제	민선7기 대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경영진단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장 직무가이드 연구
용역과제	광명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서울시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용역과제	지역재투자 활성화 및 제도화 방연 연구
용역과제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강원원주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용역과제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
용역과제	원주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제	의왕시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부평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지방분권에 따른 환경행정실태 및 사업장환경관리 방안 연구
용역과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 및 진단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 기반 인력관리(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 진단 연구)
용역과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
용역과제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성남시 조직 진단 연구
용역과제	조직 효율화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민선7기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과제	수원시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통영시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지방보조금 평가
용역과제	고흥군 무인기(드론)사업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과제	관광두레사업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제	정부업무평가 내 국정과제 재배열 방안 연구
용역과제	(가칭)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연구
용역과제	지방이양일괄법 이양비용 산정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과제	온종일 돌봄 활성화 위한 자치단체 업무수행기반 구축 연구
용역과제	양주시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동대문구 조직진단 연구

■ 2019년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고령자정책 개선방안
기본과제	주민주도의 숙의민주주의 실천방안
기본과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강화방안
기본과제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
기본과제	문제해결형 사회혁신 실현방안
기본과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기본과제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기본과제	지역경제 침체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기본과제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기본과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
기본과제	공유경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기본과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구분	연구과제명
기본과제	포용적 지역발전정책의 구상
정책과제	시·군·구 특례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정책과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최신 해외사례 연구
정책과제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제도 개선방안 연구–지방의원 급여체계와 겸직제도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평화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방안
정책과제	행정사 종류의 통합 및 시험과목 개편방안
정책과제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연구
정책과제	지자체 간 상호협력촉진을 위한 재정협력제도 방안 연구
정책과제	2단계 재정분권 대비 지방교부세제도 혁신방안 연구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
정책과제	비영리 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관련 기초자료 조사
정책과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사회적 관계망 및 공동체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과제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모델 및 사업개발
정책과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간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과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특례제도 연구
정책과제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의 효과성 평가
정책과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매뉴얼 개발
정책과제	재정진단 자치단체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정책과제	지역사랑상품권 광역화 및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분석
정책과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만족도 및 성과분석
정책과제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부처별 사업 유형화 및 종합대책 마련
정책과제	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확충효과 분석
정책과제	지역자원 동원 최적화 분권 모델 개발
정책과제	대구치맥페스티벌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정책과제	공항인근 피해주민 지원방안 연구–재정지원 조성방안을 중심으로
정책과제	자치분권시대에 대비한 광역지자체 사회복지기능 개편 방안
정책과제	대전형 주민자치 평가지표 개발 연구
정책과제	지속가능한 울산형 인구발전방안
정책과제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과제	글로벌 수소경제 확대에 따른 경기도 수소산업 발전 전략

구분	연구과제명
정책과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추진전략
정책과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관리 구축방안
정책과제	지방분권에 대응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방안
정책과제	전라북도 인구영향평가 설계방안 연구
정책과제	전남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방안
정책과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남만의 맞춤형 부동산 대책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정원관리 연구
자체과제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
자체과제	주민주도 참여예산제 모델개발
자체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막걸리 산업의 육성방안
자체과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제안 플랫폼 실태와 개선방안(위탁)
자체과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효율화를 위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이슈리포트	승용차마일리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이슈리포트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모델 개발
이슈리포트	안전부패 사례를 통한 안전감찰업무의 선제적 대응방안 연구
이슈리포트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실태 분석 및 정책 의제 발굴 연구
이슈리포트	철도횡단 도로시설물 개량·개축 비용 국비 분담 정책방안
이슈리포트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정책방향
이슈리포트	세종시 합리적인 리·통·반 설치방안 연구
이슈리포트	경기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슈리포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확대방안
이슈리포트	생활SOC 정책의 긍정적 효과(사례) 및 효율적 운영방안
이슈리포트	재정분권과 균특 사무이양 연계에 따른 재정효과 및 재원조정 방안
이슈리포트	2단계 재정분권과 전라북도 대응전략
이슈리포트	서남해안 관광 콘텐츠 개발
이슈리포트	경북형 청년 귀촌 모델 구축 및 공모사업 추진 방향
이슈리포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북형 자치경찰모델 구상
이슈리포트	경남형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슈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수시과제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적정 설치기준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수시과제	복수주소제 도입 방안
수시과제	한국의 지방자치(한글 · 영문판)
수시과제	국민참여제도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수시과제	디지털 지역혁신 현황과 발전방안
수시과제	지방 특성을 반영한 지방기록원 설립 · 운영 모델 연구
수시과제	지역 맞춤형 분권을 위한 선별적 권한이양 제도화 방안
수시과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활성화 방안
수시과제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과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 검토
용역과제	민선7기 효율적 조직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컨설팅
용역과제	울릉군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2019년 파주시 재정사업 평가
용역과제	법령상 사무총조사
용역과제	2019년 화성시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지방재정운영 실태 분석 및 자금운용방안
용역과제	인천 중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진단 연구
용역과제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용역과제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조직진단
용역과제	지역혁신 종합계획 연구
용역과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용역과제	영주시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용역과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용역과제	저출산 정책실효성 확보를 위한 육아친화지표개발 연구
용역과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 진단 연구
용역과제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과제	울진군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고성군 조직인력진단 및 개선 연구
용역과제	양천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과제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마련 및 발전방안 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용역과제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외교부와 지자체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과제	지속가능한 생활 · 복합화시설 운영모델 개발 연구
용역과제	자립기반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특례군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과제 목록

조사과제

■ 2015년

연번	구분	사업명
2015-1	타당성조사	울산 실내체육관건립
2015-1	타당성조사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2015-1	타당성조사	춘천 시청사건립 공사
2015-2	타당성재조사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2015-2	타당성조사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2015-2	타당성조사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2015-2	타당성조사	흥덕구청사건립사업
2015-2	타당성조사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15-3	타당성재조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2015-3	타당성재조사	한내~덕곡 간 도로확포장
2015-4	타당성재조사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2015-4	타당성조사	서소문청사 리모델링 사업
2015-4	타당성조사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2015-4	타당성재조사	지방도 371호선(적성~두일)
2015-4	타당성조사	김천 일반산업단지 3단계
2015-4	타당성조사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 2016년

연번	구분	사업명
2016-1	타당성조사	석곡사거리~청북삼거리 도로
2016-1	타당성조사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2016-1	사업계획적정성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2016-1	타당성조사	지방도 619호(기지시리~한진리) 확포장
2016-1	타당성조사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조성
2016-1	타당성재조사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2016-2	타당성조사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건립사업
2016-2	타당성조사	대전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2016-2	타당성재조사	용인 지방도 315호선 일부 확장 및 지하차도 개설공사
2016-2	타당성조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16-2	타당성재조사	전북 지방도 708호선 고창~내장IC 확포장사업
2016-2	타당성재조사	전북 지방도 712호선 황산~금산사IC 확포장사업
2016-3	타당성조사	한강 관광자원화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연번	구분	사업명
2016-3	타당성조사	한강 관광자원화 여의테라스 조성사업
2016-3	타당성조사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2016-3	사업계획적정성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2016-3	타당성재조사	부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2016-3	타당성조사	지방도 603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2016-3	타당성조사	홍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16-3	타당성조사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
2016-3	타당성조사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016-4	사업계획적정성	서울 용산유수지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립사업
2016-4	사업계획적정성	강동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2016-4	타당성재조사	경기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
2016-4	타당성재조사	경기 지방도 360호선 하송우~마산도로 확포장공사
2016-4	타당성재조사	경기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 도로 확포장공사
2016-4	타당성조사	수원 수목원 조성사업
2016-4	타당성조사	수원 서수원 생태복합단지 조성사업
2016-4	타당성조사	수원 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2016-4	사업계획적정성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016-수시	사업계획적정성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2016-수시	타당성조사	경기 디자이너 마을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2017년

연번	구분	사업명
2017-1	타당성재조사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2017-1	타당성재조사	양재대로 지하화
2017-1	타당성조사	성남글로벌 ICT 융합플래닛
2017-1	타당성조사	시흥 아주 특별한 공연장(문예회관) 및 미디어센터 건립사업
2017-1	사업계획적정성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내 행복주택 건립
2017-1	타당성조사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2017-1	타당성재조사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2017-1	타당성재조사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2017-1	타당성조사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17-1	사업계획적정성	통영·고성 광역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연번	구분	사업명
2017-1	타당성조사	김천 강남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2017-1	타당성조사	구미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2017-1	타당성재조사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2017-2	타당성조사	남촌 에코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2017-2	타당성재조사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단계)조성사업
2017-2	타당성재조사	창원 사파지구 도시개발 타당성조사
2017-2	타당성재조사	성남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공사 타당성조사
2017-2	타당성조사	성남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2017-2	타당성조사	대구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타당성조사
2017-2	2차타당성조사	천안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조성
2017-2	사업계획적정성	부산 동래구 청사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7-2	타당성조사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2017-2	타당성조사	경북 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2017-2	타당성조사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2017-3	사업계획적정성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7-3	타당성조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타당성조사
2017-3	타당성재조사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017-3	타당성재조사	지방도 306호선 고삼-삼죽 도로 확포장공사
2017-3	타당성조사	지방도 321호선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2017-3	타당성재조사	지방도 322호선 자안-분천 도로 확포장공사
2017-3	타당성조사	지방도 645호선 두마-노성 도로 개설사업
2017-3	타당성조사	창신숭인지역 채석장일대 명소화사업
2017-3	타당성조사	사천 송포 일반산업단지 조성
2017-3	타당성재조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
2017-3	타당성조사	청주전시관 건립 및 상업주거용지 조성사업
2017-4	타당성조사	경기 본청 대표도서관 건립
2017-4	타당성조사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
2017-4	타당성조사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2017-4	타당성조사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2017-4	타당성조사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2017-4	타당성조사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17-4	사업계획적정성	인천광역시 신청사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7-4	타당성조사	중산동 운북동간 영종순환도로 개설공사

연번	구분	사업명
2017-4	타당성조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사업
2017-4	타당성조사	서울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
2017-4	타당성조사	종로구청 종로소방서 통합개발 추진
2017-수시	타당성조사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 2018년

연번	구분	사업명
2018-1	사업계획적정성	진주시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2018-1	타당성조사	무실동 대로(2-6) 도로개설공사
2018-1	사업계획적정성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조성사업
2018-1	사업계획적정성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2018-1	타당성조사	태종대 친환경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
2018-1	타당성재조사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2018-1	타당성조사	지방도 624호선 산동-상덕 확포장공사
2018-1	타당성조사	부산시 중앙대로 확장공사
2018-1	사업계획적정성	서울시 서남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2018-1	타당성조사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18-1	타당성조사	연천 BIX 조성사업
2018-1	타당성조사	지방도 359 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
2018-1	타당성재조사	지방도 313호선 안중-조암(2) 도로확포장공사
2018-1	타당성재조사	지방도 329호선 일죽-대포(2) 도로확포장공사
2018-1	타당성재조사	지방도 379호선 광암-신북 도로확포장공사
2018-1	타당성재조사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
2018-1	타당성조사	성남시 운중동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
2018-2	타당성조사	성남 동원지구 도시개발사업
2018-2	타당성조사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018-2	타당성조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018-2	타당성재조사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
2018-2	타당성조사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2018-2	타당성재조사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2018-2	타당성재조사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사업
2018-2	타당성조사	금왕-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연번	구분	사업명
2018-2	타당성조사	북부순환도로(2단계) 개설
2018-3	사업계획적정성	(서울 광진구) 광진구 신청사 건립
2018-3	타당성조사	(서울 본청)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검토
2018-3	타당성조사	(대구 본청) 대구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2018-3	타당성조사	(인천 본청) 인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조사
2018-3	타당성조사	(충북 충주)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2018-3	타당성조사	(경기 수원) 수원 권곡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2018-3	사업계획적정성	(경기 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8-3	타당성조사	(경기 광명) 광명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2018-수시3	타당성조사	(강원 춘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 2019년

연번	구분	사업명
2019-1	사업계획적정성	(서울본청) 서울 동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9-1	타당성조사	(인천경자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1단계) 조성사업 2차 타당성조사
2019-1	타당성조사	(광주본청) 광주 경찰청사-상무로 간 도로개설 사업 타당성조사
2019-1	사업계획적정성	(대전본청) 대전 제2매립장(1단계)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9-1	타당성조사	(대전본청) 대전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재조사
2019-1	타당성조사	(세종본청) 세종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 적정성 검토
2019-1	타당성조사	(경기평택) 평택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재조사
2019-1	타당성조사	(경기남양주) 남양주 가구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2019-1	타당성조사	(강원춘천) 춘천 소양8교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2019-1	사업계획적정성	(충북청주) 청주 시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9-1	사업계획적정성	(충남본청) 충남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9-1	타당성조사	(충남본청) 충남 지방도 635호선(복수-진산) 확포장공사 타당성조사
2019-1	사업계획적정성	(전북익산)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 적정성 검토
2019-1	타당성조사	(대구본청) 대구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
2019-2	사업계획적정성	(서울은평) 은평 광역자원 순환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9-2	타당성조사	(경기고양) 고양 사리현IC주변(대로 3-48호선 시도 81 83호선) 도로개설공사 타당성조사
2019-2	타당성조사	(경기파주) 파주 지방도 363호선 야동-금승 확장 타당성조사
2019-2	타당성조사	(충남아산) 아산 모종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2019-2	타당성조사	(충남아산) 아산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연번	구분	사업명
2019-2	타당성조사	(전남본청) 전남 약산당목-금일일정 간 연도교 가설공사 타당성조사
2019-2	타당성조사	(전남본청) 전남 까치내재터널 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2019-2	타당성조사	(경남진주) 진주시 진양호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2019-2	타당성조사	(경남창원) 창원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2019-2	타당성조사	(전북군산) 군산시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보류)
2019-3	타당성조사	(서울본청) 서울 마곡 M-융합캠퍼스 조성사업
2019-3	타당성조사	(서울본청) 서울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2019-3	타당성조사	(서울본청) 서울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사업
2019-3	타당성조사	(서울관악) 서울 관악구 사당IC일대 조성사업
2019-3	타당성조사	(대구본청)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2019-3	타당성조사	(대전본청)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2019-3	타당성조사	(대전본청) 대전 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2019-3	타당성조사	(경기광주) 광주시 지방도325호선 (가칭)중부IC 개설 사업
2019-3	타당성조사	(경기김포) 김포시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2019-3	타당성조사	(경기안산) 안산시 시청사 재정비 사업
2019-3	타당성조사	(경기오산) 오산시 동부대로(시도10호선) 연속화 및 확장공사
2019-3	타당성조사	(경기파주) 파주시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사업
2019-3	타당성조사	(강원본청) 강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2019-3	타당성조사	(강원본청) 강원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2019-3	타당성조사	(충북본청) 충북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사업
2019-3	타당성조사	(충북본청) 충북 오송 바이오 일반산업단지
2019-3	타당성조사	(충북보은) 보은군 신규산업단지 조성사업
2019-3	타당성조사	(충북청주) 청주시 중앙(사적)공원 조성사업
2019-3	타당성조사	(충남본청) 충남 도립 미술관 건립사업
2019-3	타당성조사	(충남보령) 보령시 원도심 복합 업무타운 건립사업
2019-3	타당성조사	(전북본청) 전북 금융센터 조성사업
2019-3	타당성조사	(전남광양) 광양 도이 2지구 도시개발사업
2019-3	타당성조사	(전남광양)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2019-3	타당성조사	(전남순천)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2019-3	타당성조사	(경남고성) 고성군 스마트축산ICT조성사업
2019-3	타당성조사	(경남진주) 진주시 금산교~혁신도시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2019-3	타당성조사	(경남진주) 진주시 남강변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

연구과제

연도	유형	과제명
2015	지침	공공청사 및 일반행정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지침	문화·체육·관광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지침	산업단지 등 산업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지침	도로 및 교통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지침	주거 및 상업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지침	환경 분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지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2016	지침	일반지침 개선 연구
	이력관리	투자사업 이력관리체계 도입 : 심층점검 연구
	연구과제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비 추정연구
	연구과제	문화체육시설의 유형화를 통한 타당성조사 방법에 대한 연구
2017	연구과제	지방투자사업의 경제성 최소기준 연구 : 지방도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과제	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익 추정 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과제	지방투자사업 재무적 할인율 추정 기초연구
	연구과제	지방투자사업의 지방재정 영향분석 연구
	연구과제	타당성조사를 위한 고용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 연구
2018	연구과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적용방법 기초연구
	연구과제	지방재정투자사업 재무적 할인율 추정 연구(II)
	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제협력사업 및 북한지역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
	연구과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이력관리 체계 구축 연구
	연구과제	위탁개발사업의 지방재정영향 분석
2019	연구과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사회적 가치 반영방안 연구
	연구과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법 연구
	연구과제	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연구과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사설계 표준화 방안 연구
	연구과제	불법 주정차의 사회적비용 추정 연구
	연구과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연 표

1984

6. 4	지방행정연구소 기본계획 내무부 장관 승인
7. 9	지방행정연구소 설립위원회
8. 16	내무부 장관 법인설립허가 제84-23호
8. 29	제1차 이사회
9. 5	초대 장병구 소장 겸 이사장 취임(지방행정연수원장 겸임)
9. 7	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 개소(수원시 파장동 184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구내)
10. 30	제2대 이창수 소장 겸 이사장 취임(지방행정연수원장 겸임)

1985

1. 15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1. 20	연구총서 발간 제1권《각국의 지방행정제도》, 제2권《각국의 지방재정제도》
4. 11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소'로 법인명 개칭 연구자료 제3권《일본의지방자치단체의사무》발간
4. 12	제3대 전영춘 소장 겸 이사장 취임
4. 16	사무실 이전 마포구 공덕동 234-2 지방행정회관 10층
9. 18~19	'2000년대 지방행정좌표 설정' 세미나

1986

3. 7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법인명 개칭
3.15	연구총서 발간 제3권《각국의 공무원제도 비교연구》
4. 3	'2000년대를 향한 지방행정 발전방향' 세미나
4. 12~16	제47차 미국행정학회(ASPA) 정례회의 참석
5.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법률 제809호)

8. 21 〈지방행정연구〉지 창간
9.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정(9대통령령 제1961호)
10. 16~17 '지방자치 발전전략' 세미나

1987

4. 11 제4대 전영춘 원장 겸 이사장 취임
5. 29 '주민생활행정기능의 강화발전' 세미나
6. 17~18 '대도시 관할구역의 적정규모' 세미나
8. 26 지방시대의 포항시 발전을 위한 연찬회
9. 19~10. 4 제8차 IULA 세계총회 참석
10. 22~23 '지방자치와 지방재정력' 세미나

1988

5. 10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둔 제 과제' 등 세미나
6. 17~7. 21 '대도시 관할지역의 적정규모' 세미나
7. 19 '반상회 운영에 관한 건' 공청회
11. 3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당면과제' 세미나

1989

4. 3 ASPA 국제회의 참석
4. 12 제5대 손재식 원장 겸 이사장 취임
7. 6~7 '지방행정의 전문화 방안' 세미나
8. 30 제29차 IULA 세계총회 참석
12. 5 '대도시(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범위' 세미나

1990

1. 18~19 '대전직할시 승격 1주년기념 시정발전' 심포지엄

3. 1 조직개편(연구기획실 신설)

8. 20 제6대 김양배 원장 취임
제6대 손재식 이사장 취임

1991

1. 7 조직개편(자료실, 전산실 신설)

8. 9 '지방자치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 세미나

9. 10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 전개' 세미나

1992

2. 1 조직개편(정책제도연구실, 사무국 사무과 신설)

5. 1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 공청회'

7. 21 제7대 김안제 원장 겸 이사장 취임

7. 29 '지방재정의 현실과 과제' 토론회

9. 21~11. 11 지방의회의원 순회 연찬회(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10. 29 '21세기의 바람직한 지방행정좌표' 세미나

11. 2 원시 제정 : 창의적 연구풍토, 실질적 정책개발, 선도적 자치육성

1993

1. 27 조직개편(방재연구실 신설)

2. 10 연구원가 제정(작사 : 김안제·조석주, 작곡 : 전석환)

2. 2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장 협의회' 초대회장에 김안제 원장 선출

5. 6 '신한국 창조와 새로운 국민의식 개혁운동의 전개' 세미나

5. 20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안' 공청회

8. 27 '신한국 창조와 지방자치행정' 세미나

9. 10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 전개' 세미나

10. 8 '국가발전과 지방자치발전전략' 국제세미나

10. 25~11. 9 지방의회의원 연찬회(강원, 광주, 경남, 전북)

1994

7. 1	조직개편(지방재정실에 지방세연구반 설치)
9.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0년사》 발간
10. 5	제8대 정문화 원장 겸 이사장 취임

1995

3. 6	조직개편(지방세제연구실 신설)
9. 15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방안' 공청회

1996

1. 13	제9대 임경호 원장 겸 이사장 취임
7. 1	지방자치연구 우수기관 표창(내무부 장관)

1997

3. 1	조직개편(방재안전연구실 폐지)
12. 22	청사 신축이전(서울 마포구 공덕동→수원 장안구 파장동)

1998

4. 13	제10대 이달곤 원장 겸 이사장 취임
10. 24	조직개편(전산정보팀 신설)

1999

8. 30	중국 북경행정학원 교류협정 체결

10. 15 청사 이전(수원 장안구 파장동→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0

7. 10 제11대 박우서 원장 겸 이사장 취임
9. 1 중국 북경행정학원 연구자 교류
~2001. 8. 31

2001

4. 27 예산군 컨설팅 협약
6. 16 중국 길림행정학원 교류협력 체결
9. 1 중국 북경행정학원 연구자 교류
~2001. 8. 31

2002

3. 4~9. 3 중국 길림행정학원 연구자 교류
4. 15 2001년 경영혁신추진 우수기관 표창(기획예산처 장관)
8. 1 제12대 김흥래 원장 겸 이사장 취임
9. 18 태풍 '루사' 수해지역 위문 및 자원봉사(강릉)
10. 21~11. 20 중국 상해행정학원 연구자 교류
11. 19 미국 러트거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 교류협력 체결

2003

2. 6~4. 5 중국 상해행정학원 연구자 교류
7. 1 조직개편(행정평가팀과 복식부기팀 신설)
9.~2004. 8. 중국 북경행정학원 연구자 교류

2004

2. 20	'3대 특별법 제정 이후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
2. 23	'복식부기 추진사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세미나
3. 23	태국 민·관 인사 연구원 방문
6. 30	2003년도 경역혁신추진실적평가 결과 우수기관 표창(기획예산처 장관)
7. 12~23	상해행정학원 연구원 방문
9. 7	개원 20주년 기념식
10. 1~3	북경행정학원 연구원 방문
11.	UNESCAP LOGOTRI 의장기관 당선
11. 18	'분권과 개혁 : 각국의 사례와 한국적 함의' 세미나
11. 30	베트남 Dien Ban Province 간부 방문
12.28	조직개편(조사분석센터 신설)

2005

2. 14	조직개편(사업타당성평가센터 신설)
4. 26	일본 마츠야마대학과 학술교류협약 체결
5. 4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학술교류협약 체결
6. 13	인도네시아 행정연구원 연구원 방문
6. 24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이전)
8. 1	제13대 김주현 원장 취임
10. 7~8	'한국적 행정이론의 전개' 세미나

2006

2. 21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인트라넷)
7. 27	조직개편(균형발전센터 신설)
8. 28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동협약 체결(행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서울신문사 공동)
9. 15	한중 학술세미나(길림행정학원)
10. 20	'민선4기 출범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 세미나
10. 24	한중 국제학술심포지엄(상해행정학원)
11. 8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세미나

11. 21~22 '지방행정혁신 워크숍과 정부회계혁신 연찬회'
12. 11~15 상해시 공무원 교육연수

2007

4. 28 '지방정부의 과제와 미래' 세미나
5. 14~15 '지역거버넌스와 국가균형발전' 국제세미나
6. 15~20 중국 길림행정학원 학술교류
11. 8~9 우수혁신제안 BP대회
12. 2~5 '개혁, 발전 그리고 조화' 한중 학술세미나 참가
12. 14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 평가와 시사점' 세미나

2008

1. 8 태안 기름유출 재해지역 자원봉사(태안 십리포 해수욕장)
3. 6~7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실천과제 모색' 브레인스토밍
4. 21 상해시 고급 공무원단 교육
4. 25 '이명박 정부의 과제' 세미나
6. 30 '국세·지방세 조정 및 지방재정 조정제도' 세미나
7. 15 '선진한국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토론회'
7. 30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을 위한 토론회'
8. 7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8. 11 제14대 유정석 원장 겸 이사장 취임
8. 22~23 '광역경제권, 선벨트 등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구상과 지역의 대응' 세미나
9. 2 일본 도시센터 관계자 연구원 방문
9.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VISION 2020' 직원 연찬회
10. 28 남호주 알렉산드리나(Alexandrina) 시의 연구원 방문
11. 21 지역경제 살리기 대회
12. 8 '한국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 세미나
12. 12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세미나

2009

1. 14	제1차 KRILA 자치포럼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1. 16	아젠다워크숍 : 2009년도 기본연구과제 주제 선정 및 아젠다 선점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정책실무협의회 겸)
1. 22	2009년도 기본연구과제 주제선정 및 아젠다 선점을 위한 외부전문가 초청 토론회
2. 27	제2차 KRILA 자치포럼 '독일 통일과정과 행정통합 및 주민통합'
3. 11	제3차 KRILA 자치포럼 '한국과 일본 소방행정체제의 비교와 분권화에 관한 연구'
3. 25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4. 1	초빙연구원제도 운영 및 위원 선임
4. 3	조직개편(지역정책데이터센터) '지방행정의 유사중복기능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4. 9	제4차 KRILA 자치포럼 '대한민국 국가전략'
4. 14	제5차 KRILA 자치포럼 '지방행정 현장의 과제와 발전방향'
4. 15	아젠다워크숍 : 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4. 30	《경제위기 해법, 해외 지방정부에서 배운다》 발간 토론회
5. 13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협약체결 아젠다워크숍 : 국가재정투자와 지방투자사업
6. 4	서울대 행정대학원 협약체결
6. 5	'안전한 나라, 안전도시' 정책세미나
6. 17	아젠다워크숍 : 조세 재정정책의 효과 시뮬레이션
6. 26	아젠다워크숍 : 최근 경제상황 및 전망
7. 1	아젠다워크숍 : 지방선거의 특징과 선거제도
7. 10~28	법무법인 조은,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약체결
7. 22	아젠다워크숍 : 환경과 경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7. 31	'안전한 나라 만들기' 토론회
8. 5	아젠다워크숍 : 2009년 하반기 한국 경제전망
8. 17~21	한중학술세미나(길림성행정학원)
8. 20	법무법인 (유)태평양 협약체결
8. 28	국토연구원 협약체결
9. 4	개원 25주년 국제컨퍼런스 개최《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
9. 8	개원 25주년 기념행사
9. 22	아젠다워크숍 : 우리나라 준공공 부문의 구조와 개혁방안
10. 23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지방행정연수원) 공동 주최
12. 11	제6차 KRILA 자치포럼 '2020년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유망사업'
12. 14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12. 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와 MOU 체결
생활공감정책 발전방안 심포지엄
12. 18 아젠다워크숍 : 규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12. 22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명칭변경 : 기획관리실→기획경영실)
12. 28~29 중국 북경행정학원 및 북경사회과학원 방문
12. 30 아젠다워크숍 : 지방의 탄소배출권 법제도 관련

2010

1. 29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
2. 5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모색
2 . 26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와의 간담회
3. 19 제1차 KRILA 자치포럼
4. 7 2010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4. 16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방정부(선거)와 정책
4. 20 정책간담회
4. 26 국정아젠다 워크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상해행정학원 학술세미나
4 . 29 한국지방행정연구원–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협약체결
5. 13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방선거의 공명성 확보 방안과 향후 과제
5. 27 2010 제1차 KRILA&CLAIR 공동연구회
실별 업무현안 간담회 겸 체력단련 대회
6. 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협약체결
제2차 KRILA 자치포럼
6. 21 2010 제2차 KRILA&CLAIR 공동연구회
6. 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경원대학교 협약체결
7. 2 자체 세미나 : 민선5기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
8. 13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민선5기 자치단체의 정책능력 강화방안
8. 25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방재정의 패러다임 전환 및 한·일 지방분권 개혁
8. 26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연구원 방문
8.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경남 창원시 협약체결
9. 3 자체 세미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제고
9. 10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북한 급변사태시 재난방지 대책 연구
9. 17 2010 제1회 KRILA–CLAIR 공동세미나
10. 5 자체 세미나 :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10. 27	지방공무원정책연구발표대회(지방행정연수원 공동주최)
11.18~19	2010년 생태·안보체험 연수대회
11. 26	제3차 KRILA 자치포럼
11. 30	2010 제1차 한일지방자치제도연구회
12. 3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정책학의 학문적 이론화
12. 7	제4차 KRILA 자치포럼
12. 9	자체 세미나 : 생활공감정책 발전방안
12. 13	제5차 KRILA 자치포럼
12. 16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민선5기 자율과 책임을 지향하는 지방재정 구축방향
12. 17	자체 세미나 :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공공디자인
12. 30	정책간담회

2011

1. 16~20	LOGOTRI 2011년 Conference 및 회의 참석
1. 18	2011 제2차 한일지방자치제도연구회
1. 31	제1차 KRILA 자치포럼
2. 15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2. 24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창조적 선진도시 행정
3.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게이오대학 GCOE–CGCS 협약체결
3. 11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 혁신
3. 14	제2차 KRILA 자치포럼
3. 21	자체 세미나 : 2020 지방자치 중장기 발전전략
4. 20	정책간담회
4. 27	제3차 KRILA 자치포럼
5. 12	제1차 국정아젠다 워크숍 : 2011년 국정운영 방향
5. 13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방자치 부활 20년의 성과와 발전과제
5. 19	자체 세미나 : 지역녹색성장확산 컨퍼런스
5. 31	제2차 국정아젠다 워크숍 : 2011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운영방향
6. 9	자체 세미나 : 주민참여예산제 정책간담회
6. 17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정책학과 공정사회
	2011 제1차 KRILA–CLAIR 공동연구회
6 . 20~22	LOGOTRI 7차 총회 및 UNESCAP 포럼 참석
6. 28	제4차 KRILA 자치포럼
6. 30	2011 제3차 한일지방자치제도연구회

7. 3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제22차 PRSCO(태평양지역학회) 학술대회
8. 25	2011 제2차 KRILA-CLAIR 공동연구회
10. 14	2011 제4차 한일지방자치제도연구회
10. 17	제5차 KRILA 자치포럼
10. 19	자체 세미나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발전방향
10. 22	상해행정학원 국제컨퍼런스
10. 27	제3차 국정아젠다 워크숍 : 지역발전정책 보완 방향
11. 3	제4차 국정아젠다 워크숍 :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
11. 4	제6차 KRILA 자치포럼
11. 9	지방공무원 정책연구발표대회
11. 17	2011 제2회 한·일 공동세미나
11.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경북 울진군 협약체결
12. 13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12. 15	자체 세미나 : 연구성과발표회
12. 30	정책간담회

2012

1. 16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2. 9	제1차 KRILA 자치포럼
2.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회 협약체결
2. 24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3. 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영동전통시장(논현동) 협약체결
3. 26	정책실무협의회
3. 29	제2차 KRILA 자치포럼
4. 6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속가능한 지역정책과 전략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4.26~27	2012년도 직원연수대회
5. 10	제1차 국정아젠다 워크숍 : New York City Grows Marshall's Rules of City Building
	2012 제5차 한일지방자치제도연구회
5. 16	자체 세미나 :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5. 31	2011 제1차 KRILA&CLAIR 공동연구회
6. 5	제3차 KRILA 자치포럼
6. 8	정책간담회
6. 19	제4차 KRILA 자치포럼

6. 22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일자리 창출과 지역정책의 과제
6. 27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국가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략
7. 3	상해행정학원 방문교수
7. 26	2012 제2차 KRILA&CLAIR 공동연구회
8. 30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와 변혁적 리더십
8. 31	정책간담회
9. 20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
9. 26	정책실무협의회
9. 27	자체 세미나 : 지방자치 성과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10. 5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MB정부의 재정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10. 11	2012 제3회 한·일 공동세미나
10. 19~20	상해행정학원 국제컨퍼런스
10. 26	2012 제6차 한일지방자치제도연구회
11. 2	제2차 국정아젠다 워크숍 : 뉴욕 주정부의 공기업 부채
11. 12	제5차 KRILA 자치포럼
12. 24	정책간담회

2013

1. 22	제1차 KRILA 자치포럼
2. 6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3. 14	지방자치단체 정책기획관실 연찬회
3. 19	제1차 국정아젠다 워크숍 : 2013년 재난안전 R&D 추진전략
3. 21	2013년 직원워크숍 및 체력단련대회
4. 1	2012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4. 30	제1차 정책실무협의회
5. 20	제2차 국정아젠다 워크숍 : 새 정부 국정과제의 기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행정연수원 협약체결
5. 21	자체 세미나 박근혜 정부 지방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
5. 22	제1차 연구방법론 강좌
5. 31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행정학의 한국화 : 평가와 전망
6. 5	제2차 연구방법론 강좌
6. 12	제3차 연구방법론 강좌
6. 14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성장과 분배 :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선택
6. 17	자체 세미나 : 분권과 균형발전 세종시로 통한다

6. 19	제4차 연구방법론 강좌
	2013 제1차 KRILA&CLAIR 공동연구회
6. 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협약체결
6. 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정책대학원대학(GRIPS) 협약체결
	2013 제7차 한·일 공동연구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정책대학원대학 학연협력 MOU 체결식
6. 26	제5차 연구방법론 강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영남대학교 협약체결
	제1회 지방자치실천포럼 창립총회 :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지방자치의 과제
6. 28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슬로시티본부 협약체결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창조적 지방행정과 국가경쟁력
7. 3	제6차 연구방법론 강좌
7. 16	제2차 정책실무협의회
7. 17	제7차 연구방법론 강좌
7. 24	제3차 국정아젠다 워크숍 : 지방자치 현안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역할
7. 29	2012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통보
7. 30	제4차 국정아젠다 워크숍 : 지방3.0의 의미와 추진전략
7. 31	제2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지방관련 국정과제의 추진전략
8. 8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상생협력 전략
8. 23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방정부의 정책개발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새 정부 지방행정의 나아갈 방향
8. 24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신정부의 국가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동태적 정책모델링
8. 28	2013 제2차 KRILA&CLAIR 공동연구회
9. 5	제2차 KRILA 자치포럼
	길림성행정학원 왕지군 부원장 일행 방원
9. 16	자체 세미나 :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지방3.0 추진전략
9. 25	KRILA희망나눔 업무협약 및 농촌마을 자매결연
	제3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국민행복 시대의 지방자치
10. 7	2013 제8차 한·일 공동연구회
10. 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발표대회
10. 25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한국행정학의 세계화–국제협력과 거버넌스
10. 25~26	상해행정학원 국제컨퍼런스
10. 29	자체 세미나 : 희망의 새시대,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전략
10. 30	제4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다원주의적 지방 거버넌스 진화
11. 12	제5차 국정아젠다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비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충남 서산시 협약체결
	2013년도 창의혁신대회
11. 15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중앙–지방 간 바람직한 재정관계

11. 20	2013 제4회 한·일 공동세미나
11. 27	제8차 연구방법론 강좌
	제5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 – 왜 & 어떻게
11. 2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충남 논산시 협약체결
12. 2	제3차 정책실무협의회
12. 3	자체 세미나 : 지방3.0 구현을 위한 행·재정 실천 방안
12. 4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12. 6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새 정부 1년의 평가
12.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전남 신안군 협약체결
	제9차 연구방법론 강좌
12. 18	제10차 연구방법론 강좌
12. 18	제6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전략
12. 23	제3차 KRILA 자치포럼

〉〉〉 2014

1. 22	제7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지방자치,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2. 7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분권과 자치 – 2014년 지방선거를 즈음한 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전망
2. 10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2. 14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미래 복지국가구현과 지역상생 전략
2. 26	제8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 시대를 열자
3. 6	제1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정책영역별 국민 스트레스지수 개발 및 지방공무원 EPA 도입방안
3. 11	자체 세미나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
3. 13	제1차 정책실무협의회
3. 14	제2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사각지대 옴부즈만 제도 도입
3. 19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베트남과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도시 및 농촌해정 역량 강화
3. 20	제3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외국인주민 집거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체계 개선
3. 26	제9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지방자치, 새로운 토대구축이 필요하다
3. 27	제4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및 교육제도 개선,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3.0 개혁 방안
3. 27	제2차 정책실무협의회
3. 28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
3. 31	2013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4. 2	제1차 연구방법론 강좌
4. 3	제5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과소지역(군) 거점취락의 조성방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방안 (지방자치실천포럼)국회 : 지방자치 실천을 위한 지방 리더십과 재정건정성 강화
4.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 협약체결
4. 9	제2차 연구방법론 강좌
4. 10	제6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실험조례' 제정
4. 16	제3차 연구방법론 강좌
4. 17	제7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행정구역 경계 조정의 합리적 대안 모색 – 생활권 및 행정권 불일치 지역을 중심으로
4. 23	제4차 연구방법론 강좌
4. 24	제8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기초의회와 주민자치의 연계 방안 모색 – 의원겸직과 자치위원의 참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민대학교 협약체결
4. 25	자체 세미나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향
4. 29	자체 세미나 : 박근혜 정부의 지방규제 개혁추진 전략
4.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협약체결
5. 8	제9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읍·면자치제도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5. 9	2014 제9차 한·일 공동연구회
5. 14	제5차 연구방법론 강좌
5. 22	제10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지역 간 연계방안
5. 28	제6차 연구방법론 강좌
6. 5	2014년 농촌일손돕기
6.12	제11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방안
6. 13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위험사회와 정부의 역할
6. 17	제1차 KRILA 자치포럼
6. 23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6. 25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Public Administration and Happiness
6. 25	제10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지역경제와 환경
6. 26	제12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 자치에 배치되는 규칙 및 지침 현황 파악
7. 9	제2차 KRILA 자치포럼
7. 10	2013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통보
7. 22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박근혜 정부의 분권정책과 지역발전
7. 23	제11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국가개조와 지방자치

7. 24	제13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지수 개발
8. 5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The Fourth Asian Seminar in Regional Science
8. 7	제14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역 안전수준 진단을 통한 DB구축
8. 21	제15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통합 지역공동체 발전기금 마련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대도시 경제·사회개발과 지방재정
8. 27	제12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새로운 변화, 시민과 함께 : 혁신, 소통, 협치
9. 3	자체 세미나 : 미래지향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9. 4	제16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역통계를 활용한 지역형 MAGIS 구축
9. 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9. 18	제17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고향발전세(가칭) 도입
9. 19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방법론적 소통과 융합을 통한 정부정책의 재창조
	제3차 정책실무협의회
9. 24	제3차 KRILA 자치포럼
	제13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국가와 지방의 재정 협력
9. 25	지방공무원 정책개발 발표대회
9. 29	자체 세미나 :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
	제3차 연구자문위원회
10. 1	2014 한·일 공동연구회
10. 2	제18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역주민을 위한 알기 쉬운 재정보고서 공시 방안
10. 16	제19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정부3.0과 연구(원)정보의 공개 방향
10. 23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에코푸드와 슬로시티의 아름다운 同居
10. 24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민선6기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10. 24~25	상해행정학원 국제컨퍼런스
10. 28	제14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세계 경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10. 30	제20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관리도로 교통안전사업 범칙금 활용방안
10. 31	2014 제10차 한·일 공동연구회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정부의 책임성 확보
11. 3	제4차 KRILA 자치포럼
11. 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전북 남원시 협약체결
11.13~14	2014년 창의혁신대회
11. 14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창조경제시대의 친환경 지역발전 전략
11. 20	제21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 관리기구 설치
	2014 제 5회 한·일 공동세미나
11. 25	자체 세미나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 발전 전략
11. 26	제15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협치로 여는 제주의 미래

11. 27	제22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통일 대비 북한 지방행정 체제 연구
11. 29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12. 2	(지방자치실천포럼) 협동포럼 대전 :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12. 4	제5차 KRILA 자치포럼
12. 5	제23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2015년도 기본과제발굴을 위한 주요 학회장 회의
12. 11	제24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역자산 조사 및 활용센터 설립방
12. 18	자체 세미나 : 지방투자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지방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2015

1. 15	제1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1. 27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생존공간의 중앙과 지방관계 발전방향
1. 28	제16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공무원연금개혁의 쟁점과 방향
1. 29	제2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개선방안 – 주민중심재정보고서의 도입
2. 2	제1차 KRILA 자치포럼
2. 5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주민행복, 지역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
2. 6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거버넌스
2. 10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2. 12	제3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역통계를 활용한 지역수준 측정
2. 25	제17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소통과 융합의 지방자치
2. 26	제4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Smart Work 도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 가능성 검토 제1차 정책실무협의회
3. 12	제5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 대상 신용평가제도 도입
3. 20	수시 정책실무협의회
3. 20	2014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3. 21	유관학회 공동 LIMAC 문서 확인
3. 26	제6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주민행복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4. 2	제1차 연구방법론 강좌
4. 9	제7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공동체 중심의 지역복지 개선방안
4. 16	제2차 연구방법론 강좌
4. 17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통섭적 정책연구

4. 23	제8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 방향
4. 24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법적 과제
4. 29	제18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 균형발전과 소통·협업의 지방자치
5. 7	제9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제도화 방안
5. 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협약체결
5. 21	제10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자체 지역자원의 발굴 및 조사
5. 27	제19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
5. 28	제2차 KRILA 자치포럼
6.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주 혁신도시 기관 협약체결
6. 3	2015 제11차 한·일 공동연구회
6. 4	제11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옥외(불법)광고물 관리방안
6.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감정원 협약체결
6. 18	제12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의 관리방향
7. 2	제13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읍·면자치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7. 6	2014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통보
7. 7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7. 16	제14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주민자치와 마을사업의 사회성과보상제도 도입
	2015 한·일 공동연구회
7. 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협약체결
8. 13	제15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축소도시의 신재생 방안과 과제
8. 19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청년 지방자치, 희망의 메시지 & 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비전
8. 20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정책분석평가방법론의 재조명
8. 27	제16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
9. 10	자체 세미나 : 한국의 마을 살리기 전략
9. 15	제3차 연구자문위원회
9. 23	제2차 정책실무협의회
	제20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9. 24	제17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이전 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느슨한 조직형태를 중심으로
10. 8	제18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도서개발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10. 14	2015 제12차 한·일 공동연구회
10. 16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슬로시티 주민의 슬로공동체 정신발휘와 동기부여
10. 21	제3차 연구방법론 강좌
10. 22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속가능도시 지표평가 국내·외 우수사례

10. 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협약체결
10. 29	'제3회 지방자치의 날'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
11. 5	제19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공무원 인사평정방식의 객관화 제고
11. 5~11. 6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워크숍
11. 11	2015 제 6회 한·일 공동세미나
11. 13	지방재정위기 극복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11. 19	제3차 KRILA 자치포럼
11. 25	제21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과 지방살리기 과제
11. 26	지방공무원 정책개발 발표대회
12. 3	제20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 지양을 위한 제언
12.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울산 중구청 협약체결
12. 17	요코미치 부학장 세종시 방문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세미나
	제21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 개선방안

2016

1. 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협약체결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 공청회
2. 4	제1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정보, 데이터 및 교육과정 활용방안
2. 18	제2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실태 분석 및 DB 구축방안
2. 22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주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의 모색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2016년 한국사회 갈등 진단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언
2. 24	제22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지방자치와 민주시민의 정체성
2. 26	제1차 정책실무협의회
3. 3	제3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읍면동 중심 복지센터의 구축방안
3. 3	정관개정
3.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원 원주시 협약체결
3. 11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3. 17	제4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연구원 청사이전 대비 준비사항
	브레인스토밍 – 연구원 청사이전 TFT
3. 21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3.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경남 합천군 협약체결
3. 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수원시정연구원 협약체결
3. 30	제23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도정
3. 31	제5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한국 ODA 현황 및 사업추진방안
4. 14	제6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4. 20~21	2016년 춘계 직원 워크숍
4. 22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발전방안
4. 29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인사혁신과 국가경쟁력–공유와 확산
5.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협약체결
5. 12	제7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유 통계 확보방안
5. 20	LIMAC–KICA 공동세미나
5. 26	제8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차원에서의 연정 실현의 가능성과 한계–경기연정을 중심으로
6. 1	제24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지방재정 형평성, 건전성 강화방안
6. 8	제1차 KRILA 자치포럼
6. 9	제9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Rainy Day Fund와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
6. 10	2016년 농촌일손돕기
6. 13	'지역발전 및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6. 23	제10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하부행정기관의 성격과 역할 재검토
6. 24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역개발 정책과 지역경제 성장
6. 28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유라시아 시대의 상생발전을 위한 한–CIS 세미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6	지방재정전략과 지방투자사업 발전 공동워크숍
7.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네덜란드 CREARE 재단 협약체결
7. 12	제25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의 미래 2016 한·일 공동연구회
7. 13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7. 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재정성과연구원 협약체결
7. 21	강원 원주 혁신도시 상생발전 업무협약 제11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연구원 육아휴직관련 제도개선
7. 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양구군 협약체결
8. 1	2015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발표
8. 18	제12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상수도 거버넌스 구축방향
8. 19	수시 정책실무협의회

8. 22	제2차 KRILA 자치포럼
8. 30	자체 세미나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섬발전 전략의 모색
9. 1	제13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 사회통합역량지수 개발
9. 6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
9. 8	제3차 KRILA 자치포럼
9. 9	제2차 정책실무협의회
9. 29	제14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시민참여적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10. 12	2016년 제2차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워크숍
10. 18	제3차 연구자문위원회
10. 21	2016 제14차 한·일 공동연구회
10. 22	상해행정학원 국제컨퍼런스
10. 26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
10. 27	(지방자치실천포럼) 국회 : 지방자치 발전방안 논의
11. 3	제15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인감제도의 개선방향
11. 10	제16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방향 모색
11.11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제도공유 워크숍(호남권)
11.15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제도공유 워크숍(중부권)
11.18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제도공유 워크숍(영남권)
11. 24	제17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재정책임성 및 과세자주권 강화를 통한 정부 간 재정갈등 해결방안의 모색 – 미국 정부 간 재정관계제도를 중심으로
11. 30	2016 제7회 한·일 공동세미나
12. 12	연구원 이전
12. 1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12. 2	제26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대중교통중심도시 대전 : 트램 추진과제
12. 15	자체 세미나 : 지역발전과 거버넌스 연구의 심화
12. 29	제18차 국정아젠다 워크숍(정책아이디어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와 조직행태 – 바람직한 조직문화는?

〉〉〉 2017

1. 17	정관개정
1. 24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한국지방행정을 다시 고민하다
1. 18	제1차 정책실무협의회
2. 10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국가 시스템 혁신과 행정학 재건
2. 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청사 개청 기념세미나
2. 27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

2. 28	제2차 정책실무협의회
3. 17	제1회 지역경제일자리활성화포럼
3. 20	2016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4. 3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4. 7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협상을 통한 우리사회의 미래경쟁력 강화
4. 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경북대학교 행정학부 협약체결 제1차 KRILA 자치포럼
4. 21	제2차 KRILA 자치포럼
4. 24~25	2017년 상반기 워크숍
4. 27	제27회 지방자치실천포럼 :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新지역발전방안
5. 8	제3차 KRILA 자치포럼
5. 10~12	제2회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문화도시정상회의 참석
5. 17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제4차 산업혁명과 새마을운동
5. 18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신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과제와 전략
6. 9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거버넌스
6. 12	2017년 농촌일손돕기
6. 13	2017 제15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6. 16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방분권 개헌 및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6. 21	제3차 정책실무협의회 제4차 정책실무협의회
6. 22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6. 28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정책토론회
7. 12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7. 17	제4차 KRILA 자치포럼
7. 19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
7. 20	2017 한·일 공동연구회
7. 27	2016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발표
8. 17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 과제
8. 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제주연구원 협약체결
8. 24	제5차 KRILA 자치포럼
9. 11	제6차 KRILA 자치포럼
9. 15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담양군 생태도시계획 2030 실행을 위한 군민원탁토론
9. 22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정부에서의 지방재정
9. 28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토론회
10. 12	제2회 지역경제일자리활성화포럼
10. 19	2017 제16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10. 27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분권시대 경인지역 대도시 자치권 문제와 대응방안
11. 7	제3차 연구자문위원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11. 10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속가능도시 지표평가 및 우수정책사례
11. 14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공무원 교육(수도권, 강원권)
11. 15	2017 제8회 한·일 공동세미나
11. 16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공무원 교육(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12. 2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역개발의 회고와 발전방향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미래사회 변화와 지역발전 전략
12. 8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향
12. 15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

2018

2. 5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2. 19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성찰과 지향 갈등관리시스템을 논한다
2. 27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부동산 세제의 쟁점과 합리화 방안
2. 28	임의직 이사 선임
3. 16	제1차 정책실무협의회
3. 20	2017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3. 23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분권적 지방자치를 위한 주요 법률개정의 과제
3. 26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서
4. 5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4. 20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정책과제
4. 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서울연구원 협약체결
4.26~27	2018년 상반기 임직원 워크숍
4. 27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현장갈등 협상조정의 이론과 실제
5. 8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2017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1년
5. 9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간담회
5. 11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도시정부의 새로운 시작–분권과 재생과 'SMART'가 어우러진 도시
5. 24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ICT정책 고도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5. 25	2018년도 연구자문위원회 전체회의
5. 30	2018 제17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6. 2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분권화 시대의 지방자치와 지역재생 전략
6. 5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다짐

6. 12	2018년 농촌일손돕기
6. 27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발표
6. 21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한국 행정학의 성찰과 재도약–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가치론
6. 29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에너지 체제 전환 시대의 지방의 변화와 상생 협력
7. 19	자체 세미나 : 자치분권 시대의 사회혁신과 중앙–지방의 협력방안
8. 22	추석명절 관련 사회적약자 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자치단체 순회교육(수도권)
8. 23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8. 28	제2차 정책실무협의회
8. 29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자치단체 순회교육(충청권)
8. 30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연방주의에 버금가는 자치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 기반의 근린구역 주민자치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자치단체 순회교육(호남권)
9. 3	제1차 KRILA 자치포럼
9. 12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자치단체 순회교육(대경권)
9. 13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자치단체 순회교육(부울경권)
9. 2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제주연구원 협약체결
10. 1	제2차 KRILA 자치포럼
10. 19	'한·일 지방자치단체 재해대책' 한·일 세미나
10. 24	제3차 연구자문위원회
10. 30	자체세미나 : 사회혁신과주민참여적지역거버넌스(제6회 지방자치의날 기념특별기획세미나)
11. 5	제3차 KRILA 자치포럼
11. 8	2018 제18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11. 9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역량강화
11. 14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방정부, 전자정부 , ODA, K–Mooc 등
11. 21	국정목표 실천 경진대회
11. 23	자체 세미나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11. 27	2018 한·중 공동세미나
12. 3	제4차 KRILA 자치포럼
12. 14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자치단체 순회교육(강원권)
12. 21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대도시 재정과 재정분권의 과제 2018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세미나
12. 28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
12. 31	(연구원) 감사패 접수

2019

1. 5	(연구원) 표창장 접수
1. 29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1. 30	제1차 정책과제협의회
2. 12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2. 18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2. 21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정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2. 22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희망제작소,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28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
3. 4	제1차 KRILA 월례포럼
	제1차 KRILA 자치포럼
3. 5	자체 세미나 :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3. 15	자체 세미나 : 재정분권 이행방안과 장애요인 극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협약체결
3. 20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4. 1	제2차 KRILA 월례포럼
	제2차 KRILA 자치포럼
4. 5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영향과 대응전략
4. 17	제1회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 : 포용국가와 분권국가의 과제
4.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덕구 협약체결”
5. 3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역사회혁신과 사회서비스
5. 9	자체 세미나 : 지방자치법 및 주민참여3법
5. 13	제3차 KRILA 월례포럼
5. 15	제2회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 : 대한민국OS, 어떻게 할 것인가?
5. 17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혁신적 포용성장과 지역 문화경제 해법 찾기
5. 21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실험과 정책설계 방안 모색
5. 21~24	2019 UCLG ASPAC(세계지방정부 아태권역) 집행부회의 및 포럼 참석
5.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권역(UCLG ASPAC) 협약체결
5. 24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정책 평가와 추진전략
5. 29	2019 제19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5. 31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남북교류협력과 상생발전
6. 3	제3차 KRILA 자치포럼
	제4차 KRILA 월례포럼
6. 11	2019년 농촌일손돕기
6. 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협약체결

6. 19	제3회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 : 지역상생을 위한 서울의 노력–서울은 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7. 1	제5차 KRILA 월례포럼
	제4차 KRILA 자치포럼
7. 9	제3차 연구자문위원회
	공무원교육(대경권)
7. 17	제4회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
	자체 세미나 : 한국형 고향납세제도 가능성을 논하다!
7. 18~19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공무원 교육 및 찾아가는 컨설팅(1차 대경권)
7. 19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 : 지방계약의 현대적 동향
7.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협약체결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간 업무협약체결
7. 24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발표
7. 24~25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공무원 교육 및 찾아가는 컨설팅(2차 수도권)
8. 27	2019년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워크숍
8. 29	공무원교육(경기도 의정부 : 신한대학교)
9. 2	제6차 KRILA 월례포럼
9.18	제5회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 :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사회혁신
10.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35주년 기념세미나 : 새로운 35년을 향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도약과 혁신
10. 15~17	2019년도 기본연구과제 최종보고회
10.16	제6회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 : 도시재생과 사회혁신–베를린에서 본 것을 중심으로
11. 4	KRILA 자치포럼 : 살기 좋은 장소 만들기–미국 시카고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2018년도 특별연구휴직 연구성과보고)
11.20	제7회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 : 사회혁신의 엔진, 분권형 복지 대타협으로!
11. 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류 10주년 한·일 공동학술행사
11. 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정책연구 대학원대학 제20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12. 4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공무원 교육 및 찾아가는 컨설팅(3차 충청권)
12. 5~6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공무원 교육 및 찾아가는 컨설팅(4차 호남권)
12.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원도인재개발원 협약체결
12. 13	2019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세미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사〉를 만든 사람들

편찬위원장 권오철 부원장

편 찬 위 원 신두섭 기획조정본부장
박해육 자치행정혁신실장
주재복 자치분권제도실장
이 효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호 지역포용발전실장
유순기 경영지원실장
송지영 기획총괄부장
윤태섭 재정분석센터장
김상민 부연구위원
김지수 부연구위원
이용애 연구기획과장
김상우 서무관리과장
권경철 행정예산과장
김기민 전문위원

간 사 탁영지 홍보교육과장

내일을 여는 35년의 열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사

1984 — 2019

발행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033)769-9999
www.krila.re.kr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발행인 윤태범
집필작가 엄광용
디자인·제작 반디컴
서울시 중구 초동 42 아시아미디어타워 704호
02)2272-1190
www.bandicom.com

ISBN 978-89-7865-461-6